| 자체연구 2024-04 |

유형별 사례분석을 통한 교육발전특구 맞춤형 관리방안

이소영 · 박진경 · 김도형 · 김민영 · 김주락 · 최민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참여연구진

저 자 **이소영, 박진경, 김도형, 김민영, 김주락, 최민정**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이소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박진경**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도형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민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주락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객원연구원 **최민정**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

연구요약

1. 연구개요

□ 연구배경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와 지역소멸 우려
- 지역 인구의 수도권 유출 원인은 복합적이나, 대체로 교육 및 직업 등의 원인이 1차적 원인으로 나타남

❍ 우수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정주 체계 조성으로 지역발전 도모
- 정부의 지방시대전략 중 하나로서 교육발전특구 정책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전략과 지역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양성되어 지역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선순환 전략으로서 교육발전특구 추진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서 교육발전특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지방시대전략으로서 교육발전특구가 연착륙할 수 있는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 이를 위해 현재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유형별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특구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

□ 연구방법

❍ 관련 법령, 교육부 보도자료 등을 문헌조사하여 교육발전특구 지정 현황 및 주요 계획 등의 현황 정리

○ 유형별 사례분석
  - 사례지역 선정기준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으로 지정된 56곳 중 선도지역 중에서 선정, 사업신청 유형(1유형, 2유형, 3유형)이 고르게 배치되도록 선정, 교육부가 제안한 사업 유형안(유아돌봄형/ 초중고 연계형/ 대학연계형 및 지역중심 돌봄연계/ 지역산업 연계/혁신도시 연계) 등이 반영되어 유형별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선정
  - 4개 유형별 사례지역 분석: 유아돌봄형 화천군 (1유형), 혁신도시 연계형 진천-음성 연계협력 (1유형), 지역산업 연계형 광주광역시 (2유형), 지역대학 연계형 경상남도 지정 시군 (3유형)

○ 교육부,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관계자(자치단체와 교육청, 지역대학 등)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대안 도출

2. 주요 연구내용

1) 교육발전특구의 유형별 특성 및 시사점

□ 교육발전특구 지정 유형 및 현황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신청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

| 표 1 | 교육발전특구 유형 구분

유형	신청단위	신청주체
1유형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장-교육감
2유형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장-교육감
3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주: 3유형의 경우, 특별자치도가 지정하는 행정시도 신청 단위로 지정 가능
출처: 교육부(2023a)

○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 7월 말 현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총 56건이 지정됨

- 시범지역은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선도지역은 3년의 시범 운영 기간 이후 교육발전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지정되고, 관리지역은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 및 지원을 받을 예정임
- 1유형 21건, 2유형 6건, 3유형 5건 등 총 32건이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었고 나머지 24건은 매년 평가를 받는 관리지역에 해당

| 표 2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현황(1·2차 통합)

구분	건수	지자체명
1유형 (기초지자체)	41건	• (인천) 강화 • (경기) 고양, 양주, 동두천, **파주, 김포, 포천, 연천** • (강원) **춘천**, **원주**, **화천**, **강릉**,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 (충북) **충주**, 제천, 옥천, **진천-음성**, 괴산 보은 • (충남) 서산 **공주, 금산** • (전남) 광양, **순천** • (경북) **포항**, **구미**, **상주**, 칠곡, **울진**, 봉화, **김천**, **영주**, **영천**, **울릉**, 경산 • (경남) 남해
2유형 (광역지자체)	7건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세종
3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8건	• 충남(아산) • **경북(안동-예천)** • **경남(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 • **전북(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 전북(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 **전남(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 • 전남(여수,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해남) • **경남(의령, 창녕, 거창, 함양)**

주: 굵은글씨체는 선도지역에 해당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4a)와 교육부 보도자료(2024b)

□ 교육발전특구의 유형별 특성

○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본 교육발전특구의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음

| 표 3 | 교육발전특구 유형별 특성

구분	1유형(단독형)	1유형(연계형)	2유형	3유형
중점 분야	유아돌봄형	혁신도시 연계형	지역산업 연계형 (초중고)	지역산업 연계형 (지역대학)
공간 범위	기초자치단체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시)	광역자치단체(도) 지정 시군
추진 주체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장-교육감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사례	화천군	충북 음성-진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지정 시군 (진주,사천,고성,창원, 김해,양산,거제,밀양)
지역 특성	접경지역/인구감소지역 /고등교육기관 부재	충북혁신도시/ KEDI 교육관련 국책연구기관 소재	광주형 일자리사업/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우주항공(진주, 사천, 고성), 스마트제조(창원), 나노(밀양), 조선(거제), 자동차/의생명(김해, 밀양)
중점 사업	화천형 늘봄프로젝트/ 국방산업 연계 자공고 전환/ 교육+돌봄+주거 패키지 지원	혁신도시 인프라 활용 공유협력 돌봄시스템 / KEDI 활용 교육과정 개발/ 혁신도시 외곽 교육격차 해소	빛고을 직업교육혁신지구 및 광주형 마이스터고 지정 추진/ 시 전략산업과 연계한 취업·창업·주거 지원	전략산업별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및 우주항공 미래자동차 분야 취업 지원금 지원/ 우주항공 연계진학 지원
정책 연계	교육부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강원도교육청 더나은교육지구/ 행정안전부 접경지역개발사업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지원정책/ 충북혁신도시 종합계획	교육부 직업교육 혁신지구/ 국토교통부 도심융합특구/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차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교육부 RISE 및 글로컬대학 연계/ 교육부 약형 특성화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등
지자체 특성	2007년 화천군 인적자원개발 중장기계획 수립/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 조례	충북혁신도시 연계/ 유관 산업 혁신기관 연계지원/ 한국교육개발원(KEDI) 등 유관기관 연계 활용	직업계고-지역기업-대학 연계 지역인재 성장경로 구축 지원/ 광주형 일자리 사업 지원	경남 전략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체계 구축/ 분야별 시군 특구 지정 육성
제안 특례	마이스터고 지정 및 취소 권한 이양 제안	국립소방병원 개원에 따른 관련 학과 정원 증원 특례	자율형 공립고 교원 정원 외 추가 배정 제안	경남 지역산업 인재양성에 필요한 맞춤형 특례 제안

□ 정책적 시사점

○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과 교육발전 간 상관관계 더욱 분명

- 소관부처별, 추진주체별 등 기존의 파편화된 정책적 접근을 지양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경로상에서 정책적 접점 및 혁신을 찾는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교육발전특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

❍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소멸의 위기 해소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직·간접적인 방안에 해당
- 지역주도하에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선순환 형성이 궁극적인 목표

❍ 그러나 교육발전특구 전략의 차별성 부족,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의 어려움 등 사업 추진에 있어 난항을 예상하는 목소리 또한 높은 편
- 지역마다 차별화된 계획 수립이 강조되기보다 자율형 공립고 운영, 지자체 주도 늘봄·돌봄 시스템 지원 등 유사 모델 난립에 따른 사업의 실효성 저하
- 전국 지자체의 4분의 1이 교육발전특구인 상황에서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의 수가 많은 만큼 관련 예산 배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음

❍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리 전략 마련 중요
-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맞춤형 공교육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이는 그 자체로 교육혁신의 과정임
- 교육정책을 향한 국가와 지방의 공동 책무성 강화, 적시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가동,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간의 연계 협력 추진, 공공기관과 대학, 기업 등 민관 협력 강화, 지역맞춤형 특례 발굴 등 지역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실천이 요구됨

❍ 특히, 3년이라는 시범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으로 정식 지정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교육발전특구를 향한 지방의 접근은 고도화될 필요가 있음
- 현행 교육발전특구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양분되는 만큼 성공적 제도 운영을 위한 명확한 목표 설정과 관리전략 마련 중요
-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전략 수립, 교육발전특구 주체 간 유기적 연계 강화, 교육발전특구 관련 지역맞춤형 특례 발굴, 교육발전특구 성과 극대화를 위한 성과관리 방안 등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

2) 교육발전특구의 유형별 관리전략

□ 일반자치 유형에 의한 공모 유형의 한계 극복 필요

❍ 현재 1, 2, 3 유형으로 지정되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지방 교육청과 공동협력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 유형에 따라 구분된 것임

- 즉 1유형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감, 2유형은 광역자치단체장(광역시 및 제주)과 교육감, 3유형은 광역자치단체(도)가 지정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하나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협력하여 특구 기획 및 운용

❍ 현재와 같은 유형 구분은 협력 주체를 명확히 명시하여 해당 주체들이 공동사업을 기획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 특구의 공간적 범위의 불명확성,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모호로 인하여 실제로 재원 투입 및 성과관리단계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음

- 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협력하는 제1유형의 경우도 광역자치단체의 협력이 전제될 수 밖에 없으며,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기초자치단체장과 협력이 전제될 수밖에 없음
- 즉 기초-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도외시한 현재의 공모 유형 대신 현재 차별적 전략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유형별 관리가 필요

□ 교육발전특구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유형 관리

❍ 지역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관리전략 또한 현재의 지정 유형을 고려하여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2유형의 경우 제주를 제외하고는 광역시를 대상으로 지정된 것이므로, 대도시 유형이라 할 수 있으며, 1유형은 시군인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대별될 수 있음
- 3유형의 공간적 범주가 다양한데, 1유형처럼 1-2개 시군만 선정된 사례(충남 아산, 경북 안동-예천)가 있는가 하면, 경남처럼 1,2차 지정에 의해 다수의 지역을(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1차 지정), 의령, 창녕, 거창, 함양(2차 지정) 지정한 사례가 있음

❍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가 지역에 정주·취업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교육발전특구의 조성 목적임을 고려할 때, 대도시-도시-농촌의 지역특성에 따라 차별화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대도시 지역의 경우, 관내 지역대학이 소재하여 대학과 연계한 지역 및 교육혁신전략이 마련될 수 있음
- 1유형에 속하는 도시지역인 경우 인구 5만 이상인 도농복합시와 인구 100만에 버금가는 광역시급 도시지역이 있으며,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대학 소재 지역과 대학이 없는 지역 등 지역여건의 차별성이 고려되어야 함
- 농촌 지역의 경우, 1차산업 외에 발달된 지역산업이 부재하고, 인구이동이 유초등 단계에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유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인 고등교육까지 포괄하는 전생애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판별이 필요함

□ 교육발전특구의 중점사업을 고려한 유형화 방안

❍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공모 당시,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대학 등이 협력하여 유·초·중등·대학교육 분야 중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집중적 육성이나 연계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관심 분야 중심으로 다양한 모델의 특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방침 제시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지역특성에 따른 교육발전특구 운영모델로 지역중심 돌봄·교육, 지역산업 연계, 혁신도시 연계 등의 중점추진 분야를 예시로 제시

- 본 연구에서 해당 유형에 속하는 사례지역을 분석한 결과, 지역 돌봄(화천군), 지역산업 연계(경남 해당 시군), 혁신도시 연계(충북 음성·진천)형은 지역특성에 기반한 특화된 특구로 개발·운영되고 있으나,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역산업과 연계된 중점추진사업이 제안되었다기보다는 교육부가 제시한 유·초·중·고, 대학 등 교육단계별 사업내용을 마련하는데 집중하여 지역산업 연계의 차별성은 두드러지지 않았음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의 운영 및 관리를 현행과 같이, 공모 유형별, 교육단계별로 실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이 협력적으로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한다는 당초 목표와는 다르게, 주체별로 분절적인 사업추진 및 관리를 할 우려가 있음

○ 향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따른 교육발전특구 운영모델별로 유형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교육발전특구가 지향하는 바와 부합할 것임

○ 가능한 유형화안으로는 첫째, 지역돌봄형(농촌형/도시형), 둘째, 지역산업 연계형(광역시형/광역도형), 셋째, 특화지구 연계형(혁신도시/문화도시 등 다양한 지역특화특구 연계형)을 제안

3)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전략 수립

○ 지역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교육정책 수립

-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매우 높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지역교육정책 수립이 매우 중요
- 교육정책의 경우, 단편적인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마련될 수 있는 시책이 아니므로, 지역에서 실제로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얼마나 실현했는가가 중요
- 화천군의 경우, 교육발전특구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16년부터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역교육정책을 마련해 옴

○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정책으로 차별성 확보

- 지역교육정책이 지역발전정책과 실질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에 기반한 지역인재양성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교육계가 공급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에 천착하기 보다는 지역산업, 즉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특화산업 또는 지역주력산업 등 지역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인재양성 정책 제시되어야 함

- 경남의 경우, 지역이 실제로 주력하고 있는 5대산업 분야와 연계한 기술인재 양성에 집중한 〈경남형 미래전략산업 교육발전특구〉를 기획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교육발전특구 주체 간 유기적 연계 강화

❍ 지자체와 교육청 외 대학 등 유관기관 간 연계 강화

-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교육발전특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지자체-교육청과의 협업 뿐만 아니라 유관주체간 협력체계도 구축되어야 함
- 일례로 지역전략산업에 필요한 기술인재양성을 위해 직업계고 인재양성 과정을 살펴보면, 직업교육은 관련 고등학교에서, 지역인재에 대한 정주지원은 지자체 지원할 수 있지만, 직업교육에 필요한 핵심기술 연관 수업을 위해서는 관련 대학과 연구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임
- 지산학연 협력체계 중,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교육청 외 지역대학 및 유관 연구기관 등 핵심적인 기술교육을 담당할 혁신 주체들과의 연계가 더 강화되어야 함
- 교육청은 초중고 교육정책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산학연의 연계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역할이 더 중요함

❍ 지자체와 교육청 간 실질적 협력 네트워크 운용

-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교육발전특구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지방시대위원회와의 연계, 지역차원에서는 지자체내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담당기구와 교육발전특구 운영·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지원하고 지역기업,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 협력체를 구성·운영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 지역협력체는 특구를 신청한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지역별 특구 운영 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시대 4대 특구 및 지역발전 사업간 원활한 연계협력 도모 차원에서 유사 협력체 조직과 지역위원회 통합 운영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발전특구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특구가 아니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심의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는 지방시대 관련 특구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해당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제도적 기반이 없는 현 시점에서 교육발전특구의 운영은 지역 협력체보다는 교육발전특구를 실제로 담당할 지역 담당기구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공동위원장으로 추대하되, 실질적 운용은 교육발전특구 실무추진단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음
  - 교육발전특구 실무추진단에 자치단체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등 교육청 산하 유관기관과 초·중·고·대학교 등 해당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특구 사업을 함께 추진
  - 사업기획-집행-평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받는 민간조직과 자문기관 등도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함께 운용 가능
  - 중점사업 유형별 모델에 따라, 관내 유관기관으로 군부대(접경지역),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혁신도시 연계형),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연구소 등 다양한 혁신주체가 참여 가능

□ 교육발전특구 관련 지역맞춤형 특례 발굴

○ 교육 관련 규제 완화 및 특례 위주 발굴 한계 극복
- 교육발전특구는 '특구'이기에 지역맞춤형 특례 지원이 특구의 중요한 방침이었음
- 지역이 특구 내에 적용가능한 특례를 포함한 교육발전특구 사업계획서를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상향식으로 제안하고 특구로 지정되면 다양한 맞춤형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운영 모델 및 교육단계별 교육발전특구 적용 특례(안)을 제시하면서, 지역특성에 따른 다양한 특례 발굴을 위해 노력
- 지역중심 돌봄교육, 지역산업 연계, 혁신도시 연계 등 교육발전특구 운영

모델에서 나타나듯이, 관련 특례는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교육특례만을 지향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단계별 적용 특례(안)이 교육 관련 특례로 제안되다 보니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교육 관련 특례를 발굴·제안함

- 사례분석에서도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이 학과 정원 증원, 교원 정원외 추가 배정, 마이스터고 지정 권한 이양 등 교육 관련 특례 위주로 제안
- 교육발전특구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인재양성이 목적인 바,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관련 특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지만, 지역산업 육성에 위한 다양한 특례들이 발굴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경남 및 전남 등은 지역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 극복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기업 취업, 정주까지 이어지는 정책 추진 속에서 필요한 외국인 관련 특례를 제안하기도 함

❍ 지역맞춤형 특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필요

- 지자체-교육청-대학 등 유관기관들이 지역에 필요한 지역맞춤형 특례를 발굴·제안하여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없이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음
- 교육발전특구에서 지원가능한 구체적 특례안과 지자체에서 발굴한 특례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행되는지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교육발전특구의 특례 지원은 실현될 수 있을 것임
- 최초의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제도 도입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 관련 규정으로 근거를 두려고 하였으나, 입법 당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산된 바 있음
- 현재는 교육부 중심으로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며 관련 공청회 등이 진행되고 있음

□ 체계적인 성과관리 방안 제안

❍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관리를 위한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관리 필요

-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발전특구 운영계획안에서 성과지표는 교육단계별 중점

추진내용에 따라 성과지표를 제안하고 있음

- 유아돌봄 단계의 사업추진에 따라 출산율 상승, 초중고 단계의 사업추진에 따른 학업성취도 상승과 사교육비 감소, 대학 교육단계의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인재 전형비율 확대 및 지역인재 취업률 상승 등을 제시
- 교육발전특구가 지향하는 바에 따른 성과지표가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3년간의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도달하기는 어려운 성과지표임
- 따라서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운영계획서상의 성과지표는 대체로 성과관리가 용이한 실적 및 결과지표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제시
-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 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운영계획서 상에서 제시된 성과지표도 대체로 실적(결과)지표로 구성
-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분되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프로그램 참여율, 자격증 취득률, 만족도 등으로 구성
- 사업 초기단계에서는 실적(결과)지표로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교육발전특구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영향(효과)지표를 통해 성과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수립한 성과지표에 따라 사업실적을 관리하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평가에 따라 교육발전특구를 지속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업 성과지표로는 각 교육발전특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방향에 따른 목표를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할 것이므로 영향지표로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의 체계적 관리 방안

- 교육발전특구가 시범지역으로서의 사업으로부터 더 나아가 안정된 제도적 기반하에서 특구로 지속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필수적임
- 현재 지역이 수립한 자율적 교육발전특구 성과는 지역별·개별적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차별, 정량·정성별, 실적·영향별 성과지표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56개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도지역사업과 24개의 관리지역은 중앙차

원의 메타평가를 통해 이후 교육발전특구로 지정 여부를 판가름 받게 될 것임
- 1차, 2차 연차별 성과관리는 P(Plan)-D(Do)-C(Check)-A(Act) 단계 중에서 계획대비 실행, 즉 실적 위주의 관리에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겠으나, 사업이 완료되는 3차년도에는 전체 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임
- 즉 3차년도에서는 각 특구가 지향하는 효과(Effect) 또는 영향(Impact)에 따른 성과분석을 실시해야 할 것이므로, 종합효과 분석시 공통효과 지표와 자율효과 지표를 구분하여 성과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개별 지역 성과지표는 특구내 사업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나, 종합성과 관리에서 중요하게 관리해야 하는 부분은 교육발전특구의 전체 사업목표, 즉 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협력성, ② 교육혁신과 지역발전과 연계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특히 교육발전특구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관련 특례 도입 및 적용이 구체화 된다면, 도입 특례의 적정성 및 효과성 등도 중요한 성과관리의 항목이 될 수 있음
- 1차년도 성과평가를 위한 단기적 성과지표 및 관리방안은 교육부의 후속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겠으나, 지역별로는 3년간의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중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하여 사업을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음

4) 교육발전특구 관련 제도 개선 방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 24년 7월 김도읍 의원 등 11인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내 교육발전특구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 제안
- 현재 법안 발의 후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단계 진행 중

❍ 교육발전특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양성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지방시대 전략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도 지역균형발전특별법상의 근거 규정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특히 교육부에서는 교육발전특구에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조달의

필요 등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도 해당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표 4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내 교육발전특구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5조(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등) ①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자치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신설〉	제35조의 2((교육발전특구의 설치·운영) ① 국가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방인재 양성과 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발전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발전특구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출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2024)

□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교육발전특구는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위한 생태계 구축이라는 국가적인 현안을 해소할 장기적인 정책인 만큼 안정적인 법적, 제도적 뒷받침 필수

❍ 2024년 11월 김도읍 의원 등 12인은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고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입법예고와 위원회 심사 등의 입법절차 진행이 필요한 상황

- 제정 발의된 본 법안은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지정 및 운영, 각종 규제의 특례 및 교육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체계

| 표 5 |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체계

구분	세부내용
제1장 총칙	-
제2장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
제3장 규제 특례	제1절 교육발전특구와 지역혁신지원 선도지역에 대한 특례 제2절 교육분야 규제특례 우선 허용
제4장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

출처: 국회입법예고.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제4장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지정 및 운영 관련하여 지정신청 및 지정 등에 대한 규정 마련하고 있으며 교육발전특구와 일부 내용 상이

-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은 수도권 내 교육격차 완화를 위하여 대학이 지역 교육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면서 초중고 분야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체계를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발전특구와 다르게 대학 총장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전제하고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함

❍ 이상의 법안 내용 중 교육발전특구 외에 추가 지정근거를 두려고 하고 있는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지정 및 운영의 경우, '수도권 지역 지정', '대학총장 참여 필수' 등 교육발전특구와는 다른 지정 방침을 제안하고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1. 연구배경 ····· 3
2. 연구목적 ····· 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5
1. 연구범위 ····· 5
2. 연구방법 ····· 6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정책 현황

제1절 이론적 논의 ····· 11
1. 교육과 지역발전의 상관관계 ····· 11
2. 지방소멸과 교육격차 ····· 16

제2절 교육발전특구 정책 현황 분석 ····· 25
1. 교육발전특구 추진 배경 ····· 25
2. 교육발전특구 정책 추진 방향 및 내용 ····· 31
3. 교육발전특구 지정 현황 ····· 39
4.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주요 사업 현황 ····· 42

제3절 정책적 시사점 ····· 52
1. 지역발전과 교육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 52
2. 전 생애 교육을 매개로 한 지역발전전략 구체화 ····· 53
3. 교육발전특구 연착륙을 위한 개선 과제 ····· 54

제 3 장 유형 Ⅰ- 유아돌봄형 : 강원도 화천군

제1절 유형 및 교육발전특구 사업 개요 ····· 59
1. 유형 개요 ····· 59
2. 특구 사업 현황 ····· 60
1) 특구 운영 방향 ····· 60
2) 전략별 추진과제 및 주요 내용 ····· 63
3) 교육발전특구 특례 제안 ····· 69

제2절 지역여건 분석 ····· 71
1. 지역여건 ····· 71
1) 인구 현황 분석 ····· 71
2) 지역 산업여건 분석 ····· 77
3) 교육 및 연구 관련 인프라 분석 ····· 79
2. 지자체 정책 ····· 83
1) 지역발전정책 ····· 83
2) 교육정책 ····· 87
3) 관련 조례 ····· 94

제3절 관련 정책동향 분석 ····· 102
1. 교육정책 ····· 102
1) 교육부 교육서비스 관련정책 ····· 102
2) 교육부 인프라 확충 및 개선정책 ····· 105
3) 기타 교육부 관련지원정책 ····· 106
2. 지역발전정책 ····· 108
1) 국가균형발전정책 ····· 108
2) 저출산대책 ····· 115
3) 기타 관련정책 ····· 119

제4절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 121

1. 정책 시사점 ····· 121
2.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 124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전략 수립 ····· 124
2) 교육발전특구 주체 간 유기적 연계 강화 ····· 126
3) 교육발전특구 관련 지역맞춤형 특례 발굴 ····· 127
4) 교육발전특구 성과 극대화를 위한 성과관리 방안 ····· 128

제4장 유형 Ⅰ- 혁신도시 연계형 : 충청북도 음성·진천군

제1절 유형 및 교육발전특구 사업 개요 ····· 133
1. 유형 개요 ····· 133
2. 특구 사업 현황 ····· 135
1) 특구 운영 방향 ····· 135
2) 추진과제별 주요 내용 ····· 137
3) 교육발전특구 특례 제안 ····· 142

제2절 지역여건 분석 ····· 145
1. 지역여건 ····· 145
1) 인구 현황 분석 ····· 145
2) 지역 산업여건 분석 ····· 152
3) 교육 및 연구 관련 인프라 분석 ····· 159
2. 지자체 정책 ····· 167
1) 지역발전정책 ····· 167
2) 교육정책 ····· 177
3) 관련 조례 ····· 188

제3절 관련 정책동향 분석 ····· 195
1. 교육정책 ····· 195
1) 교육부 교육서비스 관련정책 ····· 195

2) 교육부 인프라 확충 및 개선정책 ····· 195
3) 기타 교육부 관련지원정책 ····· 196
2. 지역발전정책 ····· 198
1) 혁신도시 육성정책 ····· 198
2)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 199
3) 산학융합지구 조성 ····· 201

제4절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 202
1. 정책 시사점 ····· 202
2.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 205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전략 수립 ····· 205
2) 교육발전특구 주체 간 유기적 연계 강화 ····· 206
3) 교육발전특구 관련 지역맞춤형 특례 발굴 ····· 208
4) 교육발전특구 성과 극대화를 위한 성과관리 방안 ····· 210

제 5 장 유형 II – 지역산업 연계형 : 광주광역시

제1절 유형 및 교육발전특구 사업 개요 ····· 215
1. 유형 개요 ····· 215
2. 특구 사업 현황 ····· 216
1) 특구 운영 방향 ····· 216
2) 전략별 추진과제 및 주요 내용 ····· 219
3) 교육발전특구 특례 제안 ····· 234

제2절 지역여건 분석 ····· 236
1. 지역여건 ····· 236
1) 인구 현황 분석 ····· 236
2) 지역 산업여건 분석 ····· 239
3) 교육 및 연구 관련 인프라 분석 ····· 243

2. 지자체 정책 ····· 248
1) 지역발전정책 ····· 248
2) 교육정책 ····· 252
3) 관련 조례 ····· 256

제3절 관련 정책동향 분석 ····· 261
1. 교육정책 ····· 261
1) 교육부 교육서비스 관련정책 ····· 261
2) 교육부 인프라 확충 및 개선정책 ····· 264
3) 기타 교육부 관련지원정책 ····· 264
2. 지역발전정책 ····· 267
1) 국가균형발전정책 ····· 267
2) 기타 관련 정책 ····· 269

제4절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 272
1. 정책 시사점 ····· 272
2.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 273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전략 수립 ····· 273
2) 교육발전특구 주체 간 유기적 연계 강화 ····· 274
3) 교육발전특구 관련 지역맞춤형 특례 발굴 ····· 275
4) 교육발전특구 성과 극대화를 위한 성과관리 방안 ····· 276

제 6장 유형 Ⅲ – 지역대학 연계형 : 경상남도

제1절 유형 및 교육발전특구 사업 개요 ····· 281
1. 유형 개요 ····· 281
2. 특구 사업 현황 ····· 284
1) 특구 운영 방향 ····· 284

2) 전략별 추진과제 및 주요 내용 ····· 286
3) 교육발전특구 특례 제안 ····· 295

제2절 지역여건 분석 ····· 297
1. 지역여건 ····· 297
1) 인구 현황 분석 ····· 297
2) 지역 산업여건 분석 ····· 300
3) 교육 및 연구 관련 인프라 분석 ····· 310
2. 지자체 정책 ····· 316
1) 지역발전정책 ····· 316
2) 교육정책 ····· 321
3) 관련 조례 ····· 326

제3절 관련 정책동향 분석 ····· 329
1. 교육정책 ····· 329
1) 교육부 관련 정책 ····· 329
2) 기타 교육부 관련지원정책 ····· 332
2. 지역발전정책 ····· 334
1)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 ····· 334
2) 중견기업-지역혁신얼라이언스 지원 ····· 334
3)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 335

제4절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 337
1. 정책적 시사점 ····· 337
2.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 338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전략 수립 ····· 338
2) 교육발전특구 주체 간 유기적 연계 강화 ····· 340
3) 교육발전특구 관련 지역맞춤형 특례 발굴 ····· 341
4) 교육발전특구 성과 극대화를 위한 성과관리 방안 ····· 342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 347
1. 연구요약 ····· 347
2. 정책적 시사점 ····· 349

제2절 정책 제언 ····· 351
1. 교육발전특구의 유형별 관리전략 ····· 351
2.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 353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전략 수립 ····· 353
2) 교육발전특구 주체 간 유기적 연계 강화 ····· 355
3) 교육발전특구 관련 지역맞춤형 특례 발굴 ····· 358
4) 체계적인 성과관리 방안 제안 ····· 359
3. 교육발전특구 관련 제도 개선 방안 ····· 363
1) 관련법 개정안 ····· 363
2)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366

【참고문헌】 ····· 373

표 목차

| 표 2-1 | 지역 간 교육격차 관련 선행연구 검토 ····· 17
| 표 2-2 | 지방시대위원회 9대 중점추진전략 ····· 28
| 표 2-3 | 지역 특성에 따른 교육발전특구 운영 모델(예시) ····· 35
| 표 2-4 | 교육발전특구 유형 구분 ····· 40
| 표 2-5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현황(1·2차 통합) ····· 41
| 표 2-6 | 교육발전특구 1유형 선도지역 : 수도권 ····· 42
| 표 2-7 | 교육발전특구 1유형 선도지역 : 강원권 ····· 43
| 표 2-8 | 교육발전특구 1유형 선도지역 : 충청권 ····· 44
| 표 2-9 | 교육발전특구 1유형 선도지역 : 호남권 ····· 45
| 표 2-10 | 교육발전특구 1유형 선도지역 : 경상권 ····· 46
| 표 2-11 | 교육발전특구 2유형 선도지역 ····· 48
| 표 2-12 | 교육발전특구 3유형 선도지역 ····· 50
| 표 3-1 | 화천군 교육발전특구 특례 제안 내용 ····· 70
| 표 3-2 | 화천군 노후건축물 현황 ····· 76
| 표 3-3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GRDP) 현황 ····· 77
| 표 3-4 | 화천군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 77
| 표 3-5 | 화천군 사업체수와 종사자수(2018년 기준) ····· 78
| 표 3-6 | 화천군 연도별 사업체당 종사자수 ····· 79
| 표 3-7 | 화천군 유초중등 교육기관 현황(2023년) ····· 80
| 표 3-8 | 화천군 어린이집 현황(2019년) ····· 80
| 표 3-9 | 강원특별자치도 고등 교육기관 현황(2023년) ····· 81
| 표 3-10 |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2007~2026) 중장기 추진계획 · 84
| 표 3-11 | 화천군 인적자원개발 중장기계획(2007~2016) 추진전략 및 주요 사업 · 87
| 표 3-12 | 화천군 창조인재육성 중장기 추진계획(2015~2024) 주요 과제 및 주요 사업 · 88
| 표 3-13 | 화천군 지역발전정책 관련 조례 ····· 98
| 표 3-14 | 화천군 교육정책 관련 조례 ····· 101

| 표 3-15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 ····· 102
| 표 3-16 |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결과 ····· 105
| 표 3-17 |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유형별 지원규모 ····· 106
| 표 3-18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지역개발사업의 지원체계 ····· 110
| 표 3-19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의 개요 ····· 111
| 표 3-20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선정 내역(2017~2018년) ··· 112
| 표 3-21 | 화천군 교육발전특구 성과지표 선정사유 ····· 130
| 표 4-1 | 충북혁신도시의 인구변화추이(2017~2022년) ····· 145
| 표 4-2 | 충북혁신도시의 연령별 인구변화추이(2020~2022년) ····· 146
| 표 4-3 | 충북혁신도시의 연령별 인구 현황(2022년 6월 말 기준) ····· 147
| 표 4-4 | 혁신도시별 주민등록인구 현황(2022년 6월 말 기준) ····· 148
| 표 4-5 | 충청북도 융합바이오산업 주요 5개 산업단지 현황 ····· 154
| 표 4-6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첨단반도체 산업의 범위 ····· 155
| 표 4-7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융합바이오 산업의 범위 ····· 156
| 표 4-8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친환경모빌리티부품 산업의 범위 ····· 158
| 표 4-9 | 충북혁신도시 유초중등 기관 현황(2024년 12월 기준) ····· 160
| 표 4-10 | 충북혁신도시 초·중·고등학교 입학 및 졸업생 차이(2014~2020년) ·· 161
| 표 4-11 | 진천군·음성군의 고등교육기관 현황(2024년) ····· 163
| 표 4-12 | 충청북도 기관 유형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성과 (2010~2023년) ····· 164
| 표 4-13 | 충청북도 기관 업종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성과 (2010~2023년) ····· 166
| 표 4-14 | 진천군 민선 8기 공약사업의 투자유치 분야 재원별 투자계획 (2022~2026년) ····· 170
| 표 4-15 | 음성군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지역산업 분야 재원별 투자계획 (2022~2026년) ····· 172
| 표 4-16 | 진천군 민선 8기 공약사업의 교육 분야 재원별 투자계획 (2022~2026년) ····· 178
| 표 4-17 | 음성군 민선 8기 공약사업의 교육 분야 재원별 투자계획 (2022~2026년) ····· 180

| 표 4-18 | 진천군 K-스마트 교육특화사업의 5개 전략사업 투자계획(2024년) ·· 182
| 표 4-19 | 진천군 유·초·중·고생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 및 사업비 규모 (2023년 계획) ····· 183
| 표 4-20 |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현황 ····· 199
| 표 5-1 | 지역 미래 전략산업 관련 교육과정 개설(대학) ····· 228
| 표 5-2 | 특례 제안 내용 ····· 234
| 표 5-3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모빌리티 의장·전장 부품 산업 범위 ····· 241
| 표 5-4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스마트홈 부품산업 범위 ····· 242
| 표 5-5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생체의료 소재·부품산업 범위 ····· 243
| 표 5-6 | 광주광역시 유·초·중등학교 현황(2024) ····· 244
| 표 5-7 | 광주광역시 고등교육기관 현황(2024) ····· 245
| 표 5-8 | 광주광역시 기관유형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성과 (2010~2023) ····· 246
| 표 5-9 | 광주광역시 업종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성과(2010~2023) ····· 247
| 표 5-10 | 광주광역시 민선 8기 주력산업 관련 공약사업 재원별 소요예산 (2022~2026년) ····· 249
| 표 5-11 | 광주광역시 민선 8기 교육 분야 공약사업 재원별 투자계획 (2022~2026년) ····· 253
| 표 5-12 | 광주광역시 지역발전정책 관련 조례 ····· 258
| 표 5-13 | 광주광역시 교육정책 관련 조례 ····· 260
| 표 5-14 | 산업분야별 마이스터고 운영 현황(2024.4) ····· 261
| 표 5-15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계획(안) ····· 270
| 표 5-16 | 특례 제안 내용 ····· 275
| 표 6-1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첨단정밀기계 산업 범위 ····· 301
| 표 6-2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첨단항공부품 산업 범위 ····· 304
| 표 6-3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항노화메디컬 산업 범위 ····· 307
| 표 6-4 | 경상남도 유초중등 현황(2023) ····· 310
| 표 6-5 | 경상남도 고등교육기관 현황(2023) ····· 312
| 표 6-6 | 경상남도 기관유형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성과(2010~2023) ··· 314
| 표 6-7 | 경상남도 업종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성과(2010~2023) ····· 315

| 표 6-8 | 경상남도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산업 분야 재원별 투자계획 (2022~2026년) ····· 318
| 표 6-9 | 경상남도 민선 8기 공약사업의 교육 분야 재원별 투자계획 (2022~2026년) ····· 322
| 표 6-10 | 2023년 글로컬 본지정 대학 ····· 330
| 표 6-11 |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연합체 선정 결과 ····· 333
| 표 6-12 | 산학융합지구 조성 현황(2023년 8월) ····· 336
| 표 7-1 | 교육발전특구 유형별 특성 ····· 348
| 표 7-2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내 교육발전특구 원안 vs. 현행 ····· 364
| 표 7-3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내 교육발전특구 신·구 조문대비표 ····· 365
| 표 7-4 |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체계 ····· 366

그림 목차

| 그림 1-1 | 지방시대위원회의 4대특구 전략 ····· 4
| 그림 1-2 | 연구흐름도 ····· 7
| 그림 2-1 |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14
| 그림 2-2 | 지자체-대학-지역기업 자역상생발전 생태계 구축 ····· 15
| 그림 2-3 | 학령인구(6-21세)의 절대적 감소(1960-2052년) ····· 19
| 그림 2-4 | 초·중·고 학령인구의 수도권 변화 추이(2020-2050년) ····· 20
| 그림 2-5 | 시군구별 초중고 학령인구의 증감률(2020-2040년) ····· 21
| 그림 2-6 | 시군구별 초중고 학령인구의 인구밀도 변화(2020, 2040년) ····· 22
| 그림 2-7 | 행정안전부 지정 89개 인구감소지역 vs. 2040년 학령인구밀도 분포 · 23
| 그림 2-8 |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학교 교육의 변화 방향 ····· 24
| 그림 2-9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확대 ····· 25
| 그림 2-10 |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비전과 전략 ····· 27
| 그림 2-11 |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 30
| 그림 2-12 | 교육발전특구 정책방향 ····· 32
| 그림 2-13 | 교육단계별 중점 추진내용 ····· 33
| 그림 2-14 | 교육단계별 교육발전특구 적용 특례(안) ····· 36
| 그림 2-15 | 교육발전특구 지정절차 ····· 37
| 그림 2-16 | 교육발전특구 운영체계 ····· 38
| 그림 2-17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현황(1·2차 통합) ····· 54
| 그림 3-1 | 화천군 교육발전특구의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 ····· 61
| 그림 3-2 | 화천군 교육발전특구 추진체계 ····· 62
| 그림 3-3 | 화천군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 구성 및 운영 ····· 62
| 그림 3-4 | 화천군 유·초·중·고 빈틈없는 교육·돌봄체계 ····· 63
| 그림 3-5 | 화천군 교육발전특구 세부 추진방안 1 ····· 64
| 그림 3-6 | 화천군 교육발전특구 세부 추진방안 2 ····· 66
| 그림 3-7 | 화천군 교육발전특구 세부 추진방안 3 ····· 69

| 그림 3-8 | 화천군 인구수(2000~2023) ····· 71
| 그림 3-9 | 화천군 고용률(2000~2023) ····· 72
| 그림 3-10 | 화천군 실업률(2000~2023) ····· 73
| 그림 3-11 | 화천군 순이동(2017~2022) ····· 73
| 그림 3-12 | 강원특별자치도 장래 학령인구 추계(2022~2052) ····· 74
| 그림 3-13 | 강원특별자치도 장래 학령인구 유형별 추계(2022~2052) ····· 75
| 그림 3-14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정주 취업률(2021) ····· 76
| 그림 3-15 | 강원특별자치도의 연구개발 현황 ····· 82
| 그림 3-16 | 화천군의 연구개발 현황 ····· 82
| 그림 3-17 | 화천군의 민선 8기 공약 ····· 85
| 그림 3-18 | 화천군 교육복지과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목표 및 방향 ····· 90
| 그림 3-19 | 화천형 교육정책의 추진성과 ····· 91
| 그림 3-20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더나은교육지구 추진체계 ····· 92
| 그림 3-21 |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사업 ····· 103
| 그림 3-22 | 늘봄학교 세부내용 ····· 104
| 그림 3-23 |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제 ····· 105
| 그림 3-24 |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 107
| 그림 3-25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상 지역구분 ····· 109
| 그림 3-26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대응정책 ····· 113
| 그림 3-27 | 화천군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비전, 목표 및 전략 ····· 114
| 그림 3-28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 116
| 그림 3-29 | 원스톱 지역거점센터 ····· 118
| 그림 3-30 | 농어촌 통합 돌봄시스템 ····· 119
| 그림 3-31 | 삶의 질 정책의 비전, 목표 및 전략 ····· 120
| 그림 3-32 | 화천군의 최우선정책인 교육복지정책 ····· 123
| 그림 3-33 | 화천군의 온종일 돌봄 거점 계획 ····· 125
| 그림 3-34 | 화천군 교육발전특구 성과지표 ····· 129
| 그림 4-1 | 교육발전특구 사업협력체계 구축(진천군·음성군) ····· 133
| 그림 4-2 | 진천군·음성군 교육발전특구 비전과 목표 ····· 135
| 그림 4-3 | 진천군·음성군 교육발전특구 협력체계 구축 ····· 136

| 그림 4-4 | 충북혁신도시의 인구변화추이(2014~2022년) ····· 146
| 그림 4-5 | 진천군 및 음성군의 인구 수 변화 추이(2000~2023년) ····· 148
| 그림 4-6 | 진천군 및 음성군의 고용률 변화 추이(2013~2023년) ····· 149
| 그림 4-7 | 진천군 및 음성군의 실업률 변화 추이(2013~2023년) ····· 149
| 그림 4-8 | 진천군 및 음성군의 장래 학령인구 추계(2020~2040년) ····· 150
| 그림 4-9 | 진천군의 장래 학령인구 유형별 추계(2020~2040년) ····· 151
| 그림 4-10 | 음성군의 장래 학령인구 유형별 추계(2020~2040년) ····· 151
| 그림 4-11 | 시·도별 지역정주 취업률(2021년) ····· 152
| 그림 4-12 | 충청북도 첨단반도체 산업 혁신기관 ····· 155
| 그림 4-13 | 충청북도 융합바이오 산업 혁신기관 ····· 157
| 그림 4-14 | 충청북도 친환경모빌리티부품 산업 혁신기관 ····· 159
| 그림 4-15 | 충북혁신도시의 학생 수 변화추이(2014~2021년) ····· 161
| 그림 4-16 | 충북 지역의 시·군별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비교 ····· 162
| 그림 4-17 | 제2차 충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비전과 목표 ····· 167
| 그림 4-18 | 제2차 충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공간구조 구상 ····· 168
| 그림 4-19 | 충북혁신도시 내 신설학교(혁신초중) 및 기존 10개 학교 위치도 ·· 197
| 그림 4-20 | 충북 지역혁신클러스터 지구 지정 현황 ····· 200
| 그림 4-21 |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203
| 그림 4-22 | 충북 진천·음성군 교육발전특구 성과지표체계 ····· 211
| 그림 5-1 | 광주광역시 교육발전특구 비전과 목표, 전략 ····· 217
| 그림 5-2 | 교육발전특구 사업추진단 구성(광주광역시) ····· 218
| 그림 5-3 | 광주광역시 교육발전특구 사업추진체계 ····· 219
| 그림 5-4 | 광주광역시 인구 수(2000~2023) ····· 236
| 그림 5-5 | 광주광역시 고용률(2000~2023) ····· 237
| 그림 5-6 | 광주광역시 실업률(2000~2023) ····· 237
| 그림 5-7 | 광주광역시 장래 학령인구 추계(2022~2052) ····· 238
| 그림 5-8 | 광주광역시 장래 학령인구 유형별 추계(2022~2052) ····· 238
| 그림 5-9 | 시도별 지역정주 취업률(2021) ····· 239
| 그림 6-1 | 경상남도 교육발전특구 추진체계 ····· 282
| 그림 6-2 | 경상남도 교육발전특구 비전과 목표, 전략 ····· 284

| 그림 6-3 | 경상남도 교육발전특구 운영 방향 ····· 285
| 그림 6-4 | 경상남도 인구 수(2000~2023) ····· 297
| 그림 6-5 | 경상남도 고용률(2000~2023) ····· 297
| 그림 6-6 | 경상남도 실업률(2000~2023) ····· 298
| 그림 6-7 | 경상남도 장래 학령인구 추계(2022~2052) ····· 298
| 그림 6-8 | 경상남도 장래 학령인구 유형별 추계(2022~2052) ····· 299
| 그림 6-9 | 시도별 지역정주 취업률(2021) ····· 300
| 그림 6-10 | 경상남도 첨단정밀기계 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2022) ····· 301
| 그림 6-11 | 경상남도 첨단정밀기계 사업체 분포(2022) ····· 302
| 그림 6-12 | 경상남도 첨단정밀기계 산업 생태계 현황 ····· 303
| 그림 6-13 | 경상남도 첨단항공부품 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2022) ····· 304
| 그림 6-14 | 경상남도 첨단항공부품 사업체 분포(2022) ····· 305
| 그림 6-15 | 경상남도 첨단항공부품 산업 생태계 현황 ····· 306
| 그림 6-16 | 경상남도 항노화메디컬 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2022) ····· 307
| 그림 6-17 | 경상남도 항노화메디컬 사업체 분포(2022) ····· 308
| 그림 6-18 | 경상남도 항노화메디컬 산업 생태계 현황 ····· 309
| 그림 6-19 | 경상남도 공업고등학교 현황(2024) ····· 311
| 그림 6-20 | 경상남도 고등교육기관 현황(2024) ····· 313
| 그림 6-21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추진체계 ····· 329
| 그림 6-22 |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유형 다변화 ····· 332
| 그림 7-1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계획 수립 ····· 354
| 그림 7-2 | 경남형 미래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발전특구 사례 ····· 355
| 그림 7-3 | 직업계고 인재양성과정 (예시: 경남 우주항공분야) ····· 356
| 그림 7-4 | 교육발전특구 협력적 추진모델 ····· 357
| 그림 7-5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성과지표(안) ····· 361
| 그림 7-6 | 체계적인 성과관리 모델 제시 ····· 363
| 그림 7-7 |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특례적용 원칙 ····· 369
| 그림 7-8 |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특례 주요내용 ····· 371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01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와 지역소멸 우려**

○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한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격차 심화

- 지역 인구의 수도권 유출 원인은 복합적이나, 대체로 교육 및 직업 등의 원인이 1차적 원인으로 나타남

□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추구**

○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23.2.10)의 주요 안건으로 지방소멸대응 이슈를 논의한 바 있는데, 지방시대의 핵심은 교육과 산업임을 천명

□ **우수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정주 체계 조성으로 지역발전 도모**

○ 지역발전을 위한 기업유치를 추진할 때 지역의 교육 및 정주여건 미비로 우수인재 유치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을 활용한 지역발전정책 마련 필요

□ **정부의 지방시대전략 중 하나로서 교육발전특구 정책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전략과 지역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양성되어 지역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선순환 전략으로서 교육발전특구 추진

- 현재 교육발전특구는 24년 2월 1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발표한 이래, 7월 2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

| 그림 1-1 | 지방시대위원회의 4대특구 전략



2. 연구목적

□ 성공적인 교육발전특구 관리 방안 제안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서 교육발전특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정책의 이론적 모델을 검토한 후,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교육발전특구를 유형별·권역별로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지역발전정책과 지역교육정책 연계전략에 있어 현안과 문제점을 진단하여, 지방시대전략으로서 교육발전특구가 연착륙할 수 있는 유형별 관리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서 교육발전특구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 현행 교육발전특구 제도는 다른 특구 제도와 달리 지역균형발전정책 관련법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교육발전특구가 지역인재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정책으로 적절히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공간 범위

○ 연구의 1차적 공간적 범위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이나, 현재 총 56곳의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이 지정된 관계로, 지역 및 유형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구수행

- 교육발전특구 지정의 공간적 단위가 유형별로 상이하여, 분석대상이 되는 지자체의 공간적 범위도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광역시(제주도)), 광역자치단체(도)가 지정하는 시군 등 상이한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음
- 즉 시군이 단위인 특구, 광역시 전체가 단위인 특구, 도가 지정한 시군들로 다양한 공간적 범위로 분석

□ 시간 범위

○ 교육발전특구 사업운영계획서는 2024년을 기준으로 향후 5개년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된 바, 검토대상이 되는 교육발전특구 계획내용은 24년~28년까지의 계획내용임

○ 그러나 계획수립의 배경이 되는 학령인구변화 등 지역여건 추이분석은 최신 자료를 구축하여, 최소 10여년간의 지역여건 분석 예정임

□ 내용 범위

○ 교육발전특구 정책 및 특구 지정 지자체 사업계획 내용 검토

○ 유형별 사례지역 분석

- 교육발전특구 사업운영계획서 검토
- 지역여건 및 지자체 교육발전정책 분석

- 교육정책 및 지역균형발전정책 등 관련 국가 지원정책 분석
- 차별적 전략 수립을 위한 유형별 관리 방안 제시

○ 성공적 교육발전특구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시

2. 연구방법

□ 문헌조사

○ 관련 법령, 교육부 보도자료 등을 조사하여 교육발전특구 지정 현황 및 주요 계획 등의 현황 정리

○ 지자체 교육발전특구 사업운영계획서 검토를 통한 관련 개선과제 검토

□ 사례분석

○ 사례지역 선정기준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으로 지정된 56곳 중 선도지역 중에서 선정
- 사업신청 유형(1유형, 2유형, 3유형)이 고르게 배치되도록 선정
- 교육부가 제안한 사업 유형안(유아돌봄형/ 초중고 연계형/ 대학연계형 및 지역중심 돌봄연계/ 지역산업 연계/혁신도시 연계) 등이 반영되어 유형별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선정

○ 4개 유형별 사례지역 분석
- 유아돌봄형 : 화천군 (1유형)
- 혁신도시 연계형: 진천-음성 연계협력 (1유형)
- 지역산업 연계형: 광주광역시 (2유형)
- 지역대학 연계형: 경상남도 지정 시군 (3유형)

□ 관계 기관 심층면접조사

○ 교육부,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관계자 심층면접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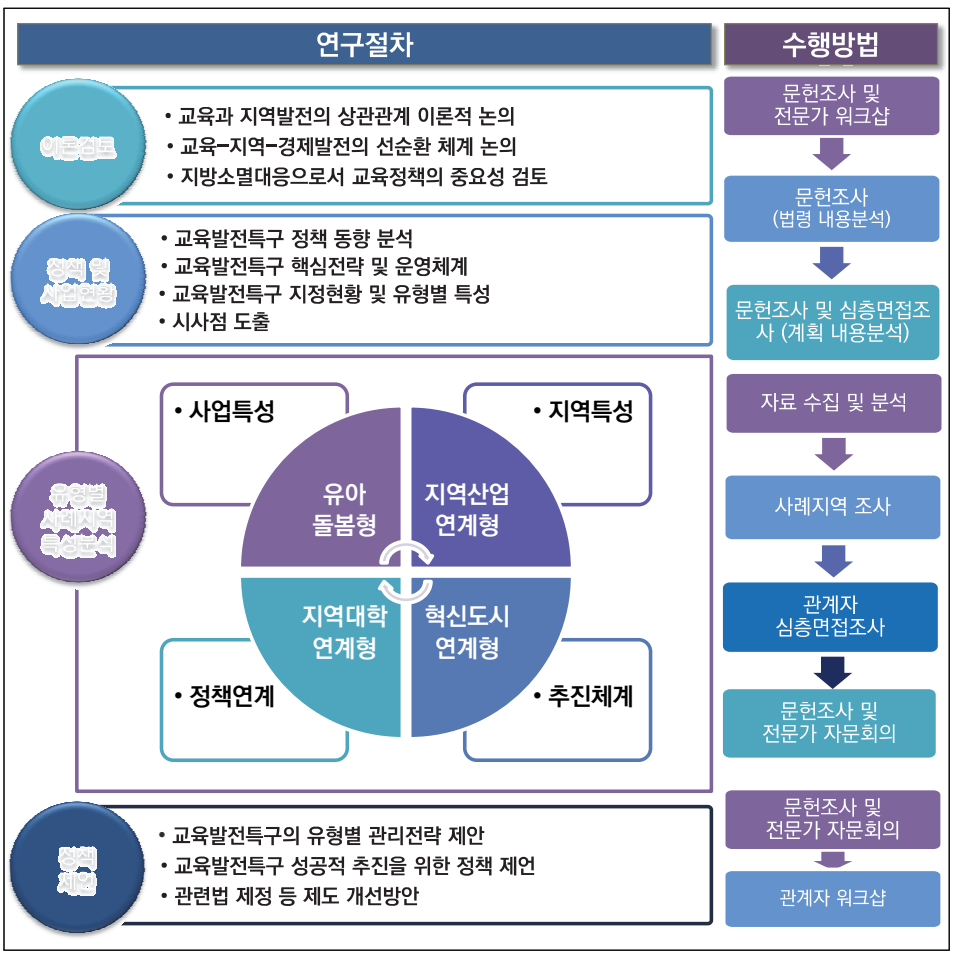
❍ 사례지역 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관계자 심층면접조사

□ 전문가 워크샵 개최

❍ 일반행정, 교육, 지역발전 관련 전문가 대상 워크샵 개최

❍ 필요시 관련 학술대회 등을 기획하여 관계자 의견 수렴

| 그림 1-2 | 연구흐름도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정책 현황

제1절 이론적 논의

제2절 교육발전특구 정책 현황 분석

제3절 정책적 시사점

02 이론적 논의 및 정책 현황

제1절 이론적 논의

1. 교육과 지역발전의 상관관계

□ **교육-국가-경제발전 : 국가경쟁력 강화 및 향상에 기여**

○ 해방이후 한국교육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발전의 밑거름으로 작용하여 국가의 압축적 경제성장에 이바지(정성수, 2024)

-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학교교육을 통해 양성함으로써 국가발전을 견인

○ 특히, 국가가 추진하는 산업화를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할 당면 과제로 인식하도록 하고 교육 투자 가치를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김영화, 2015)

- 교육은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초문해를 가능하게 해주고 조직생활에 요구되는 규칙 준수, 질서 의식 등 집단적 규범을 함양해 줌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양질의 노동력을 양성·공급하는데 주효한 역할을 함(김영화, 2017)

○ 이처럼 교육의 확대를 통한 인적자본 개발은 경제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요소에 해당

- 교육의 확대는 실업과 빈곤률을 빠른 시간 내에 줄이고 계층 간 유동성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노동생산성을 발전시킴에 따라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는 우선순위로서 설득력을 가짐(조정인, 2018)
- 교육은 물적 자본을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개인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높은 산출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인적자본 자체의 축적이나 노동생산성의 증가를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은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증대시켜 자본축적 효과를 갖음(김성순·모위홍, 2016:3-4)

○ 한국을 비롯한 대만, 싱가포르 등의 동아시아 국가의 압축적 경제성장에서 교육과 인적자본의 역할 지대
  - 저개발국이었던 한국이 단숨에 신흥개발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적자본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력이 크게 유의미하였음(정일환·김정희, 2000)

□ 교육-지역-경제발전 : 우수한 교육환경과 지역발전의 상관관계

○ 지방화·분권화 시대, 교육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은 지방의 차원에서도 유효
  -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은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및 혁신의 측면에서 중요

○ 지역을 새로운 도시경쟁력의 공간적 단위로 상정하는 신지역주의 등장 이후, 지역에 적합한 인재 양성 및 활용은 지역발전에 있어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
  - 우수한 지역인재 확보를 통한 지역혁신 역량 제고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산업의 융·복합화 경향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으로 각광받는 추세

○ 예컨대 신지역주의의 대표 정책사례이자 민-관-학 등 지역 이해관계자 간 거버넌스 시스템을 중시하는 지역혁신체계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 학습 등의 관계 속에 혁신생태계를 지속하고 지역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강조
  - 도로, 공항, 통신망, 대학, 연구소 등의 하부구조와 지역의 조직, 문화, 분위기, 규범 등의 상부구조 간 원활한 상호관계는 혁신클러스터의 성공요인으로 거론되는데(Cooke et al., 1998), 이 때 교육은 각 구조의 요소이자 이들 구조들을 연계하여 혁신을 촉진·매개하는 중요 지점에 해당

○ 한편, 지역의 우수한 교육환경 확보는 인구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과 직결(최은영, 2004)
  - 학교와 거주지는 통학구역(school attendance zone)이라는 제도로 묶여

있는 만큼 학교 교육의 공간성은 거주지의 문제로 이어지고 이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및 인구유입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박지희, 2021)

- 이는 소위 학군(學群)이라 불리는 거대한 사회적 현상과 결부되어 지역의 인구 유출입, 부동산 가격, 자산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영향을 끼침(백일순·김주락·이승원, 2023)

❍ 결국, 교육환경은 거주지 선택과 이동, 정주 만족도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한편,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 정주 여건 유지 및 개선 등에 이바지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핵심 요인임

- 학교와 거주지, 그리고 해당 거주지 내 교육청과 지자체, 더 나아가 관계 중앙부처 등은 서로 되먹임(feedback) 관계로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공유(박지희, 2021)

□ 교육과 지역발전의 상관관계 이해 예시 :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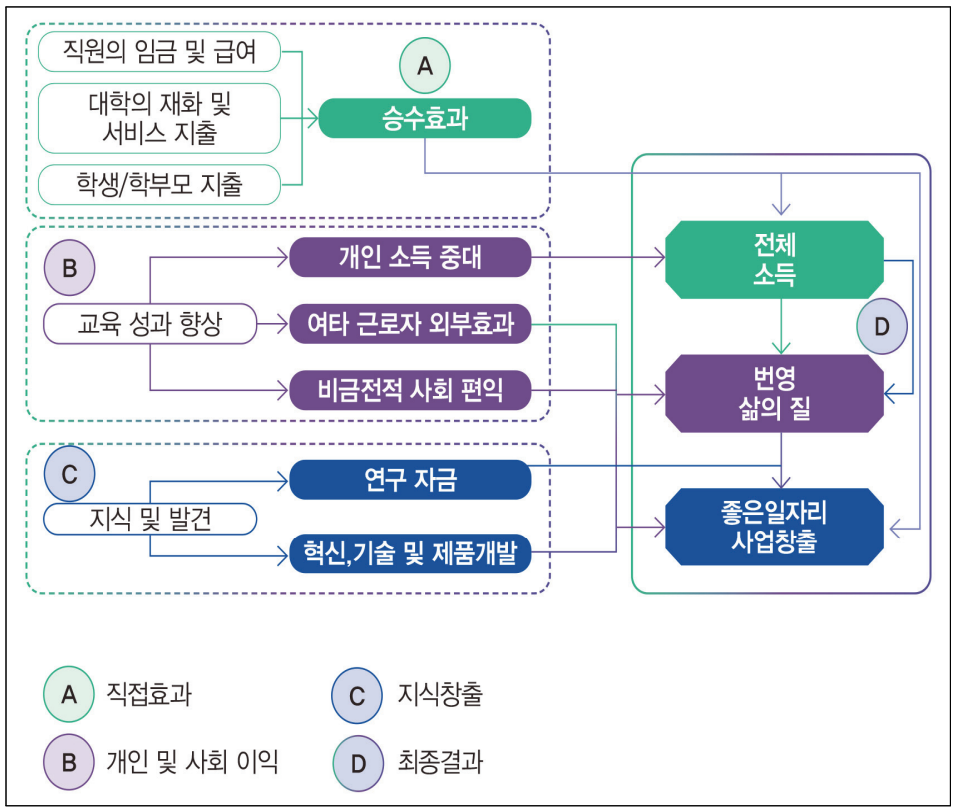
❍ Hill & Hoffman(2009)은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 측면, 개인 및 사회적 이익 측면, 지식 창출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함

- 경제적 측면은 대학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통해 지역사회에 경제적 승수효과를 유발하고, 개인 및 사회적 이익 측면에서 대학은 인적자본을 양산하여 개인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높아진 교육 수준으로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에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며, 지식창출 측면에서 대학의 연구활동은 기술발달과 혁신을 가져오는 지식을 창출하여 지역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공정을 만드는 데에 기여(이소영 외, 2021: 8)

❍ 결국 대학은 일종의 기업이자 지식생산의 기지로서 지역사회 전반에 경제적·사회적·혁신적 가치를 창출·매개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

- 이를 역으로 정리하면 대학의 정원 축소나 폐교 등에 따른 조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큼

| 그림 2-1 |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출처: Hill&Hoffman(2009)을 인용한 이소영 외(2021:9)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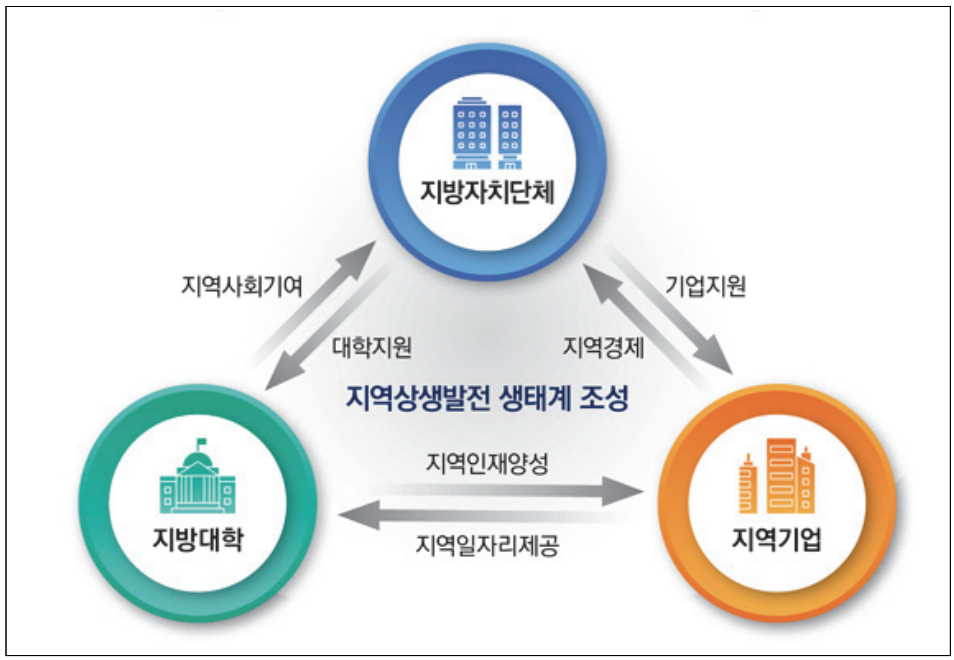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발전의 핵심주체인 지역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우수인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지역맞춤형 지역인재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게 됨

❍ 대학 등 교육기관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역인재 양성과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혁신 향상이라고 할 수 있음(이소영, 2022a)

-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므로, 대학 등 교육기관의 육성은 지역기업 간의 연계도 고려한 지역상생발전 생태계 속에서 고려되어야 함(이소영, 2022b)

- 즉 지역인재 양성으로 지역기업은 관할 지역으로부터 맞춤형 우수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됨
- 이러한 선순환 고리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관할 교육기관을 지원하게 됨

| 그림 2-2 | 지자체-대학-지역기업 자역상생발전 생태계 구축



출처: 이소영(2022a)

2. 지방소멸과 교육격차

□ 지방소멸의 또 다른 양상, 교육격차 심화

❍ 교육격차(educational gap)는 지역을 포함하여 개인의 지적 능력, 사회경제적 배경, 성별, 제도적 요인, 학교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개인 간, 집단 간의 차이를 의미(정일환·박찬호, 2020)

- 교육평등의 관점에서 교육격차는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격차, 실제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조건과 과정의 격차,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의 격차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교육 불평등과 연계하여 논의할 수 있는 개념임(이혜영·강태중, 2004)

❍ 한편, 교육격차는 격차의 집단성을 강조한 양극화라는 개념으로도 이해되는데, 구체적인 양상으로서 교육양극화는 교육불평등의 구체적인 준거인 교육격차가 양 극단의 집단으로 양분되는 현상, 그리고 상하 간의 이동이 차단된 채 고착화되는 현상을 의미함

- 이는 특정 집단에게 교육적 기회가 크게 제약되거나 불리하게 작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주지역은 계층, 성, 인종 등과 더불어 양극화를 야기하는 속성(이두휴, 2011)

❍ 실제 도시와 농산어촌, 인구 규모 등에 따른 지역 간 교육격차의 통계적 유의성을 다룬 다수의 선행연구 존재(윤기찬·김순양, 2015; 이두휴, 2011; 최영일, 2017; 김수홍, 2017)

- 이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역 간 교육격차의 발생은 분명하며,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표 2-1 | 지역 간 교육격차 관련 선행연구 검토

구분	내용
윤기찬·김순양(2015)	• 대규모 도시지역과 중소도시/농촌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측정한 결과, 교육투입, 지역환경, 교육성과 등의 면에서는 대규모 도시지역이 중소도시/농촌지역의 학생들이 인식수준이 높은 반면, 인간관계에서는 중소도시/농촌지역 학생들이 대규모 도시지역 학생들보다 인식이 양호하게 나타남 • 한편 대규모 도시지역과 중소도시/농촌지역 간에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양 지역 모두 교육여건, 교육과정, 지역환경 등이 교육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두휴(2011)	• 도시와 농촌간 교육 양극화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도시와 농촌간에는 학업성취도에서의 격차 뿐만 아니라, 학교 및 지역사회의 교육 여건, 가정의 교육지원 환경에서 있어서도 격차가 심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도시와 농촌간 교육격차는 농촌지역 우수학생의 도시이동을 통해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음 • 결국 농촌학교의 약화된 교육력은 농촌에 남아있는 학생들의 열악한 가정환경이나 지원체제와 맞물리면서 악순환을 통해 지역간 격차를 유지·확대시키면서 교육의 양극화를 초래
최영일(2017)	• 폐광지역과 도시, 농촌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실태를 파악한 결과, 폐광지역 학교들은 교육 자원과 교육 여건 면에서 도시지역에 비하여 열악한 실정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교육시설 환경 면에서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었음 • 심지어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영향으로 학생 1인당 외부교육경비 지원액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2015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 결과에서 도시지역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고, 특별한 외부 지원액이 없는 농촌지역과 비교하여도 성적이 더 낮게 나타남 • 정교한 교육활동 지원 계획이 없는 무분별한 지원과 교육투자는 아무런 교육적 효과가 없음을 시사
김수홍(2017)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 • 농어촌 학생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보상 조치가 필요, 농어촌 교원의 적절한 배치를 위한 별도의 정원 기준 마련, 농어촌 교원의 근무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처우 강화, 농어촌 학교가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농어촌 지역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책무 강화, 다섯째, 농어촌 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검토 등을 제안함

❍ 특히, 인구규모에 따른 지역 간 교육격차 및 영향요인을 분석한 윤기찬·김순양(2015)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 투입, 지역 환경, 교육성과 등의 측면에서 대규모 도시지역이 중소도시·농촌지역의 학생들보다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대규모 도시지역과 중소도시·농촌지역의 교육 여건, 교육과정, 지역 환경 등은

교육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시 말해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대다수 시군단위 지역의 경우, 교육격차를 유발하는 기회구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고, 이는 다시금 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쳐 교육격차의 가중이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음을 의미함

❍ 게다가 국가의 보호나 지원이 작동하지 않는 사교육 시장의 경우, 도시와 농촌 간, 도시 인구규모 등에 따른 사교육 참여 및 비용의 격차가 존재하고, 이는 곧 상이한 교육결과 및 환경에 따른 격차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 통계청(2024a)의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지역별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높았고, 시도별로는 서울, 세종, 경기, 대구, 부산의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결국 지방소멸의 위기를 초래한 인구의 불균등한 분포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통해 재확인되는 동시에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

- 학령인구수 감소에 따라 심화되는 분·폐교 위기 속에 교육기회의 공간적 불평등은 지역 인구이동의 압출요인(pushing factor)으로 작용
- 가령 교육 여건이 좋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은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인구 유출 및 정주환경 쇠퇴를 야기하여 지방소멸을 가속화

❍ 따라서 교육격차는 교육 문제인 동시에 사회·경제·복지 등 사회 전반의 문제로 지방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한 정책과제임

- 지역 간 교육격차는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적으로 사회통합을 약화시켜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사회문제 유발(정일환·박찬호, 2020)

□ 지방소멸-교육격차 가중 요인: 학령인구의 절대적 감소와 불균등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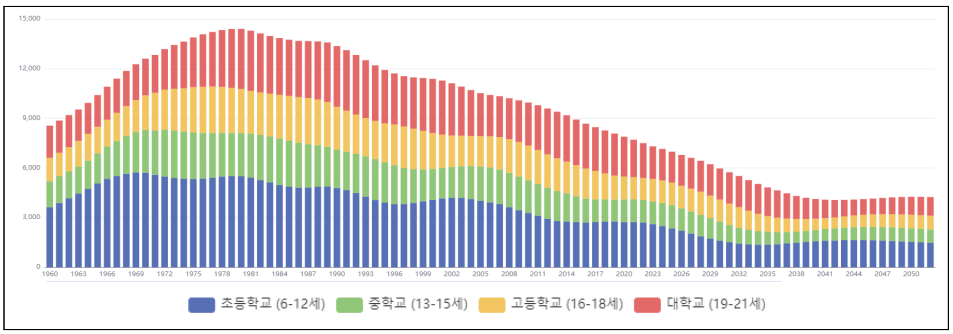
❍ 학령인구의 절대적 감소는 교육격차의 공간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요인에 해당

- 학령인구(6~21세)는 1980년(1,440만 명)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2년 750만 명에서 2035년 482만 명으로 268만 명이 급감한 후 2052년 424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통계청b, 2024)

-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통폐합한 학교 72개교 중 초등학교는 58개교로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으며 시군단위 농어촌지역 폐교 속도 가속화

| 그림 2-3 | 학령인구(6-21세)의 절대적 감소(1960-2052년)

단위: 천명



출처: KOSIS인구상황판 학령인구(6-21세)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Index.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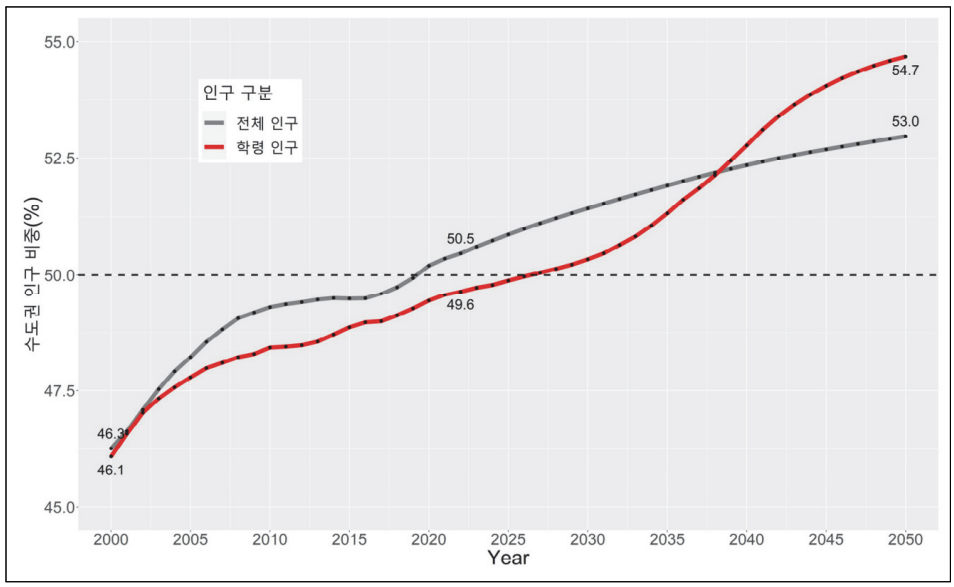
❍ 이러한 학령인구감소는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이 직면한 당장의 위기로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한 가운데, 국토의 불균형발전에 따른 지역의 격차가 지역대학 위기의 차등화로 가시화되는 상황(관계부처합동, 2021:1)

- 정원을 절반도 못 채우는 대학이 2020년 12교에서 2021년 27교로 급증하였고, 2022년에는 지방대 214곳 중 44곳(20.6%)이 대학재정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신입생 충원율 80%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소멸을 가중하는 교육격차의 또 다른 측면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학생 쏠림 현상, 이른바 학령인구의 공간적 불균등 분포로 비수도권 대비 수도권 지역의 학생 쏠림 양상 뚜렷

- 2020년 초중고 학령인구의 수도권 비중은 49.4%로 과반을 차지한 전체 인구의 수도권 비중보다는 낮은 편
- 그러나 2030년 이후 전체 인구의 수도권 비중은 완만히 증가하는 반면, 수도권 초중고 학령인구 비중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40년 52.8%, 2050년 54.7%로 빠른 증가세를 보임

| 그림 2-4 | 초·중·고 학령인구의 수도권 변화 추이(2020-20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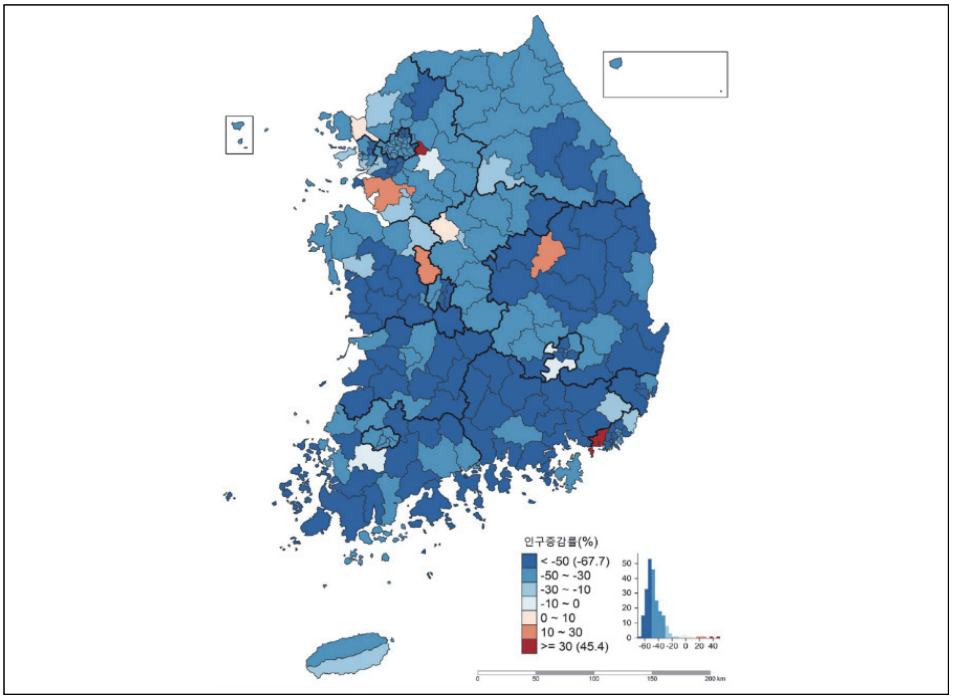


출처: 김현미 외(2022:139)

❍ 실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93개의 초·중·고등학교가 폐교되었지만, 이중 수도권은 22곳(11.4%)에 불과
- 반면, 5년간 신설된 312개 학교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54.5% 과반 차지

❍ 또한 2020-2040년 지역별 초중고 학령인구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2040년 7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의 학령인구가 감소할 전망임(김현미 외, 2022)
- 2020년 대비 2040년 학령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경기 화성시, 세종시, 경기 하남시, 부산 강서구, 경기 김포시, 경북 예천군, 충북 진천군 등임
- 반면 2020년 대비 2040년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위 10개 지역은 경남 창원시, 경기 수원시, 경기 고양시, 경기 안산시, 경기 성남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충북 청주시, 경남 김해시, 전북 전주시 등임

| 그림 2-5 | 시군구별 초중고 학령인구의 증감률(2020-204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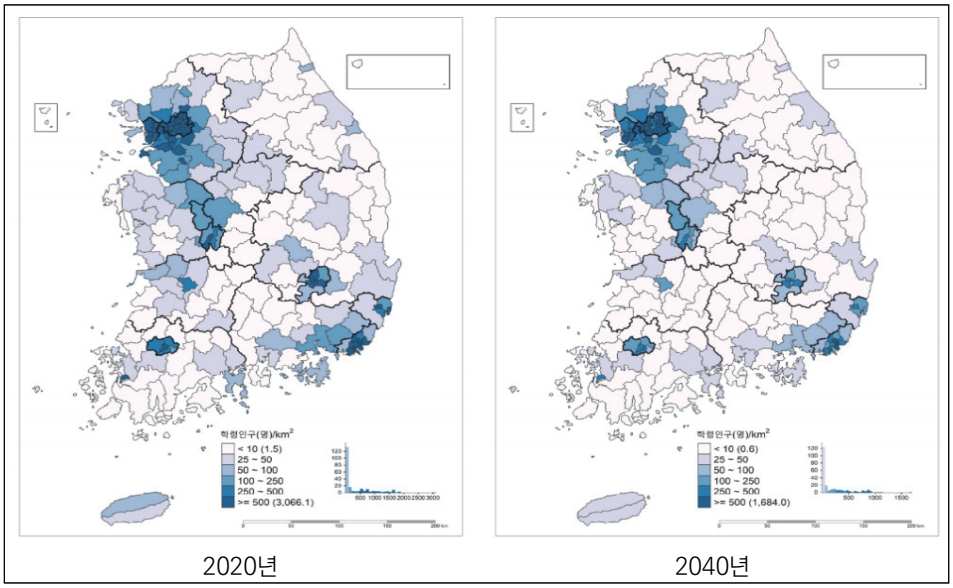


출처: 김현미 외(2022:142)

❍ 2020-2040년 시군구 초중고 학령인구 인구밀도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2040년 10인/㎢미만의 인구밀도를 보이는 시군구 증가 양상 분명

- 2020년 대비 2040년에는 수도권과 수도권 인접 시군구, 비수도권 내 중추도시 등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학령인구 과소지역에 해당

| 그림 2-6 | 시군구별 초중고 학령인구의 인구밀도 변화(2020, 2040년)



2020년 2040년

출처: 김현미 외(2022:144)

❍ 결국,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국토의 불균형 발전에 따른 인구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처럼 초중고 학령인구의 불균등 분포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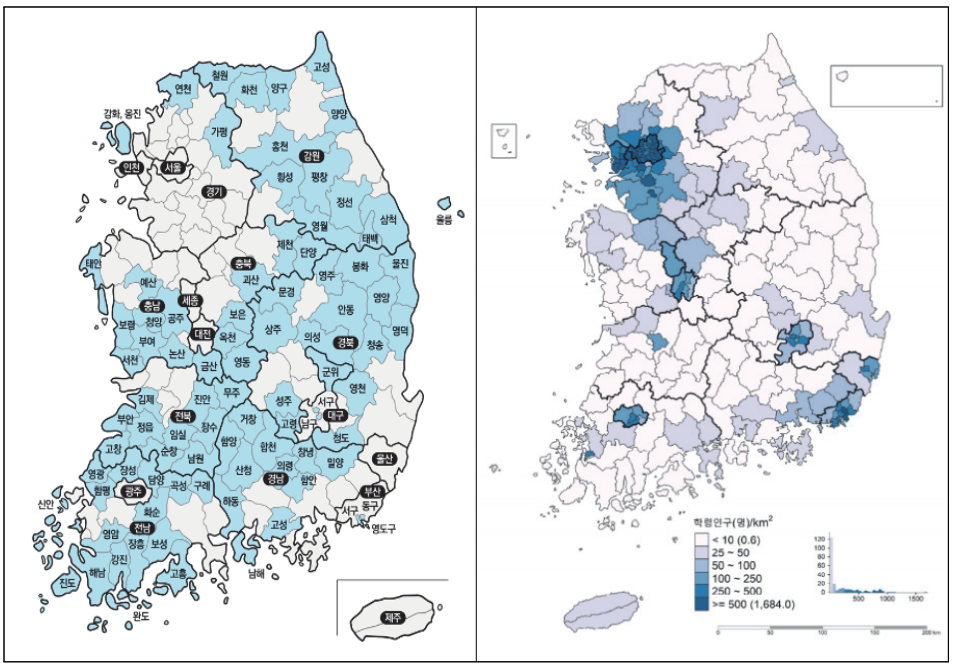
- 초·중·고 학령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지방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이야기가 회자되는 상황
- 학령인구 규모의 절대적 감소에 따른 지역별 변화량은 향후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도 크게 나타나나, 수도권의 경우 그간 학령인구 출생 및 유입에 따른 상대적 낙폭 차로, 학령인구 과소를 누적적으로 경험해 온 비수도권 지역 대비 인구밀도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에 속함

❍ 행정안전부가 2021년 지정·고시한 89개 인구감소지역과 비교해보면 거의 모든 인구감소지역이 10인/㎢미만의 학령인구 과소지역에 해당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 위기가 학령인구 부족을 통해 재확인됨

- 학령인구 과소는 교육인프라의 감소 및 서비스 저하와 정주기반의 붕괴 등과

연결되어 지방소멸을 가속하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

| 그림 2-7 | 행정안전부 지정 89개 인구감소지역 vs. 2040년 학령인구밀도 분포



출처: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김현미 외(2022:144)

□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과 연계한 교육전략 필요

❍ 인구감소시대가 도래하고 지역불균형 발전에 따른 인구의 차등적인 분포가 지방의 위기로 읽히는 현시점에서 학생수 감소와 학생 쏠림 현상 등은 이를 가시화하는 지표이자 지방소멸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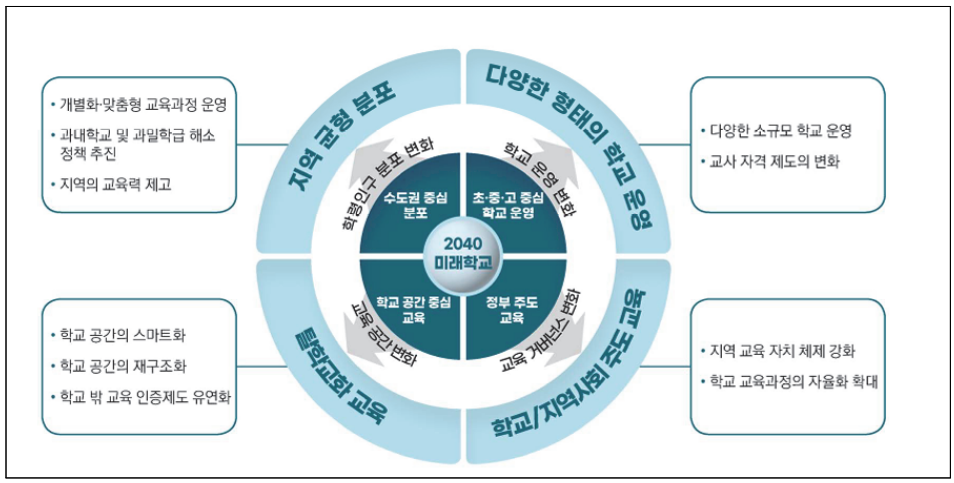
- 이른바 학교를 둘러싼 지역의 위기와 재편은 결국 학교 공간의 변화와 재구조화로 직결되는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와 교육격차 심화, 지역 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 봉착

❍ 결국 지역발전과 교육 간 선순환 형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는 곧 지역발전전략이자 교육발전전략으로써 지역발전이라는 동일 목표를 향한

종합적·체계적 접근을 요구함

- 이와 관련하여 김현미 외(2022)는 향후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학교 교육의 변화 방향으로 학령인구 분포와 학교 운영, 교육공간, 교육거버넌스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균형분포, 다양한 형태의 학교 운영, 탈학교화 교육, 학교 및 지역사회 주도의 교육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함

| 그림 2-8 |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학교 교육의 변화 방향



출처: 김현미 외(2022:278)

제2절 교육발전특구 정책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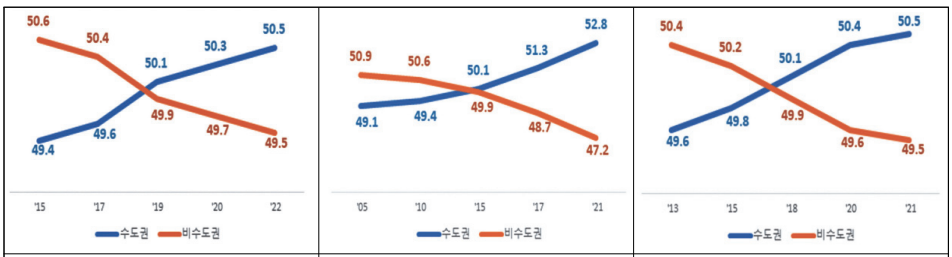
1. 교육발전특구 추진 배경

□ 그간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한계

❍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의 성과는 미진한 편임

-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은 2021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국토 인구 과반 차지하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GRDP, 고용비중 격차 확대
- 2018년 국토 현안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지역간 격차와 양극화, 자산격차 등에 대한 문제의식은 52.0%에 달함(대한민국정부, 2019)

| 그림 2-9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확대



인구비중(%)	GRDP 비중(%)	일자리 비중(%)

출처: 지방시대위원회(2023)

❍ 특히 2000년대 들어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수도권 기능의 과감한 분산과 특화발전전략 추진 등 비수도권 성장거점육성 등을 강조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수도권의 입지는 더욱 강화되는 양상(백일순·최민정, 2024)

- 2012-2018년 6년간 행정중심복합도시 20만 8,628명, 혁신도시 18만 2,127명 등 총 39만 755명의 인구가 유입되었는데, 이중 수도권에서 옮겨온 인구는 8만 3,645명(21.4%)에 불과(김태환 외, 2020)

- 비수도권의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발전전략은 선택적·집약적 발전 방식을 강조하다 보니 대도시 선호 및 다양성을 선호하는 4차 산업구조에 동승하기가 어려움(마강래, 2023)

❍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이지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관계가 양립 및 분리되었을 뿐 아니라 중앙집권적으로 정책이 추진되다보니 지방주도적인 고민과 혁신 창출이 부재하는 문제점 발생(김현호, 2022)
- 2022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예산 607.7조 원 가운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0조 원을 제외한 597.7조 원의 투자에 대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실정(기획재정부, 2022)

❍ 결국, 국토의 불균형발전과 더불어 저성장 고착화에 따른 지방경제는 악화일로 상태로 산업경쟁력 약화 및 정주여건 열악 등에 따른 지역인재 유출 등이 심화하면서 급기야 지방소멸의 위기 직면
- 급격한 산업재편 과정 속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제조업 위주의 전통 주력산업의 한계가 여실히 나타나는 가운데 교육 및 정주 환경의 차이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촉진
- 지방대학 출신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지속되면서 인력난 및 지역혁신 역량 저하 등 악순환 확대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위기 가시화(지방시대위원회, 2023)

□ 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개괄

❍ 윤석열 정부는 그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성찰하고 새로운 지역발전 방향과 전략을 수립·제시함
-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22. 4. 27.)을 토대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발표(23.7.10.)하고,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 목표를 담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23.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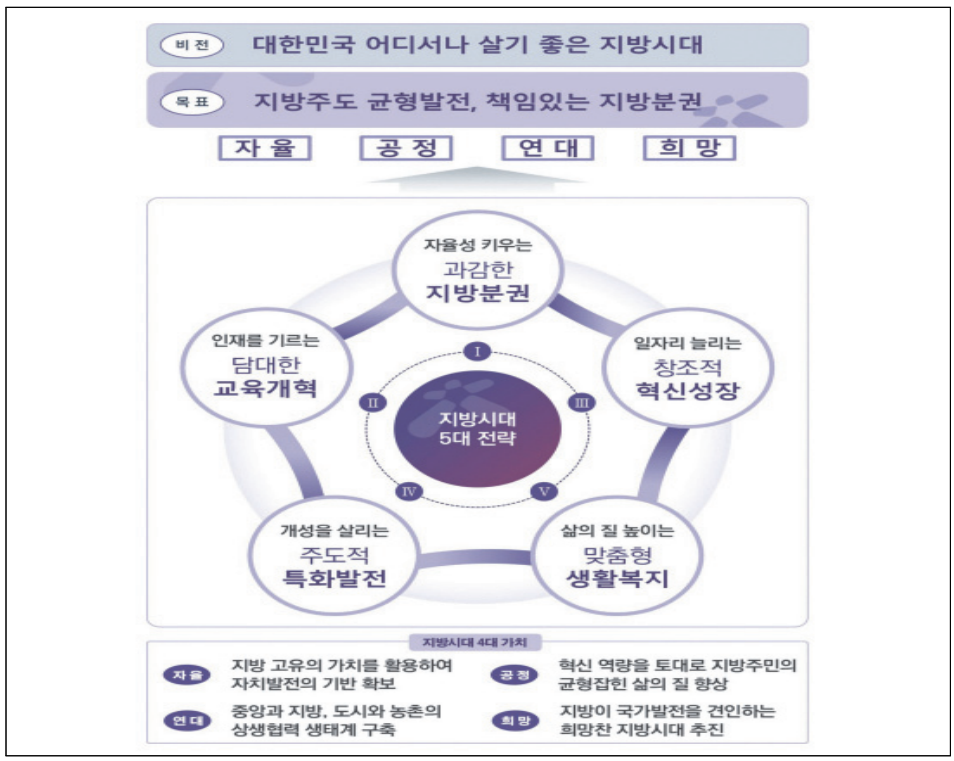
❍ 최근 수립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5년(2023-2027년) 단위 중기 법정계획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최초의 통합계획임

- 2004년 이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립되던 국가균형발전(지역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자치분권) 종합계획이 통합법 제정에 의거하여 하나의 계획으로 수립되기 시작

❍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비전 하에 4대 가치, 5대 전략 등을 제시함

-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이라는 4대 가치를 중심으로 구현을 위해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교육개혁,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복지 등 5대 전략 수립

| 그림 2-10 |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비전과 전략



출처: 지방시대위원회(2023)

○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따른 중점추진과제는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 특구 등 4대 특구 전략을 포함하여 총 9개로 구분

- 전반적으로 지방주도적이며 시장친화적인 발전 전략이 강조되고 있으며, 각각의 전략들은 현재와 향후 지방시대 미래상을 함께 제시하여 구체적인 성과도출 및 국민 체감도 향상 목표

| 표 2-2 | 지방시대위원회 9대 중점추진전략

구분	현재(AS-IS)	지방시대(TO-BE)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 및 지역총생산량의 과반 차지 • 1,000대 기업의 87%가 수도권에 위치	•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 •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신규 일자리 제공으로 지방인구 유입 촉진
교육발전특구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성장	•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고교 졸업후 교육·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유출 • 중앙정부주도의 획일적 사업 기준 운영 및 사업별로 분절적인 재정 지원	• 인재가 지역에서 양성·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공교육, 대학진학 취업 여건 개선 •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 재정지원으로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활성화 기반 구축	• 도심과 떨어진 외곽 위주의 개발사업으로 산업·문화 인프라와 접근성이 열악하여 지방에 기업·인재 유치 한계 • 부처별 개별사업 추진시 효과 저조	• 지방 대도시 도심에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주거·문화등 복합개발로 기업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부처별 각종 지원프로그램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 지역간 문화인프라 및 향유기회의 불균등 지속 • 진입장벽 낮은 단순 창업으로 소상공인 생존율 저조 및 지역산업으로 발전 한계	• 지역마다 특색있는 문화관광자원 발굴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균등한 문화향유 환경 조성 • 지역고유 자원을 활용한 로컬브랜드 발굴 육성하여 新유형의 지역산업 창출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지방경제성장	• 첨단산업 기업 인프라의 지역편중 • 지역은 산업생산거점 기능에 집중 • 전통제조업 산단의 낙후된 환경은 신산업 기업 입주에 장애	• 지역별 비교우위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주도 첨단산업 거점 구축 • 지역 혁신거점 기능(인재, 인프라) 강화 • 현대적 인프라 갖춘 첨단·신산업 산단
디지털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 지방 경제·사회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자체적인 디지털 생태계(기업·기술·인재) 조성 미흡	• 지방 주도의 경쟁력있는 혁신지구를 조성하여 인재양성과 기업성장 및 지역사회 디지털 활용 제고
생활인구 늘리기	• 개별적·무계획적 농어촌 공간의 난개발로 도시민의 이주 애로 및 인구 유출 확산	• 지방정부·지역주민이 지역 특성에 맞는 농어촌공간계획 수립하여 체계적 개발,

구분	현재(AS-IS)	지방시대(TO-BE)
	• 정주 여건 미비로 청년·은퇴자 등의 귀농 귀촌 수요 대응 한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인구소멸 지역에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타운조성으로 지방이주 수요타겟 정착 지원
킬러규제 일괄해소	• 부처관할권문제, 특혜우려 등으로 지역기업 애로사항 개선에 소극적	• 지역기업 투자 걸림돌을 끝까지 해소 •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통해 정부·지역·기업의 부담 경감, 단기간내 성과도출
분권형 국가경영 시스템	• 중앙 주도의 국정운영체제 • 자치단체의 획일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및 지역문제 개별대응으로 한계 • 권한 확대 요구에 비해 책임성 부족	• 기능 재조정으로 지방주도권 강화 • 권한 확대로 지방 특화서비스 제공 및 지역간 유연한 공동 대응 • 지방의 책임성 및 역량 강화

자료: 지방시대위원회(2023)

❍ 이러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수립 주체별로 시도 지방시대 계획, 중앙정부 부문별 계획과 별도로 복수의 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강조하는 4+3 초광역권 특화발전 계획으로 구성

- 4대 초광역권으로는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이 있고 3대 특별자치권으로는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이 있음

❍ 한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으로 별도의 시행계획이 2024년 4월 심의·의결되었고, 이는 당해연도 재정투입이 수반되는 실천계획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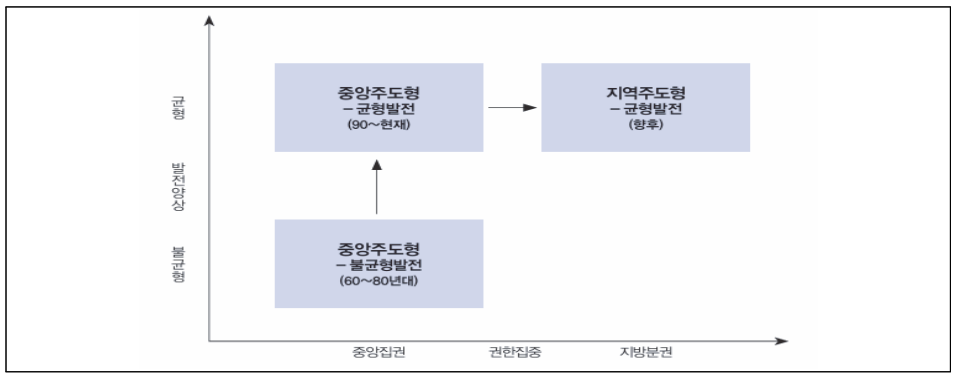
- 교육발전특구를 포함한 4대 특구는 지방시대위원회 당해연도 중점 이행과제에 해당(지방시대위원회, 2024)

□ 현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특성

❍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정책 성과가 미진했던 요인을 중앙집권적 정책추진에서 찾고 '지방분권적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을 강조(김현호, 2022)

- 중앙집권적 지역균형정책 추진에서 탈피하여 지방분권적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의 패러다임적 전환 추구

| 그림 2-11 |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출처: 김현호(2022)

❍ 이를 위한 제도적 토대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제정하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통합하는 분권형 균형발전의 법적 기반을 마련

- 지역실정을 반영하고 생활밀착형 정책을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주민을 잘 아는 지방정부의 자율권 확대 필요(지방시대위원회, 2023)
- 지난 20년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자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한 점은 의미있는 진전(송우경, 2023)

❍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는 관(官) 중심의 균형발전정책이 아닌 민(民) 중심의 균형발전정책을 지향하면서 시장친화적인 균형발전정책 추진 강조

- 공권력에 의해서가 아닌 시장주의 관점에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가 지방으로 이동하게끔 하는 것이 방점으로 기업과 개인의 이동을 촉진하려면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그들이 선호하는 교육 환경 및 정주요건 확충이 필수적(박기관, 2022)
- 기회발전특구를 비롯하여 앞으로 살펴볼 교육발전특구가 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 위한 법안」 마련 등을 통해 향후 제도적 기반이 더욱 강화될 전망

2. 교육발전특구 정책 추진 방향 및 내용

□ 교육발전특구 개념 및 접근

❍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임(교육부, 2023a:2)

- 그간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균형발전전략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교육 및 정주 여건 미비로 우수 인재 양성과 유치에 어려움 직면
- 지방 주체들 간 협력을 통해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 발전시켜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 추구

❍ 이는 지역 인재양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체계의 일환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

- 교육발전특구는 기회발전특구(지역경제활성화), 도심융합특구(지방활성화 기반 구축), 대한민국 문화특구(지방문화 생태계 조성) 중 지역 내 공교육 강화에 방점을 둔 정책임
- 각 특구 추진을 통한 궁극적인 목표는 “인재가 모이는 활기찬 지역 조성”, 즉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 강화에 있음

❍ 지역발전과 지역교육 간 상관관계를 전제로 지방정부 발전전략과 지역교육 간 연계 강화를 통해 기존 정책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함

- 이는 기존 정책이 가진 단편적·파편적 접근과 구분되는 종합적·체계적 접근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지역발전과 지역교육은 각각 분리된 정책영역이 아니라 마치 톱니바퀴처럼 물려 작동하는 하나의 대안
- 실제 균형발전정책의 다각적 접근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세종시 및 혁신도시 등으로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교육, 의료, 교통여건 등 쾌적한 정주기반 구축 미흡에 따른 생활만족도 저하는 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한 바 있음(국토교통부, 2017)

□ 정책 방향 및 핵심 전략

❍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지역 인재양성,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자체 지원 확대, 규제 합리화라는 4가지 기본 방향을 강조하고 있음(교육부, 2023a:3)

- 지역 인재양성: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대학에서 진학하고 취·창업하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 지원
- 공교육 경쟁력 제고: 공교육 틀 내에서의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 자율성 확대와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교육역량 강화
- 지자체 지원 확대: 지자체의 지원 및 교육정책 지역 권한 강화 등 특구 내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과 책무성 강화
- 규제 합리화: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규제 완화 및 특례 지원

| 그림 2-12 | 교육발전특구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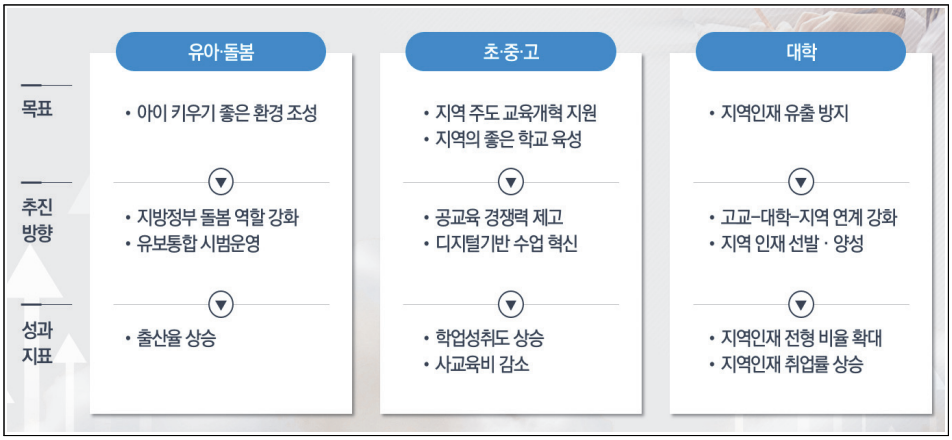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 https://www.moe.go.kr/sub/infoRenew.do?m=0320&s=moe&page=72789

❍ 상기한 4대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한 핵심 전략은 크게 지역의 주도와 책무성, 공교육 혁신과 유기적 연계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교육부, 2023a:3)
- 지역주도: 지역 주체들이 주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확산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공교육 혁신: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교육 혁신 방안 도출 및 시행
- 유기적 연계: 유아-유초등-고등교육의 전 과정에 걸쳐 지자체-교육청-지역 산업간 긴밀한 연계하에 정책 시행
- 지역책무성: 규제완화와 재정지원을 통해 특구를 지원하되 명확한 성과 목표에 따라 지방정부의 책무성 확보

❍ 여기에 유아·돌봄, 초·중·고, 대학 등 교육단계별 세부 목표 및 추진 방향, 성과 지표를 담은 중점 추진내용 또한 마련(교육부, 2023a:4)
- 교육단계별 접근을 통해 교육발전특구의 선순환 체계 구축 기대

| 그림 2-13 | 교육단계별 중점 추진내용



출처: 교육부(2023b)

❍ 각 단계에 따른 중점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유아·돌봄 단계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맞춤형 유아교육 및 돌봄을 추진하고 지방정부 돌봄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 맞춤형 유아교육·돌봄: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를 통해 학부모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 모델 발굴 및 확산
- 지방정부 돌봄 역할 강화: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하에 방과후·늘봄지원센터 운영 등 돌봄에 대한 지역 단위의 책임과 역할 강화

❍ 초·중·고 단계는 '지역주도 교육개혁 지원 및 지역의 좋은 학교 육성'을 목표로 지역 공교육의 강화, 학교 교육의 혁신, 학생 성장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 지역 공교육 강화: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학교별 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
- 학교교육 혁신: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방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지역 전체의 공교육을 내실화
- 학생 성장 지원: 학업, 진학, 직업교육, 최신 분야 학습 등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 성장을 종합지원

❍ 대학 단계는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목표로 고교-대학-지역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선발·양성을 추진

- 지역교육 중심 역할 수행: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혁신을 통해 대학이 지역교육 및 산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 지역인재 입학 전형 확대: 지역인재 특별전형 확대와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

□ 특례 지원 및 운영체계

❍ 교육발전특구는 지역맞춤형 특례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4가지 방침을 제시(교육부, 2023a:5)

- 상향식 지역교육 발전전략 마련: 특구 내에서 적용 가능한 특례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
- 타 특구와 연계: 지방시대 4대 특구는 물론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교육국제화특구 등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여건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

- 교육개혁과제 우선지원: 늘봄학교, 유보통합, 교육의 디지털 전환, 학교시설 복합화 등 교육개혁 과제와 연계를 통해 지역 공교육 경쟁력 제고에 중점
- 재정지원: 기존 정책사업 연계 및 특교·균특회계 등을 통한 지원

❍ 이처럼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다양한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고, 교육에 대한 지역투자 확대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시범지역 운영단계에서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을 우선 투입하여 특구 당 30-100억 원 내외 사업비 지원 검토
- 해당 지자체(교육청)는 특별교부금 지원액 이상의 대응자금을 투입하고 중앙정부 지원액, 지자체 대응자금 산업체 자금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금을 지자체 조례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방침상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대학 등이 협력하여 유·초·중등 대학교육 분야 중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집중적 육성이나 연계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관심 분야 중심으로 다양한 모델의 특구 운영 계획 수립이 가능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지역 특성에 따른 교육발전특구 운영 모델을 지역중심 돌봄·교육, 지역산업 연계, 혁신도시 연계 등의 중점 추진 분야별로 예시(교육부, 2023a)

| 표 2-3 | 지역 특성에 따른 교육발전특구 운영 모델(예시)

중점 추진 분야	주요 추진 내용(예시)
지역중심 돌봄·교육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지자체의 참여와 지원 확대 • 거점형 돌봄센터, 교통서비스 구축 등 지역 수요와 특성 반영한 돌봄체계 구축 • 지역의 책임교육·돌봄 환경 구축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및 학력 격차 완화 지원 •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인사 특례 운영 •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역산업 연계	• 고교-대학-지역 산업과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 개선 •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 강화 • 지역 산업의 특색에 맞는 인재양성 방안 수립 • 지역 산업 연계를 통한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 방안 마련 • 대학의 인적 물적 핵심역량 지역 환원 • 국가산단·기회발전특구 등 지역 산업전략과 교육정책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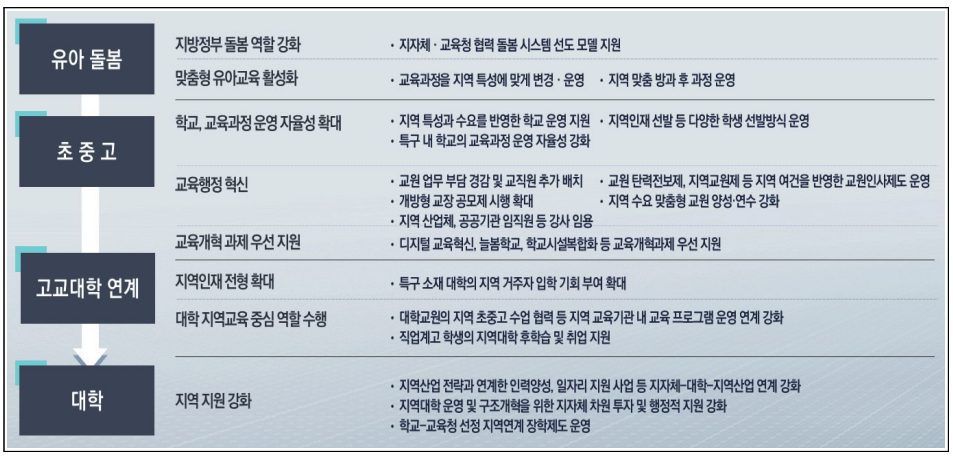
중점 추진 분야	주요 추진 내용(예시)
혁신도시 연계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 혁신도시-지역 교육기관 간 연계클러스터 운영 • 개방형 연구실, 오픈캠퍼스 등 공공기관-대학 연계 강화 •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 비율 확대 •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

출처: 교육부(2023a)

○ 특례의 경우, 유아부터 대학교육까지 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특구 지정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과 관심 분야 중심으로 앞서 제시된 영역별 특화된 모델을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특례 중심으로 적용 가능

- 즉, 지역별로 마련된 교육발전특구 운영방안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규제에 대해 특례 적용 가능

| 그림 2-14 | 교육단계별 교육발전특구 적용 특례(안)



출처: 교육부(2023b)

□ 지정절차 및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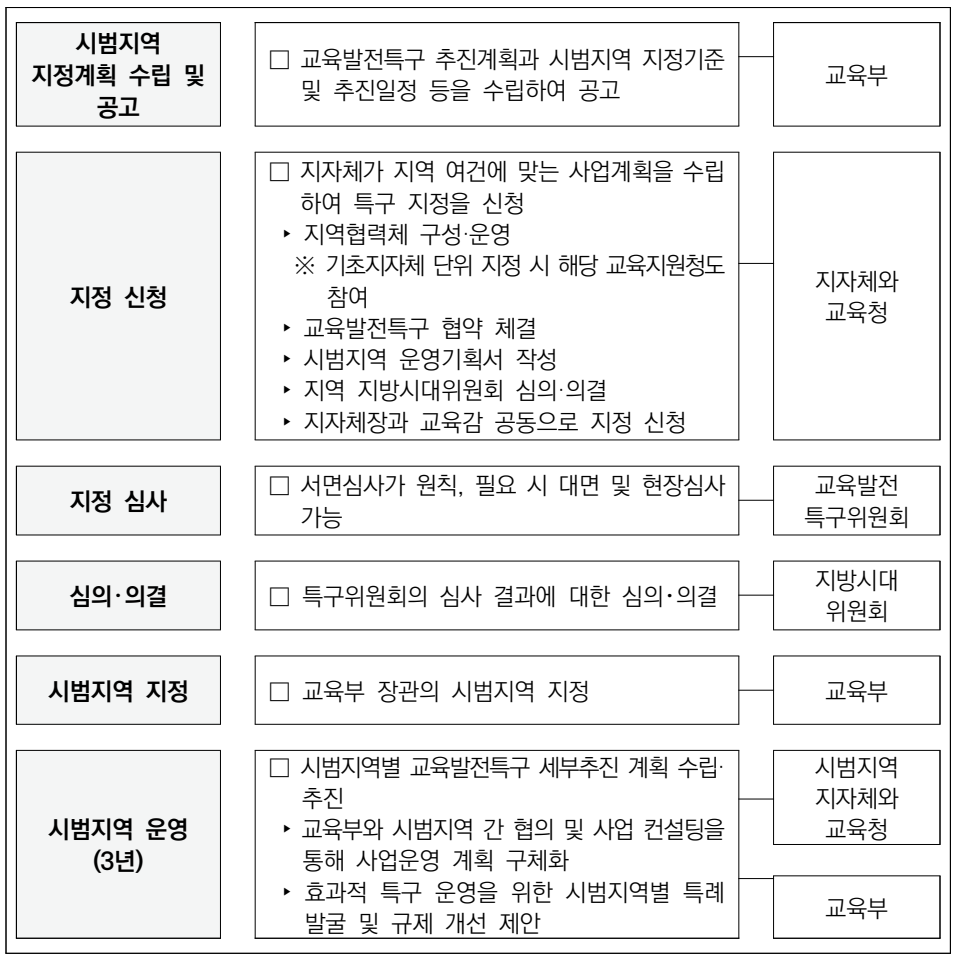
○ 교육발전특구는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

-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관련 공고 일정에 따라 특구를 희망하는 지자체와 교육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상향식 절차를 통해 추진되며 그 과정에서 특구를 희망하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교육청, 이전 공공기관, 기업, 대학 등이 함께 하는 지역 협력체 구성은 필수

-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아 특구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됨

| 그림 2-15 | 교육발전특구 지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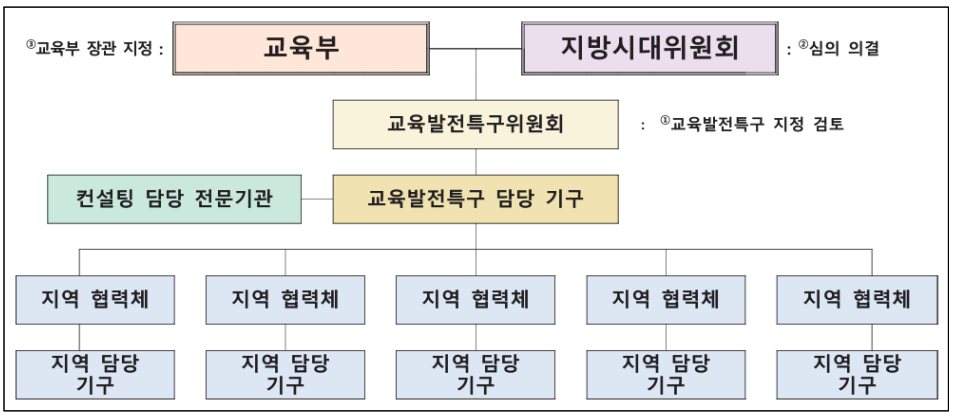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2023a:10)

❍ 운영 지원체계 상 주요 조직으로는 먼저 중앙차원에서는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교육발전특구 담당기구가 있음

- 특구 지정 및 운영, 평가 검토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위촉
- 교육발전특구 담당기구는 교육발전특구의 추진전략개발과 효율적 관리, 지역별 특성화 및 지속적 규제개선 등을 수행하며 교육부 내 담당 조직을 설치하고 지방시대위원회 및 관계부처, 시도지사협의회, 시도교육감협의회, 대교협 등과 긴밀한 협력 추진

| 그림 2-16 | 교육발전특구 운영체계



출처: 교육부(2023a:7)

❍ 지역별로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자체 내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담당 기구와 교육발전특구 운영·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지원하고 지역기업,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협력체가 있음

- 지역협력체는 특구를 신청한 광역(기초)지자체장-교육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지역별·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특구 운영 방안 등을 심의하며 기초지자체 단위로 지정시에는 해당 기초지자체장 참여가 필수적임
- 특히, 지역협력체는 지방시대 4대 특구 및 지역발전 사업 간 원활한 연계·협력 도모 차원에서 유사 협력체 조직과 지역위원회 통합 운영 가능

- 지역담당기구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기업, 대학 등과 협조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교육발전특구를 기획·운영하는 조직으로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자체 내 설치

3. 교육발전특구 지정 현황

□ 개요

❍ 교육발전특구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수도권 내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접경지역이 지정 가능

- 지역발전전략과 교육을 연계한 본 정책은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시정하고자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역경쟁력 약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및 수도권 내 특정 지역만을 정책대상으로 선별
- 수도권 내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인 경기 가평·연천, 인천 강화·옹진, 접경지역인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동두천·포천 등이 가능함

❍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간은 3년이며 시범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 시범지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적으로 정식 지정 검토

❍ 시범지역 신청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고 유형별로 신청 단위 및 주체 등이 상이함

- 신청 단위는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 등으로 구분하며 유형별로 복수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연합하여 공동 참여 가능
- 신청주체는 1유형의 경우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 2·3유형은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임

| 표 2-4 | 교육발전특구 유형 구분

유형	신청단위	신청주체
1유형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장-교육감
2유형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장-교육감
3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주: 3유형의 경우, 특별자치도가 지정하는 행정시도 신청 단위로 지정 가능
출처: 교육부(2023a)

❍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관련 공고 일정에 따라 특구를 희망하는 지자체와 교육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상향식 절차를 통해 추진되며 그 과정에서 특구를 희망하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교육청, 이전 공공기관, 기업, 대학 등이 함께 하는 지역 협력체 구성은 필수

-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아 특구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됨

□ 교육발전특구 1·2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

❍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 7월 말 현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총 56건이 지정됨

- 24년 2월 발표된 1차 시범지역에서 31건을 선정하였고, 이후 7월 발표된 2차에서는 25건을 지정함
- 이밖에 공모에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한 지역은 예비지정지역으로 두고 운영기획서 보완 등을 위한 컨설팅 제공

❍ 또한 시범지역은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선도지역은 3년의 시범운영 기간 이후 교육발전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되고, 관리지역은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 및 지원을 받을 예정임

- 1유형 21건, 2유형 6건, 3유형 5건 등 총 32건이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었고 나머지 24건은 매년 평가를 받는 관리지역에 해당

| 표 2-5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현황(1·2차 통합)

구분	건수	지자체명
1유형 (기초지자체)	41건	• (인천) 강화 • (경기) 고양, 양주, 동두천, **파주, 김포, 포천, 연천** • (강원) **춘천**, **원주**, **화천**, **강릉**,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 (충북) **충주**, 제천, 옥천, **진천-음성**, 괴산 보은 • (충남) 서산 **공주, 금산** • (전남) 광양, **순천** • (경북) **포항**, **구미**, **상주**, 칠곡, **울진**, 봉화, **김천**, **영주**, **영천**, **울릉**, 경산 • (경남) 남해
2유형 (광역지자체)	7건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세종
3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8건	• 충남(아산) • **경북(안동-예천)** • **경남(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 • **전북(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 전북(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 **전남(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 • 전남(여수,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해남) • **경남(의령, 창녕, 거창, 함양)**

주: 굵은글씨체는 선도지역에 해당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4a)와 교육부 보도자료(2024b)

❍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 소절에서는 총 56건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중 선도지역에 해당하는 32건의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봄

- 유형별로 지정현황을 살피되, 지정건수가 많은 1유형(21건)은 수도권·강원권·충청권·호남권·경상권 등 권역별로 구분하여 정리

4.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주요 사업 현황

□ 1유형: 기초지자체

❍ 먼저, 수도권 소재 기초지자체 중심의 1유형을 살펴보면 경기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은 경기 북부 특성에 따른 DMZ, 군인을 비롯해 문화예술, BIX, 드론 등 지역특화산업에 초점을 두고 지역연계 교육 제안

- 늘봄학교 확대 및 유보통합 시범모델을 발굴하고자 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에 따른 협약형 특성화고와 자공고 육성 등을 공통으로 추진할 계획

| 표 2-6 | 교육발전특구 1유형 선도지역 : 수도권

지역명	주요 제안 내용
경기 파주	• 다문화·책문화 특화 늘봄거점센터 조성 및 아동돌봄시설 확충 등 돌봄공백 해소 • 파주형 유보통합 모델학교 발굴 및 달빛 어린이 병원 확대 • 협약형 특성화고 및 자공고 2.0 육성 : 문화예술모델학교(신설) 육성 • 학생전용 통학버스 확대 운영 및 학생맞춤 공유학교 운영 • 파주시-고교-대학-기반산업 맞춤인력 양성(부트캠프 운영, RISE체계 연계) • 창업체험교육 거점센터·거점학교 육성 및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 고교학점제 및 DMZ 관광자원 연계 지역맞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경기 김포	• 스포츠·과학기술·외국어 특화 24시 돌봄센터 확충 및 안심동행 서비스 제공 • 아이키움지원 원스톱 지원 및 김포유아 더듬움(T.I.U.M) 프로젝트 확대 운영 • 디지털 기반 IB학교 확대 및 초-중-고 IB 학교 클러스터 조성 • 이주배경학생·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통합 기획 등 거점형 인재교육센터 운영 • AI 연계 자율형 공립고 2.0 및 해병대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 • 신산업연계 계약학과개설(시스템반도체공학과, 인공지능학과, 스마트 드론공학과)
경기 포천	• 포천형 유보 이음교육 시스템 구축 및 유·보·초 협의체 네트워크 구성 • 거점형 늘봄공간 마련 및 인성·창의 특화 프로그램 전면 시행 • 디지털 기반 포천 학생 맞춤형 교육 모델 운영 및 넘나들이 공동교육과정 운영 • 드론·반려동물 분야 3+2+2 교육과정 및 취업 연계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및 지역공동체 연계 강사 육성 • 포천꿈 독서 인문 공유학교 운영 및 찾아가는 사회정서 인문교육 지원
경기 연천	• 권역별 늘봄센터 구축 및 에듀택시·에듀버스 등 학생 전용 공영 통학체계 구축 • 지자체 협약형 자율형 공립고 2.0 신청 및 운영 추진 • 군인 및 대학생 인적자원 활용한 연천형 공유학교 운영 • 군인자녀 대상 맞춤형 교육지원 체계 마련 • 문화·관광 자원 활용 교육과정 개발 및 진로교육 온라인 플랫폼 개발 • 연천 BIX 산업 연계 직무·직업 교육과정 개발 및 BIX 산업교육지원센터 운영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4a)와 교육부 보도자료(2024b)

○ 강원권 내 선도지역에 해당하는 춘천, 원주, 화천, 강릉은 돌봄체계 구축을 크게 강조하여 화천형 늘봄, 춘천형 늘봄 우리봄내 동동, 강릉형 늘봄 네오볼라와 파인땡큐 등 지역특화형 돌봄체계 구상

- 또한 강원대, 한림대, 강원테크노파크 등 지역 소재 대학 및 관련 기관과의 교육연계, 지역 특성에 따른 산업인력 육성 등에 초점을 두고 사업 구체화
- 혁신도시와의 연계성 강화는 물론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여타 특구와의 관계 강조

| 표 2-7 | 교육발전특구 1유형 선도지역 : 강원권

지역명	주요 제안 내용
강원 춘천	• 춘천형 돌봄체계 '우리봄내 동동' 및 보행기준 동네단위 학습거점 구현 • 관내 대학의 자원을 초·중·고에 선도적으로 투입, AP 과정, 집중(어학 등) 교육프로그램, 강원 공유형(G-share)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 • 강원대, 한림대 등 관내 대학의 강원도 출신 지역인재 전형 확대 • 자공고, 협약형 고등학교 등 지역형 명품고 설립 및 IB 운영
강원 원주	• 직업계고(미래고, 영서고, 원주금융회계고) 대상으로 기업-공공기관-대학 협약을 통한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 • 아동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개소 및 유보통합 거점 구축 • 생애전주기 AI영재케어 프로그램 운영 및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강원 원주 산학융합지구 조성 • 강원혁신도시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및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확대
강원 화천	• 수요응답형(MOD) 스마트셔틀 확대 등 화천형 늘봄 프로젝트 본격 운영(화천학습관·사내미래인재양성관, 화천 진로·진학센터 운영) • 화천형 늘봄 Two 담임제(한국인+원어민) 배치 등 글로벌 인재 육성 • 국방산업(식품 등) 수요 연계형 자율학교(자공고 2.0) 전환 • 교육비 지원 및 양육친화주택 건설 등 교육+돌봄+주거 패키지 지원 •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인재 입학전형 확대(강원대 의대)와 연계한 인력 양성
강원 강릉	• 강릉형 돌봄시스템 구축(강릉형 네오볼라 돌봄시스템, 파인땡큐 초등 늘돌봄 등) • 공공기관 활용 초·중고 교육력 제고 및 지역산업 연계 고교(협약형 특성화고 및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 지·산·학·연 플랫폼 구축으로 산학연 연계사업 강화 및 지역인재전형 확대(강원테크노파크 신소재센터와 연계, 계약학과 신설·운영) •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통한 지역인재양성(천연물바이오, 세라믹신소재 등)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4a)와 교육부 보도자료(2024b)

❍ 충청권 내 충주, 진천-음성, 공주, 금산 모두 돌봄체계 강화와 지역 특성과 연계한 자공고 육성 등을 강조하는 한편, 지역 여건 등에 따른 차별화된 사업 제시
- 충주시는 충주 5대 전략산업(수소·바이오·자동차부품·승강기·이차전지)과 관련한 교육 및 고용연계 프로그램 추진
- 진천군과 음성군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중 유일하게 지자체 복합 사례에 해당하며 혁신도시 입지, 외국인 다수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사업계획 마련
- 공주시는 지역학, 문화관광 및 전통예술 등과 관련한 교과 체계 확보 강조
- 금산군은 아토피, 치유 등을 컨셉으로 한 안심학교 운영 확대하고 영유아 초등학생 대상으로 스마트팜 교육프로그램 개발 예정

| 표 2-8 | 교육발전특구 1유형 선도지역 : 충청권

지역명	주요 제안 내용
충북 충주	• 충주형 자공고 2.0 추진 및 기업 수요 반영 지역 특화형 교육과정·교원 확보 • 고교생 글로벌 인재육성 연수 지원 및 디지털·AI 새싹 캠프 등 운영 • Open Campus 및 충주 5대 전략산업 연계 창의·융합교실 운영 • 대학-기업 협력형 5대 전략산업 고용 연계 프로그램 추진 • 늘봄학교 '24년 하반기 전체 초등학교 확대
충북 진천-음성	• 옥동초 거점형 늘봄센터 신축 및 혁신도시 인프라활용 공유협력 돌봄시스템 마련 • 국책연구기관(KICE·KEDI)을 활용해 교육과정 개발 및 진천고·음성고 자공고 전환 • 지역선도형 학교지원센터 구축(지역선도형 학교 및 자율협약형고교 지원전담) • 혁신도시 외곽 읍·면 거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학생통학체계」 구축 • 「지역사회·산업 기반 초·중·고·대학 일관형 교육과정」 추진 • 외국인유학생 교육·구직매칭 등 K-드림실현 외국인유학생정책과 이주노동자 교육 • U턴인재 포함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규정 개정
충남 공주	• 공주형 늘봄 구축(웅진 싱크빅 지역기업과 연계한 학력증진프로그램 제공) • 국립공주대와 협력하여 국립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DigiCul IB교육 운영 중점 자율형 공립고 활성화(공주의 역사·문화를 활용한 지역연계 IB디지털인재 교육과정 단계적 지원) • RISE와 연계한 '로컬 헤리티지 인재' 양성 교육과정 운영
충남 금산	• 아이사랑 돌봄두레 등 돌봄지원센터-대학-마을교육공동체 연계 공동유아 위탁 프로그램 운영 및 교통 소외지역 야간버스 운영 •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상곡초, 제원중) 지원·운영시스템 확대 • 고교-대학(중부대)-기업(한국타이어, 대동인삼 등) 연계 자공고 및 특성화 교육 운영 • 영유아·초등학생 스마트팜 체험교육 개발·운영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4a)와 교육부 보도자료(2024b)

❍ 호남권 1유형 중 유일한 선도지역에 해당하는 순천시는 돌봄, 다문화 교육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순천만 국가정원, 기회발전특구, 정원 문화도시 등을 활용한 교육연계과정을 마련하고 웹툰, 영화 애니메이션 등 K-디즈니 순천 교육 추진
  - 이로써 순천 특화산업 중심의 인재양성과 정주환경 생태계 조성을 목표

| 표 2-9 | 교육발전특구 1유형 선도지역 : 호남권

지역명	주요 제안 내용
전남 순천	• 초·중·고 연계 IB 프로그램 도입 및 글로컬 자율형 공립고 2.0 추진 • 인접 학교 간 5개 권역 구축 및 초·중 공동교육과정 운영 • 기회발전특구·문화도시특구와 연계 및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 유·초·중·고 과정 연계 K-디즈니 순천 교육 추진 • 작은 유치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순천형 늘봄학교·토요 돌봄 운영 • 순천대 등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이주배경가정 어린이 한국문화교실 운영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4a)와 교육부 보도자료(2024b)

❍ 교육발전특구 1유형 중 선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상권 지역은 총 8곳이며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확대 운영 등을 공통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각 지역 특성 및 자원을 연계한 교육 전략을 제시
  - 포항시는 이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 고교-대학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포항형 우수인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
  - 구미시는 산학협력형 자공고 모델을 창출하고 금오공대와의 연계를 통해 해외인재 양성 강화
  - 상주시는 상산전자고등학교 이차전지학과 개설하고 현장 일체형 교육과정 개발 등을 통해 이차전지 인력 양성에 적극적임
  - 울진군은 울진원자력수소 U시티 조성을 위한 경북도, 울진군, 대학, 국가산단 기업, 특성화고 협력 강조
  - 김천시는 혁신도시 및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교육전략 마련
  - 영주시는 선비형 IB형 교육과정 시범운영을 도입하는 한편 첨단베어링, 전통장분야에 특화된 교육기반 조성 제안
  - 영천시는 군(軍)자녀 특별전형과 말산업 특화교육과정 편성 과정등을 마련

- 울릉군은 1인 1외국어 1예체능 지원하는 한편 생존수영교육, 생태교육, 해양안전교육 등 지역 특색 섬마을 체험교육을 운영할 예정

| 표 2-10 | 교육발전특구 1유형 선도지역 : 경상권

지역명	주요 제안 내용
경북 포항	• 포항형 돌봄 시스템 구축(근거리 유치원·어린이집이 유보통합 방과후 과정 공동 운영) • 포항고, 포항여고 자공고 지정 및 이차전지 인력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 (가칭)효자중 학교복합시설 등 학교복합시설 추진 •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을 통한 미래형 교육체제 구축 • 포항형 신산업 분야 고교-대학-지역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포항제철공고 3년+선린대 2년+한동대 2년 연계 교육과정 운영) • 포항형 우수인재 인센티브 확대
경북 구미	• 학교복합화사업 연계 '늘봄학교' 시설 확충 및 구미형 유초연계 이음학기 시범 운영 • 산학협약형 자공고 모델 창출 및 공립대안형 중·고 통합운영학교 신설 • 고교실습학년제 취업완성형으로 강화 및 기업공유형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지원 • 대학미진학 학생 대상 1년간 사회진입 프로그램인 시립형 POST학교 모델 창출 • 금오공대 K-GKS 확대로 해외인재 양성 및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 구축 • 구미소재 대학간 '협약형 편입제도' 도입 및 대학-기업체 협약 통한 모듈형교육과정 신설
경북 상주	• 거점형 유보통합 운영 모델 개발 및 지자체·교육지원청 늘봄 협의체 운영 • 상주여고 자공고 전환 및 AI 학습교과서 수업 진행 등 디지털 온 선도학교 운영 • 읍·면지역 초·중·고 대상 통학·방과후 활동 지원 위한 온마을 스쿨버스 운영 • 상산전자고등학교 이차전지학과 개설 및 협약형 특성화고 전환 추진 • 현장 일체형 교육과정 개발, 재직자 직무심화과정 추진으로 이차전지 인력 양성
경북 울진	• 늘봄통합센터 구축(3개소 추가 예정) 및 '울진형 늘봄학교' 전학년 확대 추진 • 울진군-울진고-대학(계약형 원자력수소학과)-국가산단 입주 기업을 연계한 자공고 육성 • 경북도, 울진군, 대학, 국가산단기업, 특성화고 협력통한 울진원자력수소 U시티 조성 • 학부모-학생을 위한 어린이 문화센터 건립 등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 • 경일대 울진캠퍼스, 포항공대 등을 활용한 오픈 캠퍼스 설치 • 울진형 하이터치, 하이테크 학교의 선도 모델 구축 및 확산(지역교원제를 연계하여 에듀테크 소프트랩 확대 및 디지털 기반 예비·현직 교원 양성) • 원자력, 수소 등 특화산업 관련 앵커기업 협력사 유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경북 김천	• 혁신도시 우리동네 돌봄터 및 구도심 맘지원센터 운영(아픈 아이 긴급 돌봄, 365일(24시) 어린이집 운영 등) • 미래생명과학·정보보안·지역산업 분야 공공기관 연계 자공고 2.0 추진 • 초등학생 대상 디지털 교재 개발 지원 및 김천시민 디지털 교육 확산 • 스마트물류기업 연계 선취업 후진학 거버넌스 구축 및 교육과정 개발 특성화고 지원 • 해외인재 지원 체계 구축(한국어학당, 문화탐방, 김천 문화의 이해 교육과정 운영)

지역명	주요 제안 내용
경북 영주	• 영주형 거점 늘봄센터 운영 및 체육특화 돌봄 공간조성 • '선비톡' 인성지도사 양성 및 온마을 밥상머리교육, 찾아가는 인성교육 확대 • 4개 권역별 외국어 교육특화 프로그램 강화 및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운영 • 인성(초등) 및 실사구시(중등) 교육과정 등 선비형 IB형 교육과정 시범운영 • 첨단베어링 국가산단조성 및 전통 장을 활용한 K-푸드 세계화 등 특성화고 지원강화 • 지역연계 교육과정 등 자율형 공립고 2.0 전환 추진 • K-U시티, 기회발전특구 사업 연계 영주 Y테크존(첨단소재·부품·장비산업 신성장 거점) 조성
경북 영천	• 유보통합 교육환경 구축 및 유아 성장단계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영천형 지역상생학교 활성화 및 자유학구제 강화 등 작은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문화 및 언어·학력신장 교육, 가족 상담 등 다문화가족 돌봄서비스 구축 • 군(軍)자녀 특별전형 및 Senior-ROTC 특화프로그램 등 국방부 협약형 자공고 신청 및 운영 추진 • 3+2+2(특성화고+폴리텍대+대구대) 과정을 통한 스마트모빌리티·로봇 융합 인재양성 • 말 산업 및 지역 사회복지 특화교육과정 편성 통한 지역산업체 취업 지원 • 외국인 유학생 취업연계 계약학과 신설 및 J턴 신중년 맞춤 평생직업파트너 교육
경북 울릉	• 학교복합시설 연계 늘봄학교 기반 구축 및 도심지 내 거점형 늘봄시스템 구축 •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지역특화 교육과정 운영 및 AI·SW 중심 디지털 혁신) • 1인 1외국어 1예체능 지원 및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논스톱 교육비 지원 • 지역 특색 섬마을 체험 교육 운영(생존수영교육, 생태교육, 해양안전교육 등) • 한동대(디지털 관광, 그린에너지), Hydra Energy(해수 활용 수소생산) 등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프로젝트 협약 • 생태·관광산업 및 항공산업 연계 지역 인재 양성 및 취업 연계 지원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4a)와 교육부 보도자료(2024b)

□ 2유형 : 광역지자체

❍ 다음으로 신청 단위가 광역지자체인 교육발전특구 2유형 선도지역으로는 비수도권 소재 중추도시에 해당하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이 선정되었고, 특별자치도로서는 제주도가 포함됨

- 수도권 소재 서울, 인천, 경기는 지정지역에서 우선 배제

❍ 2유형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자치 범위 내 모든 지역이 지정 범위인 만큼 향상된 교육 여건을 기본 확보를 강조하되, 상대적으로 지역경쟁력이 우위인 지점에 대한 특화전략을 제안하고 있음

- 부산시는 부산형 학력신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어디서나 말할 수 있는

영어하기 편한 도시 조성과 (가칭)부산국제K-POP고 설립 등을 제시
- 대구시는 국제인증 교육과정(IB) 특구를 운영하고 수성 알파시티와 연계한 교육전략, 의·약대 등 인기학과 지역인재 입학 비율 확대 등을 마련
- 광주시는 조선대 첨단 반도체 융합전공을 신설하고 복합쇼핑몰 유치 관련 직업계고·대학 교과 확대하는 한편, 초등 학부모를 위해 10시 출근을 허용한 중소사업장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구체적 전략 제시
- 대전시는 지역대학·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자공고를 육성·지원하고 대전시-교육청 간 연계·협력을 위한 상시 조직 신설 예정
- 울산시는 울산공업고등학교를 지역기반산업 분야의 협약형 특성화고로 운영하고 정년 시니어를 활용하여 돌봄시스템 확충
- 제주도는 교육과정 범위 내 일부 교과를 영어로 진행하는 등의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 운영하고 돌봄 및 안전에 관련한 사업 확대 추진

| 표 2-11 | 교육발전특구 2유형 선도지역

지역명	주요 제안 내용
부산	• 0세~초6까지 공공에서 책임지는 부산형 통합 늘봄 • 부산형 학력신장 프로젝트, 직업교육·인성교육 강화 및 교육기회보장(학습지원 계절학기 도입, 학교-대학-지역을 연계한 교과심화학습, 자기주도학습 강화) • 어디서나 말할 수 있는 영어하기 편한 도시 조성 및 (가칭)부산국제K-POP고 설립 및 외국인 유학생 맞춤 교육과정 운영 • 대학의 강점·특성화 영역에 따른 연합대학 체제 개편 • 지역산업 맞춤 해외대학 연계 글로벌캠퍼스 운영
대구	• 지자체 연계형 지역늘봄 및 영유아 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유보통합지원 전문기관 설립) • 국제인증 교육과정(IB) 특구 운영, 학생선택권 보장 및 IB 대입전형 도입 • 에너지, 인공지능, 첨단 의료 등 창의융합교육 특화과정을 운영하는 자공고 설치 • 수성 알파시티(로봇·모빌리티 산업, 스마트팩토리 산업, 팻밀리 산업 등)와 연계한 ABB 산업 특화형 협약형 특성화고 등 운영 • 디지털 인프라 확충(인공지능 교육센터 및 AI·디지털 융합 혁신 플랫폼 구축) • 의·약대 등 인기학과 지역인재 입학 비율 확대 및 글로컬 U-Complex 조성
광주	• 인기 학과(의치약, 간호학과 등) 지역인재전형 확대, 단계적으로 전체 학과로 확대 •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및 광주형 마이스터고 지정 추진 • 학교 스스로 지역사회, 학교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교 교육 혁신 • AI 영재고 설립 등 에듀테크 활용 기반 구축 • 반도체, 에너지, 관광 등 지역 대학과 지역특화산업 간 교육과정 연계(조선대 첨단 반도체 융합전공 신설, 복합쇼핑몰 유치 관련 직업계고·대학 교과 확대 등)

지역명	주요 제안 내용
	• '온마을 다봄터' 민간위탁 늘봄지원기관 선정 등 교육청·지자체 협력 돌봄 구축(초등학부모를 위해 10시 출근을 허용한 중소사업장에 장려금 지급) • 시 전략산업과 연계한 취업·창업·주거지원 및 일자리 확대 • 교육국제화 특구 연계 및 지역 정주형 해외 인재 유치 • 학교복합시설 구축 및 학교시설 공유
대전	•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및 지역산업 맞춤형 대전희망인재 인증제 추진(나노·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전략산업 기반 충남기계공고, 유성생명과학고 등 육성) • 공동훈련, 기업현장훈련의 1+3 실무기반 인재양성 프로그램 마련 • 거점형 늘봄센터 구축 및 인접 초등학교를 하나의 '늘봄지구'로 조성 • '프로그램 신청→차량 지원→프로그램 운영→안심귀가' 늘봄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지역대학·대덕연구개발특구 연계 자공고 2.0 및 특성화고 학생 원스톱 서비스 지원 • 창업지원·복합주거공간 연계 미래혁신 청년숙사 운영 및 청년통학버스 운영 • 혁신지원본부 및 대전교육발전특구지원연구단 신설 통한 대전시-교육청 간 연계·협력
울산	• 울산형 책임돌봄프로젝트로 정년시니어활용 품앗이돌봄과 기업협력 거점형돌봄시설 설치 • 지역사회 대학과 연계한 로봇·코딩 등 방과후 특성화, 지역특화 유보통합모델 개발 및 선도유치원 운영 • 교육과정 연계 산업체 체험 프로그램 '울산아이꿈터' 운영 및 지역연계 교육과정 개발 • 울산지역 10개 공공기관의 프로그램을 채용형 과정으로 개편해 고졸 취업 활성화 • 울산공업고등학교를 지역기반산업 분야의 협약형 특성화고로 운영 • 울산대 지역인재 비중 확대 및 고교-대학 연계 공동 교육과정 운영 • 도심 및 주력 산업단지 6곳에 시공간 초월형 멀티캠퍼스(UbiCam) 조성
제주	•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 운영(교육과정 범위에서 일부 교과를 영어로 진행하는 등 글로벌역량 학교 운영) • IB 프로그램 운영 학교 확대 및 제주대학교 연계 과정 운영 •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50% 이상 확대 및 수능 없는 학생부 중심 전형 선발 • 항공우주·해양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추진(한림공고, 성산고) 및 교육혁신 • 찾아가는 우리집 선생님, 다문화가족 통합협의회 운영 등 맞춤형 다문화 교육 지원 •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환경 조성 및 AI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 초등주말돌봄센터 '꿈낭' 운영 및 학교 밖 기관 연계 늘봄 추진 • 안전한 등·하굣길 '통학올레' 운영 및 자치경찰을 (가칭)학교안전경찰관으로 배치 •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 복지 지원 및 제주형 촘촘복지(제주가치통합돌봄) 시행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4a)와 교육부 보도자료(2024b)

□ 3유형 :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 3유형은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를 신청 단위로 하는데, 생활권 공유 및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광역지자체 내 다수의 기초지자체로 구성됨

-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지 5개 지정 사례에 속하는 기초지자체 수는 총 25곳임

❍ 3유형 또한 다른 유형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늘봄학교 확대 및 유보통합 모델 개발 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지역특성 및 지역특화산업 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연계전략 마련

- 경북은 HEMP 규제자유특구와 바이오생명국가산단 활용, 경남은 우주항공 및 미래자동차, 전북은 생명산업, 이차전지, 에너지수송, 전남은 에너지, 해양관광, 미래농생명산업 등과 연계지점 확보

❍ 또한 동일한 광역지자체라 하더라도 인접지역 간의 관계, 권역 구성 등에 따라 교육 연계전략은 차이를 보임

- 예컨대 경남도의 경우 3유형 선도 사례는 2개로 동부권(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과 서부권(의령, 창녕, 거창, 함양)으로 구분 가능
- 전자가 지역특화산업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한 교육체계 마련이 중심이라면 후자는 정주성 강화를 위한 4개 군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로컬유학 교육마을 클러스터 조성 등을 강조

| 표 2-12 | 교육발전특구 3유형 선도지역

지역명	주요 제안 내용
경북 (안동-예천)	• 경북형 돌봄중앙센터 구축 및 인근 초등학교(10개교 정도) 하나의 돌봄지구로 구성 • 인구감소지역 중학교 대상 24시간 학교 책임제 운영 • IB교육과정 시범도입 및 미래산업 및 메가트랜드 변화 반영한 미래형자율학교 운영 • HEMP 규제자유특구, 바이오생명국가산단 등 활용 고교-대학-지역기업 연계 • K-드림 비자지원센터·경북가족센터 운영 등 입국-교육-정주 해외유학생 Non-Stop 지원체계 마련
경남 (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	• 늘봄 확대, 주거·취업 지원 및 해외유학생 유치 등 매력적 청년 정주여건 조성 • 전략산업별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및 우주항공·미래자동차 분야 취업지원금 지급 • 기회발전특구 앵커기업의 지역 졸업생 채용 협약 체결 등 앵커기업 참여 확대 •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GADIST), 우주항공방산연구소 등 연계진학 및 고교 교육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 • (진주·사천·고성) 우주항공분야 기업연계 협약형 특성화고 단계적 추진 등 직업교육혁신지구 기반 활용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

지역명	주요 제안 내용
전북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 유보 이음교육 운영 및 지역늘봄협의체 구성·운영 통한 지역 책임 돌봄시스템 구축 • 에듀테크활용과 미래형수업혁신 위한 전북미래학교 운영, IB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 지역특화산업 연계 특성화고 교육과정 재편 및 직업교육혁신지구 플랫폼 구축 • 지역-대학 협력사업 지원 및 지역산업 연계 일자리 창출(익산-생명산업기반 고등연계, 남원-서남대 폐교부지 활용, 완주-이차전지, 에너지 수송 관련) • 전북특별법(제63조) 외국인 체류자격 등 특례 활용, 유학생 유치·정주유도 위한 주거비 등 지원
전남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	• 단위학교형·학교돌봄터형·마을연계형 늘봄학교 등 촘촘한 지역연계 늘봄 체제 구축 • 전남형 공동교육과정 및 IB 프로그램, 전남독서인문교육 등 지역단위 공동·연계교육 • 지역특화 자율형 공립고 2.0과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및 가칭 전남국제직업고 신설 • 에너지, 해양관광, 미래농생명산업 등 지산학 연계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한국어, 이중언어 교육 운영 및 이주배경대상자 전형 확대 • 전남외국인거점센터 구축과 거점형 외국인진료센터 및 전남해외인재사무소 운영
경남 (의령, 창녕, 거창, 함양)	• 1군 1자공고 신청·운영 추진 및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 2(의령, 창녕)+2(거창, 함양) 지역단위 연계교육 및 4개 군 공동교육과정 운영 •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등 대학없는 지역 공유대학 현장 캠퍼스 운영 • 초등특화 교육+주거공간 지원+정주지원의 로컬유학 교육마을 클러스터 운영 • 산업중심의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및 RISE체계 연계 공동프로그램 운영 • 원스톱 통합복지 지원 및 5천만 국민 거창/함양/의령/창녕 살아보기 프로젝트 추진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4a)와 교육부 보도자료(2024b)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 지역발전과 교육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 교육은 한 인간이 그가 속한 문화권에 알맞은 삶의 방식을 배우는 사회화 과정으로 개인의 적응과 성취를 지원하는 동시에, 양극화나 불평등과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김병욱, 2021)
- 교육은 문화전승, 사회이동촉진, 사회혁신 및 통합 등의 사회적 기능 담당하며 이는 곧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도 이바지

❍ 교육을 통한 사회의 존속과 혁신발전은 국력(國力) 향상과 상관관계 형성
- 교육을 통한 양질의 인력 확보는 국가의 압축적 경제성장을 견인한 주요 요인 중 하나

❍ 지방시대, 교육과 발전의 관계는 지방 차원에서도 유효하며 지역불균형 발전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개혁은 불가피한 선택
-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기업유치과정에서 지역의 교육 및 정주여건 미비는 우수인재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교육부, 2024a)
- 우수한 교육환경은 지역의 정주만족도와 직결하며 풍부한 인적 역량 확보를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전략으로써 기능 가능

❍ 지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 국토 공간의 발전전략은 다각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적합한 교육 연계 지역발전전략 확충을 통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정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 필요
- 그간 교육, 복지, 지역발전 등 정책 분야별 단절적·파편적 접근의 한계가 분명했던 만큼 전문화된 정책영역 간 연계 및 융합을 통해 정책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접근이 필요함

2. 전 생애 교육을 매개로 한 지역발전전략 구체화

❍ 교육발전특구는 지역혁신체계나 이를 강화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등 지역과 연계한 대학 교육 중심의 기존 발전전략과 달리 전 생애 교육을 두루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유의미

- 대학이라는 특정 시기의 정책 범위에서 벗어나 돌봄, 초중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접근을 통해 지역의 정주 여건 확충 및 발전 기반 조성을 도모함

❍ 실제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된 시범지역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지역 초중고-대학 간 연계 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발전전략을 제시

- 교육단계별 중점 내용 및 우선 사업 등에 대한 지역별 구체적인 제안 및 검토를 통해 지방발(發) 교육개혁 가시화

❍ 특히, 교육발전특구는 공교육 혁신에 방점을 두고 지역 주도하에 다양한 지역 주체간 유기적 연계와 책무성 강화, 중앙의 실질적 지원 뒷받침이라는 원칙하에서 추진되는 정책인 만큼 추진 의의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큼

- 과감한 교육 특례 적용 등을 통해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공교육의 한계를 뛰어넘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간 연계를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의 실효성 제고
- 이는 결국 국가주도 인재양성(NHRD)이라는 중앙집권적 정책 환경에서 벗어나 지방의 발전 및 분권에 기여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시스템을 구축하는 토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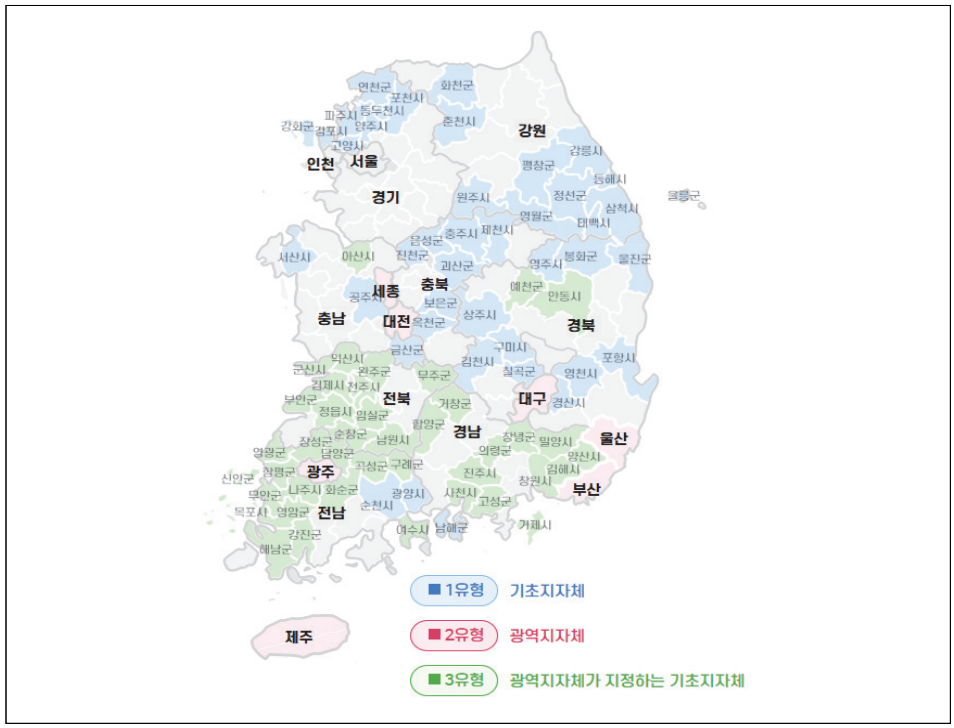
3. 교육발전특구 연착륙을 위한 개선 과제

○ 지역 주도 교육발전특구 도입에 따른 의의와 기대만큼 우려 또한 존재

○ 먼저, 특구의 지정 개수와 관련하여 1,2차 시범지역 발표 이후 전국 상당수의 지역이 교육발전특구에 지정된 상황으로 특정 목적으로 특별히 설치한 구역을 의미하는 특구의 정의 자체가 희석

- 지정지역으로 원천 배제되는 수도권을 차치하고 비수도권 내 과반의 지역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어 특구 지정을 통해 기대되는 정책 추진의 선도성이나 희소성 등이 상대적으로 떨어짐

| 그림 2-17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현황(1·2차 통합)



주: 예비지역으로는 1유형의 가평, 홍천, 청주, 영동, 증평, 경주, 문경, 통영과 3유형의 전남(완도, 진도,고흥, 보성, 장흥) 등이 지정

출처: 교육부 https://www.moe.go.kr/sub/infoRenew.do?m=0320&s=moe&page=72789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 지정 규모(개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 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현황과 추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단계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음(교육부, 2023a)

- 따라서 교육발전특구는 선도와 관리, 예비지역으로 구분되며 연차평가와 추가 컨설팅 등 계획의 성과관리 및 지원에 차등을 두고 있음

❍ 그러나 결국 문제는 '너도 나도 특구'라는 특구 난립에 따른 내실 부족 우려로 한정된 예산 배분의 비효율성, 향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한 허용 여부 및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고, 정책 파급의 부작용이나 변수 발생에 따른 대처 또한 난감

- 특구 아닌 지역이 없고, 각각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3년간의 한시적 운영 기간에 따른 선도지역 사례의 전국 확산 방침은 사실상 무의미함
- 지역간 교육격차뿐만 아니라 지역내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 또한 잠재된 만큼 제대로 된 정책관리와 평가가 필요

❍ 다음으로 교육과 지역발전을 연계한 교육발전특구라는 획기적 정책 도입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특구 전략이 수립되지 못한 한계 발견

- 교육발전특구 전략들이 어느 지자체나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오랜 화두들로 지역별 차별성이 부재하다는 것임
- 차별적 교육발전특구 전략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지역발전전략과 연계된 교육발전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지방 교육청의 기존 사업들 중심으로 특구 전략이 수립된 경우가 많음

❍ 마지막으로 교육발전특구의 4대 기본방향 중, 유기적 연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반행정 및 교육행정 각계에서 일고 있음

- 교육발전특구의 유기적 연계는 유아-유·초등-고등교육의 전 과정에 걸쳐 지자체-교육청-지역산업간 긴밀한 연계하에 정책이 시행되도록 하는 것인데, 교육계에서는 국가책임교육 성격이 강한 유·초·중등교육의 책무성을 지나

치게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반행정이 교육행정을 지나치게 간섭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없는지,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 간의 갈등이 유발되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을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제시(정성수, 2024)

- 교육발전특구 지정 이후 해당 지자체의 지정 축하 홍보전을 바라보며, 지금은 치적 홍보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특구 성공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임을 지적하기도 함[1)]
- 지자체-교육청-지역산업간 긴밀한 연계하에 정책이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유기적 연계의 기본방향인데, 교육발전특구 전략들의 차별성 부재는 교육발전략 수립시 유기적 연계에 의해 사업이 기획되지 못했다는 의미도 있음

❍ 특히, 3년이라는 시범운영 기간 내 특구 발전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이 과연 충분할 것인가가 염려되는 가운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유형별 성공모델 제시가 필요한 시점

- 선택과 집중의 정책 기조 하에서 지역 고유의 모델이 정립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

1) 특구란 '특별히 설치한 구역'을 의미하는데, 특구가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은 당연한 일이며, 특구전략으로 제신된 유보통합, 늘봄환경, 디지털기반, 특색형교육, 글로벌다문화, 인문교육 등 6개 키워드는 어느 지자체나 방점을 두고 있는 교육정책의 오랜 화두라서 지역 차별성이 부족함.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지역발전을 위한 마중물임에는 틀림없지만, 지금은 치적 홍보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특구 성공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임 (김현규 포천시 의회의원 기고문, 프레시안 2024년8월6일 기사 中)

제 3 장

유형 Ⅰ - 유아돌봄형 : 강원도 화천군

제1절 유형 및 교육발전특구 사업 개요

제2절 지역여건 분석

제3절 관련 정책동향 분석

제4절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03 유형 Ⅰ – 유아돌봄형 : 강원도 화천군

제1절 유형 및 교육발전특구 사업 개요

1. 유형 개요

□ 교육부 사업신청 기준에 따른 유형

○ 강원도 화천군의 경우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특구를 신청하는 '기초지자체(1유형)'에 해당

□ 교육단계에 따른 유형

○ 교육발전특구는 유아·돌봄, 초·중·고, 대학으로 구분하여 교육단계별로 세부 목표, 추진방향,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 강원도 화천군의 경우 교육단계별로 보았을 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유아·돌봄형'으로 구분됨

○ 유아·돌봄형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맞춤형 유아교육 및 돌봄을 추진하고 지방정부 돌봄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 맞춤형 유아교육·돌봄: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를 통해 학부모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 모델 발굴 및 확산
  - 지방정부 돌봄 역할 강화: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하에 방과후·늘봄지원센터 운영 등 돌봄에 대한 지역 단위의 책임과 역할 강화

□ 지역 특성에 따른 유형

○ 교육발전특구는 지역특성에 따라서도 지역중심 돌봄·교육형, 지역산업 연계형, 혁신도시 연계형으로 운영 모델이 구분되어 있으며, 강원도 화천군의 경우 '지역

중심 돌봄·교육형’으로 분류됨
- 지역별로 마련된 교육발전특구 운영방안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규제에 대해 특례 적용

❍ 지역특성에 따른 교육발전특구 운영 모델 중에서 지역중심 돌봄·교육형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자체의 참여와 지원을 확대하고, 거점형 돌봄센터, 교통서비스 구축 등 지역 수요와 특성 반영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음
- 그 외에도 지역의 책임교육·돌봄 환경 구축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및 학력 격차 완화 지원,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인사 특례 운영,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을 함께 추진

2. 특구 사업 현황

1) 특구 운영 방향

□ 화천형 교육&돌봄 선도모델과 교육 개혁과제를 동시에 실현하는 교육발전특구 조성

❍ 2015년 전국에서 최초로 교육복지과를 신설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교육복지 정책을 바탕으로 완성형의 온종일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고, 아이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조성
- 지역의 미래를 위해 아이들을 잘 키우고,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가 주도하여 파격적인 돌봄 혁신에 기여

❍ 화천형 교육&돌봄 선도모델과 교육 개혁과제를 동시에 실현하는 교육발전특구 조성의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
- (비전) 화천형 교육&돌봄 선도모델과 교육 개혁과제 동시 실현
- (목표) 교육비, 주택가격 등 저출생의 경제적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교육개혁 과제 실현을 통한 아이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 그림 3-1 | 화천군 교육발전특구의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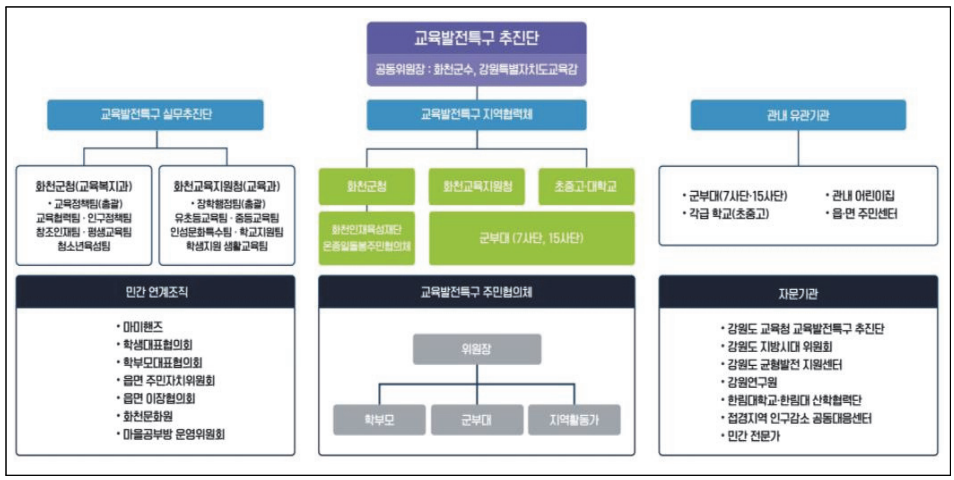
자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2024.5)

□ 지자체-교육청-대학-기업-민간 등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화천군청 교육복지과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화천교육지원청 교육과를 중심으로 교육발전특구 실무추진단을 구성함

- 화천군청은 교육복지과 교육정책팀(담당 1, 직원 1)에서 총괄하고, 인구정책팀과 평생교육팀, 교육협력팀과 창조인재팀, 청소년육성팀 등이 참여
  * 교육정책팀에서 교육발전특구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특례 발굴, 관련 법령 정비, 협력기관 협무협의 등의 업무 수행(2024.3.8.)
- 화천교육지원청 교육과에서는 장학행정팀이 총괄하고, 유초등교육팀과 중등교육팀, 인성문화특수팀, 학교지원팀, 학생지원 생활교육팀이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정책기획과 교육자치분권팀을 중심으로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 구성(2024.1.3.)

| 그림 3-2 | 화천군 교육발전특구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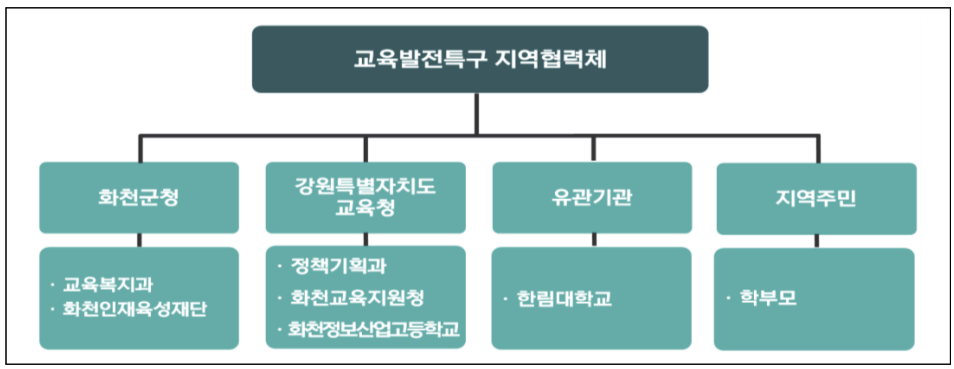


자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2024.5)

❍ 또한 화천 교육발전특구는 화천군수와 강원도교육감을 공동위원장으로 유관기관인 한림대학교와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지역협력체를 구성하여 운영

-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는 교육발전특구의 운영방안을 심의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수행

| 그림 3-3 | 화천군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 구성 및 운영



자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2024.5)

2) 전략별 추진과제 및 주요 내용

(1) 완성형 온종일 돌봄 생태계 조성

□ 지자체 주도 화천형 늘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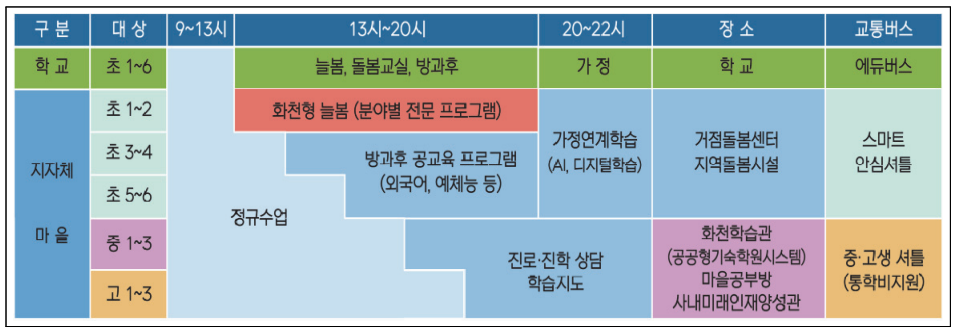
❍ 화천군 교육복지과가 직영으로 학교복합시설인 화천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하여 온종일 + 방학기간 + 시간선택형 늘봄을 통해서 대상별로 맞춤형의 온종일 돌봄 서비스 구축

-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에는 온종일 늘봄(영어, 독서, 체육, 미술 등 12종의 일일 3교시 정규수업 운영)을 운영하고, 방학기간 특별 늘봄을 신설
- 초등학교 3~6학년의 경우에는 시간선택형의 돌봄을 운영하고, 교과학습, 영어, 독서, 예체능 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

❍ 학교복합시설인 화천커뮤니티센터를 어린이와 청소년 전용의 온종일 돌봄센터를 운영하도록 지원

- 공연장, 실내·유아놀이터, 장난감대여소, 돌봄교실, 스터디카페 등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청소년 전용시설에서 이뤄지는 전 학년(미취학~초·중·고) 돌봄

| 그림 3-4 | 화천군 유·초·중·고 빈틈없는 교육·돌봄체계



자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2024.5)

□ 어린이 스마트(AI) 안심 셔틀 운영

❍ 화천군 교육복지과 직영으로 운수업체 및 MOD 시스템 운영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미취학 아동 5세~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 셔틀버스를 운영

- 스마트 셔틀버스는 화천권역 및 사내권역의 교육시설에서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13:50분부터 20:30분까지 운영

❍ 스마트 셔틀버스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응답형으로 어린이 교육시설을 운행하는 버스임

- 교육시설 거점 및 거주지 간 이동수단 확보를 통한 자녀의 안전 귀가 및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 대응
- 무상으로 구축한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2권역 2대씩, 총 4대의 수요응답형 미니버스(19~21인승) 운행

| 그림 3-5 | 화천군 교육발전특구 세부 추진방안 1



자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2024.5)

□ 온종일 돌봄 인프라 구축

❍ 미취학부터 유·초·중·고까지 빈틈없는 교육·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화천권역의 1호 온종일 돌봄 거점과 더불어 사내 권역에 2호 온종일 돌봄 거점을 추가로 구축

- 사내권역의 2호 온종일 돌봄 거점인 '사내커뮤니티센터'를 사내초등학교에 조성

❍ 화천권역의 1호 온종일 돌봄 거점은 2024년 2월에 완공된 '화천커뮤니티센터'로서 돌봄 사각지대 제로화 및 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인프라에 해당되며, 화천초등학교 내 부지에 기구축되어 있음

- 사내커뮤니티센터는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 9월에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추가로 선정되어 기존 사업비 63억원에서 163억원으로 변경되었음

(2) 양육친화마을 조성

□ 양육친화주택 건설

❍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등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262호를 신규 공급하여 양육친화주택을 건설하고, 상하수도, 전기·통신,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70호, 청년 공공임대주택 72호, 통합형 공공임대주택 120호(국민임대 100호 / 영구임대 20호) 조성

❍ 온 세대가 공존하는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주거, 힐링, 일자리가 결합된 자족도시의 기틀 마련

□ 대학까지 교육비 걱정 없는 화천

❍ 부모 모두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가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실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학자지원금·거주공간지원금·재능개발지원금 지원

- 실질적인 수준의 교육비(등록금 및 거주비) 100%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전액 군비로 지원

□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화천군 일자리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취·창업 지원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강좌 및 역량강화 사업 운영, 화천군 평생교육 홈페이지 강사 등록 운영

| 그림 3-6 | 화천군 교육발전특구 세부 추진방안 2



자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2024.5)

(3) 글로벌 화천 인재양성

□ 맞춤형 지역 전문 인재양성

○ 맞춤형 지역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하여 강원대 등 거점 대학 지역인재 입학전형 확대

- 초등 5학년부터 미래인재양성관 및 화천학습관 운영 등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사전 준비를 하고, 강원대학교 의대 등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
  * 미취학~초등 저학년은 외국어 아카데미(영어, 중국어 등), 키즈문화아카데미 등 인문학 및 외국어 기초 소양 증진
  * 초등 고학년~중학생은 미래인재아카데미를 통한 핵심교과 학습(수학, 영어, 국어 등)
  * 고등학생은 화천학습관과 연계한 심화학습을 통해 지역특화 우수 인재 육성

❍ 자율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전환 등을 통한 교육-직업-정착의 선순환 프로세스 조성
- 화천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 전환을 통한 강원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전문 인재 육성
-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특성화고)를 마이스터고(특목고)로 전환을 통해 직업기초 능력 및 직업인성, 직무수행 능력, 외국어능력 향상 등 교육제제 구축 및 운영으로 현장 실무형 인재 육성

□ 학생 맞춤형 공교육 지원

❍ 미취학아동(5~7세)을 대상으로 「키즈 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공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공교육 지원 확대
- 미취학아동 대상 교과(수학, 한자 등)와 문화(댄스, 발레 등)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동의 균형 잡힌 발달 지원
- 방과후 학교 및 특성화 학과, 더나은교육지구 운영, 다문화 및 중도입학 청소년 등 지원체계 확대, 청소년 대상 문화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소외지역 학생의 역량 강화, 교육기관 협업 및 연계사업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 진로진학 프로그램 및 학령별 맞춤형 1:1상담 제공으로 체계적인 입시 및 진로진학 준비
-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으로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방법 및 공부하는 습관 배양

❍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화천학습관의 전문화된 학사일정을 운영하여 학업 역량 강화 및 입시지도
-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

❍ 열악한 교육환경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맞춤형 핵심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미래인재아카데미」 운영
- 초등 5학년부터 수학, 영어, 국어(논술) 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

□ 화천형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젝트

❍ 학년별이 아닌 레벨별 프로그램 참여방식을 통해 맞춤형 외국어 학습 추진
- 외국어 4대 영역을 원어민과 함께 외국어 학습 레벨별 영어학습 전 학생들 개별적으로 원어민과 영어책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리딩 코칭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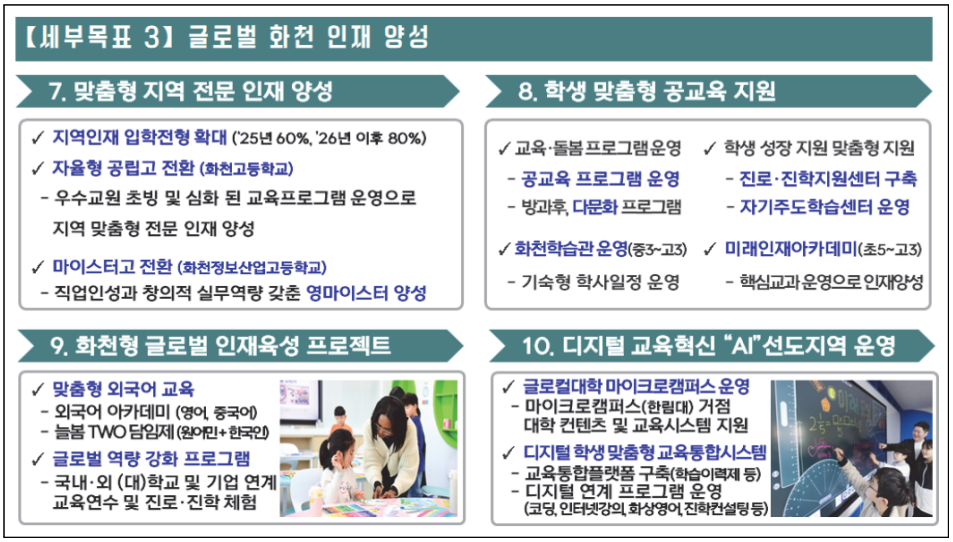
❍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대)학교 원어민 교수와 연계하여 외국어 교육과 (대)학교 탐방을 통한 진로탐색 및 외국어 능력 배양
- 국내·외 기업의 직업체험을 통해 마이스터고, 대학 미진학 학생 등 직업을 찾는 학생들을 위한 직업 탐방

□ 디지털 교육혁신 “AI” 선도학교(지역) 운영

❍ 글로컬대학 연계 마이크로 캠퍼스 운영
- M-campus를 거점으로 AI 고등교육 모델적용을 통해 대학의 디지털 콘텐츠 및 교육지원, 진로상담 등 교육 시스템 구축

❍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통합시스템 구축
- 온라인 진로·진학 컨설팅, 학생별 학습이력제 관리, 각종 교육정보 및 수강신청 등 화천군 교육 전체를 검색 할 수 있는 교육통합플랫폼 구축
- 디지털(AI)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시스템 구축(코딩, 화상영어, 인터넷강의 등)

| 그림 3-7 | 화천군 교육발전특구 세부 추진방안 3



자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2024.5)

3) 교육발전특구 특례 제안

□ 시·도 교육감 마이스터고 지정·취소 권한 부여

○ 화천 교육발전특구는 시·도 교육감의 마이스터고 지정 및 취소 권한을 이양하는 특례를 제안

- 강원특별자치도의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 급감에 대비하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래 산업수요를 빠르게 반영하여 강원도 직업계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한 미래 인재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함

○ 교육감의 지정을 받은 자율학교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향후 제정될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법령에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조항 신설

- 이를 통해서 마이스터고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없이 지정·고시 가능

| 표 3-1 | 화천군 교육발전특구 특례 제안 내용

현행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발전특구법(안)
제90조 제1항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10.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제00조(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발전특구 지정 시·군에 대해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지정·고시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도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2024.5)

제2절 지역여건 분석

1. 지역여건

1) 인구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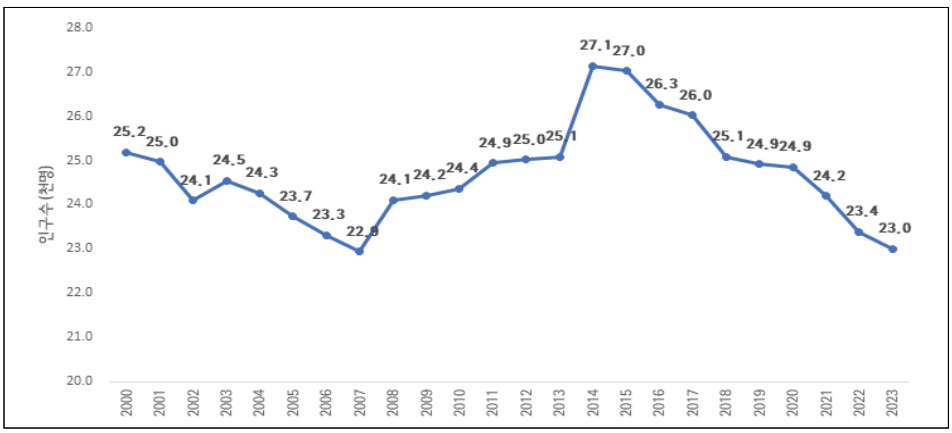
(1) 인구 및 고용 동향

□ **인구 과소지역으로 지방소멸위기 직면**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의 인구는 2000년 25.2천명에서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07년부터 다시 꾸준히 증가, 2014년에 27.1천명으로 정점을 찍고 다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전형적인 인구 과소지역으로 지방소멸위기 직면

- 2014년에 27.1천명이었던 화천군의 인구는 2023년 현재 23.0천명으로 2014년 대비 15.2% 감소

| 그림 3-8 | 화천군 인구수(2000~2023)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KOSIS)

❍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어 군사도시에 해당하는 화천군은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일반 군민보다 군장병 수가 더 많은 지역에 속함

- 군인수가 인구수 대비 111.0%(국회예산정책처, 2021)

❍ 2010년대 중반에는 군인들의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운동으로 인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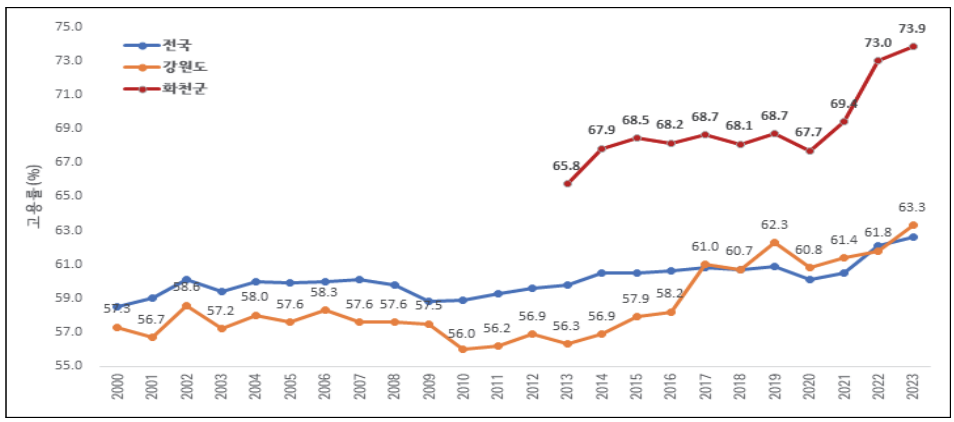
- 그러나 국방개혁 2.0 정책 추진으로 군부대 해체, 병합, 이전하면서 다시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

□ 농어촌지역 특성상 고용률은 높지만 군인가족 등의 비자발적 실업이 많음

❍ 화천군은 2023년 기준 고용률은 73.9%, 실업률은 0.5%로 농어촌지역의 특성상 전국이나 강원특별자치도 대비해서도 양호한 편임

- 2020년 이후 전국적으로 고용률이 다소 회복 중에 있고, 실업률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화천군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전국 대비 모두 양호한 상태로 추세는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음

| 그림 3-9 | 화천군 고용률(2000~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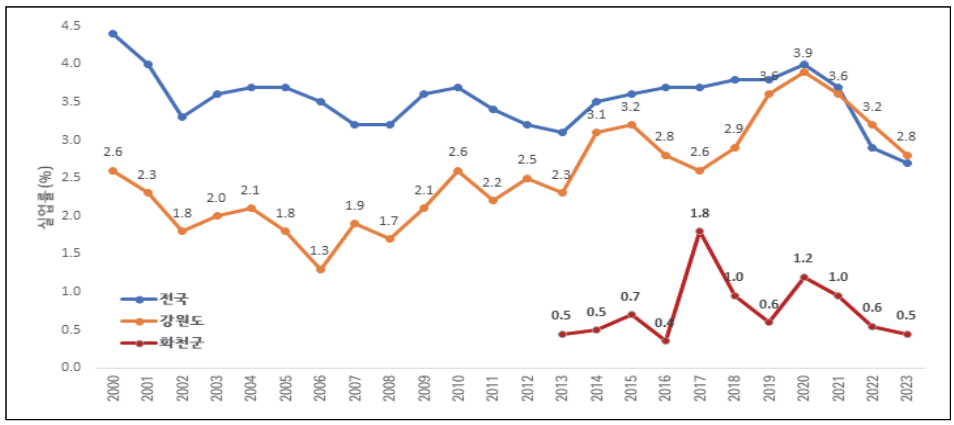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KOSIS)

❍ 군인가족들의 출산율이 높아서 화천군 전체 합계 출산율은 1.57명으로 높지만 출산 후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 지역에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부족하다보니 우수한 학력과 능력을 갖춘 군인가족 등의 경력단절여성의 비자발적 실업 발생

| 그림 3-10 | 화천군 실업률(2000~2023)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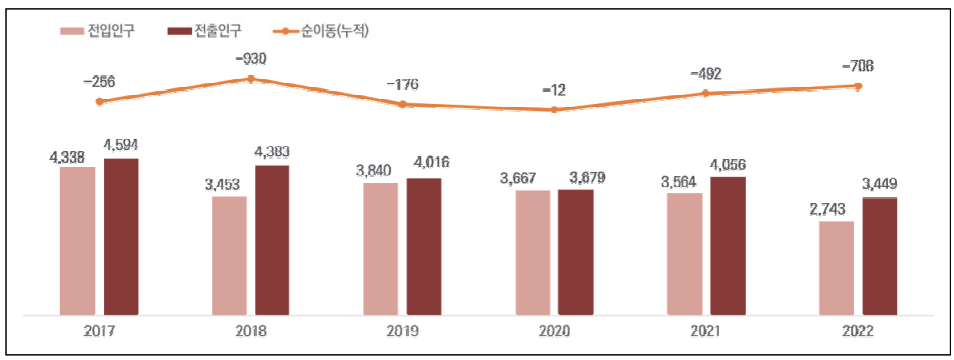
(2) 학령인구 동향

□ 교육문제로 전출 학생수가 많은 편

❍ 2017~2022년 기준 인구 순이동은 전출이 전입을 초과하여 약 2,572명이 순유출하였음

- 접경지역의 특성상 군인들의 이동이 많아서 전입이나 전출 사유는 주로 직업이나 가족 때문

| 그림 3-11 | 화천군 순이동(2017~2022)



자료: 통계청(KOSIS)

❍ 학교알리미 지역별 공시정보 자료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전학 비율을 살펴보면 역시 전출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

-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대도시 등 타지역으로 전학을 가는 비율이 49.3%

□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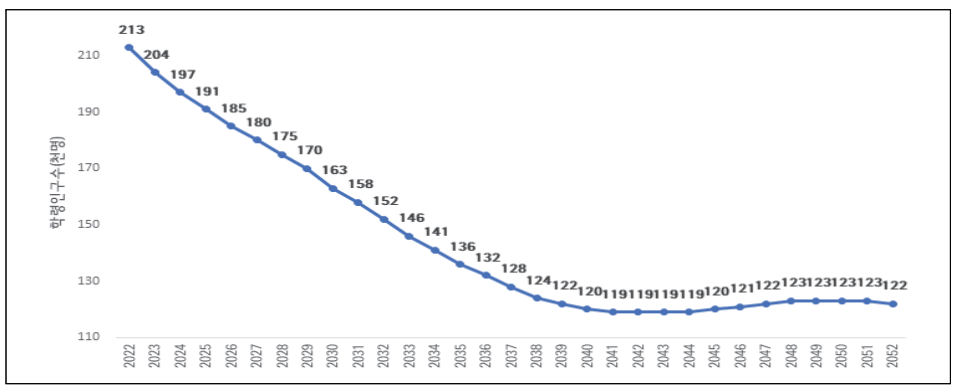
❍ 화천군이 속해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학령인구는 2022년 21.3만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52년에는 12.2만 명으로 42.7%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전반적으로 2040년까지는 급격히 감소하다가 이후 완만한 L자형 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전망

❍ 강원특별자치도의 연령별 학령인구는 2022년 대비 2040년에 중학생(12~14세), 고등학생(15~17세), 대학생(18~21세)이 모두 약 47~48%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에 초등학생(6~11세)은 이보다 감소율이 다소 낮은 36.1%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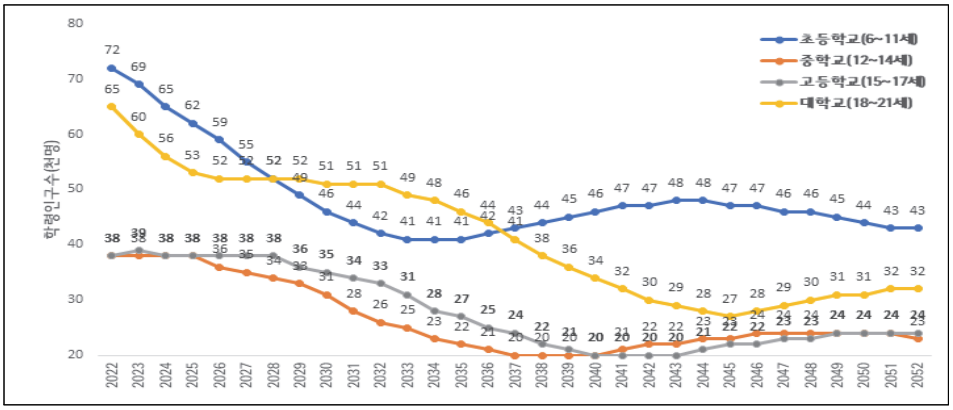
- 그러나 2022년 대비 30년 후인 2052년에는 대학생(18~21세)의 경우 50.8%가 감소한 3.2만명에 불과하고, 초등학생(15~17세)의 경우에는 40.3%가 감소한 4.3만명에 불과하여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예측

| 그림 3-12 | 강원특별자치도 장래 학령인구 추계(2022~2052)



주: 중위 수준 장래인구 추계 가정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KOSIS)

| 그림 3-13 | 강원특별자치도 장래 학령인구 유형별 추계(2022~2052)



주: 중위 수준 장래인구 추계 가정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KOSIS)

(3) 지역정주 동향

□ 지역개발 한계와 주거문제

❍ 대표적인 접경지역 군사도시인 화천군은 각종 접경지역 개발규제로 지역개발의 한계가 있어 도시성장 정체

- 국방개혁 2.0으로 군부대가 개편되어 2022년에는 27사단이 해체되면서 특히 화천군의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쇠퇴 가속화

❍ 특히, 전후 건설되었던 기존 시가지나 주거지가 60여년이 경과하여 쇠퇴하고 있어 화천군에 소재하는 주택들은 2023년 기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40.2%(통계청, KOSIS)로 10채 중에서 6채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주택임

- 각 읍면별 중심지 노후건축물은 모든 중심지에서 노후 건축물 비율이 75% 이상으로 물리적인 노후도도 심각함

❍ 주택의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거주 비율(59.5%)이 높고, 2017년 이후 민간아파트 공급이 없어 젊은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는 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

- 군인가족들의 숙소배정을 위한 대기기간이 평균 수개월 소요되며 주택 부족으로 타 지역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하는 군숙소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화천군, 2024)

| 표 3-2 | 화천군 노후건축물 현황

구분	총 건축물수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수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 수	20년 미만 경과 건축물 수	노후건축물 비율(%)
화천읍	919	611	173	135	85.3
간동면	247	155	44	48	80.6
하남면	106	42	14	50	52.8
상서면	244	176	46	22	91.0
사내면	504	303	77	124	7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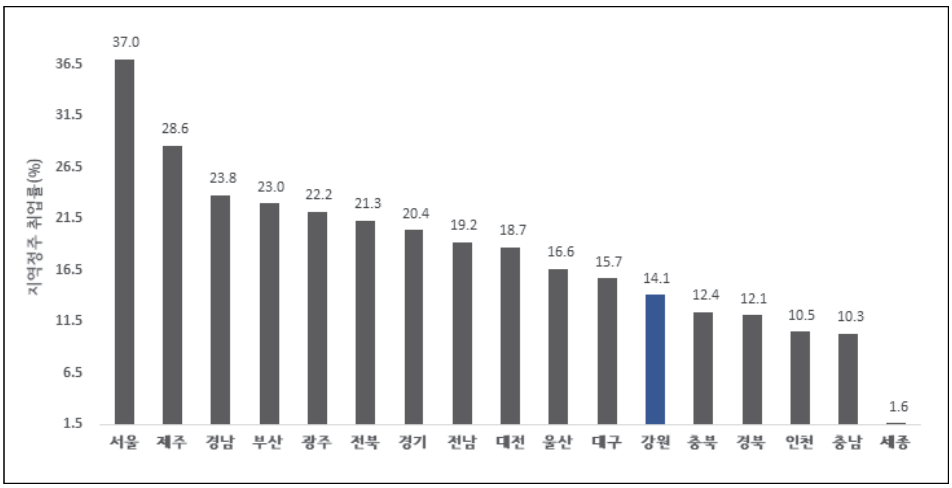
자료: 국가중점개방데이터(2023)

□ 지역정주 취업률 저하

❍ 화천군이 속해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대학 졸업자 중에서 약 14.1%만이 지역 내 기업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 시도 대비 상당히 낮은 편

- 지역정주 취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2021년 기준 서울로 37.0%였으며, 이어서 제주 28.6%, 경남 23.8%, 부산 23.0%, 광주 22.2% 순으로 나타남

| 그림 3-14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정주 취업률(2021)



주: 1) 지역 대졸자 중 해당 지역 소재 기업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비율로 산출
2) 데이터 특성상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제외됨
자료: 최정윤 외. 2023

2) 지역 산업여건 분석

(1) 주요 산업 동향

□ 지역내총생산(GRDP)은 3차 산업 중심

❍ 강원특별자치도를 기준으로 산업별 지역내총생산(GRDP)은 농업·임업·어업이 4.7%, 광업·건설업·제조업이 5.5%,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84.0%를 차지하여 3차 산업의 총생산액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전체 산업 화천군의 사업체수는 2019년 기준 2,326개로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는 4.0명에 해당

| 표 3-3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GRDP) 현황

구분	합계	농업·임업·어업		광업·건설업·제조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GRDP	구성비	GRDP	구성비	GRDP	구성비
2011년	995,676	55,996	5.6	99,408	10.0	783,345	78.7
2012년	1,057,023	67,535	6.4	90,883	8.6	838,045	79.3
2013년	1,079,896	59,979	5.6	72,750	6.7	891,606	82.6
2014년	1,120,033	68,253	6.1	63,024	5.6	931,770	83.2
2015년	1,134,705	64,168	5.7	78,280	6.9	929,838	81.9
2016년	1,179,800	62,313	5.3	84,282	7.1	965,867	81.9
2017년	1,251,925	57,238	4.6	77,655	6.2	1,047,928	83.7
2018년	1,345,860	49,960	3.7	79,322	5.9	1,141,115	84.8
2019년	1,418,076	60,126	4.2	77,255	5.4	1,201,253	84.7
2020년	1,464,125	68,729	4.7	79,913	5.5	1,229,605	84.0

자료: 통계청(KOSIS)

| 표 3-4 | 화천군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구분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사업체당 종사자수
2017년	2,149	8,371	3.9
2018년	2,244	8,708	3.9
2019년	2,326	9,196	4.0

자료: 통계청(KOSIS),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2) 관련 지역산업 분석

□ 주로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 종사

❍ 산업별 화천군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2018년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이 32.6%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2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9.9% 순

- 종사자수로는 공공행정이가장 많고, 숙박 및 음식점업 16.8%, 건설업과 도소매업이 각각 10.7%

| 표 3-5 | 화천군 사업체수와 종사자수(2018년 기준)

산업 구분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사업체당 종사자수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전체 산업	2,244	100.0%	8,708	100.0%	3.9
농업, 임업 및 어업	13	0.6%	72	0.8%	5.5
광업	-	-	-	-	-
제조업	130	5.8%	510	5.9%	3.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	0.2%	52	0.6%	13.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5	0.7%	167	1.9%	11.1
건설업	140	6.2%	931	10.7%	6.7
도매 및 소매업	475	21.2%	928	10.7%	2.0
운수 및 창고업	89	4.0%	214	2.5%	2.4
숙박 및 음식점업	732	32.6%	1,462	16.8%	2.0
정보통신업	19	0.8%	124	1.4%	6.5
금융 및 보험업	16	0.7%	133	1.5%	8.3
부동산업	32	1.4%	54	0.6%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1	1.4%	95	1.1%	3.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4	1.5%	106	1.2%	3.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6	1.2%	1,874	21.5%	72.1
교육 서비스업	86	3.8%	755	8.7%	8.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3	3.3%	630	7.2%	8.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6	4.7%	220	2.5%	2.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223	9.9%	381	4.4%	1.7

자료: 화천군 통계연보(2019)

□ 사업체수 대비 종사자수 부족

❍ 화천군의 사업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21년 기준 3,172개로 2014년 대비 약 60%가 증가함

- 반면 종사자수는 2014년 대비 약 17% 증가한 9,401명으로 2021년 기준 평균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3.0명 수준으로 2014년 4.1명 대비 약 27% 감소하였음
- 최근 5년간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평균 5인 미만으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적은 종사자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천군 전체적으로 사업체 대비 종사자수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표 3-6 | 화천군 연도별 사업체당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당 종사자수
	개수	전년비 증감	인원수	전년비 증감	
2014	1,983	(6.5%)	8,037	(5.8%)	4.1
2015	2,095	(5.6%)	7,837	(-2.5%)	3.7
2016	2,106	(0.5%)	8,349	(6.5%)	4.0
2017	2,149	(2.0%)	8,371	(0.3%)	3.9
2018	2,244	(4.4%)	8,708	(4.0%)	3.9
2019	2,326	(3.7%)	9,196	(5.6%)	4.0
2020	2,955	(27.0%)	9,435	(2.6%)	3.2
2021	3,172	(7.3%)	9,401	(-0.4%)	3.0

자료: 강원도(2023), 강원도사업체조사

3) 교육 및 연구 관련 인프라 분석

(1) 교육기관

□ 유·초·중등 교육기관 현황

❍ 2023년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의 유·초·중등 학교는 총 32개가 위치해 있고, 학생 수는 2,019명, 교원 수는 341명으로 교원수 대비 학생수는 약 5.9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화천군에는 타 자치단체와 달리 특목고나 특수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 존재하지 않고, 특성화고는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음
- 일반고등학교는 간동, 사내, 화천 고등학교로 3개가, 중학교는 간동, 사내, 상서, 화천 중학교로 4개가 위치해 있고, 초등학교는 총 11개가 위치해 있음

❍ 어린이집은 2019년 기준 19개소로 화천읍에 8개소, 사내면에 5개소로 타 면지역에 비해서 많은 어린이집이 분포
- 상서면에는 15사단다목리어린이집 등 3개소가, 하남면에는 3개소가, 간동면에는 화천어린이집분원이 위치해 있음

| 표 3-7 | 화천군 유초중등 교육기관 현황(2023년)

(단위: 개, 명)

학제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교원 수 대비 학생 수
합계		32	2,019	341	5.9
유치원		13	219	36	6.1
초등학교		11	940	152	6.2
중학교		4	431	67	6.4
고등학교	일반고	3	332	59	5.6
	특성화고	1	97	27	3.6

주: 조사기준일 2023년 4월 1일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 표 3-8 | 화천군 어린이집 현황(2019년)

구분	시설수	시설명
화천읍	8	화천어린이집, 둘리어린이집, 늘푸른상리어린이집, 예사랑어린이집, 사무엘어린이집, 꿈나무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웅진어린이집
간동면	1	화천어린이집분원
하남면	2	하남파랑새어린이집, 햇살어린이집
상서면	3	15사단다목리어린이집, 봉오다솜어린이집, 칠성어린이집
사내면	5	Daycare27어린이집, 귀염둥이어린이집, 사과나무어린이집, 해달별어린이집, 늘푸른 햇골 어린이집

자료: 화천군 통계연보(2019)

□ 고등 교육기관 현황

○ 강원특별자치도에는 대학교나 전문대학, 기능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위치해 있지 않음

-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총 18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위치해 있으며, 이 중에서 대학이 8개, 전문대학이 7개 위치해 있으나 대학원은 없음

| 표 3-9 | 강원특별자치도 고등 교육기관 현황(2023년)

(단위: 개, 명)

학제	학교 수	재적학생 수	전임교원 수	전임교원 수 대비 재적학생 수
합계	17	106,792	3,799	28.1
대학	8	84,193	3,237	26.0
교육대학	1	1,285	77	16.7
전문대학	7	12,373	274	45.2
기능대학	1	582	41	14.2
부설대학원	-	8,359	170	4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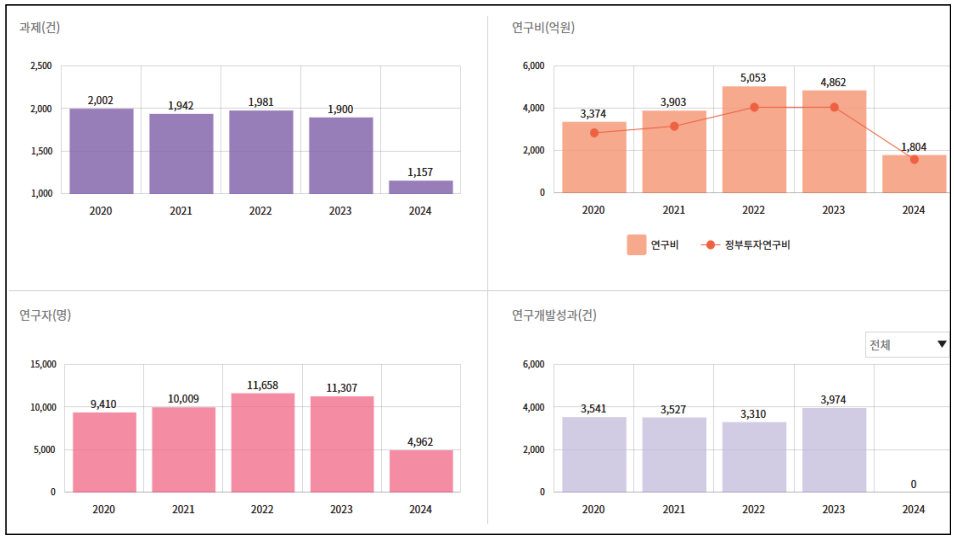
주: 조사기준일 2023년 4월 1일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2) 연구기관

○ 강원특별자치도는 1,202개의 국가연구개발기관이 위치해 있고, 매년 약 1,900개 정도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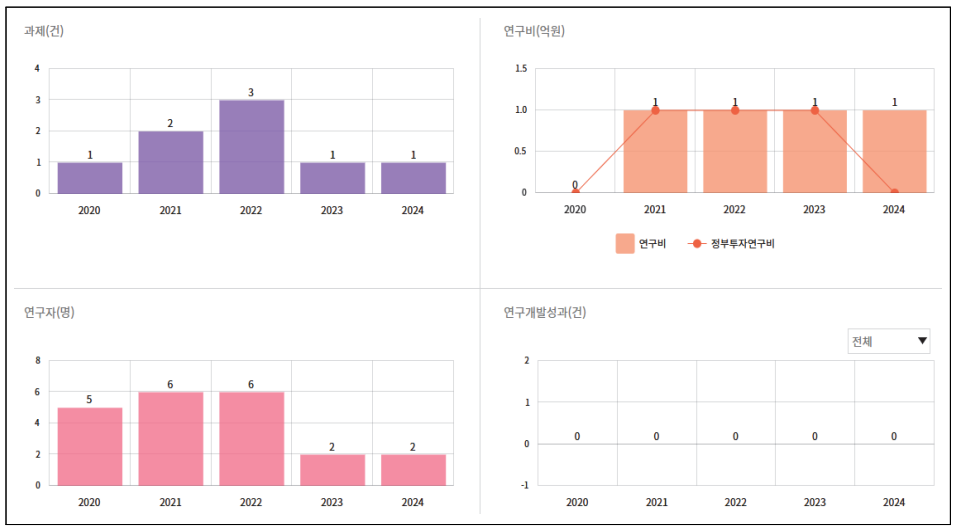
- 화천군의 경우 2024년 현재 기업이 5개, 정부/지자체가 1개, 기타 1개의 7개 기관이 위치해 있음

| 그림 3-15 | 강원특별자치도의 연구개발 현황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웹사이트(https://www.ntis.go.kr/orginfo/index.jsp)

| 그림 3-16 | 화천군의 연구개발 현황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웹사이트(https://www.ntis.go.kr/orginfo/index.jsp)

2. 지자체 정책

1) 지역발전정책

(1) 정책의 비전과 목표

□ 민선6·7·8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가 최우선 정책 목표

❍ 화천군의 지역발전정책은 2006년 화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평생학습 추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던 시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당시 평생학습 추진을 위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고, 정주기반이 취약해져 주민들의 위기의식이 대두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도출
  * 인구감소와 도농간 격차는 결국 교육여건이 열악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고 진단
- 접경지역의 특수성으로 출산율은 높지만 돌봄과 교육환경 부족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군의 발전이 뒤처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서, 창조인재육성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교육과 지역발전정책을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

❍ 이에 화천군은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를 장기적인 지역발전의 군정목표로 설정하고, 세부적으로 '출산율 전국 1위', '아이기르기 세계 1위', 그리고 '인구 3만 명 달성'이라는 비전을 수립

- 지역발전정책 속에서 아이를 기르기 가장 좋은 지역이 결국은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인식 하에서 교육과 복지정책을 결합시키고,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정책 등을 함께 추진
- 본격적으로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4월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는 교육여건을 강화하여 지역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음
- 아이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지원 확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정주기반 조성, 시책개발과 정책 법제화 등을 추진

| 표 3-10 |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2007~2026) 중장기 추진계획

구분	주요 내용
비전	• 세계 제 1의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 출산율 전국 1위, 인구 3만 명 달성
기간	• 2017~2026(20년간)
주요내용	•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의 기본정책, 발전방향, 비전제시 •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를 위한 중·장기 방향 설정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인구늘리기를 위한 정책 개발
추진방향	•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를 위한 기반여건 조성 •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를 위한 생애단계별 시책개발 •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정책 법제화
추진내용	• 아이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 공교육 지원 확대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 다자녀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 • 지역출신 공무원 임용

자료: 화천군(2007),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중장기 추진계획

□ 군민과의 약속을 실현하는 군정운영

❍ 화천군의 민선 8기 군정 운영 목표는 "군민과의 약속을 실현하는 군정 운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5대 분야는 교육 분야, 농업 분야, 복지 분야, 정주여건 분야, 경제·일자리 분야로 구분

- 교육분야는 생애주기에 맞춘 교육정책으로 최고의 환경 조성이 목표
- 농업분야는 실질적 수익창출 정책으로 미래형 농촌 공동체 실현
- 복지분야는 사각지대 없는 복지 살기좋은 화천
- 정주여건 분야는 화천군민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건설 및 지원 정책
- 경제·일자리 분야는 일자리 만드는 지역경제 정책으로 잘사는 화천

❍ 교육정책이 최우선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화천군민이 살기 좋은 지역을 건설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수익창출과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중시

-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사각지대 없는 복지와 주거 공간 문제 해결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목표를 함께 설정

| 그림 3-17 | 화천군의 민선 8기 공약



자료: 화천군청 홈페이지(https://www.ihc.go.kr/www/contents.do?key=2362)

(2) 주요 관련 사업

□ 세대 공존 자립형 주거단지 조성

❍ 주택 부족 및 노후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장기복무자·은퇴자 등 온세대가 공존하는 전원마을 조성

- 장기적으로 주거와 일자리, 그리고 힐링이 가능하도록 관련 사업이 복합·결합된 자족도시 기틀 마련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전원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전원마을에 필요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 간동면 간척리 594-1번지 일원에 상하수도, 도로,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을 함께 조성

□ **공공주택사업(행복주택) 및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행복주택 84세대를 화천읍 하리에 공급하고, 주거안정 도모
- 노후 공공청사(현 화천읍사무소)를 활용하여 행정복지센터와 LH 공공 임대주택을 복합개발

○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필요계층의 주거기반을 마련하여 주거안정 도모
- 화천읍 신읍리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통합공공임대주택 70호 건립

□ **화천형 청년창업육성센터 및 청년 CEO 육성**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을 활용하여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의 예비창업자 및 기 창업자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1년차에는 창업준비, 운영비, 공간임차료 등 간접비 지원, 2년차에는 창업성공시 시제품제작, 홍보비 등 지원, 3년차에는 청년 신규 채용시 인건비 지원

○ 강원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을 연계하여 사업화자금(우수 아이템 개발, 창업활동비, 재료비, 홍보비) 및 시설 자금(창업공간 리모델링, 임차료 등 유무형 비유동자산)을 지원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를 활용 융자 지원
- 창업기본교육, 사업계획, 사전멘토링(사업 아이디어 구체화 및 정립), 사후진단 멘토링 등 창업 사전·사후 지원

□ **직업위탁교육 및 창업지원 확대**

○ 대학 미진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청년 창업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추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1조와 「화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에 근거

○ 직업군, 기업 채용정보 제공 및 면접 등 취업지도를 위한 취업 컨설턴트 배치
- 청소년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과과정 외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관련 교육비 지원

2) 교육정책

(1) 정책의 비전과 목표

□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출예방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도모

❍ 화천군의 교육정책은 2007년 인적자원개발 중장기계획(2007-2016)을 수립하면서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음

- 인적자원개발 중장기계획 수립의 목적은 화천군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학습기회 확대, 엘리트 교육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인재의 학력신장 및 인구유출 예방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 화천군이 관내 학생의 타 지역으로의 유출이 많아 우수인재가 감소하면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 교육여건 증진을 통한 인구유출 방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모색

| 표 3-11 | 화천군 인적자원개발 중장기계획(2007~2016) 추진전략 및 주요 사업

추진전략	주요 사업
창의력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	• 건강한 임산부 영유 교실 • 영육아 보육시설 확충 • 방과후학교 운영 • 면지역 특성화학교 창조적 어린이 인재육성 • 초중영어 Upgrade School 운영 • 생태·평화교육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엘리트 교육	• 화천군 학습관 조성 • 향토인재학사 운영 확대 • 교육복지시택 확대 •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 우수 농어촌 고교 지원 • 청소년 미래 인재육성 • 청소년 리더육성 • 우수교사(강사) 인센티브 지원
삶의 가치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 • 지역전문가 Pool 운영 • 국제행사 및 축제 종사자 대학 운영 • 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 직업 전문화 교육 지원 • 지역공동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자료: 화천군(2007), 인적자원개발 중장기계획

❍ 이때부터 화천군청 산하에 전국 최초로 '교육복지과'를 신설하여 화천군의 교육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는 추진체계 정비

- 교육복지과와 교육기관, 학생 및 학부모,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자가 함께 교류하는 교육협력 네트워크인 '화천군창조인재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문제 해결 노력 지속

❍ 창조인재육성 중장기 추진계획은 이후 2014년에 화천군 창조인재육성 중장기 추진계획(2015-2024)을 수립

-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교육·복지부문 확충 및 인재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원동력 창출에 초점

| 표 3-12 | 화천군 창조인재육성 중장기 추진계획(2015~2024) 주요 과제 및 주요 사업

추진전략	주요 사업
건강하고 바른 성장 환경 조성	•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 화천 공공 어린이도서관 건립 및 운영 • 키즈 영어아카데미 운영 • 눈높이 문화예술 공연 기획
행복한 꿈과 희망을 갖는 어린이	•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지원 • 학교 및 학생 급식지원 • 원어민교사 지원 • 초등학생 해외연수 지원 • 어린이 영어아카데미 운영 • 스마트리(SmaTree) 자기주도 영어학습 • 청소년 글로벌리더 영어캠프
비전과 진로가 정립된 학생	• 진로 아카데미 운영 • 맞춤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명품학교 만들기 • 기숙형 고교 지원 • 특성화 고교 지원 • 청소년 해외연수 확대 • 화천학습관 운영 • 공무원 사관학교 운영 • 청소년수련관 운영 • 사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 마을 공부방 운영, 청소년야영장 운영 • 사내 도서관 건립 및 운영

추진전략	주요 사업
진취적 기상, 글로벌 마인드 함양	• 해외대학 유학생 지원 • 수도권 대학생 거주공간 지원 •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학부모 부담 경감	• 학자금 지원 • 대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
배움의 기쁨, 나누는 행복, 평생학습	•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우수동아리 지원 • 책읽는 화천 만들기 • 성인문예 프로그램 운영 • 대학과 연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 한마당 개최

자료: 화천군(2014), 창조인재육성 중장기 추진계획

□ 생애주기에 맞춘 교육정책으로 최고의 환경조성

❍ 민선8기 군수공약 실천계획서 및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교육정책은 생애주기에 맞춘 교육정책으로 최고의 환경조성을 목표로 함

- 핵심전략에 따른 세부 목표로서는 기쁨의 출산 행복한 육아 환경 조성, 걱정 없는 자녀 돌봄 환경 조성, 경제적 부담이 없는 교육환경 조성, 질 높은 교육정책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 화천창업교육 확대 추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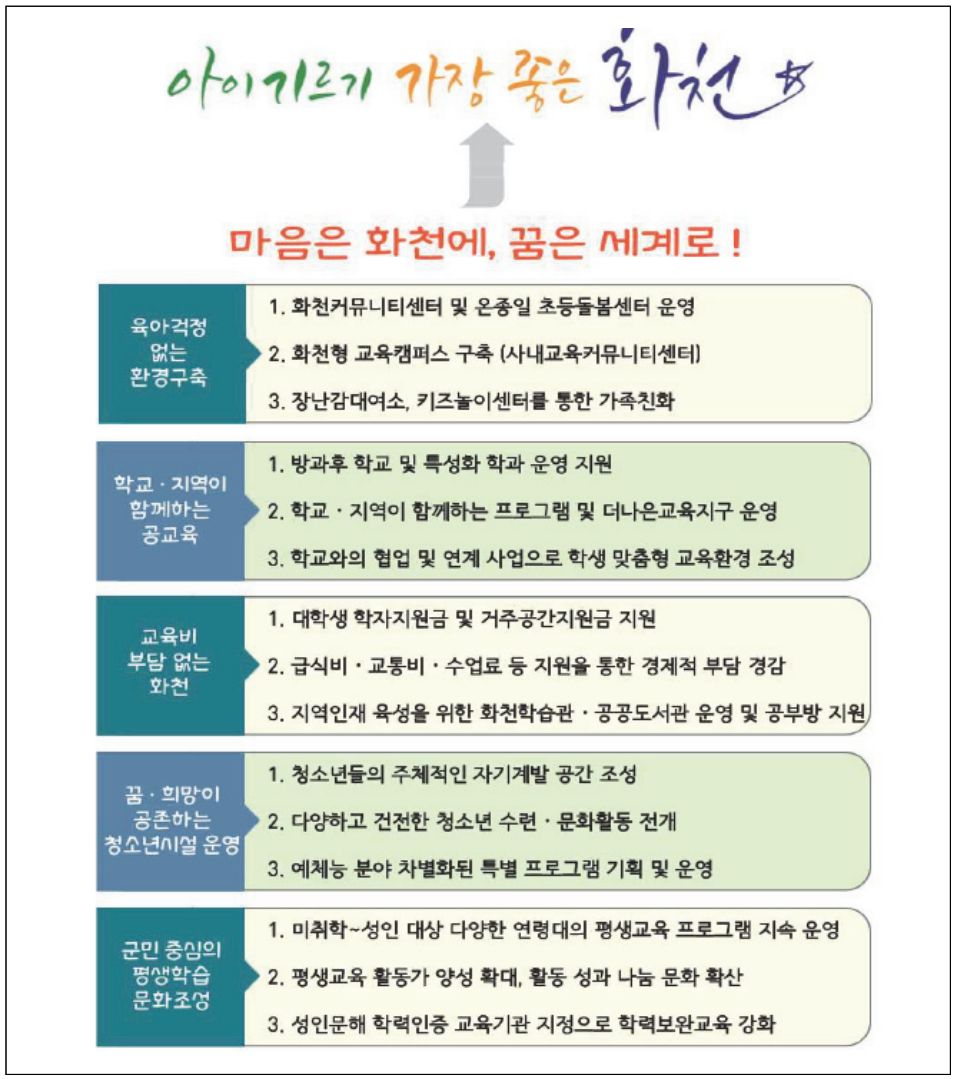
❍ 교육·보육정책에 관한 9개 공약사업이 제시되어 있으며,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개정 등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여 추진 중임

- 출생일 기준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생아 역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출산 지원금 1회 300만원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하여 전문적인 유방관리 및 모유수유 지원, 신생아 관리 지원, 모자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산후 회복 지원
-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에게 출산 지원 바우처를 지원하고, 청소·세탁·취사 등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 복합커뮤니티 센터에서 화천형 아이 온종일 스마트 돌봄 서비스제를 운영
- 대학 등록금 실 납부액 100%와 거주공간비(월세·기숙사비) 지원, 문화·예술·체육 분야 특기자(고등학생) 재능개발비 지원
-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급식비 지원, 교복비, 교통비 및 수업료 지원
- 중학생·특성화고 어학연수(뉴질랜드), 청소년 해외 내방연수, 초등학생 어학

연수(신규), 원어민교사 외국어 학습 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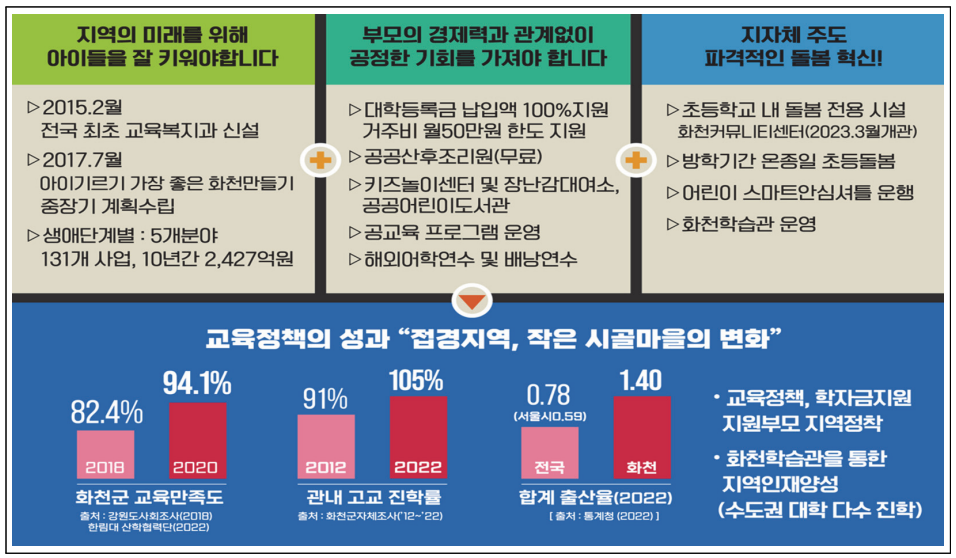
- 관내 중3~고3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진학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의 직업 위탁교육 및 창업지원 확대

| 그림 3-18 | 화천군 교육복지과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목표 및 방향



자료: 화천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 그림 3-19 | 화천형 교육정책의 추진성과



자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2024.5)

(2) 주요 관련 사업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더나은교육지구

❍ 더나은교육지구는 교육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공동 분담하는 교육 협력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사업임

- 아이들의 삶을 중심으로 총체적 지원이 가능한 민·관·학 협치체계를 구축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역 교육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시·군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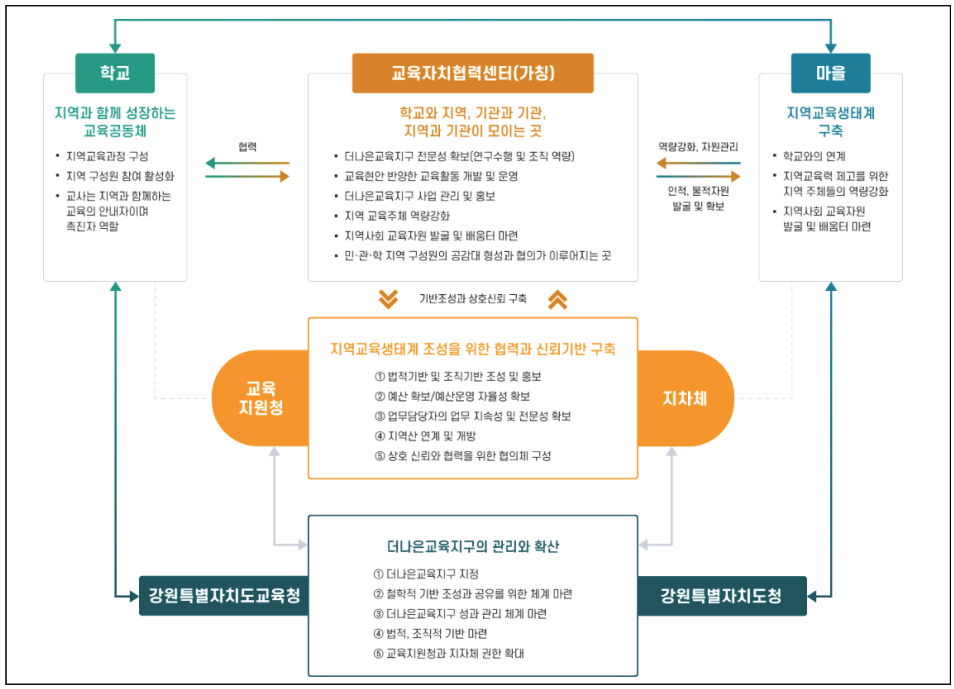
❍ 신뢰와 협력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지역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추진방향은 아동·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온마을 돌봄·배움터 제공, 교육청·지자체·학교·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소통·협력체계 구축,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며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
-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회적 돌봄과 배움을 함께 배우고 익히는 지역교육

과정인 온마을 돌봄배움터 사업과 교육거버넌스 구축사업으로 구분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화천군의 더나은교육지구는 배움으로 꿈꾸고 더불어 행복한 「물빛누리 행복교육」을 비전으로 설정
- ‘더 나은 방과후 학교’ 운영을 지구 중점 공동사업으로 추진 중임

| 그림 3-20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더나은교육지구 추진체계



출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s://www.gwe.go.kr/main/content.do?key=m2307210640053)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

❍ 흥미, 적성 등 비슷한 학생들이 스스로 구성한 동아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잠재된 창의성을 발견하고 협동의식 향상 도모
- 전액 군비로 관내 13개 초등학교 및 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 특기적성 및 특성화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 화천초 학교연계(관내 교육시설 연계), 중등 학교연계(진로직업체험 및 현장체험),

고등 학교연계(교과연계 심화전문과정), 초등 IT아카데미, 단계별 학습코칭 프로그램, 어린이 파크골프 아카데미, 뉴스타트 프로그램, 원어민교사 수업 운영, 내고장 바로알기 등은 학교 정규수업 운영

- 학교의 방과후 수업은 초등·고등 방과후 수업, 화천초 학교연계(관내 교육시설 연계), 중등 학교연계(창체동아리, 음악프로그램), 고등학교 동아리 지원, 원어민교사 수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 화천군에서는 방과후아카데미(화천청소년수련관), 사내초 학교연계(사내문화의집) 운영

□ 화천 커뮤니티 센터 운영 및 화천형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 운영

❍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창의적인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이들의 꿈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화천 커뮤니티 센터는 공연장, 실내놀이터, 돌봄교실 및 교육실, 체육관, 재미놀이실, 장난감 대여소 및 유아놀이실, 스터디카페, 글로벌 교육실 등으로 운영(교육복지과 인구정책 담당 직영)

❍ 화천 커뮤니티센터에서는 돌봄 공백 해소를 통한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돌봄 인프라 구축

- 돌봄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한 부모 안심 보육환경 조성, 외국어 특화교육 및 독서토론, 특기적성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

□ 원어민 교사 지원 및 외국어 학습 확대

❍ 관내 학교 원어민 교사 지원으로 공교육 내실화 도모

- 학생들에게 생활 영어 능력과 영어에 대한 친밀감을 높여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

❍ 전액 군비로 관내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4대 커리큘럼 교육

-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책읽기 수업을 주1회 제공하는 영어 아카데미를 운영함

□ **화천군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 운영**

❍ 군 운영 교육시설 및 거주지 간 셔틀버스 운행을 통한 수요자(학생)의 안전 수송 및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 대응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화천군 교육시설 거점을 운영하는 셔틀버스 운행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기반 수요응답형 셔틀버스 운영

3) 관련 조례

(1) 지역발전정책

□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이농·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고, 전입자 등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9년 1월에 제정
- 인구증가시책은 화천군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함
- 전입세대 지원대상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화천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를 말하고, 출산장려 지원대상은 부모(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를 출산(입양)한 세대를 말함

❍ 군수는 인구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입세대 지원과 출산장려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전입세대 지원은 전입지원금, 주택수리비, 헬스장 이용권, 영화 관람권 등을 말하며, 전입지원금 수령 이후 1년 이상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함

❍ 인구시책의 협조·지원체제 구축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민·군·관 합동으로 화천군 인구증가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인구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타 사업에 우선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부당한 지원시 환수조치함

□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모자보건법」 제3조,「영유아보육법」 제4조, 「청소년기본법」 제8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7년에 7월에 제정

- 조례에서 '교육'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교육기본법」에 따른 초·중·고등학생,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의미로 사용됨

❍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를 위해 5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기업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아이기르기 좋은 환경만들기 사업, 생애단계별 지원사업, 교육분야 지원사업, 교육비 경감 시책사업, 청소년 지원사업, 다자녀가정·저소득층·장애아동·다문화가족·경력단절여성 등 지원사업 등
-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아이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은 교육비 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 경력단절여성 지원, 그리고 환경조성으로 구성됨

- 교육비 지원의 범위는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사업, 저소득층아동·장애아동의 교육 및 보육 지원, 다문화자녀의 교육 및 보육 지원, 진로 및 역량개발을 위한 현장체험, 문화탐방, 스포츠경기 관람 및 체험, 국제교류 활동, 동아리 활동 지원, 학업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주도학습 지원 등의 사업으로 교육비와 학생, 학교, 개인, 법인, 단체에 경비 지원 가능
  * 학생의 부모 모두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가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등은 학자지원금 및 거주공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다자녀 가정 지원의 범위는 화천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 감면과 화천군에서 채용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우선 채용, 그리고 셋째아 이상 자녀 기저귀 지원
-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해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자신감 회복을 위한 상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사업, 화천군에서 채용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우선 채용 지원
- 또한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키즈센터, 공동돌봄센터, 장난감대여소 등을 운영할 수 있음

□ 화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3년 6월에 제정
- 인구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하고,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를 말함

❍ 군수는 군청 산하에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생활환경 개선 사업, 재난·재해 등 범죄 예방 사업)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화천군 여성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특색을 살린 상품생산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성공방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9년 9월에 제정
-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특색을 살린 상품생산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화천군 여성공방을 설치
- 공방의 시설은 전문작업실, 공동작업실 및 부대시설 포함

❍ 공방을 이용하는 사람은 공방 이용료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이용허가와 동시에 납부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공방을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의 경우 이용료를 감면함

□ 화천군 주택보급 활성화 지원 조례

❍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민 유입 촉진과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 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주택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4년 10월에 제정
- 주택은「주택법」제2조에 따른 5세대(世帶) 이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을 말함
- 화천군이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진입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전기·통신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말함

❍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은 세대당 6천만원으로 하되 최대 6억 원까지 지원
- 신청자는 지원사업 신청 전에 건축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선행하여야 하며, 기반시설 부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또는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고, 화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함

| 표 3-13 | 화천군 지역발전정책 관련 조례

구분	조례	내용
인구	화천군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군을 화천군민으로 포용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극대화하려는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군·관 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이농·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전입자·제대군인 등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화천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화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
	화천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화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
	화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화천군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함
지역 발전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 조례	국가적인 문제인 저출산·고령화의 위기상황에 우리군만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생애단계별·계층별 지원을 위한 근거로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2017년 7월부터 시행 예정
	화천군 여성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특색을 살린 상품생산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성공방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화천군 주택보급 활성화 지원 조례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민 유입 촉진과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 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주택보급을 활성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 교육정책

□ 화천군 보육조례

❍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천군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화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군립 어린이집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제정

-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담당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군립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

❍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 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군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등 심의

□ 화천군 창조인재육성조례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화천군의 창조인재육성을 위한 군정사업 추진과 추진에 필요한 학생, 학교, 법인 또는 단체의 창조인재육성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환경 개선과 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 제정
- 창조인재는 인성과 감성, 창의력과 실력을 고루 갖춘 사람으로 과거를 답습하지 않고 국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창조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말함
- 교육은 영·유아, 초·중·고·대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학습과 관련된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

❍ 창조인재육성에 관한 중·장기 사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창조인재육성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
- 주요 창조인재육성 시책을 조정하고 창조인재육성과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창조인재육성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심의·자문
- 영·유아 교육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화천군 운영 학습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창조인재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학생, 학교, 법인 및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군수는 창조인재육성을 위해 학습시설을 운영할 수 있고, 관련된 학생, 학교, 법인,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도서관 등 학습편의 시설 설치, 영·유아 교육지원, 청소년 해외연수 지원, 대학생 기숙시설 및 해외유학 지원, 청소년 공부방운영 지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평생학습 교육 지원 등

□ 화천군 학생 통학지원 조례

❍ 관내 학생들의 통학편의와 화천군이 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편의 제공과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7년 6월 제정
- 지원대상은 지원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과 화천군수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아동 및 청소년

❍ 관내학교 학생의 통학 차량이거나 화천군에서 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차량 지원
-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 중 버스요금 실비 지원

□ 화천군 온종일 초등돌봄에 관한 조례

❍ 「아동복지법」에 따라 화천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22년 9월에 제정
- 온종일 돌봄은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아동 보호 및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종일 돌봄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
- 돌봄시설의 확충 및 지원, 돌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지원, 돌봄아동의 교육 및 홍보, 돌봄아동 부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온종일 돌봄 지원과 관련하여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우선 지원

-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화천군지역돌봄협의회를 설치하고, 온종일 돌봄 운영계획을 심의·자문함

| 표 3-14 | 화천군 교육정책 관련 조례

구분	조례	내용
창조 인재 육성	화천군 창조인재육성 조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화천군의 창조인재 육성을 위한 군정 사업 추진과 추진에 필요한 학생, 학교, 법인 또는 단체의 창조인재육성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화천군의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 내 교육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화천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도서관법」에 따라 화천군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도시의 위상 제고와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보육 돌봄	화천군 보육조례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천군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화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군립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
	화천군 온종일 초등돌봄에 관한 조례	「아동복지법」에 따라 화천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화천군 학생 통학지원 조례	관내 학생들의 통학편의와 화천군이 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편의 제공과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청소년 육성	화천군청소년지도위원 위촉운영에관한조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화천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화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화천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평생 교육	화천군 평생학습조례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의 생태·평화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생태.평화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절 관련 정책동향 분석

1. 교육정책

1) 교육부 교육서비스 관련정책

□ 유보통합

○ 저출생의 위기 속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현재의 이원화된 체제에서는 교육과 돌봄 여건이 달라서 기관별로 서비스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교육부 보도자료, 2023.1)

- 이에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

| 표 3-15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	만 3세부터 취학 전 어린이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
법적 성격	학교	사회복지시설
근거 법령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관리부처	교육부/시·도교육청	보건복지부/시·도
기관 구분	국립/공립/사립 유치원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민간/가정/부모협동/직장어린이집
교육·운영일수	• 교육과정 : 연간 수업일수 180일 이상 • 방과후 과정 : 연중무휴 (공휴일 제외)	연중무휴(공휴일 제외)
교육·운영시간	• 교육과정 : 1일 4~5시간 • 방과후 과정 :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 - 아침·저녁·온종일 돌봄 가능	1일 12시간(07:30~19:30) • 기본보육 : 1일 7시간 • 시간연장 가능
교육·보육과정	3~5세 누리과정	0~2세 표준보육과정, 3~5세 누리과정
직위체계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기타 직원	원장, 보육교사, 기타 직원
교사자격	• 유치원교사 1급/2급 • 특수학교(유치원)1급/2급	• 보육교사1급/2급/3급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료: 영유아 교육·보육추진단(2023), 유보통합 리플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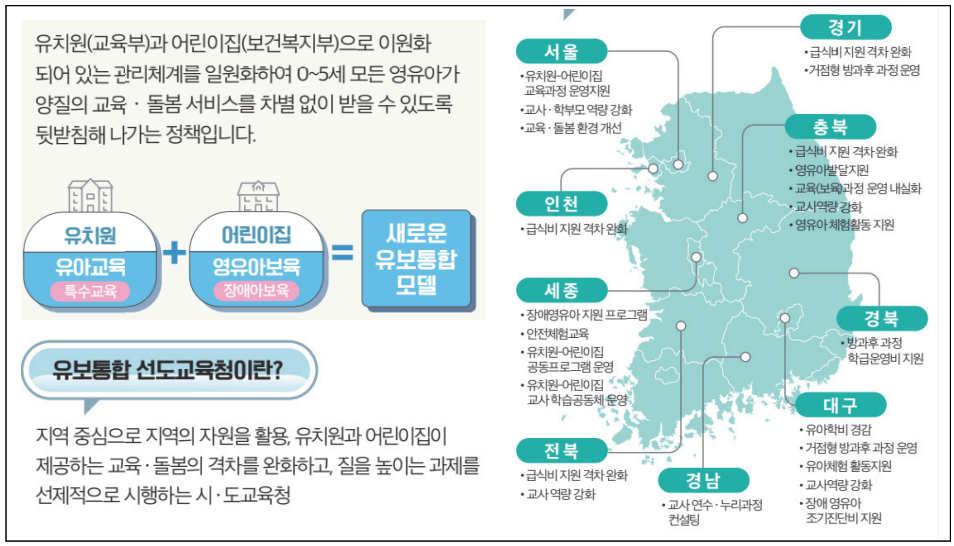
❍ 유보통합은 초등 늘봄학교와 연계함으로써 0~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책임교육·돌봄체계 확립

- 충분한 이용시간(8h+4h) 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0~5세 영유아 교육과정,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 교육을 중심으로 영유아 교육과 돌봄 관리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생애 초기부터 책임교육 기반 마련

- 1단계(2023~2024)에서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3~4개)을 운영하고 학부모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교육비와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등 2024년부터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지원비(유치원 방과후과정비와 어린이집 누리운영비) 지원규모를 현실화함
- 등 기관 간 격차완화는 선제적 추진, 통합기관 모델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마련
- 2단계(2025~)에서는 일원화된 관리 체계하에서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본격 시행

| 그림 3-21 |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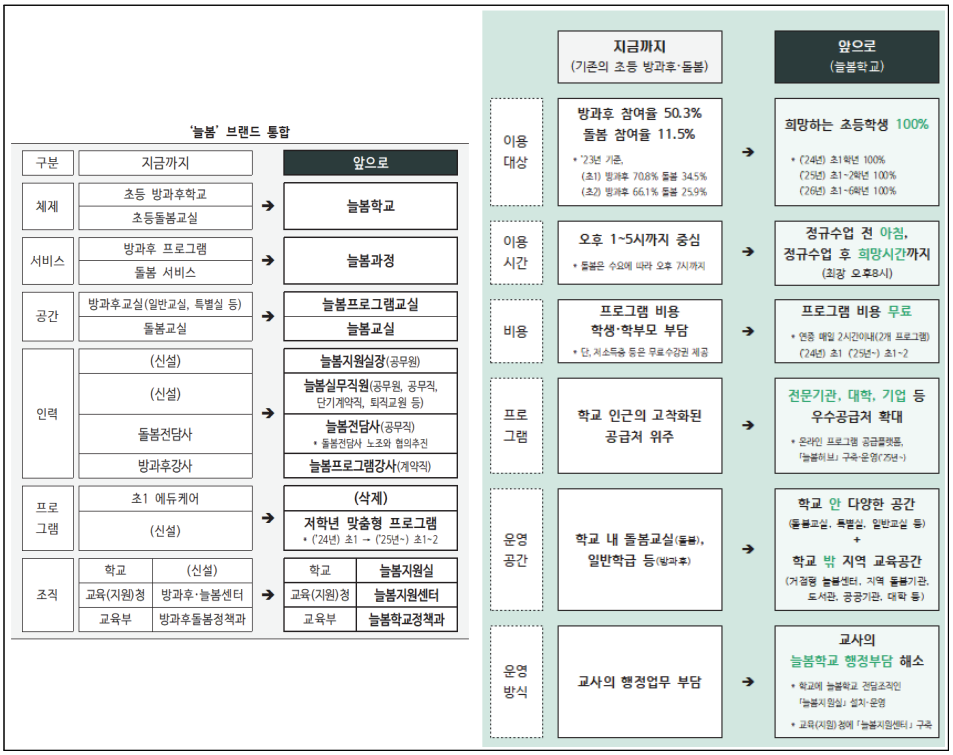
자료: 영유아 교육·보육추진단(2023), 유보통합 리플릿

□ 늘봄학교

❍ 정규수업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정책

-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초등 돌봄을 하나의 체제로 통합하여 단일체제로 개선

| 그림 3-22 | 늘봄학교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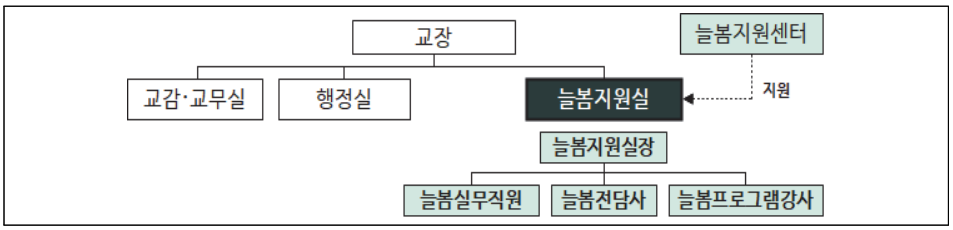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4.2),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 등을 해소하고자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2024년부터 도입됨

- 원하는 초등학생 모두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4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학년 연차별 확대

- 초등학교 1~2학년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하고, 초등학교 3~6학년 대상으로는 체육, 문화·예술, AI·디지털, 사회·정서, 기초학습,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사교육과 차별화되는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 그림 3-23 |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제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4.2),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2) 교육부 인프라 확충 및 개선정책

□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 교육부는 2023년부터 교육·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생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육·돌봄, 문화·체육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2023년에는 학생·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평생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39개를 선정하였고, 2024년에는 총 42개 사업을 선정하였음
- 강원도 화천군은 2023년에 학교인근 돌봄교실, 평생교육실, 스터디카페로 구성되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음

| 표 3-16 |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결과

구분	2023년	2024년		계
		1차	2차	
사업 수	39	22	20	80*
총 사업비 (교육부 지원)	7,500억 원 (3,020억 원)	3,750억 원 (1,520억 원)	4,620억 원 (2,075억 원)	15,870억 원 (6,615억 원)

주: 2023년 기 선정된 사업 재공모 선정으로 중복 제외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4.8.8), 2024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2차 공모 결과 발표

❍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교육발전특구·늘봄학교 등 교육개혁사업과 연계된 사업, 기타 관계부처 사업과 병행·연계되는 사업, 생존수영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포함하는 사업,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공모사업에서 우선 선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하여 교육부에서 지자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되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총사업비의 20%~ 30%를 지원하며,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최대 50%까지 예산 지원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인구감소지역이나 수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50%까지 일괄 지원

| 표 3-17 |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유형별 지원규모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	사업비 지원율	비고
20% 미만	30%	• 늘봄학교,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교육·돌봄 프로그램과 연계한 사업은 사업비 10%p 가산 지원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50% 일괄 지원
20% ~ 40%	25%	
40% 이상	20%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3.12), 2024년 학교복합시설 확대 본격화

3) 기타 교육부 관련지원정책

□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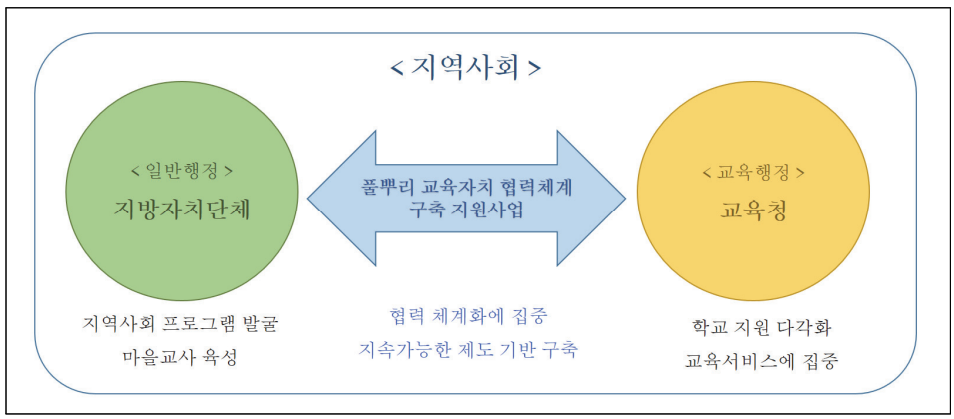
❍ 화천군의 교육청 협력사업은 2018년 교육부의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들 수 있음

-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지역주민과 학교가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고 공교육 혁신을 추진하던 교육사업임
-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협력을 통해서 풀뿌리 교육자치를 강화하고자 추진하였던 사업임

❍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사업은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거버넌스 구축분야와 교육사업 협력분야의 사업을 추진한 사업으로 2018년 화천군은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사업에 선정되었음

- 거버넌스 구축 분야는 기초지자체·교육청·학교·지역사회 간 지역교육혁신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내실화하는 사업
  * 기초단체장·교육장·지역주민정례협의회, 지역교육혁신 3주체협의회 등
- 교육사업 협력 분야는 지역교육혁신을 추진함에 있어 기초지자체·교육청·학교·지역사회 간 협력을 일상화하고 성과 창출에 집중하는 사업
  * 지자체-교육청 협력을 통해 공동 교육지원센터 구축, 지역사회 원클릭 지원프로그램 마련, 학교시설 복합화, 지역사회 교육지원 성과공유, 마을교육네트워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교육협력시스템 정착 등

| 그림 3-24 |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출처: 교육부(2018.7),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2. 지역발전정책

1) 국가균형발전정책

□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 2024년 2월, 화천군에 개소된 화천커뮤니티센터는 2019년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16억 원을 투입하여 4년 만에 준공된 초등 온종일 돌봄시설임

- 화천커뮤니티센터는 초등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종일 돌봄과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학습 및 방과후 수업공간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복합시설에 해당함
- 센터는 연면적 5,135㎡ 규모로 지하 1층에 공연장, 1층에 실내 놀이터와 파티룸, 2층에 돌봄시설과 실내체육관, 창의교육실, 3층에 돌봄시설과 장난감 대여소, 유아 놀이실, 4층에 글로벌 교육실과 진로진학 상담실, 스터디 카페로 구성되며, 공무원과 센터장, 돌봄교사 등이 함께 시설을 운영

❍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대표적으로 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낙후지역 개발 정책에 해당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되었던 2004년 「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당시 낙후지역은 '오지(오지개발촉진법 제2조), 개발대상도서(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제1항), 접경지역(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 개발촉진지구(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그밖에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이소영·박진경, 2021)

❍ 특수상황지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10항에 의거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 요인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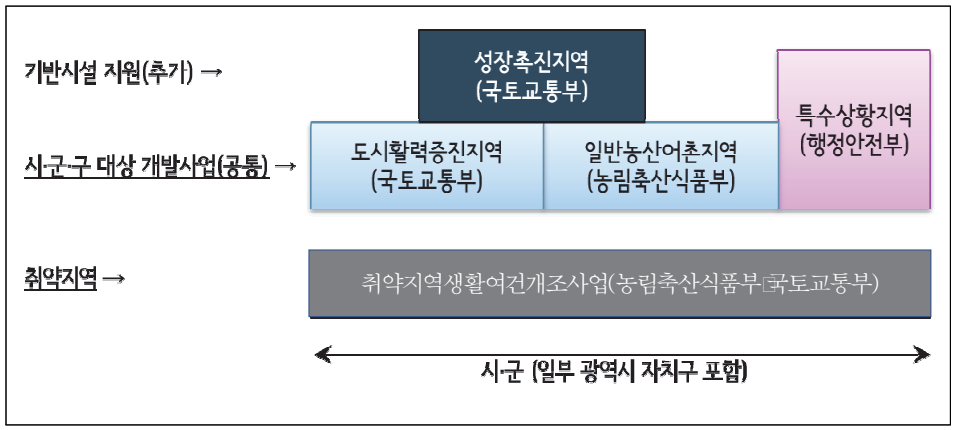
- 구체적으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섬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성장촉진지역 해당 섬 제외),

그리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 사업지역을 말함

❍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부문별 발전계획과 시도발전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

- 동법 제6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계획의 내용 중에서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은 제20조에 의거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 개선, 특성에 맞는 발전 촉진, 주민 소득창출 기반 확충,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 도시환경 개선, 교육·의료·복지 증진 등 낙후지역 관련 계획에 해당

| 그림 3-25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상 지역구분



출처: 기획재정부(2023.9), 2024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을 참고하여 작성

❍ 현재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 등의 낙후지역 관련 지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의 시군 공간을 4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자체별 예산에 매칭하는 국고 보조금 비율은 성장촉진지역 100%(인프라의 경우), 특수상황지역(80%), 일반농산어촌지역(70%), 도시활력증진지역(50%)으로 차등 보조
- 시군구 마을단위 개발사업은 우선 일반농산어촌지역, 특수상황지역, 도시활력

증진지역으로 구분하고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은 시군 중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도로 등) 확충을 추가로 지원

| 표 3-18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지역개발사업의 지원체계

구분	대상지역	대상사업	주관부처 (보조율)
성장촉진지역	• 일반농산어촌 중 낙후도가 심한 70개 지역 및 183개 도서 •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일반농산어촌·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외에 추가로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예산을 신청	• 지역접근성시설지원 • 성장기반시설지원	국토부 (100%)
특수상황지역	•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및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371개 개발대상도서 중 성장촉진지역이 아닌 188개 도서가 대상	• 기초생활기반확충 • 지역소득증대 • 지역경관개선 • 지역역량강화	행안부 (80%)
일반농산어촌 지역	•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세종시, 제주도 행정시 포함)에 있는 읍면 및 군(광역시 군은 제외) 123개 시·군 지역이 대상	• 기초생활거점 육성 • 권역단위 거점개발 • 농촌중심지 활성화 • 시군역량강화 • 신활력플러스	농식품부 (70%)
도시활력 증진지역	• 특별·광역시의 군·구 및 일반시 지역과 도농복합형태의 시중 동지역 143개 시·구 대상 * 우리동네 살리기는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사업대상지역 선정	• 우리동네살리기	국토부 (40~60%)
취약지역	• 취약지역 개조사업(전국 시·군·구)	• 생활·위생인프라 • 주택정비 • 안전확보 • 휴먼케어(문화·복지활동, 노인돌봄 등) • 주민역량강화지원	농식품부 국토부 (70~80%)

자료: 기획재정부(2023.9), 2024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을 참고하여 작성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 행정안전부는 2022년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2017년부터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을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추진한 바 있음

- 지방의 인구감소를 저지하고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은 청장년 유입과 귀촌 활성화 등 새로운 인구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장년과 귀촌인의 창업과 정착에 중점을 두되, 아동 돌봄 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시책이 포함되어 있었음

| 표 3-19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의 개요

구분	내용
목적	•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삶의 질을 보장하여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포용적 균형발전을 촉진
대상	• 인구감소지역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시군구
방식	• 공모방식 : 시군구→시도→행안부(1차 서면, 2차 현장, 3차 발표평가)
재원지원	• 매칭방식 : 특교세 60%, 지방비 40% • 2018년 : 총사업비 150억 원(특교세 90억, 지방비 60억) 2017년 : 총사업비 147억 원(특교세 88, 지방비 59)

자료: 김현호·박진경(2019), 인구감소지역 유형별 모델 및 사업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은 ① 지역활력 제고, ② 생활여건 개선, ③ ICT 기반 스마트타운 조성, ④ 공공서비스 전달 개선, ⑤ 공동체 활성화 유형으로 구분

- 2017년에는 충남 예산, 전북 정읍, 전남 강진, 경북 영양, 경남 하동 등 9개 지역이 선정되었고, 2018년에는 강원 화천 등 11개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대부분 복합적 사업으로 추진되었음
- 2018년의 경우 공동체 활성화, 지역활력제고 관련 사업이 가장 많고, 전남 곡성은 역활력제고+ICT 기반 스마트타운조성+생활여건 개선의 가장 복합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김현호·박진경, 2019)

| 표 3-20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선정 내역(2017~2018년)

구분	지역	사업명	사업유형
2017년	강원 평창	민관이 함께하는 대관령면 신바람 프로젝트	ICT 스마트타운조성
	충북 음성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 건립	공동체 활성화
	충남 예산	함께하는 실버키즈 100세 공동체 활성화	지역활력제고+공동체 활성화
	전북 정읍	지역활력 창출을 위한 동네 레지던시 조성	생활여건개선+공동체 활성화
	전북 고창	고수 해오름 생활 중심마을 조성	공동체 활성화
	전남 강진	농촌을 두드림! 아이의 울음! 희망이 열림!	지역활력제고+공동체 활성화
	경북 영양	인구지킴이 민관공동체 대응센터 구축	지역활력제고+생활여건 개선
	경남 하동	유앤유 (도시민 U턴-행복 UP) 타운조성	생활여건개선+공동체 활성화
	경남 합천	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조성	생활여건개선+공동체활성화
2018년	강원 화천	화천형! 일자리 & 돌봄 클러스터 구축	공동체 활성화
	강원 인제	하추분교 다시 세우기	지역활력제고+공동체 활성화
	충남 보령	약관에서 불혹까지 '곰내 줌마아재 희망키움 센터' 조성사업	지역활력제고+공동체 활성화
	충남 서천	다시 하나 된 마을 철길 건너 희망으로	생활여건개선+공동체 활성화
	전북 김제	활력 충천!! 사람 살기 좋은 성산별곡	지역활력제고
	전북 임실	걱정 없이 농사지어 희망을 파는 행복한 로컬푸드 공동체 구축	지역활력제고+공동체 활성화
	전남 곡성	청년들과 여행자의 든든한 '비빌 언덕 곡성'	지역활력제고+ICT 기반 스마트타운조성+생활여건 개선
	전남 보성	귀농·귀촌인 마중물 사업 '소멸위기 문덕면 살리기 프로젝트'	생활여건개선+공동체 활성화
	경북 문경	聞慶에서 청년의 행복을 캐내다, - 청춘텃밭 in 山陽	지역활력제고+생활여건개선
	경북 봉화	행복 나눔 파인토피아 봉화 조성	생활여건개선+공동체 활성화
	경남 함양	함양 산양삼 Welcome 농장 조성	지역활력제고+공동체 활성화

자료: 김현호·박진경(2019), 인구감소지역 유형별 모델 및 사업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강원도 화천군의 경우 접경지역 특수성으로 출산율은 높지만 돌봄·교육환경 부족으로 인구유출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교육과 복지사업을 연계한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및 돌봄 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2018년 공모사업에 선정

- 여성공방 조성, 여성공방 전시실 및 판매장 조성, 전산 교육장 조성, 그리고 공동 돌봄센터 조성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대응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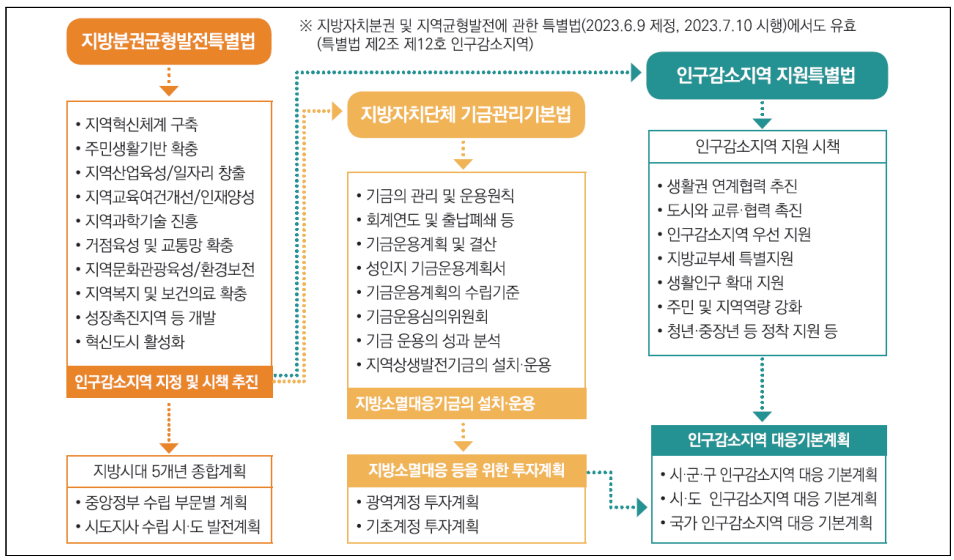
❍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은 2022년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정책으로 추진되기 시작

-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말하며, 현행법상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에 근거를 두고 89곳이 지정되어 있음

❍ 국가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중기계획인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기본계획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과 연계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행정, 재정, 정보·인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림 3-26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대응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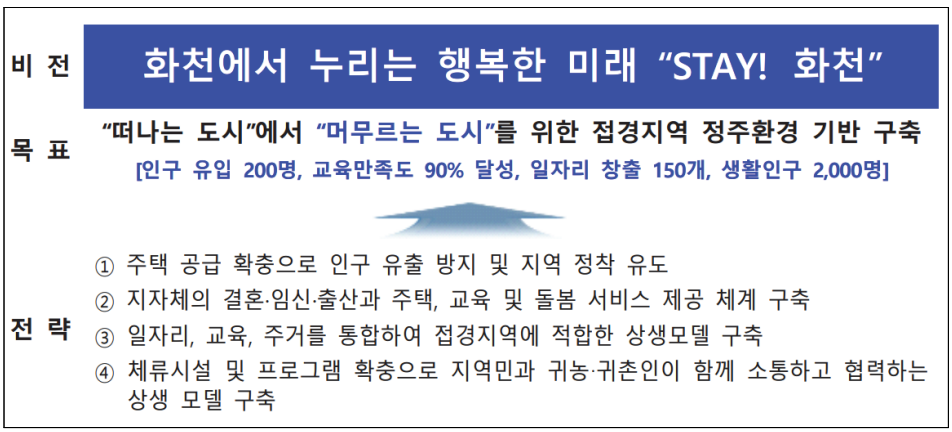
자료: 이소영(2024). 인구감소지역 대응정책의 협력적 추진방안.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제150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화천군은 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안)에서 ‘화천에서 누리는 행복한 미래 “STAY! 화천”’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음
- 접경지역 정주환경 기반 구축을 통해 “떠나는 도시”에서 “머무르는 도시”로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화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전략으로는 주택 공급 확충, 결혼·임신·출산과 주택, 교육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일자리-교육-주거 통합 모델 구축, ‘역민과 귀농·귀촌인을 위한 체류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등을 전략으로 제시
- 특히, 화천군은 교육복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화천형 가족행복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

❍ ‘화천형 가족행복센터’ 사업은 가족행복센터 조성과 운영,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주택과 교육, 돌봄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사업임
- 결혼, 임신, 출산, 주택, 교육·돌봄을 지자체가 책임지는 원스톱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그림 3-27 | 화천군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비전, 목표 및 전략



자료: 화천군(2024),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안)

2) 저출산대책

□ 보건복지부 저출산 대책

❍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1.08명으로 낮아진 이후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여 대응하기 시작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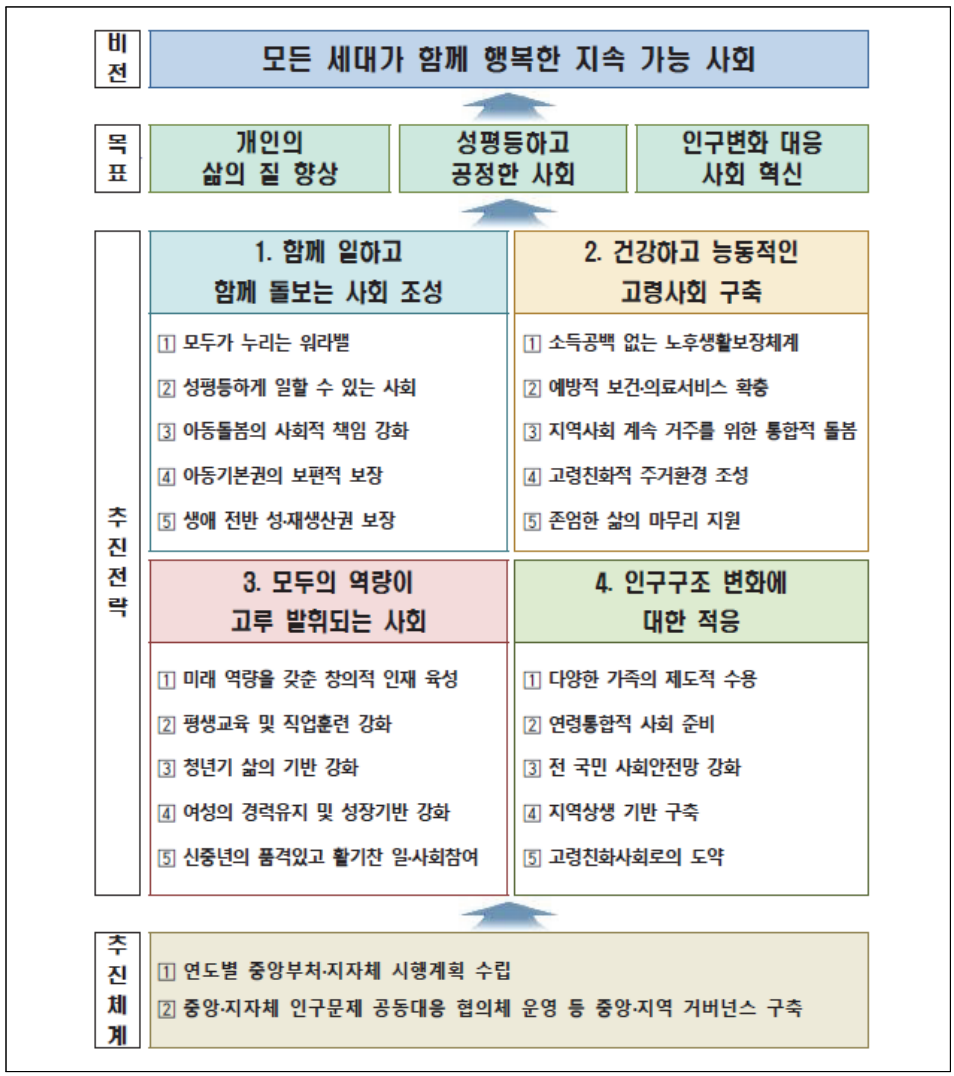
❍ 동법 제4조에 의거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자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가와 지자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함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을 수립하고, 저출산 완화 및 고령사회 대응을 2006~2010년 간 추진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11~2015년 간 추진되었으며, 국가책임보육 실현, 임신·출산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 제도 확충 등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 강화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브릿지 플랜 2020) 2016년~2020년까지 추진되었으며, 신혼부부 주거 지원, 청년 일자리 확대 등 구조적 대응 시도
- 현재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범위를 출산장려에서 전 생애 삶의 질 제고로 종합적 대응으로 확장

| 그림 3-28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1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출산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하며, 계층·세대 간 통합과 연대 등을 강조(관계부처 합동, 2020.12)

-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하여 출산율 제고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대비와 관련된 것으로 과제 영역을 확장

❍ 특히, 아동기본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고,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
-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보육을 확충하고,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 시간제 보육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등 다양하고 유연한 돌봄서비스 확충
-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돌봄공동체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및 참여형 돌봄 문화 조성
- 아동의 균등한 초동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온종일 돌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아동돌봄 통합적 운영 기반 마련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저출산대책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로 보건복지부 시책을 통해서 추진되는 구조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7개 분과위원회는 미래기획분과, 세대공감분과, 지역상생분과, 일생활균형분과, 성평등노동권분과, 가족다양성분과, 아동돌봄분과로 구분

□ 행정안전부 지자체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 보건복지부와 별도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극복을 선도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지자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모사업과 우수시책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및 시책을 발굴하고, 특교세 등 재정지원, 포상 등을 통해 인센티브 제공
- 지자체의 추진의지, 계획의 우수성, 효용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확산성, 주민체감도 등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서 선도 지자체를 매년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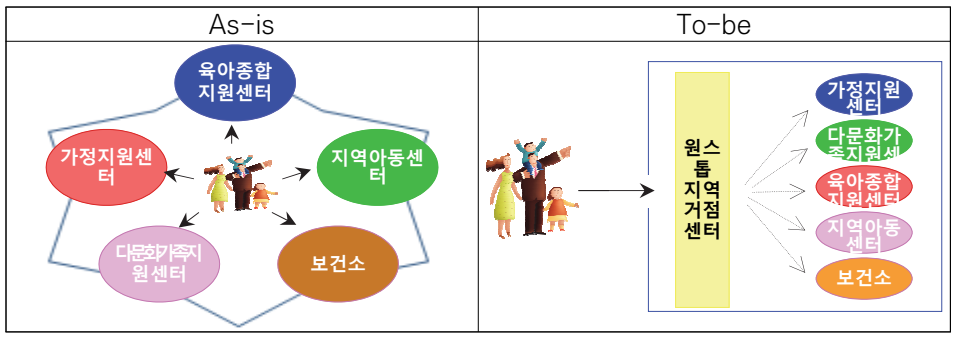
❍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다함께 돌봄사업' 등을 통해 도서관, 주민센터 등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지역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사업 성과를 창출하고, 성공모델화(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7)

- 지자체 또는 민간위탁시설이 분산 제공하고 있는 주거·결혼·임신·출산·보육 등 서비스를 공간적으로 통합 제공함으로써 지자체 지원시책의 연계성·통합성·효율성 제고

❍ 공모사업이 처음 추진되었던 2016년에는 서울 성북구, 충남 부여군, 전북 완주군, 경북 의성군이 원스톱 지역거점센터로, 경남 밀양시가 가족친화마을로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교세 29억 원을 지원받았음

- 2017년에는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으로 사상구 등 9개소가,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으로 경기 과천시 등 10개소가 선정되어 특교세 40억 원 지원
- 2018년에는 일자리-주거-복지체계를 두루 갖춘 경북 의성군의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과 서울 중구의 학교안 모든 아이 돌봄사업, 강원 영월군의 읍면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11개 사업이 선정
- 강원 화천군의 경우 2020년에 우리동네 이동 도우미 '화천 행복 셔틀'사업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음
  * 학생 무상 통학 셔틀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기르기 인프라 부족에 따른 기관간 협업으로 교통환경 개선
- 2023년에도 5건이 선정되었으며,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한 공공 돌봄 서비스 강화, 육아기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출산 인프라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등의 유형 등이 많았음

| 그림 3-29 | 원스톱 지역거점센터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7.10), 지자체의 저출산 위기극복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3) 기타 관련정책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삶의 질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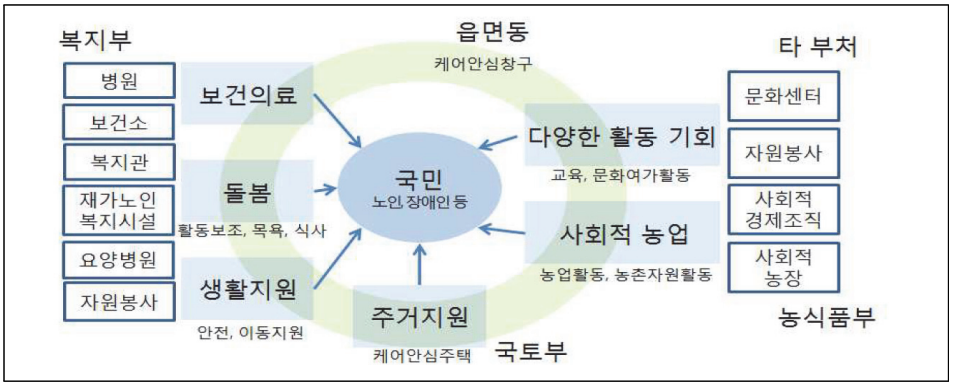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어업인 및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복지, 의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 촉진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은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기초생활 여건 개선,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에 관한 사항,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농어촌서비스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음
- 총리 주재 삶의 질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서는 화천군과 같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를 육성하는 전략을 포함

- 농어촌 지역의 통합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조성 목표

| 그림 3-30 | 농어촌 통합 돌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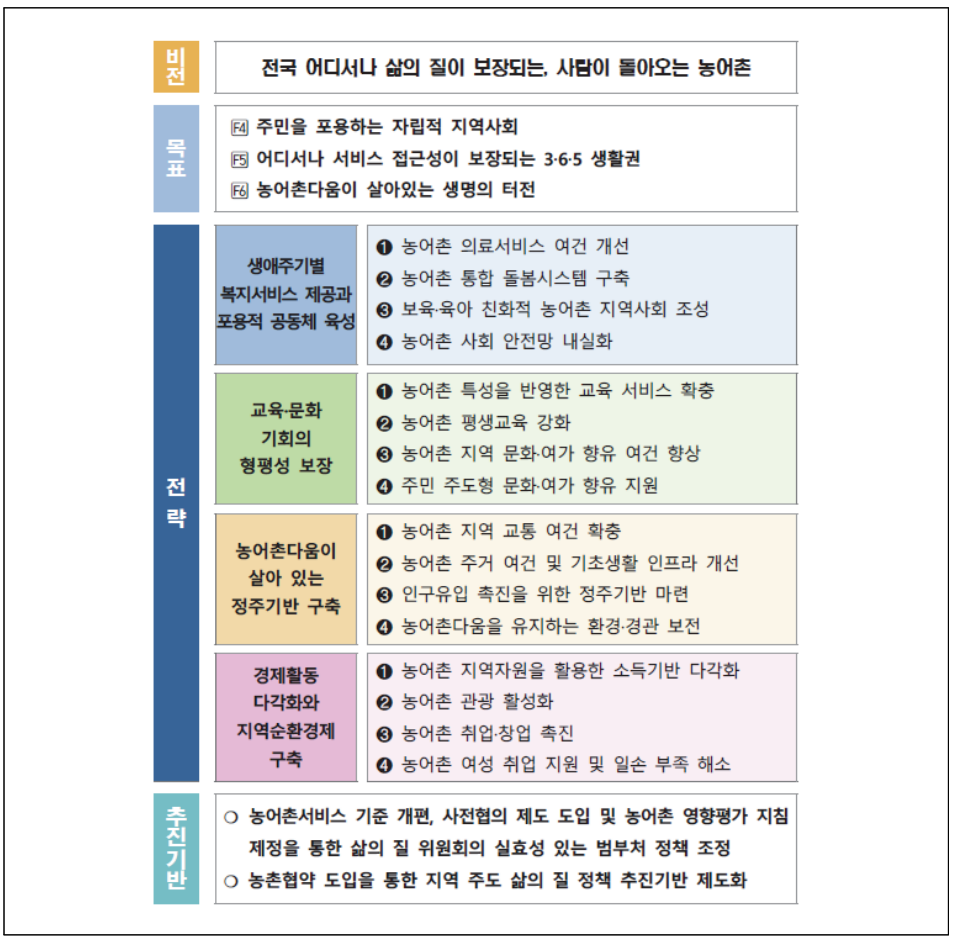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2),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안)

❍ 농어촌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되는 농어촌 통합돌봄 인프라 조성사업의 경우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을 활용하여 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고, 농어촌 통합 돌봄시스템의 경우 돌봄, 의료, 생활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한 특수 차량 도입, 통합돌봄센터 등 돌봄 기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시설 리모델링 등 지원

| 그림 3-31 | 삶의 질 정책의 비전, 목표 및 전략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2),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안)

제4절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1. 정책 시사점

□ 지역의 특수한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발전특구 정책방향 제시

❍ 전형적인 농어촌 인구과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이고 군사도시인 화천군은 2000년대 중반부터 인구감소와 지역발전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결국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고 진단

- 강원 접경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일반 군민보다 군장병 수가 더 많은 지역이나, 국방개혁 2.0 정책 추진으로 2014년에 인구 정점을 찍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현재 2만 3천명에 불과
- 젊은 군인가족이 많아 출산율은 높지만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약 50%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가는 등 대도시로의 전출 문제 심각
-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보니 우수한 학력과 능력을 갖춘 군인가족 등의 경력단절여성의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
- 군인가족들의 숙소배정을 위한 대기기간이 평균 수개월 소요되고, 젊은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는 주택이 부족하여 타 지역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하는 군숙소 대기자까지 발생

❍ 지역발전정책 속에서 아이를 기르기 가장 좋은 지역이 결국은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인식 하에서 화천군은 본격적으로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를 장기적인 지역발전의 군정 목표로 설정하고, 교육과 복지정책을 결합

- 주거문제 해결과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정책 등을 함께 추진하는 등 교육+돌봄+주거+일자리 정책을 복합 추진

❍ 현재 화천군의 교육발전특구 모델이 제안하고 있는 비전은 "화천형 교육&돌봄 선도모델과 교육 개혁과제를 실현하는 교육발전특구 조성"으로 그동안의 교육복지정책 추진을 통해 사회적인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촌지역 교육발전특구의 정책방향을 일관되게 담고 있음

- 화천 교육발전특구의 목표 역시 교육비, 주택가격 등 저출생의 경제적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교육개혁과제 실현을 통한 '아이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기초자치단체 주도의 꾸준한 교육과 돌봄정책 혁신 노력 지속

○ 화천군은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정책은 세부적으로 '출산율 전국 1위', '아이기르기 세계 1위', 그리고 '인구 3만 명 달성'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2015년부터 지자체 주도로 시작되었음

- 2015년 2월에 교육을 복지로 접근하여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교육복지과를 신설하였고, 2017년 부터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생애단계별로 5개 분야, 131개 사업을 20년 간 추진

○ 교육발전특구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초등학교 내 돌봄 전용시설을 조성하고, 화천 학습관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등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하여 돌봄을 책임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옴

- 2023년 3월 개관된 화천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방학기간 온종일 초등돌봄, 어린이 스마트 안심셔틀 운행 등을 추진

○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정책을 군의 최대 필요한 정책으로 인식, 학자금 지원과 지원부모 지역정착을 유도하여 성과 창출

- 화천군 교육만족도는 2018년 82.4% 대비 2020년에 94.1%(한림대 산학협력단 조사, 2022)로 증가하였고, 관내 고교 진학률은 2012년 91%에서 2022년 105%(화천군 자체조사, 2022)로 증가

□ 화천군 교육복지정책과 교육부 교육발전특구의 정책 연속성 확보

○ 화천군의 최우선정책은 바로 교육복지정책으로 저출산·고령화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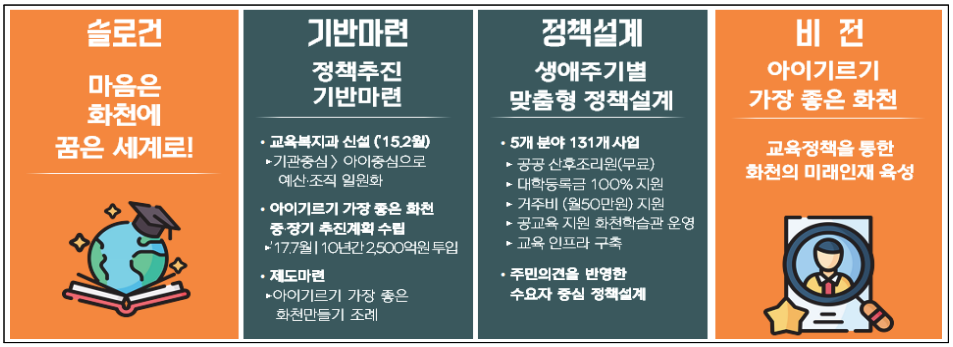
-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중장기 계획은 생애주기별, 대상특성별로 세분화되어 극대화되어 있음
- 생애단계별로는 임신출산기,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청년기, 전생애기간

으로 구분되어 맞춤형으로 정책이 설계

❍ 교육정책을 통해 아이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화천의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지역발전전략은 교육발전특구의 교육혁신전략과 연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할 계획

- 온종일 돌봄과 글로벌 화천인재육성, 주택정책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특화 산업단지 조성 등의 화천형 교육복지정책은 지역의 공고육 역량강화와 늘봄학교, 학교복합시설, 디지털 교육혁신, 맞춤형 지역 전문 인재양성 등 특구의 교육혁신전략과 맞닿아 있음

| 그림 3-32 | 화천군의 최우선정책인 교육복지정책



자료: 화천군 내부자료

□ 지방소멸대응 지역발전정책과 교육발전특구의 연계 추진

❍ 화천군의 교육발전특구는 또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대응정책과 연계하여 교육발전특구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 접경지역의 특수성으로 출산율은 높지만 돌봄과 교육환경이 부족하여 인구가 유출하고 있다고 판단,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화천형 일자리 돌봄 클러스터 구축을 함께 추진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으로 추진

-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화천형 공공주거 정책을 패키지로 추진하여 주거+힐링+일자리를 교육정책과 연계시키고 있음

○ 특히, 2024년 2월 화천군에 개소한 화천커뮤니티센터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하에서 2019년 행안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초등 온종일 돌봄시설로서 초등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종일 돌봄과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학습 및 방과후 수업공간 등의 역할을 담당

- 1호 온종일 돌봄 거점에 더해 공간적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2호 온종일 돌봄 거점을 계획하고 있으며, 2호 거점인 사내 커뮤니티 센터는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23년 9월에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추가로 선정되어 총사업비가 증액

2.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전략 수립

□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교육발전특구 비전 및 목표 설정

○ 화천군의 경우 유아·돌봄형 기초지자체 유형으로 선도적인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인구감소 접경지역이자 군사도시인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지자체 주도의 늘봄 특화모델을 제안하여 교육+돌봄+주거 패키지 지원을 통한 농촌지역 교육발전특구의 정책방향 제시

○ 접경지역 특성상 간부 비중이 높으나 부족한 주택, 군 관사 부족 문제로 군 간부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관외 출퇴근 비율이 높아 정주인구 확보를 위한 주택 조성 등 지역 문제 해결형의 전략 마련

- 교육발전특구에서 추진될 교육정책과 더불어 화천군 자체적으로 필요한 양육친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
- 특히,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들에 초점을 맞추고,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을 함께 추진하여 주거+힐링+일자리 정책까지 고려

* 인구감소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교육문제로 약 50%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인근 시도로 유출

❍ 교육발전특구가 전국 차원에서 성공적인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구조로 전략을 계획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추진해오던 지역발전정책 및 교육정책과 연계 추진

□ 공간적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과 교육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

❍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교육정책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 화천군의 경우 그간의 교육복지정책 추진으로 관내 교육·돌봄시설을 분석하고, 이를 공간적으로 연결시키는 인프라 구축사업을 함께 계획하고 있음

❍ 공간적으로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온종일 돌봄 거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
- 학교복합시설 사업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연계하여 온종일 돌봄 거점을 계획하고, 교육발전특구 프로그램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

| 그림 3-33 | 화천군의 온종일 돌봄 거점 계획



자료: 화천군 내부자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산간지역이 많은 화천군의 지리적인 특성과 농어촌 특성상 접근하기가 어렵다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화천군청 직영으로 스마트 셔틀버스를 운행
  - 설문조사 결과 교육시설이 분산(도보 20여분 이상)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 사고 발생 우려

2) 교육발전특구 주체 간 유기적 연계 강화

□ 지자체-교육청 간 연계 및 광역-기초 지자체 간 연계 강화

○ 화천 교육발전특구 운영계획서는 교육발전특구 지역협의체 컨설팅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화천군 교육복지과에서 수립하였기 때문에 지자체의 지역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화천군의 경우 2010년대 중반부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 더나은교육지구 등 교육청과의 연계가 비교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화천 교육발전특구가 교육부의 사업신청 기준에 따른 유형상 기초지자체(1유형)으로 선정되어 있어 교육발전특구 운영계획서 상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역할은 미흡
  - 완성형 온종일 돌봄 생태계 조성, 양육친화마을 조성, 글로벌 화천인재양성의 추진과제상 세부사업별로 완성형 온종일 돌봄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화천인재양성사업의 경우에는 교육특별교부금이 지원
  - 양육친화마을의 경우 화천군의 군비나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광역자치단체와의 연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의 효율적인 운영

○ 현재 화천 교육발전특구는 화천군수와 강원도교육감을 공동위원장으로 유관기관인 한림대학교와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지역협력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임
  -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는 교육발전특구의 운영방안을 심의하고 유관기관

과의 협력을 수행하는 바 기존의 주민협의체나 자문기관, 민간 연계조직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

3) 교육발전특구 관련 지역맞춤형 특례 발굴

□ 시·도 교육감 마이스터고 지정·취소 권한 특례 기발굴

○ 화천 교육발전특구는 시·도 교육감의 마이스터고 지정 및 취소 권한을 이양하는 특례를 제안하였음

- 강원특별자치도의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 급감에 대비하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래 산업수요를 빠르게 반영하여 강원도 직업계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한 미래 인재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함

○ 교육감의 지정을 받은 자율학교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향후 제정될 교육발전특구법이 제정된다면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조항 신설을 통해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음

- 이를 통해서 마이스터고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없이 지정·고시 가능

□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특례 추가 모색

○ 현재 화천은 맞춤형 지역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하여 강원대 등 거점 대학 지역인재 입학전형 확대와 화천형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지역인재 입학전형 확대를 위해서 강원대학교-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간에 업무협약을 맺고 우수 의료인재 양성을 위해서 의대 정원 중 지역인재 선발 기준을 기존 31%에서 2025년까지 60%까지 확대할 계획

  * 지역인재선발 입학 시 지역의료원 의무 근무

○ 지방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 육성법)」에 의거 해당지역의 범위 및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관련 별표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학생 최소 입학 비율은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약학대학의 경우 20%, 간호대학은 15%, 법학전문대학원은 10%, 의학전문대학원은 10%, 한의학전문대학원은 20%

- 이에 의대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를 중심으로 지역인재 선발 기준을 확대하는 특례 모색도 고려해볼 수 있음

4) 교육발전특구 성과 극대화를 위한 성과관리 방안

□ 계획-실행-평가-개선(P-DC-A) 절차에 따른 성과관리계획 기 수립

❍ 화천군 교육발전특구는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서 계획-실행-평가-개선(P-DC-A) 절차에 따른 성과관리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음

- 계획(Plan) 단계에서는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토대로 목표 타당성을 검토하고, 중장기 목표 및 성과지표 등 계획을 수립
- 실행(Do) 단계에서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조성, 육아친화마을 조성, 글로벌 화천인재 양성의 추진과제별로 실행, 운영
- 평가(Check) 단계에서는 성과지표 달성수준을 평가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며, 과제별로 사업비 집행현황을 점검
- 개선(Act) 단계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특구 추진의 저해요소를 발굴하여 개선, 그리고 특구의 효과성, 지역의 기여도 등 우수성과 및 지역사회 공유, 확산

❍ 교육발전특구 계획은 교육발전특구 추진단에서 연도별로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및 관리

- 완성형 온종일 돌봄 생태계 조성, 양육 친화마을 조성, 글로벌 화천인재 양성의 추진과제별로 목표에 따른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각각의 성과지표를 도출하여 각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성과지표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분되고, 정성지표는 주로 주민 만족도로 80% 이상으로 설정

| 그림 3-34 | 화천군 교육발전특구 성과지표

	완성형 온종일 돌봄 생태계 조성	양육 친화마을 조성	글로벌 화천인재 양성
목표	• 안전한 돌봄 생태계 조성 • 자녀의 양육부담 완화	• 교육+돌봄+주거가 결합된 양육친화마을 조성	• 지역인재 유출 방지 • 농촌지역 특구 방향 제시
추진 방향	• 온종일+방학기간+시간 선택형 늘봄 운영 • 안전한 돌봄 인프라 구축	• 공공주택, 주거단지 조성 • 대학까지 교육비 절감 •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 지역맞춤형 글로벌 인재육성 • 디지털 교육 혁신
성과 지표	• 합계 출산율 상승 • 온종일 돌봄 만족도 증가 • 스마트안심셔틀 만족도 증가	• 주택보급율 상승 • 경력단절여성 자격증 취득률 증가	• 학업성취도 상승 • 관내 학교 진학률 상승 • 사교육비 감소

자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2024.5)

□ 교육발전특구의 공통 성과지표와 특성화지표 단순화

❍ 화천 교육발전특구 운영계획서 상에서 성과지표는 각 세부사업별로 상당히 상세하게 비교적 많은 수의 정량·정성 성과지표가 연도별로 제시되어 있음

- 성과지표는 각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목적과 직결된 핵심지표(공통지표)와 특성화지표(자율지표)로 구분할 필요
- 양육친화마을 조성 전략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업 진행률(%)이나 사업 공정률(%), 입주율(%) 등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 결과(outcome) 지표라기 보다는 과정(process) 지표나 산출(output)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수정·보완이 다소 필요하다고 판단됨

❍ 교육발전특구는 주로 교육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만족도(점)와 이용자수(명), 프로그램 참여율(%) 등으로 단순화

- 양육친화마을 조성사업 및 완성형 온종일 돌봄 생태계 중에서 하드웨어 사업의 경우에는 시설을 건설하는 동안에는 성과를 측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공정률(%)을 활용하되 예산집행률(%) 지표는 적절치 않음

-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공정률(%)과 같은 과정(process) 지표보다는 이용자수(명)나 방문자수(명), 입주율(%) 등 사업목적과 직결되는 지표를 활용할 것을 제안함

| 표 3-21 | 화천군 교육발전특구 성과지표 선정사유

구분	성과지표	지표 선정사유	성과목표(2024년)
정량	합계 출산율	• 돌봄 생태계 조성 및 자녀의 양육부담 감소로 타 군단위 합계 출산율 대비 우위 〈측정방법〉 통계청 자료	• 타 군단위 평균 대비 합계 출산율 1% 우위
	주택보급율	• 양육 친화마을 조성을 통한 주택 보급률 전년 대비 상승 ※ 2020년 강원도 104.4%, 화천군 97.4% 〈측정방법〉 통계청 자료	• 전년 대비 1% 상승
	경력단절여성 자격증 취득률	• 화천군에서 운영하는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프로그램 이수자 중 자격증 취득율 〈측정방법〉 프로그램 내부 자료	• 자격증취득 50% 이상
	학업 성취도	• 미래인재아카데미 등 프로그램 이용 관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상승 〈측정방법〉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활용	• 전년 대비 3% 이상 상승
	관내 高 진학률	• 타 시군으로 전출 방지 및 전입 유도 〈측정방법〉 학교알리미 공시자료	• 102% 이상 달성
정성	사교육비 감소	• 전년 대비 월평균 사교육비 감소 〈측정방법〉 화천군사회조사	• 전년 대비 3% 감소
	화천군 교육프로그램 참여율	• 교육 돌봄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역정착 〈측정방법〉 프로그램 참여자수(내부자료)	• 정원 대비 80% 이상 참여
	주민만족도	• 온종일돌봄, 스마트 안심셔틀, 각종교육 프로그램 등 특구사업 만족도 상승 〈측정방법〉 설문조사	• 80% 이상 만족

자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2024.5)

제 4 장

유형 Ⅰ - 혁신도시 연계형 : 충청북도 음성·진천군

제1절 유형 및 교육발전특구 사업 개요

제2절 지역여건 분석

제3절 관련 정책동향 분석

제4절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04 유형 Ⅰ – 혁신도시 연계형 : 충청북도 음성·진천군

제1절 유형 및 교육발전특구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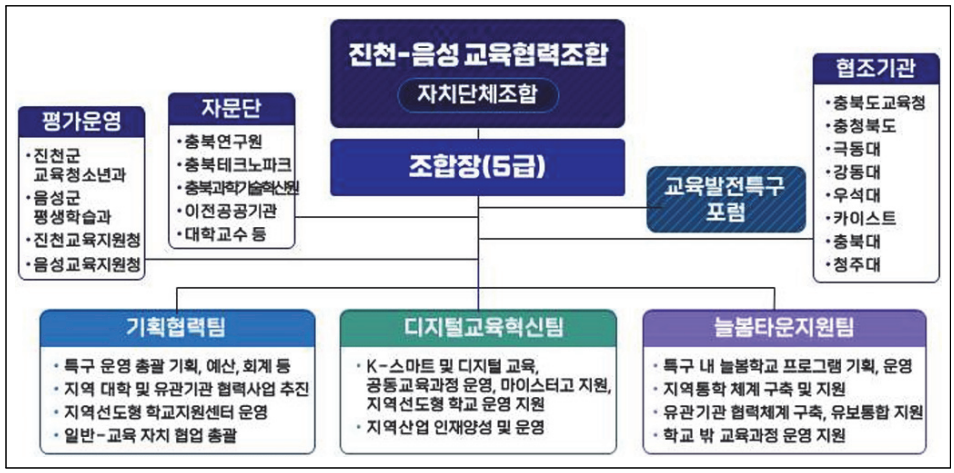
1. 유형 개요

□ 교육부 사업신청 기준에 따른 유형

○ 진천군과 음성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1유형의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선정

– 진천군과 음성군은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아 자치단체조합의 법적 지위를 갖는 교육협력조합 설립 추진을 계획

| 그림 4-1 | 교육발전특구 사업협력체계 구축 (진천군·음성군)



출처: 진천군·음성군·진천교육지원청·음성교육지원청(2024: 66)

– 1조합장(5급)과 3팀의 9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진천·음성군과 진천·

음성교육지원청에서 각각 6명과 4명이 파견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
- 특구 시범지역 등 5년 동안 운영되며, 교육발전특구를 총괄해 기획·예산 집행의 권한을 갖고 있음

❍ 진천군과 음성군, 진천교육지원청과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커뮤니티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를 구축
- 1유형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유형으로, 군수와 교육장이 진천·음성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의 공동위원장을 맡음

□ 교육단계에 따른 유형

❍ 특구 운영계획은 유아·돌봄,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특정의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려움
- 거점형 늘봄학교 구축, 돌봄인프라 활용으로 늘봄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진천-음성 공유교육 및 늘봄 체계를 구축
- 지역 협약형 자공고 전환 등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학교' 지정으로 공교육 경쟁력 확보 및 신뢰도 제고

❍ 지역주민의 생애주기와 생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 제공

□ 지역 특성에 따른 유형

❍ 지역 특성에 따른 교육특구 중점 추진 분야로 유형을 구분하면, 음성군과 진천군은 혁신도시 연계형에 해당
- 혁신도시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생애주기별 디지털 교육 및 늘봄 공간 확보로 정주여건을 강화지역 육성 주력산업과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으로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

❍ 이전 공공기관 채용비율을 확대하고 유턴 지역인재 채용 대상의 포함을 요구하는 등 지역청년의 이탈 방지를 위해 노력

2. 특구 사업 현황

1) 특구 운영 방향

□ **충북혁신도시 중심의 지자체 협업 교육발전 생태계 구축**

○ 충북혁신도시 중심으로 진천군과 음성군을 '충청권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것과 연계하여 교육발전특구를 운영
- 수도권으로의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 국가적 인구감소에 따른 지자체 협업의 모델을 발굴

○ 교육발전특구 운영 비전과 목표, 전략 등 설정
- (비전) 교육혁신을 통해 인구유입 및 지역산업 육성으로 지방시대 선도
- (목표) 비전의 실현을 위해 협치(Governance), 혁신(Innovation), 성장(Growth) 등 3대 목표를 제시

| 그림 4-2 | 진천군·음성군 교육발전특구 비전과 목표



출처: 진천군·음성군·진천교육지원청·음성교육지원청(2024: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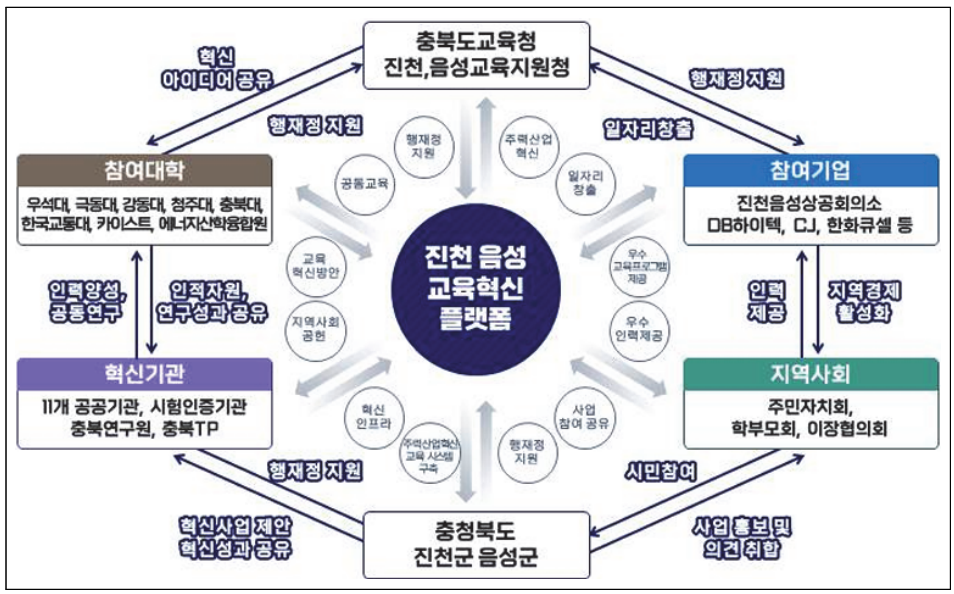
○ 진천·음성의 발전전략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연계해 지역균형발전 모델을 창출
-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역발전 전략 및 정주여건을 조성
- 1차적으로 혁신도시 외 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2차적으로 충북 지역으로 확산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3차적으로는 지자체 협업의 모델을 전국에 확산

□ 진천·음성 교육혁신 플랫폼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 진천군과 음성군, 진천교육지원청과 음성교육지원청 등을 중심으로 교육혁신 플랫폼을 통해 대학, 혁신기관, 기업,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의 운영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성과를 분석
-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효과적 추진 방안을 모색
- 교육발전특구사업 추진과 관련한 기관과의 연계 유지 등의 역할을 수행

❍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위해 교육혁신 플랫폼을 구성
- 참여대학 : 우석대, 극동대, 강동대, 청주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카이스트, 에너지산학융합원 등
- 혁신기관 : 11개 공공기관, 시험인증기관, 충북연구원, 충북TP 등
- 참여기업 : 진천음성상공회의소, DB하이텍, CJ, 한화큐셀 등
- 지역사회 : 주민자치회, 학부모회, 이장협의회 등

| 그림 4-3 | 진천군·음성군 교육발전특구 협력체계 구축



출처: 진천군·음성군·진천교육지원청·음성교육지원청(2024: 66)

2) 추진과제별 주요 내용

□ (추진과제 1) 진천-음성 공유 교육+늘봄(EduCare) 체계 구축

○ 추진 목표 및 필요성
- 혁신도시 내 에듀케어 서비스를 희망하는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맞춤형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지역 내 정주여건 강화에 기여
- 젊고 활력 넘치는 충북혁신도시에 특화된 '지자체 협업 공공형 교육+늘봄 시스템'을 구축

○ (세부과제 1) 혁신도시 내 거점형 늘봄학교(센터) 구축
-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한 학교의 교육·돌봄 환경 구축
- 학교와 지역이 함께 활용 가능한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과 학생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

○ (세부과제 2) 혁신도시 인프라 활용 늘봄시스템 구축
- 혁신도시와 지역 내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학교밖 늘봄 체험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학부모의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
- 혁신도시 내 학교 밖 늘봄 프로그램 가능 시설 및 학교별 늘봄 담당자와의 협의 후 충북혁신도시 늘봄타운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장지원을강화
- 젊고 활력이 넘치는 충북혁신도시에 특화된 지자체 협업 중심의 공공형 교육 및 늘봄시스템을 구축

○ (세부과제 3) 복합혁신센터를 활용한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 복합혁신센터는 진천·음성 주민이 문화·여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공유도시 개념을 도입한 혁신도시의 대표문화시설로서, 공유평생학습관, 인공지능 교육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활용해 생애단계별 교육(Education) 및 늘봄(Care)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정주 여건을 강화
- 돌봄은 복합혁신센터 내 실내공연장을 활용하여 학교 공간 부족의 어려움 및 지역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 밖 늘봄 프로그램(문화공연체험)을 시범 운영

- 진천군과 음성군이 공동으로 운영 중인 공유평생학습관을 활용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특구 강좌를 기획하고 이를 운영

❍ (세부과제 4) 혁신도시 내 돌봄인프라 활용으로 늘봄 사각지대 해소
-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별 돌봄 인프라 등을 연계하여 군 또는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 돌봄 플랫폼을 활용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을 도모하고, 서로의 역량과 자원을 공유하며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돌봄(Care) 서비스가 필요한 군민들이 손쉽게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추진과제 2)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교」 운영

❍ 추진 목표 및 필요성
- 혁신도시와 타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 등 특구 맞춤형 학교 운영으로 공교육 경쟁력 확보와 신뢰도를 제고
- 진천·음성 지역 내 모든 학교가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사교육비 절감으로 타 지역으로의 학령인구 이탈 방지를 도모

❍ (세부과제 1)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자율형 공립고', '지역 선도형 학교' 등 추진
- (자율형 공립고) 교육부의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2023.06.21. 보도)에 제시된 공교육의 다양성 확대 정책 관련하여 진천고, 음성고 등 일반계고 2개교를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지정
- (KEDI 협력학교 운영 강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전고, 동성고 등 2개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의 글로벌 리더로서 미래 지향적인 명문고등학교 혁신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 교육과정 특화고교 운영) 진천군의 광혜원고,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진천사업고 등 3개교를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학습 프로그램과 향후 교육학습 활동을 개발해 많은 학생들이 세계시민 의식 함양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 (지역 자율협약형 고교 운영) 음성군의 매괴고, 대금고, 충북반도체고 등 3개교를 대상으로, 자율형 공립고, KEDI 협력학교 외 지역 고교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균형 잡힌 성장과 교육 역량 강화로 미래 인재를 양성
- (지역선도형 학교 운영 및 확대) 충북혁신도시와 혁신도시 이외 지역 학교 간 교육격차 및 교육여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사회·산업의 특성을 수렴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특성화 소규모학교로 육성

❍ (세부과제 2) 교육격차 해소 및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한 「균형적 학구 운용」,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지원
- 진천군과 음성군 내 지정되어 있는 일방 학구제 대상학교를 확대하여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확대 및 학교규모 적정화에 기여
- 지역의 실정 및 특색을 고려한 소규모학교 간 상호작용(학습공동체 운영)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공동 교육과정 개설 및 지원을 통해 공교육의 내실화를 도모

❍ (세부과제 3) 안전하고 편리한 「차량지원 시스템」 구축
- 차량지원 시스템을 통해 진천·음성군 지역학생들의 교육 접근권, 지역사회·산업 연계 교육 프로그램 및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도모
- 차량 임차 지원을 통한 진천·음성 지역 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차량지원 시스템을 구축

❍ (세부과제 4) 교육발전특구 과제 수행을 위한 우수교원 지원
- 지역별 선도교원을 활용한 연구회 결성 및 운영에 대해 승진가산점 및 연구개발비 등 인센티브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방법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
- 진천·음성 교육협력조합 구축 후 행·재정적 지원 부서를 조직화하여 교원들의 연구회 조직은 (가칭) 교육발전특구 포럼으로 활성화

□ (추진과제 3) 4차산업 대비 K-스마트 교육 강화 및 전 세대 디지털 인재 양성

❍ 추진 목표 및 필요성
- 정부의 디지털 교육 활성화 및 공교육 강화를 위한 K-스마트 교육 연계 미래 인재를 육성

- 초·중등학생들과 주민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SW·AI 교육 확산에 기여

❍ (세부과제 1) K-스마트교육 연계 디지털 교육사업 운영
- 2021년「K-스마트 교육시범도시 구축사업」의 지속발전 추진동력을 활용하여 보다 더 강화된 기관 간 협력 및 사업 브랜드화를 통해 디지털 미래 인재 교육 생태계 안착
-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미래 경쟁력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 함양을 통해 AI 지역인재를 양성

❍ (세부과제 2)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인공지능 교육 거점 센터 운영
- 일반 교육과정(초·중) 및 심화 교육과정(초·중) 운영에 따른 교육기능 강화로 K-스마트 특화교육사업 단계별 커리큘럼을 구성
- K-스마트 인공지능(AI) 교육지원 거점센터 운영으로 사업안착 도모

❍ (세부과제 3) 진로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활용
- 진학 또는 진로 관련 정보 습득 등을 위한 맞춤형 온라인 플랫폼 구성으로 공간 제약 없는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교육비 절감 및 학습동기 부여에 기여
- 진천·음성 지역 학생들에게 고품질 콘텐츠 제공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교육자원 분포의 불균형 해소를 도모

❍ (세부과제 4) 전세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한 디지털 격차 심화로 전 군민 디지털 세상 적응을 위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초교육부터 취업연계 교육까지 '전 세대 생애주기별 디지털 교육'으로 확장
- 진천군 평생학습센터와 음성군 평생학습과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충북혁신도시 공유 평생학습관의 디지털학습장을 활용하여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늘봄프로그램을 제공

□ (추진과제 4) 지역산업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구축으로 미래인재 양성

❍ 추진 목표 및 필요성

-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진천군은 4대 신성장 산업, 음성군은 4+1 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이와 연계한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할 실정
- 현재 지방인재 채용 관련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지역인재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채용 효과는 미미하여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

❍ (세부과제 1) 지역 주력산업 연계 및 개발(대학)지역인재 양성

-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학,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이전공공기관 등과 연계해 인재양성 및 지역산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대학·초중고등학교·이전공공기관 등의 인력양성으로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기업 취업과 연계

❍ (세부과제 2) 진천-음성 「지역사회·산업 기반 초·중·고·대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 진천·음성군 지역사회와 주력 산업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경험(교육)을 통해 지역에 정주하고 지역산업체(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인재를 선제적으로 육성
- 바이오, 헬스케어, 2차전지, 반도체 등 지역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적자원의 '역량(competency)'을 추출하고 이와 같은 역량을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적합하도록 학교교육과정 및 대학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운영

❍ (세부과제 3) 지역산업 연계 및 K-드림 실현 외국인 유학생 정착과 이주노동자 교육 (지역대학&뿌리산업 연계)

- 국내 적응이 어려운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게 고용민원, 체류관리, 통번역, 상담, 교육 등 One-stop 서비스를 제공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현장실습 또는 취업과 연계한 규제혁신 및 지원프로그램을 개설

○ (세부과제 4) 지역 상생 청년 타지 유출을 막기 위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규정 개정
-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시 현행 5인 이하를 채용하는 소수 직렬을 의무채용에서 예외토록 하는 조항을 개선
- 이전지역에서 초·중·고등교육을 이수 후 타 지역 대학을 졸업(예정)한 U턴 인재를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

3) 교육발전특구 특례 제안

□ 교육발전특구 과제 수행 및 공교육 강화를 위한 우수교원 유치 인센티브 제공

○ 진천·음성 교육발전특구 학교 교원 승진 가산점 개정
- 충북혁신도시 내 옥동초, 상신초, 동성초, 서전중, 동성중, 서전고 등을 '나급지'로 조정 요청

○ 진천·음성 교육발전특구 학교 교원 승진 가산점 신설
- 진천·음성 지역 내 선도교원을 활용한 연구회 참여 및 교육발전특구 사업 담당 교원(보직교사)에 대한 승진가산점을 신설
- (가칭)특구 포럼에 참여하는 교원 또는 유공교원의 경우 승진가산점 및 중복 경력을 인정

□ 지역-대학 협력 기반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 극동대·강동대의 보건·간호 계열 학과 정원 조정 등 필요(증원)
- 국립소방병원 개원에 따른 인력 공급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극동대 및 강동대 관련학과 정원 증원 필요
- 소방의료 특화 캠퍼스 조성 및 지역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학과 정원 증원 및 캠퍼스 설립

○ 국립소방병원과 지역인재 채용 관련 협약
- 국립소방병원·음성군·강동대·극동대는 국립소방병원의 간호·보건인력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 업무협약을 체결

□ 산학 겸임강사 채용 및 운영 / 학교 밖 외부 전문가 참여 수업 규제 특례

○ K-스마트 교육 및 지역 사회·산업 관련 교육 실시
- 진천군과 음성군 양군 내 초·중·고등학교에서 K-스마트 교육 및 지역 산업 분야의 우수한 외부 강사가 정규 교육과정 내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 제6항을 바탕으로 충북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교육발전특구 디지털 및 지역 사회·산업 교육 운영을 위한 강사 운영'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법제도 개선 이후, 지역 내 공공기관(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및 지역 산업체 전문 인력의 교육발전특구 내 정규교육과정 수업 가능

□ 지역산업 연계 및 K-드림 실현 외국인 유학생 정착과 이주 노동자 교육 관련 특례

○ 유학생 비자 등 관련 규제 개선
- 지역 대학의 유학생 유치 활성화, 유학생 진로 탐색 기회 확대를 위해 유학생 비자 관련 규제 개선 건의

○ 비자 발급, 취업활동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유학생 유입 확대
- 비자 발급 시 재정능력 심사 기준 관련 규제 완화
-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시간제 취업 기준 규제 완화
- 졸업 후 취업비자로 변경 (E-9 또는 E-7)

□ 지역 상생 청년 타지 유출 막기 위한 지역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규정 개정

○ 현재 지방인재 채용 관련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지역인재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채용 효과는 미미해 의무채용 관련 예외조항 개선 등으로 실질적인 채용 비율 확대 필요

○ 지역인재 채용 규제 개선
- 현행 5인 이하를 채용하는 소수직렬은 의무채용을 예외토록 하는 조항 개선

- 이전 지역에서 초·중·고등교육을 이수 후 타 지역 대학을 졸업(예정)한 경우 U턴 인재를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을 위한 진천-음성 교육협력조합 설립

❍ 진천·음성군이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을 위한 공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 및 행정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 필요
- 1유형 선정 지역 중 2개 지자체 협업 사례는 진천-음성군이 유일하며, 공동으로 사무 처리 및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 필요

❍ 진천-음성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따른 성공적인 운영과 추후 특구 지정에 대한 업무전담 조직 구성으로 교육개혁과제 수행 가능
- 늘어나는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하고 진천-음성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중복되는 예산 절감으로 지방재정 기여

제2절 지역여건 분석

1. 지역여건

1) 인구 현황 분석

(1) 인구 및 고용 동향

❍ 충북혁신도시의 인구는 2014년에 2,638명에 불과했으나, 이후에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3만 명을 상회

-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진천군 덕산읍 21,962명, 음성군 맹동읍 8,918명 등 총 30,88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북혁신도시 계획인구(39,476명)의 약 78.2%를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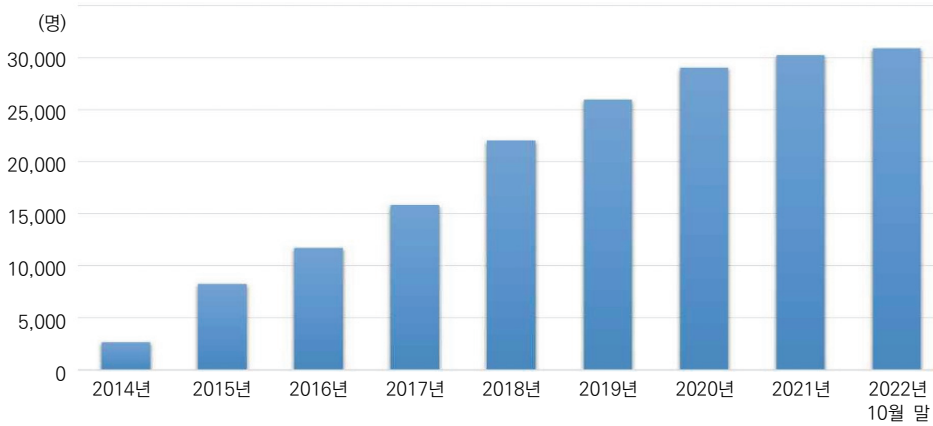
| 표 4-1 | 충북혁신도시의 인구변화추이 (2017~2022년)

(단위: 세대, 명)

구 분		계	진천군 덕산읍	음성군 맹동면
2017년	세대	6,242	2,749	3,493
	인구	15,801	2,663	8,138
2018년	세대	8,659	4,922	3,737
	인구	22,031	13,704	8,327
2019년	세대	10,253	6,359	3,894
	인구	25,937	17,379	8,558
2020년	세대	11,769	7,787	3,981
	인구	29,057	20,519	8,538
2021년	세대	12,280	8,213	4,067
	인구	30,237	21,592	8,645
2022년 (10월 말)	세대	12,495	8,292	4,203
	인구	30,880	21,962	8,918

출처: 충청북도(2022), 〈제2차 충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p.48, 재구성

| 그림 4-4 | 충북혁신도시의 인구변화추이 (2014~2022년)



출처: 충청북도(2022), 〈제2차 충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p.48.

❍ 2020년부터의 연령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만 0세~19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0%를, 만 20세~49세는 전체의 약 50%를 상회

- 학생 및 청년·중년층이 전체 인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표 4-2 | 충북혁신도시의 연령별 인구변화추이 (2020~2022년)

(단위: 명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10월 말)
계	29,057 (100.0)	30,237 (100.0)	30,880 (100.0)
0~9세	5,296 (18.2)	5,248 (17.5)	5,158 (16.7)
10~19세	3,417 (11.8)	3,767 (12.4)	4,068 (13.2)
20~29세	2,900 (10.0)	2,832 (9.4)	2,708 (8.8)
30~39세	6,951 (23.9)	6,770 (22.5)	6,517 (21.1)
40~49세	5,862 (20.2)	6,425 (21.1)	6,854 (22.2)
50~59세	2,724 (9.4)	3,012 (9.9)	3,211 (10.4)
60~69세	1,327 (4.6)	1,525 (5.0)	1,626 (5.3)
70세 이상	580 (2.0)	658 (2.2)	738 (2.4)

출처: 충청북도(2022), 〈제2차 충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p.49, 재구성

❍ 충북혁신도시의 평균연령은 32.4세로,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국 혁신도시 연령별 점유율과 비교했을 때 충북혁신도시는 0~9세, 30~39세, 40~49세의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가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표 4-3 | 충북혁신도시의 연령별 인구 현황 (2022년 6월 말 기준)

(단위: 명 (%))

구 분	평균 연령	계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
전체	34.7	232,632 (100.0)	35,944 (15.5)	30,453 (13.1)	22,794 (9.8)	43,741 (18.8)	49,953 (21.5)	27,445 (11.8)	14,860 (6.4)	7,442 (3.1)
부산	34.6	7,348	1,067	1,246	549	761	1,877	1,039	514	295
대구	36.4	18,678	2,719	1,633	1,808	4,258	3,738	1,818	1,619	1,085
광주·전남	33.1	39,191	6,125	4,946	4,578	7,879	8,068	4,215	2,290	1,090
울산	39.0	19,909	2,837	2,666	1,737	3,188	4,484	2,782	1,518	697
강원	35.8	26,472	3,703	3,459	2,645	4,992	5,534	3,472	1,801	866
충북	32.4	30,653 (100.0)	5,239 (17.1)	3,937 (12.8)	2,763 (9.0)	6,628 (21.6)	6,695 (21.8)	3,133 (10.2)	1,561 (5.1)	697 (2.3)
전북	36.9	29,251	4,081	4,901	2,804	4,070	6,764	3,790	1,859	982
경북	33.0	23,134	4,019	2,835	2,327	4,494	4,795	2,757	1,280	627
경남	33.0	33,091	5,502	4,279	3,182	6,699	6,954	3,744	1,941	790
제주	38.1	4,905	652	551	401	772	1,044	695	477	313

출처: 충청북도(2022), 〈제2차 충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p.49, 재구성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혁신도시 정주환경 통계조사〉에 따르면, 충북혁신도시의 인구달성률은 78.5%로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9위를 기록

- 그러나 2021년 6월 말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1년 동안의 인구 증가는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결과를 나타냄

  * 광주·전남 768명, 충북 716명, 경남 63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4-4 | 혁신도시별 주민등록인구 현황(2022년 6월 말 기준)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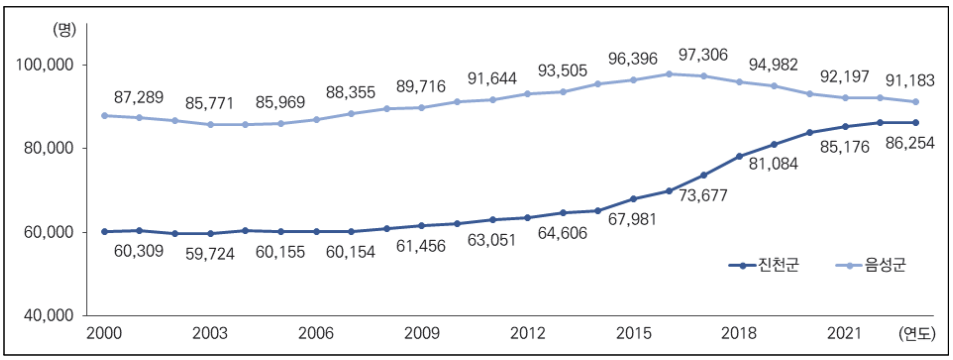
혁신도시	인 구		혁신도시	인 구	
	계 획	달 성		계 획	달 성
부산	7	7.3 (105.7)	충북	39	30.7 (78.5)
대구	22	18.7 (85.0)	전북	29	29.3 (100.7)
광주·전남	50	39.2 (78.4)	경북	27	23.1 (85.6)
울산	20	19.9 (99.5)	경남	38	33.1 (86.8)
강원	31	26.4 (85.2)	제주	5	4.9 (98.0)

출처: 국토교통부(2022), "22년 상반기 혁신도시 정주환경 통계조사 발표" (보도자료), 9.26.

❍ 충북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진천군과 음성군의 2023년 인구는 각각 86,254명과 91,183명으로, 2000년 이후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혁신도시 입지의 영향으로 두 지역 간에 점차 비슷한 규모로 근접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진천군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소폭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07년 이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23년 인구는 2000년 대비 43.5%의 성장을 기록
- 반면에 음성군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감소하다가 2005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 2016년 97,787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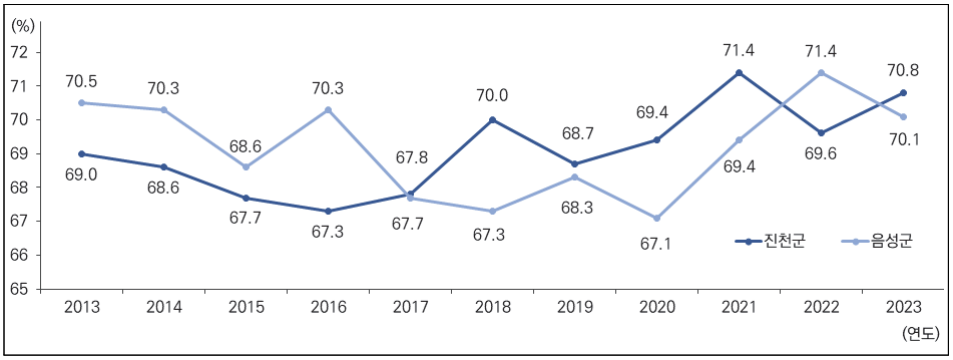
| 그림 4-5 | 진천군 및 음성군의 인구 수 변화 추이(2000~2023년)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진천군과 음성군의 고용률은 2013년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2/2분기 현재 두 지역 모두 70% 이상으로 전국 평균(62.0%)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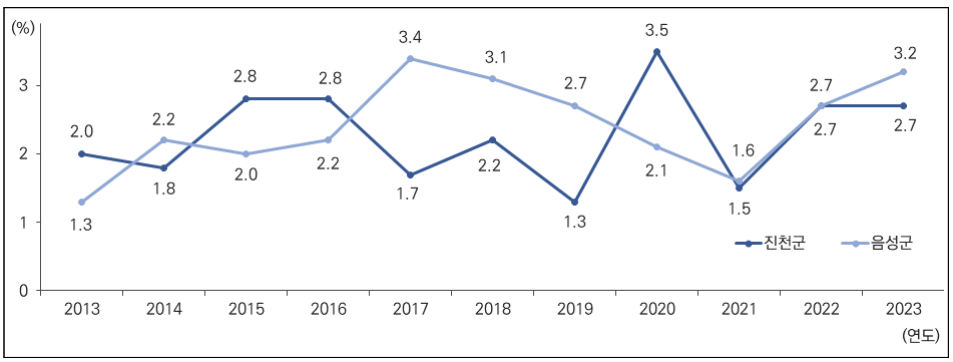
| 그림 4-6 | 진천군 및 음성군의 고용률 변화 추이 (2013~2023년)



출처: 행정안전부, 「경제활동인구조사」

❍ 진천군과 음성군의 실업률은 2013년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 2023년 2/2분기 현재 각각 2.7%와 3.2%를 나타냄
-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나, 2023년에는 진천군이 전국 평균(2.7%)과 같은 수준을, 음성군은 높은 수준을 기록

| 그림 4-7 | 진천군 및 음성군의 실업률 변화 추이 (2013~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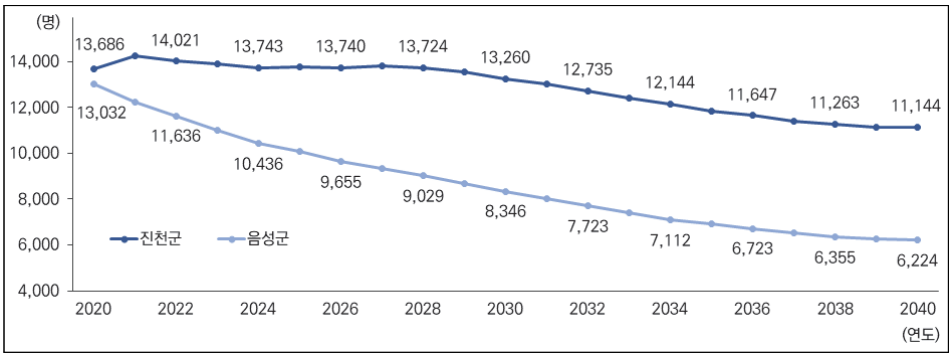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 「경제활동인구조사」

(2) 학령인구 전망

❍ 진천군과 음성군의 학령인구는 꾸준히 감소하여 2040년에는 각각 11,144명과 6,224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진천군은 2021년에 14,263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40년까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음성군은 진천군보다 더욱 빠르게 감소하여 2040년의 학령인구가 2020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

| 그림 4-8 | 진천군 및 음성군의 장래 학령인구 추계 (2020~204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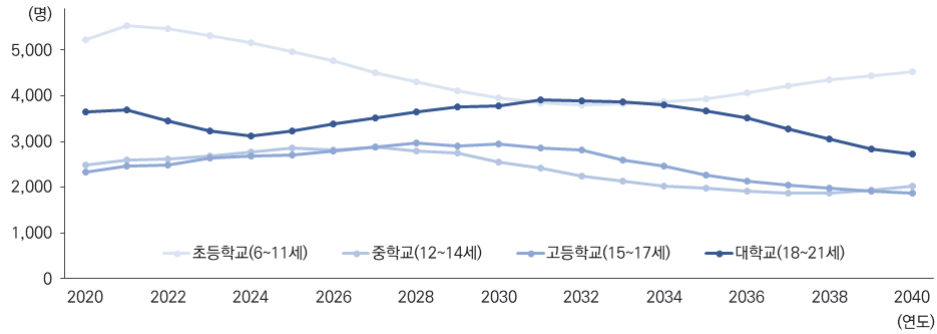


출처: 충청북도, 「시·군단위 장래인구추계」

❍ 2020년 진천군의 학령인구를 유형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5,22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대학생 3,639명, 중학생 2,485명, 고등학생 2,33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각각 2022~2032년 기간과 2028~2037년 기간에 감소했다가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하여 회복하는 양상을 나타냄
-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소폭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각각 2028년 2,963명과 2031년 3,904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그림 4-9 | 진천군의 장래 학령인구 유형별 추계 (2020~204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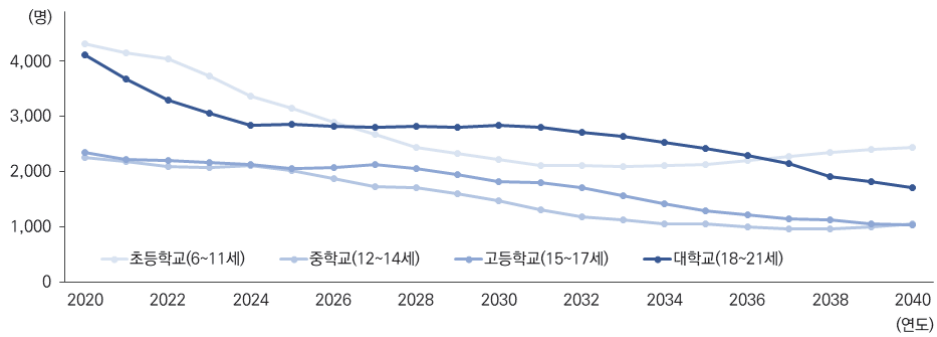


주: 중위 수준 장래 인구추계 가정
출처: 충청북도, 「시·군단위 장래인구추계」

❍ 2020년 음성군의 학령인구를 유형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4,332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대학생 4,109명, 고등학생 2,338명, 중학 2,26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각 유형에서 미시적인 증가 현상도 보이지만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 2040년의 학령인구는 모든 유형에서 2020년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그림 4-10 | 음성군의 장래 학령인구 유형별 추계 (2020~2040년)



주: 중위 수준 장래 인구추계 가정
출처: 충청북도, 「시·군단위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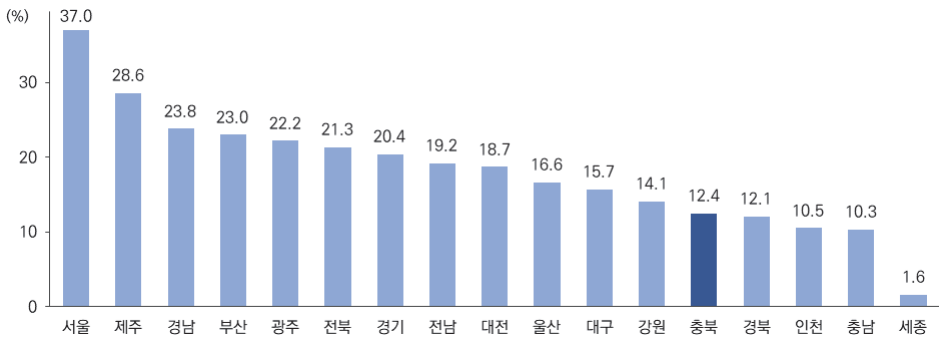
(3) 지역정주 취업률 추이

❍ 진천군과 음성군이 속한 충청북도는 지역 대학 졸업자 중 12.4%가 지역 내 기업에 취업해 지역정주 취업률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를 기록함

❍ 이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율로 2021년 지역정주 취업률이 가장 높은 시·도인 서울(37.0%)의 약 1/3 수준에 불과

- 충북 지역의 정주 취업률 향상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 차원에서 충북혁신도시의 역할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 그림 4-11 | 시·도별 지역정주 취업률 (2021년)



주: [1] 지역 대졸자 중 해당 지역 소재 기업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비율로 산출된 '지역정주 취업률1' 자료를 활용함
[2] 데이터 특성상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제외됨
출처: 최정윤, 문보은, 백승주, 손윤희, 조옥경, 장수정. 202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지원을 위한 지역 특성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 지역 산업여건 분석

(1) 주요 산업 동향

□ 충북 지역의 주력산업

❍ 충북혁신도시의 기능을 고려해 충청북도 주력산업에 초점을 맞춰 지역 산업 여건을 분석했으며, 이와 관련해 〈2024년 충청북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참고

❍ 충청북도는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부품' 등을 주력산업으로 선정
- 충북 주력산업의 최근 3년(2019~2021년)간 종사자수 연평균성장률은 각각 첨단반도체 1.78%, 융합바이오 3.50%, 친환경모빌리티부품 3.40%로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나타냄
- 사업체수의 연평균성장률도 첨단반도체 17.36%, 융합바이오 11.85%, 친환경모빌리티부품 9.10%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진천군 및 음성군 현황

❍ 진천군과 음성군은 비인구감소지역으로 도내에서 지역 산업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임
- 충청북도 13개 시·군 가운데 6개의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7개 지역 간에 제조업체 수 기준으로 지역 불균형 현상이 나타남
- 진천군과 음성군은 도내 제조업체 수의 비중이 각각 13.2%와 26.9%로 청주시(34.0%) 다음으로 높은 지역에 해당
- 주력산업의 경우도 진천군과 음성군이 각각 11.1%와 18.8%를 차지해 청주시(48.6%) 다음으로 도내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냄

❍ 충북 중소기업 밀집지역 사업장 수를 분석한 결과 진천군과 음성군은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장을 차지
- 청주시의 사업장이 1,068개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음성군으로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지역특화발전특구 등에 368개사가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산업단지공단, 2023년 2분기)
- 진천군은 산업단지와 지역특화발전특구 등에 283개사가 입지하여 충주시(337개사) 다음으로 나타나 도내에서 네 번째 많은 것으로 파악

❍ 충청북도 주력산업 가운데 하나인 융합바이오 산업의 누계 생산액 상위 5개 산업단지 중에 진천군과 음성군이 3개를 차지
- 충북 내에 융합바이오 산업 연관 업종이 입주한 산업단지는 모두 17개로 파악

- 상위 5개 산업단지로는 진천군에 신척일반산업단지와 덕산농공단지가, 음성군에는 금왕일반산업단지가 입지

| 표 4-5 | 충청북도 융합바이오산업 주요 5개 산업단지 현황

(단위: 개사, 명, 억 원, 백만 달러)

유형	시·군	단지명	입주업체 수	가동업체 수	고용현황	누계생산	누계수출
국가	청주시	오송생명과학	72	60	4,702	33,447	1,729
일반	진천군	신척	94	86	2,455	12,760	269
일반	청주시	오창제2	8	8	2,295	10,673	818
농공	진천군	덕산	7	7	2,100	6,965	265
일반	음성군	금왕	8	7	1,219	6,008	570
합 계			189	168	12,771	69,853	3,651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2022년 2분기),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통계표; 충청북도(2023: 12)에서 재인용
주: 충북 내 산업단지(국가, 일반, 농공 포함) 중 해당산업 업종에 해당하는 누계생산액 상위 5개 산업단지에 해당

(2) 관련 지역산업 분석

□ 첨단반도체 산업

❍ 첨단반도체 산업은 산업 전반의 지능화·자동화·효율화에 필요한 첨단반도체 부품, 소프트웨어, 서브 시스템, 기존 제품(공정·장비 포함)으로 산업 특성에 따라 부품 간 통합과 AI·SW 기반의 제어기술 융합을 통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산업을 의미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첨단반도체 산업의 범위는 세세분류로 핵심 7개, 연관 17개 등 총 24개의 산업에 해당
- 충청북도 첨단반도체 산업의 주요 품목은 고성능 반도체 부품, 차세대 반도체 공정, 다기능 AI 반도체, 지능형 제어부품 등으로 구성

❍ 충청북도 첨단반도체 산업은 2021년 기준으로 전국대비 종사자 수가 5.7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체 규모계수(BQ)는 1.95로 전국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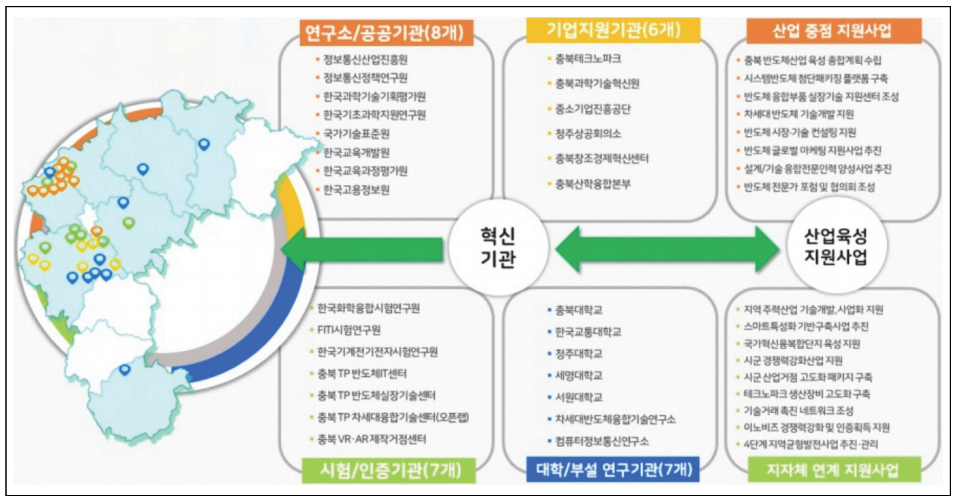
- 2022년 기준으로 사업체 460개, 매출액 44,207억 원, 종업원 수 8,684명, 연구개발비 1,995억 원, R&D역량 5.51%, R&D성과 458건 수준을 나타냄

| 표 4-6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첨단반도체 산업의 범위

KSIC		세세분류명	KSIC		세세분류명
핵심	C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연관	C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C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C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C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C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C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C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C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C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C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J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C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연관	C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C2730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C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C29120	유압기기 제조업
	C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C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C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C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C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출처: 한국기업데이터(2023); 충청북도(2023), 〈2024년 충청북도 지역산업진흥계획〉, p.12에서 재인용

| 그림 4-12 | 충청북도 첨단반도체 산업 혁신기관



출처: 충청북도(2023), 〈2024년 충청북도 지역산업진흥계획〉, p.17

-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18.88명, 매출액 96.10억 원, 연구개발비 4.34억 원, 연구소 보유 0.60개, 특허출원 0.42건, 특허등록은 0.57건 수준을 보임

❍ 가치사슬 기반의 혁신기관 분류 결과 충북 지역 내 첨단반도체 산업은 인·허가, 인력양성, 시험인증, 기업지원 등 단계별 전 과정에 대한 국내 최고 수준의 혁신 인프라를 보유

- 충청북도는 첨단반도체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대학 및 기업과의 연계·협력으로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

□ 융합바이오 산업

❍ 융합바이오 산업은 바이오기술을 기반으로 선도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예방, 진단, 치료, 건강증진에 필요한 제품·서비스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첨단반도체 산업의 범위는 세세분류로 핵심 6개, 연관 13개 등 총 19개의 산업에 해당

| 표 4-7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융합바이오 산업의 범위

KSIC		세세분류명	KSIC		세세분류명
핵심	C20423	화장품 제조업	연관	C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C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C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C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C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C21220	한의약품 제조업		C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C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C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C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업
연관	C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C2730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C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J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C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M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C17909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

출처: 한국기업데이터(2023); 충청북도(2023), 〈2024년 충청북도 지역산업진흥계획〉, p.21에서 재인용

- 충청북도 융합바이오 산업의 주요 품목은 단백질의약품, 유전자재조합치료제, 체외진단기기, 코스메슈티컬 등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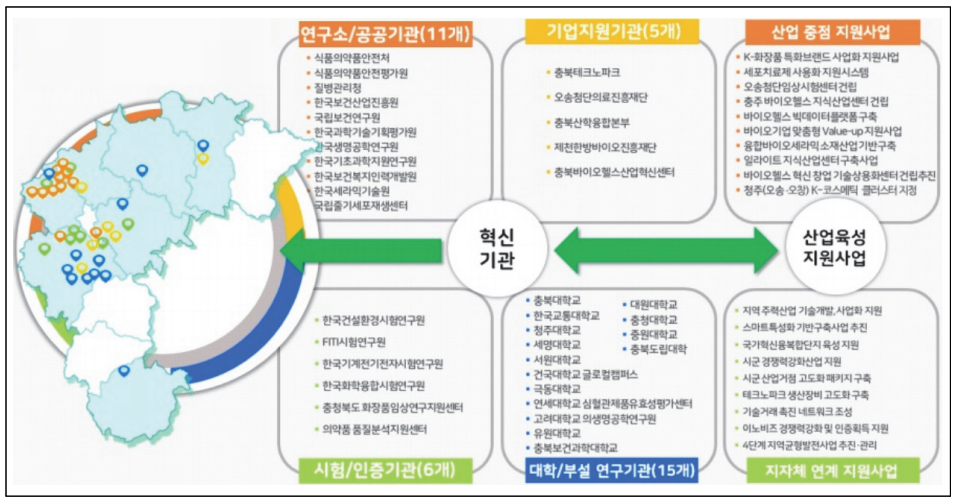
❍ 충청북도 융합바이오 산업은 2021년 기준으로 전국대비 종사자 수가 11.71%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체 규모계수(BQ)는 1.43으로 전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2022년 기준으로 사업체 584개, 매출액 69,676억 원, 종업원 수 12,201명, 연구개발비 3,116억 원, R&D역량 4.24%, R&D성과 487건 수준을 나타냄
-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20.89명, 매출액 119.31억 원, 연구개발비 5.34억 원, 연구소 보유 0.62개, 특허출원 0.42건, 특허등록은 0.42건 수준을 보임

❍ 가치사슬 기반의 혁신기관 분류 결과 충북 지역 내 융합바이오 산업은 인·허가, 인력양성, 시험인증, 기업지원 등 단계별 전 과정에 대한 국내 최고 수준의 혁신 인프라를 보유

- 충청북도는 바이오산업과 지역발전을 위해 유관대학 및 대기업과 협력, 투자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

| 그림 4-13 | 충청북도 융합바이오 산업 혁신기관



출처: 충청북도(2023), 〈2024년 충청북도 지역산업진흥계획〉, p.26

❍ 친환경모빌리티부품 산업은 친환경동력부품, 모빌리티용 전장부품 등 이동체의 성능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핵심 부품을 제조·개발하는 산업을 의미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친환경모빌리티부품 산업의 범위는 세세분류로 핵심 7개, 연관 15개 등 총 22개의 산업에 해당
- 충청북도 친환경모빌리티부품 산업의 주요 품목은 모빌리티용 신품 소재부품, 이차전지 소재부품, 차체 및 특장차 소재부품, 전기장치 및 주행용 센서, 자동차 경량 및 전동부품 등으로 구성

| 표 4-8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친환경모빌리티부품 산업의 범위

KSIC		세세분류명	KSIC		세세분류명
핵심	C28202	축전지 제조업	연관	C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 제품 제조업
	C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C25941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C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C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C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C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C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 장치 제조업		C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C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 장치 제조업		C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C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C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연관	C22191	고무패킹류 제조업		C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C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C30122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C25122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C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C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C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출처: 한국기업데이터(2023); 충청북도(2023), 〈2024년 충청북도 지역산업진흥계획〉, p.30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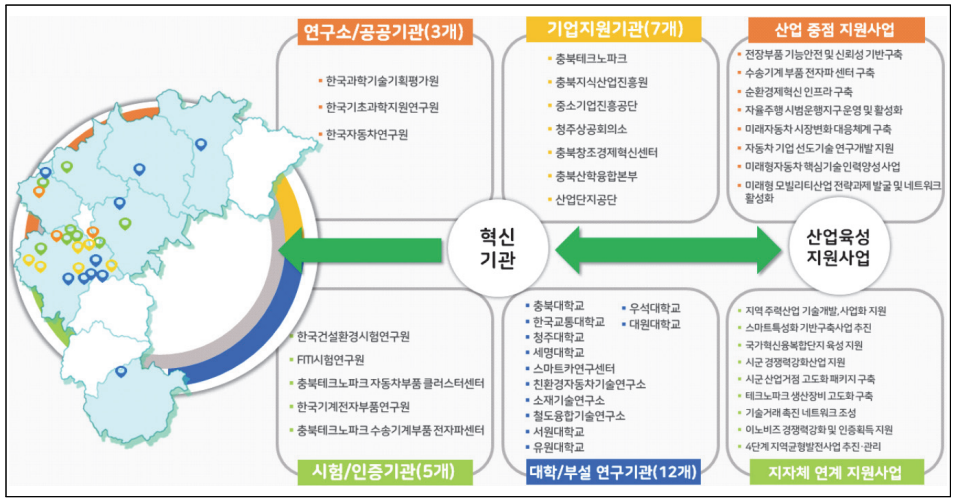
❍ 충청북도 친환경모빌리티부품 산업은 2021년 기준으로 전국대비 종사자 수가 6.8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체 규모계수(BQ)는 2.01, 산업 성장률은 2.17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2022년 기준으로 사업체 206개, 매출액 40,530억 원, 종업원 수 5,838명, 연구개발비 1,350억 원, R&D역량 2.90%, R&D성과 221건 수준을 나타냄

-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28.34명, 매출액 196.75억 원, 연구개발비 6.55억 원, 연구소 보유 0.58개, 특허출원 0.40건, 특허등록은 0.67건 수준을 보임

❍ 가치사슬 기반의 혁신기관 분류 결과 충북 지역 내 친환경모빌리티부품 산업은 인·허가, 인력양성, 시험인증, 기업지원 등 단계별 전 과정에 대한 국내 최고 수준의 혁신인프라를 보유

- 충청북도는 친환경모빌리티의 수요 및 보급 확대, 자원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시장 확보와 기업지원 등으로 재제조 산업 혁신 거점으로의 성장 역량 강화 추진

| 그림 4-14 | 충청북도 친환경모빌리티부품 산업 혁신기관



출처: 충청북도(2023), 〈2024년 충청북도 지역산업진흥계획〉, p.26

3) 교육 및 연구 관련 인프라 분석

(1) 교육기관

□ **충북혁신도시 유초중등 기관 현황**

❍ 혁신도시 개발계획상 설립 예정인 총 11개교 중에서 2024년 12월 현재 10개교(유3, 초3, 중2, 고1) 건립 완료

- 혁신초중학교가 2028년에 개교할 때까지 지리적으로 근접한 옥동초의 학급당 학생 수를 분담하면서 교육환경 개선 가능

| 표 4-9 | 충북혁신도시 유초중등 기관 현황(2024년 12월 기준)

학교 및 소재지		규 모		학급당 학생수	개교일
		학급수	학생수		
동성유	음성군 맹동면	7	126	18.0	2014.9.
서전유	진천군 덕산읍	12	203	16.9	2019.3.
옥동유	진천군 덕산읍	10	173	17.3	2016.9.
유치원		29	502	17.3	-
동성초	음성군 맹동면	36	851	23.6	2014.3.
(혁신초)	진천군 덕산읍	(30)	(1,050)	35.0	2028.3. (예정)
진천상신초	진천군 덕산읍	40	955	23.9	2019.3.
옥동초	진천군 덕산읍	49	1,355	27.7	2022.12.
초등학교		126	3,161	25.3	-
동성중	음성군 맹동면	16	361	22.6	2014.3.
서전중	진천군 덕산읍	35	888	25.4	2017.3.
중학교		51	1,249	24.5	-
동성고	음성군 맹동면	25	600	24.0	2023.3.
서전고	진천군 덕산읍	25	522	20.9	2017.3
고등학교		50	1,122	20.9	-

출처: 충청북도(2022), 〈제2차 충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p.217을 토대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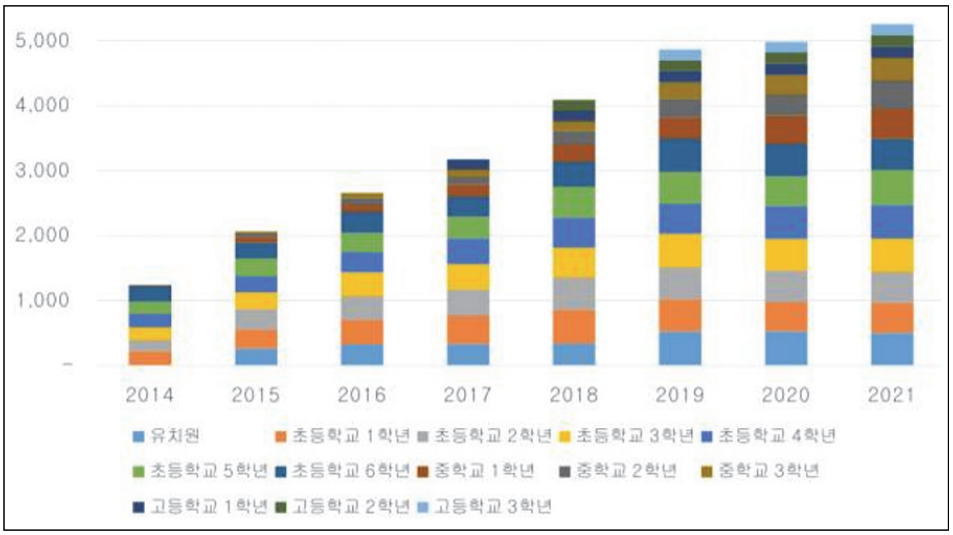
❍ 혁신도시 내 진급 학생 수용 현황
- 중학교 입학 인원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결과가 나타나지만, 그 인원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 고등학교 입학 인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타 지역에서 유입되었지만, 이후에는 타 지역으로 유출이 진행되는 현상이 관찰
- 그럼에도 충북혁신도시의 학생 수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표 4-10 | 충북혁신도시 초·중·고등학교 입학 및 졸업생 차이 (2014~2020년)

연도	학생 수		A-B	학생 수		C-D
	초등 졸업 (A)	중등 입학 (B)		중등 졸업 (C)	고등 입학 (D)	
2014년	239	86	-153	2	-	-2
2015년	237	110	-127	26	-	-26
2016년	325	180	-145	80	161	81
2017년	313	263	-50	111	166	55
2018년	387	324	-63	148	179	31
2019년	516	432	-84	246	175	-71
2020년	500	468	-32	296	174	-122

출처: 충청북도(2022), 〈제2차 충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p.218,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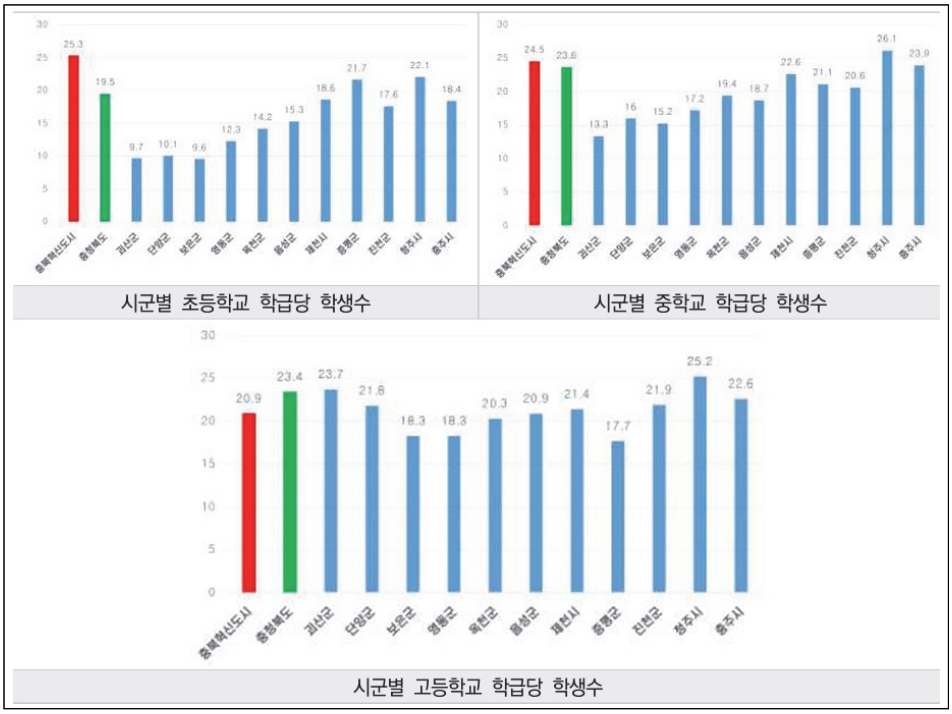
| 그림 4-15 | 충북혁신도시의 학생 수 변화추이 (2014~2021년)



출처: 충청북도(2023), 〈제2차 충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p.218

❍ 충북 지역의 시·군별로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충북혁신도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5.3명으로 충북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충청북도, 2022: 219)

| 그림 4-16 | 충북 지역의 시·군별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비교



출처: 충청북도(2023), 〈제2차 충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p.219

□ 관내 유초중등 기관 현황

❍ 2024년 진천군의 유·초·중등 기관 현황을 보면, 전체 학교 수는 47개, 학생 수는 11,121명, 교원 수는 1,116명으로 나타남

- 유치원이 17개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7개, 일반고 3개, 특목고 2개, 특성화고 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음성군의 유·초·중등 전체 학교 수는 60개로 진천군보다 많지만, 학생 수는 8,777명로 적은 인원의 분포를 나타냄

- 유치원이 23개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 20개, 중학교 10개, 일반고 4개, 특목고 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진천군과 음성군에는 고등학교가 각각 6개와 5개로, 모두 11개의 학교가 소재
- 진천군에는 진천고, 광혜원고, 서전고 등 3개의 일반고등학교, 충북체육고,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등 2개의 특수목적고등학교,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인 진천상업고가 관내에 소재
- 음성군에는 음성고, 대금고, 매괴고, 동성고 등 4개의 일반고등학교, 그리고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충북반도체고가 위치
- 진천군의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와 음성군의 충북반도체고는 충북의 주력 산업과 연관이 있는 분야로 판단
- 진천군의 서전고와 음성군의 동성고는 충북혁신도시에 위치해 이전공공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협력하는 학교로 운영

□ 관내 고등교육기관 현황

❍ 2024년 진천군과 음성군의 고등교육기관 현황을 보면, 전체 학교 수는 2개, 학생 수는 9,872명, 전임교원 수는 255명으로 나타남

| 표 4-11 | 진천군·음성군의 고등교육기관 현황 (2024년)

(단위: 개, 명)

학 제		학교 수	재적학생 수	전임교원 수	전임교원 수 대비 재적학생 수
진천군	대학	(1)	1,646	51	32.3
	부설대학원	(2)	49	-	-
	소계	-	1,695	51	33.2
음성군	대학	1 (1)	3,890	119	32.7
	전문대학	1	4,018	85	47.3
	부설대학원	(5)	269	-	-
	소계	2	8,177	204	40.1
총 계		2	9,872	255	38.7

주: [1] 조사기준일은 2024년 4월 1일
[2] 캠퍼스와 대학부설 대학원은 학교 수에서 제외되어 소계와 총계에 합산하지 않았으며, 개별 항목에서는 학교 수를 괄호로 표기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 학교 수는 캠퍼스와 대학부설 대학원을 제외하는 통계 집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

❍ 진천군에는 우석대 제2캠퍼스와 부설대학원으로 일반대학원, 경영문화대학원 등이 소재

❍ 음성군에는 극동대학교와 부설대학원으로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글로벌대학원, 산업기술보안대학원, 보건과학대학원(폐교) 등이 있으며, 청주대 제2캠퍼스와 전문대학인 강동대가 소재

(2) 연구기관

❍ 충북혁신도시의 기능을 고려하여 연구 수행 기관의 현황과 연구개발 성과는 충청북도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 수행 현황을 분석

❍ 충청북도 기관유형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성과를 살펴보면, 충청북도에서는 중소기업, 대학-부설 연구기관, 출연연에서 많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높은 연구성과를 내고 있음

| 표 4-12 | 충청북도 기관 유형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성과 (2010~2023년)

(단위: 건, 백만 원)

기관유형	과제 수	연구비	논문	특허
중소기업	5,002	1,815,083	1,492	5,382
대학-부설	4,349	1,112,579	14,942	6,400
출연연	2,886	1,091,197	211	0
정부/지자체-기타	8	62	0	0
중견기업	543	589,833	523	1,497
대기업	20	9,175	8	24
기타	123	29,614	73	40
준정부기관	146	78,147	145	92

주: 지역은 충북, 업종은 제조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자료 추출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웹사이트(https://www.ntis.go.kr/orginfo/index.jsp)

- 2010~2023년 중소기업에서 수행한 연구과제 수와 연구비는 각각 5,002건과 1,815,083백만 원으로 가장 많은 수준이며 특허 출원 역시 5,382건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 대학-부설 기관은 논문 수와 특허 출원이 각각 14,942건과 6,400건으로 여러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중견기업의 경우 논문 523건, 특허 출원 1,497건으로 주목할 만한 연구개발 성과를 나타냄

❍ 충청북도 업종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성과를 살펴보면, ① 연구개발업, ②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③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의 업종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음

- 2010~2023년 연구개발업에서 과제 수 6,158건, 연구비 1,668,285백만 원, 논문 15,220건, 특허 6,713건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임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경우 과제 수 551건, 연구비 383,802백만 원, 논문 346건, 특허 1,193건으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는 업종 중 하나로 나타남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역시 과제 수 896건, 연구비 395,763백만 원, 논문 390건, 특허 1,402건으로 높은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특허 성과가 두드러져 관련 산업 기술 혁신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 외에도 ①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② 전기장비 제조업, ③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④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등의 업종에서 연구가 활발히 수행

| 표 4-13 | 충청북도 기관 업종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성과 (2010~2023년)

(단위: 건, 백만 원)

기관유형	과제 수	연구비	논문	특허
1차 금속 제조업	50	20,409	11	81
가구 제조업	5	836	0	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88	54,379	96	16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73	175,315	166	472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93	87,848	22	14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68	301,231	213	88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79	96,342	54	97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635	704,588	157	5
기타 제품 제조업	109	22,510	15	10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4	2,149	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88	96,592	78	27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	273	0	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68	31,086	26	54
식료품 제조업	477	80,750	157	341
연구개발업	6,158	1,668,285	15,220	6,713
음료 제조업	29	3,269	35	15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322	116,637	89	35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96	190,805	98	357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	64	0	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	6	0	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6	95,008	21	214
전기장비 제조업	393	180,050	179	519
전문 서비스업	65	12,991	20	25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51	383,802	346	1,19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7	737	0	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3	3,965	0	12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896	395,763	390	1,402

주: 지역은 충북, 업종은 제조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자료 추출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웹사이트(https://www.ntis.go.kr/orginfo/index.jsp)

2. 지자체 정책

1) 지역발전정책

(1) 정책의 비전과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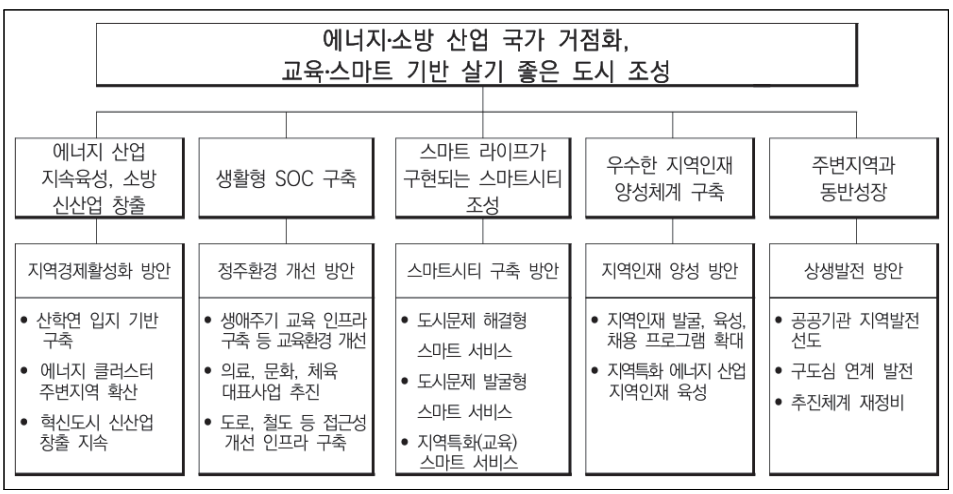
□ **제2기 충북혁신도시 발전계획의 추진**

○ 2007년부터 시행된 혁신도시의 물리적 조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2018년 기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해 5개년 계획으로 시·도지사는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 위와 같은 배경에서 충북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충청북도는 〈제2차 충북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5년 간(2023~2027년) 추진할 주요 전략을 설계해 구체적 사업을 제시

| 그림 4-17 | 제2차 충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비전과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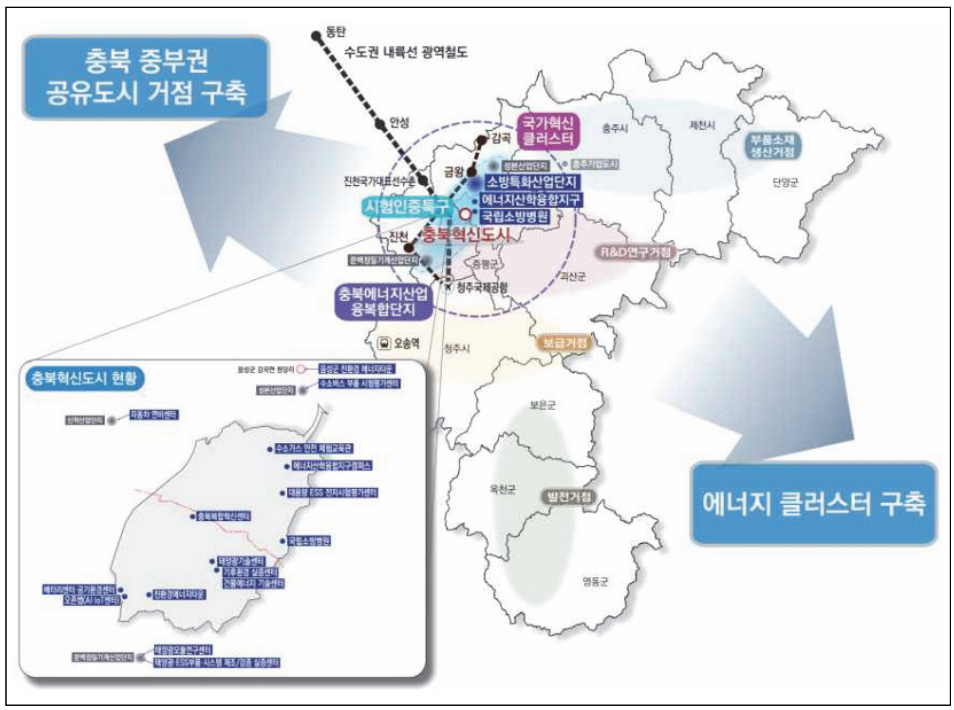


출처: 충청북도(2023), 〈제2차 충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p.124

- 제1기 충북혁신도시 발전계획의 비전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지역발전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제2기 충북혁신도시 발전계획의 비전은 '에너지·소방산업 국가 거점화, 교육·스마트 기반 살기 좋은 도시 조성'으로 설정

❍ 충북혁신도시 집적 에너지 산업 거점 기능을 주변지역으로 확대
- 국가혁신클러스터, 충북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등 정부시책 활용 혁신도시 반경 20㎞ 구간을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육성
- 에너지 테마 연계 충북혁신도시 일원 시험인증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
- 충북혁신도시에 건설 중인 국립소방병원 기능 확대 및 기 입지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소방장비검사검수센터)의 기능 연계를 통해 첨단소방산업 클러스터 신규 구축 추진

| 그림 4-18 | 제2차 충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공간구조 구상



출처: 충청북도(2023), 〈제2차 충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p.148

□ 진천군의 지역발전정책 및 사업

❍ 진천군은 민선 8기의 군정 비전을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분야의 핵심목표를 설정

- 지역발전정책은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나 진천·음성 교육발전특구의 주무대인 혁신도시의 기능을 고려해 균형발전 및 지역산업 정책 중심으로 살펴보면, 5대 분야 중에 하나*의 핵심목표로 제시된 '활력있는 경제도시'와 관련

  * 그 외에 다른 4개의 핵심목표는 '군민만족 복지도시', '쾌적환경 맑은도시', '혁신성장 농업도시', '문화·교육 특화도시' 등을 제시

- 〈공약실천계획〉에 따르면 '활력있는 경제도시'란 '선순환적 경제, 중부권 신성장거점 도약'를 의미

❍ 진천군의 지역경제·산업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투자전략실로서, 최근의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투자유치'와 '성장거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군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 투자전략실의 2024년 정책목표는 '진천시 건설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로 설정

  * 세부전략으로는 '투자유치를 통한 활력있는 경제도시 기반 마련',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산업입지 제공', '중부내륙권 성장거점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자족형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충북의 핵심도시 도약' 등이 제시

- 2023년에는 군정 비전인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의 실현을 위해, 정책의 목표는 '중부권 경제거점 도시로 도약'이 제시

  * 전략목표로는 '활력있는 경제도시 초석을 다지는 투자유치', '투자유치 경제기반 마련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으뜸도시 조성을 위한 성장거점 개척', '핵심사업 발굴·추진을 통한 지역혁신거점 조성' 등이 제시

❍ 88개 공약사업(100개 세부사업) 중에 '활력있는 경제도시' 관련 사업의 수는 22개(26개 세부)로, 이들 가운데 투자유치 및 성장거점 기반 마련과 관련해서는 5개 사업이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실제로 이들 5개 사업은 〈공약 이행 추진계획〉상 '활력있는 경제도시'를 위한 5개 분야 중에 하나*인 '투자유치 경제기반 마련' 분야에 분류되어 설계

* 그 외에 다른 4개 분야는 '취업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함께 누리는 관광자원 개발', '살기좋은 도시기반 조성', '편리한 교통망 확충' 등이 있음

- 즉 '문백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진천 초평 일반산업단지 조성', '진천 스마트복합 산업단지 조성사업',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광혜원 유통물류센터 조성' 등 5개 사업은 2024년 10월 현재 당초 계획된 대로 모두 정상 추진 중임

❍ 위의 5개 공약사업의 총사업비는 2022년 9월 발표 기준 약 1조 8,661억 원으로 산출

- 사업은 SPC 구성, 민간개발 등의 방식으로 추진되어 재원별 비중은 국비와 도비가 0%이고, 군비는 0.02%에 불과하며, 기타 재원이 99.98%를 차지

| 표 4-14 | 진천군 민선 8기 공약사업의 투자유치 분야 재원별 투자계획(2022~2026년)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총 사업비	1,866,076 (100.0)	0	0	345 (0.02)	1,865,731 (99.98)
문백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260,600 (100.0)	0	0	145 (0.1)	260,455 (99.9)
진천 초평 일반산업단지 조성	297,476 (100.0)	0	0	0	297,476 (100.0)
진천 스마트복합 산업단지 조성	242,000 (100.0)	0	0	0	242,000 (100.0)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158,000 (100.0)	0	0	200 (1.3)	157,800 (98.7)
광혜원 유통물류센터 조성	908,000 (100.0)	0	0	0	908,000 (100.0)

출처: 진천군(2022), 〈생생 88팔팔 군민만족 공약 실천계획〉, pp.74~83, 재구성
주: 2022년 9월 발표 당시 기준 자료로 2024년 10월 현재와는 차이가 있음

□ 음성군의 지역발전정책 및 사업

❍ 음성군은 민선 8기의 군정 비전을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분야의 군정방침을 설정

- 지역발전정책은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나 진천·음성 교육발전특구의 주무대인 혁신도시의 기능을 고려해 균형발전 및 지역산업 정책 중심으로 살펴보면, 5대 분야 중에 하나*의 군정방침으로 제시된 '역동적인 지역경제'와 '조화로운 균형발전' 등과 관련
  * 그 외에 다른 3개의 군정방침은 '함께하는 평생복지', '품격있는 교육문화', '사람중심 안전환경' 등을 제시
- 그러나 '조화로운 균형발전' 분야는 대부분 도로 건설, 도시재생, 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교육발전특구 및 혁신도시 정책과는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 또한 '조화로운 균형발전' 분야에 분류된 사업 가운데 지역산업 정책과 관련된 '음성군 기업혁신파크 조성' 사업은 예산투입을 미정으로 발표해 본고에서는 '역동적인 지역경제' 분야만 살펴보기로 함

❍ 음성군의 지역경제·산업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기업지원과'와 '2030전략실'로서, 최근의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투자유치'와 '성장거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군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 기업지원과의 2023년과 2024년 정책목표는 '투자유치 경제성장 기반 마련 및 인프라 확충으로 기업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로 설정
  * 역점과제로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정주여건·육성기반) 체계 구축', '우량기업 및 첨단산업분야(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유치', '농공·산업단지 유지·관리 지원으로 기업환경 개선 도모', '신성장동력 관련 산업 맞춤형 특화 산업단지 조성' 등

❍ 100개 공약사업 중에 '역동적인 지역경제' 관련 사업의 수는 22개로, 이들 가운데 투자유치 및 성장거점 기반과 관련해서는 4개 사업이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위의 4개 공약사업의 총사업비는 추후 산정이 예상되는 1개 사업을 포함하여 2022년 발표 기준 약 2조 2,372억 원으로 산출
-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민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4개 공약사업의 재원별 비중은 민자가 88.4%를 차지
- 국비는 8.7%를 구성하며, 도비와 군비는 미미한 수준으로 각각 1.7%와 1.2%를 나타냄

| 표 4-15 | 음성군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지역산업 분야 재원별 투자계획(2022~2026년)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총 사업비	2,237,203 (100.0)	195,069 (8.7)	37,376 (1.7)	26,904 (1.2)	1,977,854 (88.4)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순차적 조성	2,123,654 (100.0)	132,996 (6.3)	18,638 (0.9)	8,166 (0.4)	1,963,854 (92.5)
미래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	(추후 산정)	-	-	-	-
수소산업 안전·표준화 클러스터 조성	74,549 (100.0)	53,073 (71.2)	9,738 (13.1)	9,738 (13.1)	2,000 (2.7)
미래차 핵심 인프라 구축	39,000 (100.0)	9,000 (23.1)	9,000 (23.1)	9,000 (23.1)	12,000 (30.8)

주: 2022년 발표 당시 기준 자료로 2024년 10월 현재와는 차이가 있음
출처: 음성군(2022), 〈민선 8기 공약 자료집〉, pp.4~11, 재구성

(2) 주요 관련 사업

□ 사업 개요

○ 민선 8기의 공약사업과 매년 발표하는 〈주요업무계획〉에서 지역산업 분야로 판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검토

- 담당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되, 민선 8기 출범 이후인 2023년과 2024년의 자료에서 제시된 사업 중심으로 검토

  * (진천군) 투자전략실; (음성군) 기업지원과, 2030전략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출한 사업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산업단지 조성 등 진천군과 음성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 지자체가 수행하는 정책 사업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재원은 지방비(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

  * 재원이 지방비가 아니더라도 SPC 구성, 민간개발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다른 재원이 포함될 수 있음

□ 문백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 급증하는 산업입지 수요에 따라 원활한 공급대책 마련 및 체계적인 산업집적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
- 오송~오창~진천으로 이어지는 충청북도의 산업벨트 축을 형성하여 주변 지역의 발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 오창 방사광 가속기 사업에 따른 배후산단 조성을 통해 신산업 유치 선도

❍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일원에 약 146만㎡ 규모로 조성
- 민관합동개발*의 방식으로 추진되며, 2,60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 진천군, SK에코플랜트, 토우건설, IBK투자증권 등이 참여

□ 진천 초평 일반산업단지 조성

❍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고용창출 등을 통해 군의 경제기반 구축에 기여
- 진천군 남동지역의 신 경제거점 확보로 군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

❍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일원에 약 123만㎡ 규모로 조성
- 민간개발*의 방식으로 추진되며, 약 2,6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 진천초평산업단지(주)

□ 진천 스마트복합 산업단지 조성

❍ 신규 분양 산업용지 부족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조성을 통해 인구증가를 견인
- 17번 국도 인접 및 오창·오송 등 지역의 강점을 살려 특화 산업단지 조성

❍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일원에 약 145만㎡ 규모로 조성
- 민간개발*의 방식으로 추진되며, 약 2,9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 진천스마트복합산업단지개발(주)

□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 진천군 북부지역의 성장을 유도하고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등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의 성장을 도모

○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진천군 이월면 사당리 일원에 약 81만㎡ 규모로 조성
- 민관합동개발*의 방식으로 추진되며, 약 1,99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 진천군과 태영건설 등이 참여

□ 광혜원 유통물류센터 조성

○ 신한은행 연수원 조성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대체사업을 추진
- 비대면 라이프 스타일의 확산에 따른 유통·물류 기능이 집적된 복합물류단지를 조성

○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진천군 광혜원면 실원리 일원에 약 31만㎡ 규모로 조성
- 약 1,99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유통-물류 기능이 집적된 복합물류단지를 조성

□ 신성장산업 발굴 및 집중 육성 지원

○ 급변하는 정책환경 및 정부정책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특화산업을 발굴하고 신성장산업 육성전략을 마련
-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한 4+1 신성장산업* 선정 및 육성 추진
  * ① 에너지 신산업, ② 시스템반도체, ③ 이차전지, ④ 헬스케어, ⑤ 기후대응농업

○ 4대 혁신성장산업 (4개 분야)
- (에너지 신산업) 그린 뉴딜 산업에 따른 에너지 신산업 육성
  * 3개 전략, 6개 과제 17개 사업 2조 5,261억 원
- (시스템반도체) 시스템반도체 중부권 핵심거점 구축
  * 3개 전략, 3개 과제 9개 사업 1조 21억 원
- (이차전지) 이차전지 생산기반 및 전후방 연계산업 육성
  * 3개 전략, 6개 과제 17개 사업 8,784억 원

- (헬스케어)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헬스케어 산업 육성
  * 3개 전략, 6개 과제 12개 사업 1조 2,707억 원

❍ 지역기반산업 (1개 분야)
- (기후대응농업) 기후변화 대응 지역농업 특화발전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 3개 전략, 5개 과제 12개 사업 1,847억 원

□ 음성경제 성장 기반 마련 투자유치 추진

❍ 음성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 및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분야, 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과 경제활성화 원동력이 필요
- LG, SK 등 대기업 및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8조 5천억 원, 13,000명 고용 창출을 목표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투자유치를 추진

❍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국가 3대 전략산업의 기업을 집중 유치
- 이차전지 분야 대기업 사 신설 미래차 반도체 제조 핵심 대기업 사 증설 유치
- 투자유치 서울사무소를 교두보로 삼아 국내 대기업 본사와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치를 강화

□ 충북혁신도시 도시첨단2 산업단지 조성

❍ 충북혁신도시 장기 미분양 클러스터용지에 도시첨단2 산업단지 중복지정 추진으로 토지 활용성을 증대하고 활성화를 도모
-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을 확충하고 토지이용 불균형 해소에 기여

❍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일원에 약 10만㎡ 규모로 조성사업 추진
- 2023년 6월 충북혁신도시 도시첨단2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
- 약 288억 원의 사업비를 시행사인 LH가 100% 부담

❍ 세제감면 혜택 등 우량기업 유치로 충북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구유입 도모
- 장기 미분양 클러스터용지를 산업, 공공시설, 지원용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주거용지 추가 확보 여건 조성

□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의 순차적 조성

❍ 계획적인 입지를 유도하여 투자유치일자리 창출
- 수도권과의 접근성 확충 및 향상으로 산업시설용지 수요 증가

❍ 용산산업단지
-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및 용산리 일원에 약 104만㎡ 규모로 조성 사업 추진
- 민·관 합동의 방식으로 추진되며, 약 1,50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 인곡산업단지
-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 금왕읍 유촌리 일원에 약 173만㎡ 규모로 조성 사업 추진
- 2016년 음성군과 충북개발공사 간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해 공영개발의 방식으로 추진되며, 약 2,70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 음성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음성군 맹동면 마산리 일원에 약 65만㎡ 규모로 조성 사업 추진
- 민간개발의 방식으로 추진되며, 약 1,36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 생극제2산업단지
-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일원에 약 40만㎡ 규모로 조성 사업 추진
- 2021년 음성군이 한국투자증권과 (주)생극제2산업단지와 MOU을 체결해 민간개발의 방식으로 추진되며, 약 77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 삼성테크노밸리산업단지
-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와 양덕리 일원에 약 158만㎡ 규모로 조성 사업 추진
- 민간개발의 민간개발의 방식으로 추진되며, 약 3,5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2) 교육정책

(1) 정책의 비전과 목표

□ 진천군의 교육정책 및 사업

❍ 진천군은 민선 8기의 군정 비전을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분야의 핵심목표를 설정
- 교육정책은 5대 분야 중에 하나*의 핵심목표로 제시된 '문화·교육 특화도시'와 관련
  * 그 외에 다른 4개의 핵심목표는 '활력있는 경제도시', '군민만족 복지도시', '쾌적환경 맑은도시', '혁신성장 농업도시' 등을 제시
- 〈공약실천계획〉에 따르면 '문화·교육 특화도시'란 '문화·예술의 르네상스, 으뜸 교육도시'를 의미

❍ 진천군의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복지행정국의 교육청소년과로서, 최근의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미래'라는 공통된 키워드가 발견되어 미래 세대에 대한 군의 관심과 의지를 알 수 있음
- 교육청소년과의 2024년 정책목표는 '미래를 만드는 동행, 다같이 성장하는 교육도시 조성'으로 설정
  * 교육정책과 관련된 세부전략으로는 '미래를 이끄는 교육, 지역혁신성장 교육생태계 안착', '내일의 성장과 미래의 도약을 위한 청소년 육성 강화' 등이 제시
- 2023년에는 군정 비전인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의 실현을 위해, 교육정책의 목표를 '성장하는 삶, 미래교육 특화도시 조성'으로 설정
  * 전략목표로는 '진천 100년의 설계, 미래교육 특화도시 조성', '행복한 오늘, 미래를 빛낼 청소년 육성' 등이 제시

❍ 88개 공약사업(100개 세부사업) 중에 '문화·교육 특화도시' 관련 사업의 수는 21개(22개 세부)로, 이들 가운데 6개 사업이 교육 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교육 분야의 6개 사업은 〈공약 이행 추진계획〉상 '문화·교육 특화도시'를 위한 3개 분야 중에 하나*인 '미래 교육 기반 조성' 분야에 분류되어 설계
  * 그 외에 다른 2개 분야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함께 즐기는 체육 인프라 조성' 등이 있음

- 당초에는 '디지털 교육 공유 플랫폼 구축', '혁신도시 AI영재고 성공적 유치 추진', 'K-스마트교육 지속 추진', '유·초·중·고생 입학축하금 지급', '다자녀가구 대학생 장학금 지원', 'AI영재 페스티벌 개최' 등의 사업 추진을 계획
- 그러나 '혁신도시 AI영재고 성공적 유치 추진' 사업은 AI바이오영재고의 오송 입지 확정에 따라 추진이 불가하여, 최근 지정에 성공한 유사 교육 사업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운영'으로 공약 사업을 변경
- 또한 '다자녀가구 대학생 장학금 지원'의 경우도 (재)진천군장학회 이사회의 의견에 따라 지원 대상을 대학생에서 초등학생으로 수정하여, '다자녀가구 초등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원'으로 공약 사업을 변경

| 표 4-16 | 진천군 민선 8기 공약사업의 교육 분야 재원별 투자계획 (2022~2026년)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계	국비	도비	군비	기 타
총 사업비	11,841 (100.0)	5,771 (48.7)	0	5,136 (43.4)	934 (7.9)
디지털 교육 공유 플랫폼 구축	1,430 (100.0)	1,000 (69.9)	0	215 (15.0)	음성군 매칭 215 (15.0)
혁신도시 AI영재고 성공적 유치 추진	추후확정	-	-	-	-
K-스마트교육 지속 추진	7,755 (100.0)	4,755 (61.3)	0	2,500 (32.2)	교육청 500 (64.5)
유·초·중·고생 입학축하금 지급	2,317 (100.0)	0	0	2,317 (100.0)	0
다자녀가구 대학생 장학금 지원	200 (100.0)	0	0	0	장학기금 200 (100.0)
AI영재 페스티벌 개최	139 (100.0)	16 (11.5)	0	104 (74.8)	교육청 19 (13.7)

주: 2022년 9월 발표 당시 기준 자료로 2024년 10월 현재와는 차이가 있음
출처: 진천군(2022), 〈생생 88팔팔 군민만족 공약 실천계획〉, pp.204~217, 재구성

❍ 민선 8기 교육 분야 6개 공약사업의 총사업비는 사업비 미정 1개 사업을 포함해 2022년 9월 발표 기준 118.4억 원으로 산출
- 재원별 비중은 국비와 군비가 각각 48.7%와 43.4%이고, 음성군 매칭, 교육청, 진천군 장학회 장학기금 등을 통한 기타 재원이 7.9%로 나타남

- 앞서 언급했듯이 '혁신도시 AI영재고 성공적 유치 추진' 사업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운영' 사업으로 변경되어 35억 원(특교 17.5+ 지방 17.5)의 사업비 투자를 계획
- 또한 '다자녀가구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은 '다자녀가구 초등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어 2024년 본예산에 편성

□ 음성군의 교육정책 및 사업

❍ 음성군은 민선 8기의 군정 비전을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분야의 군정방침을 설정
- 교육정책은 5대 분야 중에 하나*의 군정방침으로 제시된 '품격있는 교육문화'와 관련
  * 그 외에 다른 4개의 군정방침은 '역동적인 지역경제', '조화로운 균형발전', '함께하는 평생복지', '사람중심 안전환경' 등을 제시

❍ 음성군의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행정복지국의 평생학습과로서, 부서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다양한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명문고 육성과 지역인재 양성에 대해서도 군의 관심과 의지가 확인
- 평생학습과의 2024년 정책목표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상상대로 평생학습 실현'으로 설정
  * 역점과제로는 '음성군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추진', '상상대로 음성을 리드할 다양한 인재 지원사업', '누구나 행복하고 건전한 청소년 행정지원', '정보접근의 문턱을 낮추어 도서관 이용 활성화', '관람객 중심의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등이 제시

❍ 100개 공약사업 중에 '품격있는 교육문화' 관련 사업의 수는 25개로, 이들 가운데 5개 사업이 교육 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위의 4개 공약사업의 총사업비는 2022년 발표 기준 약 78.3억 원으로 산출
- 재원은 국비와 도비가 없고 군비와 기타 재원이 각각 92.9%와 7.1%를 차지
- 각각의 사업은 군비 또는 기타 재원이 100%를 나타냄

| 표 4-17 | 음성군 민선 8기 공약사업의 교육 분야 재원별 투자계획(2022~2026년)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총 사업비	7,826 (100.0)	0	0	7,271 (92.9)	555 (7.1)
충북혁신도시 AI 영재고 공동 유치 및 지역 고등학교 명문화 사업	5,110 (100.0)	0	0	5,110 (100.0)	0
지역대학-기업 상생협력형 취업연계 장학사업 운영	180 (100.0)	0	0	0	180 (100.0)
중·고등학생 명문학원 인강 지원	375 (100.0)	0	0	0	375 (100.0)
초·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및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급	2,161 (100.0)	0	0	2,161 (100.0)	0

주: 2022년 발표 당시 기준 자료로 2024년 10월 현재와는 차이가 있음
출처: 음성군(2022), 〈민선 8기 공약 자료집〉, pp.162~176, 재구성

(2) 주요 관련 사업

□ 사업 개요

❍ 민선 8기의 공약사업과 매년 발표하는 〈주요업무계획〉에서 교육 분야로 판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검토

- 교육정책 담당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되, 민선 8기 출범 이후인 2023년과 2024년의 자료에서 제시된 사업 중심으로 검토

  * (진천군) 교육청소년과; (음성군) 평생학습과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출한 사업의 범위에서 진천군과 음성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교육 사업에 대해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 지자체가 수행하는 교육 분야의 정책 사업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재원은 지방비(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

  * 재원이 지방비가 아니더라도 (재)진천군장학회와 같은 민간단체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다른 재원이 포함될 수 있음

□ K-스마트 교육특화사업

❍ K-스마트 국가시범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전국에 확산할 수 있는 'K-스마트교육 진천형 모델'을 개발

- K-스마트교육의 단계별 추진으로 차세대 지역혁신리더를 양성
- 디지털 대전환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으로 미래사회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미래사회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디지털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 함양을 도모
- 지자체-교육기관-과학 전문기관-공공기관 협력 기반의 차세대 디지털 인재 양성 교육 생태계를 조성

❍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의하면, 본 사업은 'K-스마트 인공지능(AI) 교육지원' 등을 포함해 모두 5개의 전략사업으로 구성

- ① K-스마트 인공지능(AI) 교육지원 : 인공지능 영재학급(방과후, 자유학기제)으로 보편적 영재교육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며, 심화과정으로 K-스마트 인공지능 교육센터를 운영해 인공지능 교육 거점을 구축
- ② 아이티(IT) 스카우트 지원 : AI교육·기숭체험 및 캠프활동 등 차세대 지역혁신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
- ③ 지역특화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국외프로그램) : IT기업 견학, AI기술혁신 첨단산업 중심도시 체험을 통한 지역특화 글로벌 리더 양성
- ④ 버추얼클래스 교육지원 : 원어민 교사와 학생 간 실시간 원격화상 회화 수업 실시
- ⑤ K-실감학습터 디지털 교육지원 : K-실감학습터 활용 미래기술 연계 교육, 4차 산업 미래기술 체험·행사 등 실시
- 위의 5개 전략사업은 진천군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학교, 인공지능 교육센터, 충북혁신도시 오픈랩 등의 장소에 총 8억 원의 사업비(2024년 기준)를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

| 표 4-18 | 진천군 K-스마트 교육특화사업의 5개 전략사업 투자계획 (2024년)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계	군비	교육청	비 고
총 사업비	800	550	250	-
① K-스마트 인공지능(AI) 교육지원	300	300	0	교육과정(초·중), 영재교육(초·중)
② 아이티(IT) 스카우트 지원	50	50	0	영재교육(초·중)
③ 지역특화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국외프로그램)	200	100	100	영재교육(초·중)
④ 버추얼클래스 교육지원	150	0	150	영어
⑤ K-실감학습터 디지털 교육지원	100	100	0	체험·행사

출처: 진천군(2024), 〈2024 주요업무계획〉, p.122, 재구성

□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으로 대상자에게 폭넓은 교육과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

- 학교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4개 지원 분야 17개 세부사업에 대해 군비 100%로 17.8억 원의 사업비(2024년 기준)를 지원

  * 관내 유치원 17개소, 초·중·고교 29개소, 교육지원청 및 교육기관 등이 지원 대상

- 진천군-교육(지원)청-학교 등 교육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

❍ 교육협력 사업에 대한 발전적인 추진 및 지원을 검토

- 환경생태계 조성(이월중), 상상놀이터 조성(만승초) 등 환경개선 사업 추진
- 옥동초등학교 거점형 늘봄센터 건립, 진천중학교 창의융합교육센터 구축사업 등 지역연계형 학교복합시설의 조성사업과 협력
- 진천문학관 활성화 사업 등 교과과정 연계 교육 및 체험 공간 확충 지원

□ 유·초·중·고생 입학축하금 지원

❍ 보편적·실질적 지원을 통해 학부모 교육경비의 부담을 경감하고 체감형 교육복지 실현을 도모

- 영유아에 집중되어 있는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을 초·중·고 입학생에게 확대 지원함으로써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 자녀 입학 시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주 여건을 조성해 출산율 확대 및 인구 늘리기에 기여
- 입학이라는 새로운 시작과 출발에 대해 진천군민의 모든 관심과 축하 메시지 전달로 군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유사한 교육기관에 최초로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지원금 10만 원을 지원
- 지원 대상 인구 규모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2,889명과 3,019명으로, 사업비는 각각 2.899억 원과 3.019억 원으로 산정
- 본 사업은 2022년 5월에 230명 대상자에게 유치원 입학축하금으로 총 2.3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동년 6월 초·중·고생 입학축하금 지원 확대를 검토해 동년 8월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

| 표 4-19 | 진천군 유·초·중·고생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 및 사업비 규모 (2023년 계획)

(단위: 명, 백만 원)

구 분	계	유치원생	초등학생 (만 6세)	중학생 (만 12세)	고등학생 (만 15세)
대상자 수	2,889	270	889	859	871
소요액	288.9	27	88.9	85.9	87.1

출처: 진천군(2023), 〈2023 주요업무계획〉, p.241, 재구성

□ AI영재 페스티벌 개최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차세대 창의융합인재 육성을 위하여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 스마트 창의융합 체험부스 등 다양한 체험과 놀이가 가능한 체험활동을 추진하며, 사업비 재원은 교육경비보조금(군비 100%)으로 충당
  * 〈공약실천계획〉에서는 5G 및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메타버스, AI 체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

-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으로 확산적 사고력 실현 및 역량을 제고

❍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창의융합·영재교육 문화 확산을 도모
- 영재 페스티벌 체험 운영을 통해 진천군의 창의·융합 인재 육성에 기여

□ 다자녀가구 초등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원

❍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초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
-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가정의 자녀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입학하고 학교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
  * 2022년도 진천군장학회 제4차 임시이사회에서 다자녀 장학금 대상을 중등 1학년에서 초등 1학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2023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변경 결정 당시 초등 1~6학년에 대해서는 중학교 입학 시 장학금을 지급(2023~2028년)

❍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여, 민선 8기의 5대 핵심목표 중에 하나인 '문화·교육 특화도시'의 실현을 도모
-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당초 '다자녀가구 대학생 장학금 지원'이었으나, (재)진천군장학회* 이사회 의견에 따라 대학생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수정
  * 사업비 재원은 (재)진천군장학회의 장학기금 100%로 충당

□ 지역특화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국외프로그램)

❍ 2024년 신규사업으로, 앞에서 살펴본 'K-스마트 인공지능(AI) 교육지원'의 5개 전략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 해당
- 초·중학생 30명을 선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일원을 중심으로 한 IT기업체 및 대학교 등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 사업비는 진천군(군비)과 교육청이 각기 50% 매칭으로, 총 2억 원(2024년 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특화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환경을 공동으로 조성
- 전 세계를 주도하는 IT·AI 기술혁신 및 첨단산업 중심도시 체험을 통해 차세대를

이끌어갈 지역혁신 리더로서의 마인드 함양을 도모

□ K-스마트 인공지능 교육센터 운영

❍ 'K-스마트 인공지능(AI) 교육지원'의 5개 전략사업 중 하나인 'K-스마트 인공지능(AI) 교육지원'의 예산을 활용하는, 2024년 신규사업에 해당
- 인공지능 교육센터는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내에 위치해 진천군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사업비 재원은 군비 100%로 마련

❍ 지역 내 초·중학생 대상의 AI교육 심화과정을 2개 반 운영
- KAIST 융합교육연구센터, 교육지원청 등과 연계한 AI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교육 제공
- 장기적으로 지역상생 인공지능 교육협력의 거점으로 운영하는 전략을 모색
  *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정책·교육콘텐츠 공동연구개발, 강사연수, 지역상생 교육 클러스터 기반 마련

□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재)진천군장학회 장학사업 추진

❍ 친권자 또는 본인의 주소를 진천군에 1년 이상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
- 장학생 선발은 분야별로 자격 조건이 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 등 장학사업을 1년에 2회 추진

❍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의하면, 사업비는 2024년 기준으로 총 4.7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
- 14개 분야에서 1,318명을 선발해 4.6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
  * 前명문대학교 특별장학금, 대학진학 우수학생, 우수교원 인센티브, 희망사다리 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관내대학 특별장학금, 문해교육 학력인정자 장학금, 특기 장학금, 다문화·북한이탈주민자녀, 학력신장 인센티브, 청소년 꿈드림 장학금, 우수학생 인센티브, 성적우수 장학금, 고3응원 장학금 등 14개 분야별로 장학생 선발·지원
- 장학금 지원 외에도 고3응원 및 홍보사업 등 홍보 분야에 1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 **'상상대로 음성' 인재 지원사업**

○ 학부모 및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내 지역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제공

- 다양한 맞춤형 장학사업과 인재지원 사업을 통해 음성군 미래를 선도할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 및 명문학교 육성사업으로 교육환경을 개선
- 2024년 기준 3,205백만 원(도 2, 군 2,519, 기타 684)의 예산 소요 예정
  * (재)음성군장학회 장학금 지원, 맞춤형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비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명문학교 육성사업 등

○ 장학지원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사업으로 우수 학생 외부 유출 방지에 기여

- 지역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추진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도모

□ **입학축하금 확대 지원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 취학 및 상급학교 진학하는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

- 기존 영유아에 집중되어 있는 출산 관련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모두가 행복한 체감형 복지시책을 추진

○ 음성군에 주소를 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생 및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금을 확대 지원 하며, 학교밖지원센터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2024년 기준 대상자는 총 2,140명(유 237, 초 486, 중 743, 고 674)으로 파악되며, 2.15억 원의 예산 소요 (군비 100%)
- 복지 수요에 대응 지원하여 지역사회 계속 거주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화폐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중·고등학생 온라인 강의 지원 사업**

○ 음성군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온라인 강의 연간 수강권 지원

- 100명의 학생에게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을 지급(자부담 0%)
  * 소요예산 : 4만 5천 원 × 100명
- 외 온라인 강의 학생(200명)이 직접 강의 업체 선택 후 수강권 구입비를 지원

(자부담 10%)

* 소요예산 : 1천 2백만 원(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관내 중·고등학생에게 온라인 강의를 지원하여 지방과 수도권 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도모

- 학력격차 해소 및 학령인구 외부 이탈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

❍ 관내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교통비의 부담을 경감

- 신청일 기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청소년이 지원 대상
- 1인당 10만원의 충전카드를 지급해 2024년 기준 총 5.85억 원의 예산 소요 예정 (100% 군비)

❍ 2023년 12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으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 관내대학 진학장학금 지원사업

❍ 지속적인 청년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관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진학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대학과 상생 발전 협력으로 경쟁력 강화 도모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음성군에 주소를 둔 관내 대학교(극동대, 강동대) 입학생을 대상으로 진학장학금을 지원
- 일반 신입생(50명)은 1인당 1백만 원을, 성인학습자(20명)는 1인당 50만 원을 지원
- 총 사업비는 6천만 원이며, 재원은 (재)음성군장학회 기금 이자로 충당

❍ 지역대학과 상생 교류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 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를 도모

-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그 인재들이 정착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의 기반을 마련

3) 관련 조례

(1) 지역발전정책

□ 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조례

❍ 충북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설정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전공공기관의 장,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관·대학·연구소·경제단체의 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설정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 국내·외 기업,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진천군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

❍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 목적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천군투자유치진흥기금(존속기한 10년)을 설치·운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기업의 다음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

-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지원금 (군수가 매입하는 임대용 토지 매입비, 분양대금의 차액)
- 국내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의 교육훈련 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지원
- 국내 기업의 관내 이전비 지원 및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 관내 공장 증설비 지원
-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
- 국내·외 유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공장 또는 건물 임차료 지원

-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음성군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대학교 유치를 위한 음성군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산학융합지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음성군 내 산학융합지구를 의미

❍ 자치단체장은 산학융합지구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산학협력 사업 육성 및 진흥 사업
-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및 기업창업·보육사업
- 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전문연구기관 유치사업
- 교통 및 거주환경, 편의시설 등의 개량·확충 사업 등

□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 음성군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읍·면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골고루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
-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을 의미
- 자치단체장은 관내 읍·면별 지역발전도를 조사·분석하여 매 5년마다 저발전 지역을 선정

❍ 자치단체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5년 단위의 음성군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 지역 간 격차 실태분석 및 지역발전도 조사
- 저발전지역의 균형발전 목표에 관한 사항
-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 지역별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을 고려한 개발계획 등

□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 음성군에 투자하려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전 등에 대한 지원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통하여 관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

❍ 자치단체장은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음성군투자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기업의 다음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
- 투자기업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 투자기업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 유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공장 또는 건물 임차료 지원
-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보조금
- 벤처임대단지 운영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
- 컨설팅 수수료, 포상금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등

(2) 교육정책

□ 충청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4차 산업혁명* 교육’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의미
  *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함

❍ 충청북도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 창의융합형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해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
- 교원의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연구활동을 적극적

으로 지원
-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 또한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교육과정과 연계한 4차 산업혁명 교육내용 개발 및 수업 지원
- 4차 산업혁명 교육 컨설팅 지원
- 4차 산업혁명 교육 우수사례 공유 및 홍보
- 교원 대상 4차 산업혁명 수업 역량강화 연수
-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약칭 : 「지역특구법」)에 따라 진천군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2015년 2월에 제정되었고, 현행 법규는 2024년 6월에 일부 개정
-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는 진천의 문화 및 교육의 발전을 위해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의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외국어 교육 기반(외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 국제적인 인재양성(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 지역 주요 문화의 국제화(테마 문화의 국제화) 사업
- 교육문화의 국제화 사업
- 그 밖에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 특화사업의 추진과 관련해 소요되는 재원은 수탁사업자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재정 여건상 자체재원으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경우 진천군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화사업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의 발전에 필요한 국제 학술대회, 워크숍, 연찬회 등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
- 또한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민간자본의 투자유치를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진천군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자치단체장은 당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수입액(세외수입 제외)의 7%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보조기준액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진천군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
  * 다만, 특별교부세 등 특정재원 사업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보조기준액의 50%를 상회하는 사업의 사업비는 포함하지 않음

❍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보조사업
- 학생들의 특기적성 및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사업

- 유치원 교사의 연수경비와 교재·교구비 등 지원사업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교육발전사업 및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

❍ 자치단체장은 당해년도 보조사업에 대해 예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조대상 사업·예산액과 신청기한을 정해 교육장과 각급 학교의 장에게 통지해야 함
-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신청서를 교육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
  * 다만, 필요한 경우에 자치단체장은 교육장에게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진천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시행할 진천군장학회의 설립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장학회는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기타 장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

❍ 장학회의 기금은 군의 출연금, 운용수익금, 기타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
- 자치단체장은 장학회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진천군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자치단체장은 해당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일반회계의 군세수입액(세외수입 제외)의 5%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
- 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직접 음성군이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
  * 다만, 특별교부세 등 특정재원 사업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보조기준액의

50퍼센트를 상회하는 사업의 사업비는 포함하지 않음
- 중앙부처의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대응투자 사업의 경우는 총사업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가능

❍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과정 운영사업
-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 우수교원 및 우수학생 유치에 필요한 사업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 음성군 소재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

□ 음성군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음성군장학회를 설립하고 이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장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그 밖에 장학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사업을 수행
- 장학금의 지급 대상은 음성군민 또는 음성군민의 자녀로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설정

❍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음

제3절 관련 정책동향 분석

1. 교육정책

1) 교육부 교육서비스 관련정책

□ 늘봄학교

○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의미
-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로 운영
- 즉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은 없어지고, 늘봄학교 하나의 체제만 존재

○ 원하는 초등학생 모두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4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누구나 이용'하도록 학년 연차별로 확대
- 저학년의 성장·발달에 적합한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 무료 제공 ('24년, 초1 → '25년부터, 초1~2)
  * 초1학년 학교적응 지원 및 놀이중심의 예·체능, 사회·정서 등
- 초등학교 3~6학년에게 사교육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미래역량 함양, 진로탐색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
  * 체육, 문화·예술, AI·디지털, 사회·정서, 기초학습,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 지자체·공공기관·대학·기업 등 연계 프로그램, 수요에 맞춘 아침·저녁늘봄, 지역공간 활용 등 모델 다양화

○ 충북혁신도시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충북교육청 맞춤형 늘봄학교를 운영
- 교육발전특구를 활용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형 늘봄학교 모델을 발굴하며 확산을 추진

2) 교육부 인프라 확충 및 개선정책

□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을 복합

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
-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연평균 40교씩 총 200교 선정 추진
-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39개와 42개 선정
- 충청북도 진천군은 2024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사업에 '옥동초등학교 거점형 늘봄센터 건립' 사업이 선정

❍ 교육발전특구·늘봄학교 등 교육개혁사업과 연계된 사업, 기타 관계부처 사업과 병행·연계되는 사업, 생존수영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포함하는 사업,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공모사업에서 우선 선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해교육부에서 지자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되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사업비의 20%~ 30%를 지원하며,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최대 50%까지 예산을 지원
-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50%까지 일괄 지원

3) 기타 교육부 관련지원정책

□ 충북혁신도시 초중통합학교 신설

❍ 2024년 10월 진천군 충북혁신도시 내 (가칭)혁신초중 신설 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최종 조건부 승인
-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충북교육청이 제출한 (가칭) 혁신초중 신설 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통학안전대책 마련 및 보고 후 추진을 조건으로 승인
- (가칭)혁신초중학교는 충북혁신도시 및 인근 개발에 따라, 충북혁신도시 내 14,468.9㎡부지에 42학급(유 3, 초 18, 중 18, 특수 3), 학생 993명(유 57, 초 450, 중 486)의 규모로 건립
- 총 사업비는 614억 원으로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 결과적으로 충북혁신도시 내 계획되었던 11개의 유·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신설

| 그림 4-19 | 충북혁신도시 내 신설학교(혁신초중) 및 기존 10개 학교 위치도



출처: 충북교육청 보도자료(2024.10.31.)

❍ (가칭)혁신초중 신설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충북혁신도시 내 학생 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문제되었던 과밀 학급 문제가 해소되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지역발전정책

1) 혁신도시 육성정책

❍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를 의미
-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의 대학·연구소·산업체·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도모

❍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는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지리적으로 집중하여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지역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조성된 용지에 해당
- 혁신도시내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 고급일자리 창출 등 지역 도시성(Urbanity)을 살리는 촉매제로 조성
-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전체 혁신도시 개발면적 중 6.9%(3,111천㎡)로 구성되며, 2023년 12월 기준으로 79.3%의 분양률을 나타냄
- 혁신도시 2단계 추진으로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전략에 따른 업종 유치 및 관리를 강화
  * 혁신도시 발전단계 : 1단계(~2015) 공공기관 이전 → 2단계(2015~2020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 3단계(2020~2030년) 지역혁신 확산
-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률은 2023년 기준으로 79.3%(2,467천㎡), 분양면적 대비 입주율은 50.7%(1,287천㎡)을 나타냄
  * 충북혁신도시 : (분양률) 55.4%; (입주율) 28.2%
- 또한 혁신도시에 총 3,724개 기업이 입주하였으며, 혁신도시 및 인근지역으로 기업의 이전이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충북혁신도시의 입주기업 수 변화추이 : 2018년 24개 → 55 → 75 → 87 → 108 → 2023년 124개

| 표 4-20 |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현황

(단위: 천㎡)

혁신도시	클러스터 면적	클러스터 비전
대구	858	• 안전안심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혁신성장 거점 클러스터
광주·전남	415	• 호남광역경제권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녹색성장 거점도시
울산	141	• 신산업의 집적지
강원	112	• 녹색기반의 건강·생명·관광 지식기반 서비스업 “거점도시 건설”
충북	684	• 지역과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K-City 모델도시조성(교육·쏠라·ICT)
전북	227	• 농생명 혁신거점 혁신도시,금융·ICT 혁신성장 전북특별자치도
경북	307	• 그린에너지·IT 융합·첨단교통·농생명산업 클러스터
경남	216	• 창조적 혁신으로 융합산업 허브 클러스터 육성
제주	151	• 교육·연수 및 MICE 산업 관광·문화 컨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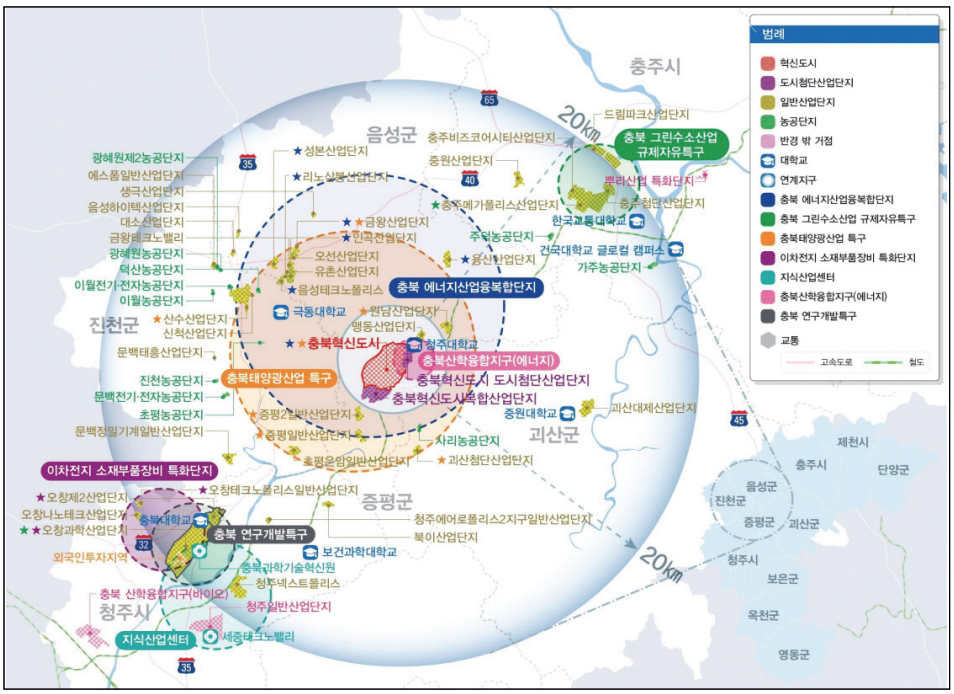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http://innocity.molit.go.kr/

❍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부족한 정주인프라를 중심으로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창업공간 등을 융합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
-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정주인프라(문화, 체육, 복지)와 창업지원공간을 융합한 복합혁신센터 11개소(혁신도시별 1개소, 증축 1개소 포함) 건립
- 사업비는 총 2,896억 원(국비 1,064 + 지방비 1,821)이 투입

2)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기존 혁신 거점을 연계하여, 각 지역의 특성화된 혁신자원과 역량을 활용하는 자립적 성장체계를 구축
- 신산업 육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며, 혁신 인력과 R&D 인프라의 집적을 통해 지역 주도의 성장을 도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주요 지원 대상

| 그림 4-20 | 충북 지역혁신클러스터 지구 지정 현황



출처: 충북테크노파크 https://www.cbtp.or.kr/

❍ 주요 프로그램은 기업유치 및 정책지원, 인력 양성 지원, 글로벌 협력 지원, 기업 지원 등으로 구성

-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클러스터 내 기업 유치 활동을 활성화하고 관련 정책적 지원을 제공
-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특화 산업에 맞춘 전문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인턴십, 재직자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
- 특화 산업 육성에 필요한 해외 기술과 협력 채널을 구축하며, 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도 포함
- R&D 성과 제고를 위해 시제품 제작, 기술 인증, 기업 설명회(IR)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

3) 산학융합지구 조성

❍ 산업단지 내 대학 캠퍼스와 기업연구소를 통합하여 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
- 지역 내 현장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산업단지와 대학이 긴밀히 협력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

❍ 주요 프로그램은 산업융합기반 조성, 산학융합촉진 지원 등으로 구성
- 기업연구관, 대학 캠퍼스관, 기업지원시설 등을 포함해 대학과 기업 간의 공간적 통합 인프라를 구축
-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통해 R&D 공동연구와 프로젝트Lab 운영, 인턴십 등을 통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중소기업의 기술지원도 함께 제공

❍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7개 지구가 선정되어 지원 중이며, 총 14개 지구가 조성 완료
- 충북혁신도시 음성 지구도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되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335억 원(국비 119, 지방비 152, 민간 84)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
  *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이 주관하고, 청주대학교, 극동대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주)신성이엔지 등이 참여

제4절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1. 정책 시사점

□ 혁신도시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인 방향성 설정

❍ 진천·음성 교육발전특구의 비전은 충북혁신도시의 특성을 연계해 볼 때 방향성을 전략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판단
- 진천·음성 교육발전특구는 충북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져 인구 유입과 경제 성장의 기반이 조성된 지역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진천·음성 교육발전특구의 비전은 충북혁신도시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 혁신도시로서의 인프라와 일자리가 어느 정도 갖춰 있다 해도, 교육 환경이 양호하지 않다면 장기적인 인구 정착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교육발전특구 모델은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청년 및 가족 단위의 인구 유입을 도모
- 이는 결과적으로 충북혁신도시의 인구 정착률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충북혁신도시는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되어 관련 기업과 이전공공기관이 위치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
- 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 혁신은 지역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이러한 교육발전특구 모델은 충북혁신도시의 산업 육성과도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 진천·음성 교육발전특구가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다른 지역에도 좋은 모델이 되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긍정적인 사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교육과 지역경제의 연계는 충북혁신도시의 특수한 발전 전략과도 부합

□ 충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사업의 발굴 및 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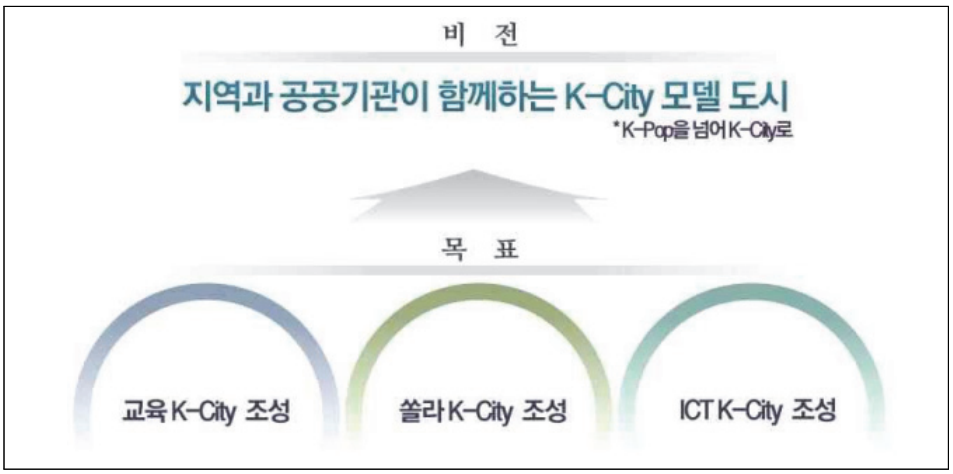
❍ 충청북도(2016)가 수립한 〈충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 기본계획〉에서는 '지역과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K-City 모델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

- K-City란 교육, 쏠라, ICT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 고유의 시스템이 착근한 도시로서, K-Pop, K-Culture 등 한국적 세계화를 이룬 문화 한류와 같은 맥락의 도시를 의미
- 충북 이전 공공기관은 교육, 쏠라, ICT 분야의 세계적 벤치마킹 대상 기관에 해당

❍ 위와 같은 비전의 달성을 위해 지역과 공공기관이 교육, 쏠라, ICT 분야의 특성화 사업을 추진

-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되는 교육, 정보통신 등의 분야를 상징하는 국내 최고기관이 충북 혁신도시에 입지하는 지역적 여건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적 품격을 제고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미래상을 실현

| 그림 4-21 |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출처: 충청북도(2016), 〈충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 기본계획〉, p.77

❍ 위와 같은 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 계획은 충북혁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의 사업에서도 연동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개발 및 적용, 제반 교육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 및 미래 교육비전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충북혁신도시에 입지한 강점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의 추진에 적극 활용
-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종합적이며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한국 교육이 당면한 제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인 교육체제를 개발함으로써 교육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충북 혁신도시 내 신설 학교 운영에 한국교육개발원의 전문 인력이 지원하는 체계를 통해 우수학교로 육성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지역 차원에서도 교육을 활용한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에 대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중심적인 역할은, 충북혁신도시의 교육환경을 향상하여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지역 교육청과의 정책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충북 교육의 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의 정도가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성패를 좌우

❍ 진천군과 음성군 간에 연계하여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지역의 한계를 넘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협력 모델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실제로 지자체 간 협력이 쉽지 않은 일이므로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맥락에서 두 지자체 간 협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교육발전특구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두 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방향성과 주요 정책 결정을 담당할 공동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진천군과 음성군이 준비하고 있는 자치단체조합의 결성은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데 좋은 시도로 판단
- 협의체는 양 자치단체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이전공공기관의 관계자도 포함하여 지속적이고 일관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공동 협의체의 운영을 제도화하여 정기적인 모임과 성과 분석 등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두 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 가령 진천군이 교육 인프라 개발을 담당하고 음성군이 기업 협력 및 실습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또한 자치단체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분야별 책임과 권한에 대해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진천군과 음성군이 협력하여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하는 데 있어, 공동의 목표와 성과 지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
- 구체적인 지표를 선정하여 양 자치단체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사업을 추진
- 성과 지표는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함으로써 자치단체 간 경쟁이 아닌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사업의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2.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전략 수립

□ 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강화 및 명확한 공동의 목표 설정

❍ 진천군과 음성군의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두 지자체가 연계하여 추진하는, 국내에서 유일한 사업으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
-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향후 다른 혁신도시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 진천군과 음성군 사례는 지자체 간 협력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혁신도시가 위치한 다른 지자체도 지역의 목표와 특성에 따라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 **충북혁신도시의 기능을 고려한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

○ 충북혁신도시는 충북의 중심에 위치하여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차별화된 교육 및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춘 곳으로 판단
- 충북혁신도시가 혁신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역산업의 거점으로서 혁신도시의 모델로 발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교육발전특구의 사업을 추진

○ 충북혁신도시는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이 위치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인재 양성에 적합
-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 에너지 관리 시스템, 친환경 기술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강좌와 실습 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2) 교육발전특구 주체 간 유기적 연계 강화

□ **지자체와 교육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보완 방안**

○ 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필수 요소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할 분담, 성과 관리 등에 대한 명확한 협력 체계가 미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여,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방향성과 세부 계획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
- 협의체 내에서는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구별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 시 중재 역할을 담당할 중립적 위원회를 두어 문제 해결을 지원

□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협의체 포함 및 참여 독려**

○ 현재 교육발전특구 추진체계에는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협의체에서 빠져 있으나, 공공기관들은 인프라와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로 협의체에 포함하여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은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공공기관이 교육과정 기획 및 실행에 실질적인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도록 협의체 내 역할을 명확히 규정

❍ 학생들이 전문 지식과 경력을 갖춘 공공기관 인사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도입
-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무적인 관점을 배우고, 지역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학생 대상 특강을 개최하고,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

❍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 양성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조합의 결성

❍ 진천군과 음성군이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자치단체조합 결성을 계획
- 이는 두 지자체 간 연계를 공식화하고, 공동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자치단체조합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가령 정기모임 일정과 결정 사항을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
- 이를 통해 지자체가 공동의 목표를 중심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자치단체조합 결성을 통해 두 지자체가 재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적절히 분배하는 시스템을 마련
- 이를 통해 사업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간 협력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가령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특정 항목별로 재정을 구체적으로 배정하여 각 지자체가 공동 책임을 지도록 운영

❍ 자치단체조합 내에서는 성과 평가와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여, 각 지자체가 공동 목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인구 유입률, 학생 진학률, 취업률 등의 지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조합 내에서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교육발전특구 관련 지역맞춤형 특례 발굴

□ 교육발전특구 학교 교원 승진 가산점 신설 특례 제안의 문제점

❍ 교육발전특구 학교 교원들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특례 제안은 교원들의 동기 부여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도라는 점에서 취지가 긍정적이나, 불합리한 요소가 있어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우선 특정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지역 교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전국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많은데, 특정 특구 교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면 다른 지역 교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는 공정성을 중시하는 교원 승진 체계의 근본 취지와도 적합하지 않음

❍ 또한 승진 가산점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교원 승진 가산점을 통해 교원들의 동기와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와 달리, 가산점 부여가 실제로 교육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어려울 수 있음
- 교원 승진은 다양한 경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구조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지역에서 연구회 참여로 수고했다는 이유로 가산점을 부여하면 교원 평가의 객관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특정 지역에서만 승진 가산점을 제공할 경우, 교원들이 승진 가산점을 얻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동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는 오히려 교원 배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육 환경 구축에 방해가 될 것으로 예상
- 교육발전특구의 목적은 교육 질 향상과 지역의 교육 발전이지만, 가산점 제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 교육발전특구로서 진천 음성 지역에 교원 승진 가산점 특례를 적용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증가할 수 있음
- 이는 전국적인 정책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특례 제도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정책은 일관성과 형평성을 지켜야 하는데, 특정 지역에 예외를 두면 정책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유의

□ 국립소방병원 개원에 따른 대학의 정원 증원 특례 제안의 문제점

❍ 충북혁신도시에 국립소방병원이 개원하면서 극동대와 강동대의 관련 학과 정원 증원을 특례로 제안하고, 병원의 특별전형 증원을 요구하는 방안에 불합리한 점이 발견

❍ 대학의 학과 정원을 특례로 증원하는 것은 타 대학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음
- 보건 계열 학과는 전국적으로 여러 대학에 존재하며, 소방병원 개원만을 이유로 특정 지역 대학의 정원을 증원하면 타 대학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 이는 공정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교육부의 기본 방침과도 맞지 않음

❍ 국립소방병원이 개원한다고 해서 곧바로 관련 인력 수요가 증가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소방 관련 전문 인력은 일부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학과 정원까지 증원하는 것은 과한 조치일 수 있음
- 소방병원의 인력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대학 정원을 증원하면 졸업생의 취업난을 초래하거나 소방 인력 공급 과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병원이 개원했다고 해서 관련학과의 특별전형을 증원하는 것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
- 특별전형 증원은 일반 전형 응시자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특정 병원의 개원과 같은 지역적 요인으로 입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대학의 학문적 자율성에 어긋나는 문제임
- 특별전형 증원은 사회적 합의와 공정성에 기반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개별 기관의 요청에 의해 변경해서는 안 되는 사안으로 판단

❍ 특정 지역에 국립병원이나 대규모 공공시설이 개원할 때마다 인근 대학의 정원이나 특별전형을 증원하는 특례가 허용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며, 특례 제도가 남용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례가 반복되면 대학 정원 정책과 특별전형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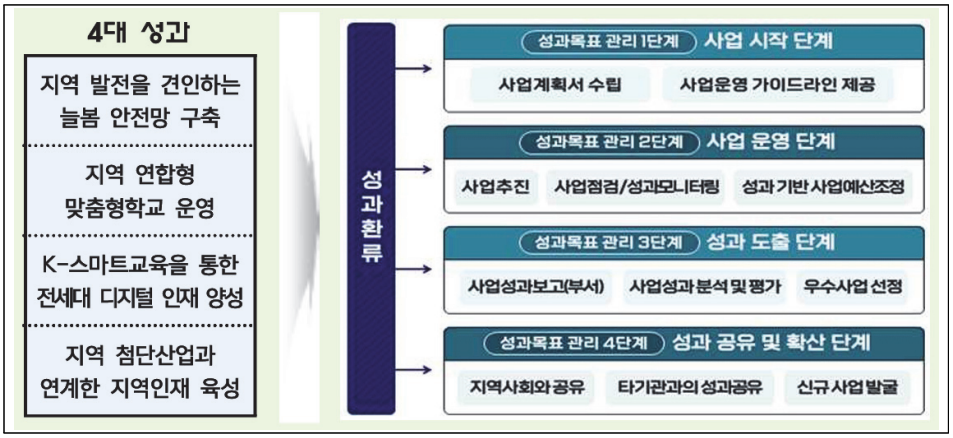
4) 교육발전특구 성과 극대화를 위한 성과관리 방안

□ 성과관리방안의 검토

❍ 사업계획서상에 제안된 성과관리 방안은 교육발전특구의 목표를 달성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및 평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

❍ PDCA(Plan-Do-Check-Act)에 의한 성과관리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
- 4대 성과 목표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와 주민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성과 확산 및 환류 결과를 반영
- 사업운영의 성과를 도출하고 공유·홍보를 통한 확산으로 성장의 기반을 마련

| 그림 4-22 | 충북 진천·음성군 교육발전특구 성과지표체계



출처: 진천군·음성군·진천교육지원청·음성교육지원청(2024: 70)

□ 성과지표 검토

○ '학교 밖 늘봄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지역 산업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표는 단위가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성과지표를 제시

- 그러나 이들 지표는 수요자를 정확히 예측하여 현실에 적합하게 산정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

○ '늘봄 학생·학부모 만족도'의 지표도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기준값 86점에서 2028년 91점까지 5점 상승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 만족도의 점수는 경험상 오차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5점을 향상한다는 것은 과한 목표 설정일 수 있음

제 5 장

유형 II - 지역산업 연계형 : 광주광역시

제1절 유형 및 교육발전특구 사업 개요

제2절 지역여건 분석

제3절 관련 정책동향 분석

제4절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05 유형 II – 지역산업 연계형 : 광주광역시

제1절 유형 및 교육발전특구 사업 개요

1. 유형 개요

□ 교육부 사업신청 기준에 따른 유형

○ 광주광역시는 광역지자체 단위의 교육발전특구(2유형) 선도지역으로 선정
- 2유형의 신청 주체는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으로,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구 사업 추진단을 구성함
- 2유형은 광역지자체 전체가 특구로 지정되는 만큼 기본적으로 교육여건 향상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우위를 지니는 분야에 대한 특화전략을 제시함

□ 교육단계에 따른 유형

○ 광주광역시의 교육발전특구 운영계획은 유아·돌봄, 초·중등교육, 대학 교육 등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중등교육 중심의 '초중고 연계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중등 직업교육 혁신,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한 자율형 공립고 2.0 활성화, 지역과 학교 특성을 반영한 혁신모델(자치학교) 운영 등을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함
-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으로 AI 및 디지털 인재 양성,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공교육의 질적 개선을 모색함

□ 지역 특성에 따른 유형

❍ 지역 특성에 따른 교육특구 중점 추진 분야로 유형을 구분하면, 광주광역시는 지역산업 연계형에 해당함

- 대입 지역인재전형 확대, 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광주형 마이스터고·협약형 특성화고·자율형 공립고 2.0 등 공교육 혁신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인재를 양성함
- 초·중등 교육에서 AI, SW 교육을 강화하고, AI 영재고, AI 대학원, 광주 SW 미래채움센터 등을 설립, 운영해 지역의 미래 전략산업인 AI·디지털 산업 인재를 육성함
- RISE 사업 연계, 창업사다리 펀드 조성, 유학생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반도체, 에너지, 관광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 지원을 강화함

2. 특구 사업 현황

1) 특구 운영 방향

□ 지역문제 해결 및 인재 정착을 유도하는 교육정책

❍ 광주광역시 지역 특성 및 발전방향과 연계한 교육개혁 정책을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정책 중심으로 교육발전특구 운영

- 지역의 교육·산업·일자리 정책과 연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교육정책 추진

❍ 지역문제 해결과 인재 정착을 유도하는 교육발전특구 운영 방향과 추진 전략 설정

- (비전) 다양한 실력으로 내일이 빛나는 미래교육도시 조성
- (목표) 광주가 인재를 키우고 인재가 다시 광주를 키우는 선순환 교육 혁신 모델 구축

| 그림 5-1 | 광주광역시 교육발전특구 비전과 목표, 전략



출처: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교육청(2024)

❍ 규제 완화,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인재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광주형 '교육-취·창업-정주'의 지속적인 성장 모델 개발

- 지역의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는 광주형 모델을 개발해 침체한 공립고, 공업계 특성화고 등의 활성화 도모
-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돌봄의 대표도시로서 늘봄학교와 같은 교육개혁 선도 모델을 지정해 시너지 효과 유발
- 광주 발전 전략과 초·중·고·대학 핵심인재 육성 전략의 상호 맞춤형 연계를 통해 지역 청년 유출, 지역대학 위기 등 지역 불균형 심화 문제 완화

□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적인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 체계 구성

❍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과 광주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특구 사업추진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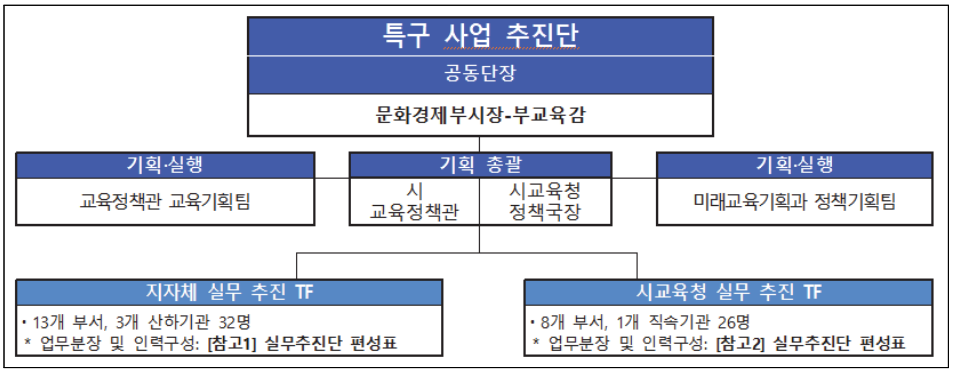
- 시에서는 교육정책관 교육기획팀[2]에서 기획과 실행을 총괄하고, 분과에

2)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2024년 2월) 당시 조직으로, 시 조직 개편(2024년 7월) 이후 교육청년국

따라 AI반도체과, 로봇가전의료산업과, 에너지산업과 등 13개 부서, 3개 산하기관이 참여

- 교육청에서는 미래교육기획과 정책기획팀에서 기획과 실행을 총괄하고, 진로진학과, 중등특수교육과, 시설과 등 8개 부서, 1개 직속기관이 참여

| 그림 5-2 | 교육발전특구 사업추진단 구성(광주광역시)



출처: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교육청(2024)

❍ 시장과 교육감을 공동위원장으로 5개 자치구, 18개 대학과 8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교육발전특구 지-산-학 거버넌스(지역 협의체)를 구축하고, 업무 협력을 통해 중요 사항을 합의하고 결정함

- 지역 대학(18곳) : 광신대, 과학기술원, 광주교대, 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송원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호남신학대, 광주보건대, 기독간호대, 동강대, 서영대,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 한국폴리텍대
- 유관기관(8곳) :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상공회의소,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그린카진흥원, 인공지능사업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광주연구원, 광주여성가족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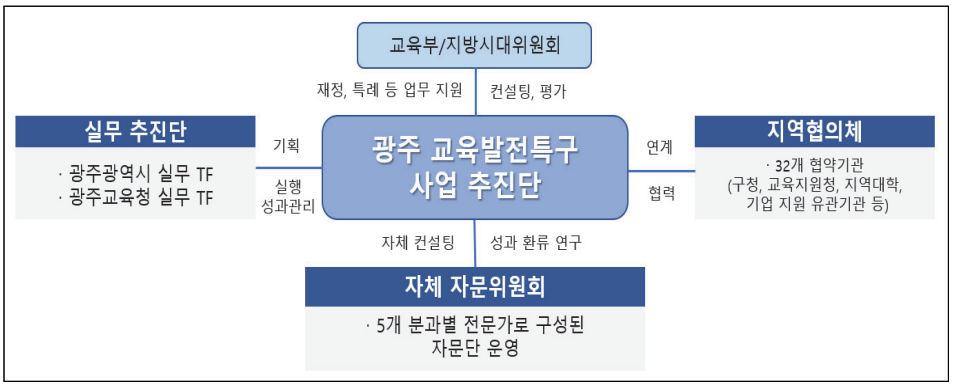
❍ 5개 분과별 자문단을 구성해 자체 컨설팅을 수행하고, 성과 환류 연구를 진행해

교육지원정책과(교육지원정책팀)에서 해당 역할을 담당함. 이 보고서는 광주광역시의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운영계획서'(2024년 5월)의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개편 이전 조직을 반영하고 있음.

지역 협력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

- 중등 직업교육혁신 분과, 자공고 2.0 활성화 및 학교교육혁신 분과, AI·디지털 인재양성 분과, 지역특화산업 연계 분과, 돌봄 확대 및 지역거주여건 개선 분과

| 그림 5-3 | 광주광역시 교육발전특구 사업추진체계



출처: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교육청(2024)

2) 전략별 추진과제 및 주요 내용

(1) 중등직업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고도화

❍ 혁신지구 협력체계 마련

- 시 교육정책관, 노동일자리정책관, 창업진흥과, 청년정책관 사이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광주경영자총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체계 마련
-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를 운영해 시와 상시 협력체계 유지

❍ '교육-취업-정착' 선순환 구조의 지역인재 성장경로 구축

- 유관기관-지역대학-참여기업이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매칭을 위해 기업이 참여하는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최
- 취업동아리 운영 표준안 등을 제작해 운영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취업동아리 중심의 진로직업교육을 시행

❍ 지역 혁신 기반 조성
- 지자체와 협력해 혁신지구 참여기관 및 직업계고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직업계고 교육과정 홍보를 통해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 제고 추진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고도화

❍ 지역 산업현장 적합성이 높은 중등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도제학교 운영 내실화를 지원
- 성과평가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도제교육 운영 준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도제학교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지원
- 교육훈련 직종 다양화를 위해 신규 도제학교 지정을 지원
- 도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역량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담당 교사 대상 워크숍을 개최하고, 도제학교 운영 우수사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안내서와 운영 매뉴얼 개발

❍ 지역 기업 참여 확대와 네트워크 활성화
- 학교-학교, 학교-기업체 간 정례협의회를 운영하고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사업 운영 현황,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 성과 확산 등을 추진

□ 광주형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운영

❍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특성화고 선도모델 구축
- 국가 미래산업, 지역 전략산업이 맞춰 학과를 개편하고, 산업현장 맞춤형 실습환경 조성
- TV, 라디오, 온라인 등을 통해 광주형 마이스터고를 홍보해 우수 신입생 확보를 지원

❍ 지역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세부전공 코스형, 타학과 융합형, 부전공 이수형, 공동 교육과정, 학교밖 교육 등 학생 성장 중심의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을 지원

-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신산업·글로벌 현장 맞춤형 직무연수를 강화하고, 부전공 연수를 지원
- 학급당 학생 수(18명), 학급당 교원 수(2.4명) 등의 지표를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맞추고, 매년 교육과정 운영비(6억 원)와 시설환경 개선비(100억 원)를 지원해 직업교육 우수모델을 창출

❍ 다양한 진로를 설계하는 학생 역량 강화
- 전공별 진로 컨설턴트와 연계해 1학년부터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체계적인 전공교육, 현장실습, 언어교육 등을 통해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뿐 아니라 국외 취업 및 창업이 가능한 기술 인재를 양성
- 창업교육을 위한 빛고을 스타트업 플랫폼을 구축해 창업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고, 창업전문가와 1:1 멘토링을 운영해 직업계고 학생의 창업 유도
- 지역 전략산업에 맞춤 5대 핵심 분야별 취업동아리 운영

(2) 대학-기업 연계를 통한 자율형 공립고 2.0 활성화

□ 대학 및 기관 연계 교육과정 운영

❍ 대학 및 기관과 연계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과 학습 기회를 보장
- 전남대, 조선대, 광주교대, 서영대, 조선간호대 등 대학과 연계한 일반선택 및 진로 선택 과목 운영
-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사)스마트인재개발원등 기관과 연계한 진로 선택 과목 운영
- 교육청 주관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대면) 및 빛고을온학교 주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비대면·대면 블랜디드) 병행 운영

❍ 지역 대학과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
- 대학과 연계해 학교별 특색 교과목을 신설하고, 인정도서 개발
- 대학 교수와 자공고 교사가 Co-teaching을 통해 학생 수준 맞춤형 수업 운영
- 지역 대학의 우수 연구 프로그램에 자공고 학생이 참여하고, 방과후 혹은 주말·방학 중 협약 대학 인력 및 (연구)시설을 활용 동아리 활동 지원

❍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실습 프로그램 개발
- 광주글로벌교육센터(광산구), 多가치센터(광주송정도서관다가치문화도서관), 온마을이음학교 광산교육협력센터, 첨단거점영어체험센터와 연계한 국제교류 및 글로컬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시청 유관 부서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프로그램 확대
  • 인공지능산업실(인공지능·반도체·미래먹거리·모빌리티·로봇의료가전 등 지자체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문화체육실(e-스포츠·음악산업·체험형 융합 프로젝트·영화제 등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 확대), 경제창업국(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모의 창업 지원) 등
- 공공기관의 특화 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무형 교육과정과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 광주형 대학과목 선이수제(AP) 개발·운영
- 광주형 선이수제 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외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운영체계 관련 규제를 개선해 환경 조성
- 대학과목 선이수 인정을 위한 정차 및 운영 매뉴얼을 개발해 자율형 공립고에 시범 운영 후,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에 전면 적용 추진

❍ 자율형 공립고 2.0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 지원
- 자공고 전환학교의 운영 성과 평가,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실시
- 우수 교원 모집을 위해 교장공모제를 통해 전문성을 지닌 교장을 임용하고, 교원의 추가 배정,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
- 우수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후기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선지원 선발하고, 광역지자체 단위로 모집

□ 지역인재 전형 확대

❍ 지역인재선발의 지역 범위 설정이 서로 달라, 광주의 전남대, 조선대는 호남권 전역, 전북의 전북대와 원광대는 호남권과 전북지역으로 나누어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있음
- 호남권 대학 관계자, 호남권 교육청 관계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전북권 지역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요구
- 학교 통신망 구축 및 지원, 디지털 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 지역거점국립대, 지역거점사립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확대 추진
-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전남대(지역거점국립대) 의대는 80% 이상, 조선대(지역거점사립대) 의대는 70% 이상으로 확대 요구
-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전체 학과도 확대 추진

❍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등 인기 학과의 수시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80%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역인재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 상향 논의

□ 지역인재 할당제 등 인센티브 도입 및 확대

❍ 지역 우수 인재가 졸업 후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할당제를 확대 적용
- 광주광역시 및 광주전남 빛가람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의 협약으로 단계적 확대(~30%) 추진

❍ 지역 고교 졸업 후 지역인재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지역 내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우선 선발 비율을 확대하고, 창업 시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창업지원금 지원

(3) 지역과 학교 특성을 반영한 학교교육 혁신모델 개발·운영

□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색(빛깔)을 반영한 자치학교 운영

❍ 학교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는 자치학교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 유치원(공립 단설), 초등(공립), 중·고·특수학교(공·사립) 중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9개 주제영역(실력향상, 미래교육, 기후환경·생태, 교육복지, 세계시민, 다문화, 문화예술체육, 지역사회 연계, 학교 자율주제)로 운영
- 2024년 현재 141개교가 지정돼 있으며, 학교급별, 규모별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있음(학교당 평균 28,259천 원 지원)

❍ 지자체가 제안하는 지역사회 연계 자치학교 운영 신규 운영 및 지원
- 2025년 이후에는 국립 초·중·고등학교, 사립 초등학교, 각종학교로 범위를

넓혀 신규 자치학교를 선정하고, 지자제가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운영 영역을 제안하면, 세부 운영과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

- 자치학교에 신규 선정된 학교 중 희망학교(4곳)를 대상으로 시 지정 연구학교와 연계하는 자치학교 주제영역별 학교 교육 혁신모델 개발 예정

(4)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으로 광주형 AI·디지털 인재양성

□ 지역 자원 활용 AI·SW 소양 교육 확대

❍ 초중고 대상 광주형 AI·SW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 초·중등 교육과정에 AI·SW 교육 시수를 확대해 AI·SW 활용 역량 증대
- 지역자원과 연계해 학교 AI·SW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AI·SW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중심의 활동 프로그램 개설

❍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학생들의 역량 함양을 위해 IT 기업 및 대학 연계 AI 교육 교수학습 모델 및 교육자료 개발(고등학교 대상)

□ 광주 SW 미래채움 사업 추진

❍ SW 교육 인프라 통합 및 거점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SW미래채움센터 설립

❍ AI·SW 교육을 담당할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채용해 지역 SW 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
- 강사 양성을 위한 기준 마련(강사 등급체계, 승급체계 등), 교육 후 사후관리 프로그램 기획·운영, SW 강사 자립화 방안 마련

❍ 학생 대상별 맞춤형 AI·SW 교육 지원
- AI·SW교육 협력강사가 초등학교로 찾아가 수업 제공

□ AI 영재고등학교 설립

❍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원내에 운영하는 AI 영재고등학교를 2027년 3월 개교 목표로 추진

- 과학영재 발굴·육성전략(과기부, 2023년 2월)에 GIST 부설 광주 AI 영재학교 신설 추진 내용 포함
-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교육부, 2023년 3월)에 과기원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 추진(과기정통부) 포함

(5)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공교육 질적 개선

□ 디지털 기반 교육 환경 조성

❍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상호작용과 질 높은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용 태블릿 PC 공급
- 중학교 1학년 전체, 초등학교 3~4학년 수요조사 후 필요 수량 보급

❍ 노후 칠판을 전자칠판으로 교체하고, 학교 통신망을 개선해 디지털 교육환경 갖추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교육 시스템 구축

❍ AI를 활용한 융합교육이 가능한 AI팩토리(미래교실)를 조성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과 학생 참여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지원

□ 디지털 역량을 갖춘 교원 양성

❍ 교사별 디지털 역량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수요에 맞춘 연수를 통해 교사가 혁신적인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중 381명의 선도교사 양성
-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5,019명 대상 AI 디지털교과서 교원 연수
- 지역 대학과 연계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청, 대학, 공공기관이 AI 디지털교과서 교원 연수를 전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워크숍 및 세미나 등 연수 프로그램을 공유·보완

□ 지역사회 연계 디지털 선도지구 운영

❍ 자치구 및 거점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디지털 교육 선도지구 운영

- AI·SW교육 선도지구(체험 및 실습, 학부모 대상 교육 지원), 디지털 교육 선도지구(AI 코스웨어를 활용한 사교육 경감 및 방과후 교육 지원), 테크센터 운영(지역 연계 테크센터(스마트 기기 수리, 무선망 점검 등) 운영으로 디지털 교육 전환 지원), 디지털 튜터 지원(지역 내 인적자원 재교육)

❍ 에듀테크 활용 기반 구축, 디지털 수업혁신 교원 양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공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민관학 협의회 구성
- 지자체, 교육청, 학부모단체, 대학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명으로 구성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과 디지털 선도지구 운영 등을 협의

□ 국제화특구 연계 글로벌 교육 환경 조성

❍ 광산 교육국제화특구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교육청, 시청, 광산구청, 지역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제를 구축해 글로벌 교육 환경 조성
- 지역대학의 전문성을 살리고 지역사회의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영어 및 다언어·다문화 체험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 교육청, 시청, 광산구청, 지역대학 연계하여 각 학교에서 세계 시민으로서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주제와 분야 등을 직접 선정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글로벌 학교 운영

(6) 지-산-학 협력 기반 맞춤형 대학 인재 양성

□ RISE와 고교(직업계고) 연계 예비 인재 양성 사업

❍ 직업계고와 연계할 수 있는 일반대학, 전문대학, 기능대학이 추진의 주체가 되어, 지역 맞춤형 직업계고 예비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직업계고 연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업계고 학생 컨설팅을 지원
- 학생의 수요와 지역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현장 중심의 산학협력 교육을 통해 지역 산업과 즉시 투입형 인재를 배출해 구직난과 구인난 해소를 기대함

□ 산학 협업 프로젝트를 통한 현장 중심 핵심 대학 인력 양성

❍ 지역 대학과 연계해 지역 주요 산업의 연구 및 산업 역량 증진

- 광주·전남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광주(전남대, 조선대)와 전남(목포대, 순천대, 동신대)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의 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수요맞춤형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양성해, 산학협업 활성화 및 취업 연계, 기업역량 강화를 추진
- 지역전략산업 융합보안 핵심 인재 양성: 전남대와 협력해 융합보안대학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
- 대학 ICT연구센터 육성 지원 사업: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지원해 블록체인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융합 기술개발 및 석·박사급 다학제적 고급인력 양성

□ 산업현장 즉시 투입가능한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취업역량 강화

❍ SW 중심 대학 지원
- 전남대 15대 SW 관련 학과를 대상으로 전공교육 강화, 융합교육 확대, 기초교육 실시,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산학협력 프로젝트, 채용연계형 인턴십 운영 등 산학협력을 확대하며,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 워크숍 등 SW 가치확산 활동을 추진

❍ 기업주도 집중교육을 통한 SW 전문 인재 양성
- NHN 아카데미 광주캠퍼스를 조선대 IT 융합대학에 신설해 NHN의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멘토링과 강의를 지원
-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해, 현장 전문성을 갖춘 SW 실무인재 양성

❍ 현장중심 AI 특화인재 양성을 위한 AI 사관학교 운영
-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기업이 원하는 최적의 AI 실무인재를 양성해 AI 기술 기반 취·창업 활성화를 도모
- AI에 관심 있는 전국 청년 미취업자(만18세 ~ 39세)를 대상으로 교육 시행

❍ AI 직무전환 교육
- 인공지능 등장에 따른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직무전환 희망 재직자 및 구직자 대상 교육 실시

(7)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대학 교과 편성 확대

□ 지역 미래 전략산업 및 역점사업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설

○ 구글 클라우드 기반 AI인재양성

- 전남대(16명), 조선대(4명), 조선이공대(4명), 광주대(4명), 호남대(2명) 등 5개 지역대학 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아이코어이앤씨(구글 공인 교육 파트너사)에서 교육 실시

○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 반도체 일반·기초 교육을 넘어 대학별 역량 및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 특성화 방향을 설정하여 대학 간 역할분담 체계 구축
-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교원, 시설 등 인프라 구축, 기업 협업을 확충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특성화 모델 운영 기반 마련 지원

| 표 5-1 | 지역 미래 전략산업 관련 교육과정 개설(대학)

분야	주요내용
반도체	• (융합전공) 조선대 첨단 반도체 특성화 융합전공 신설 • (특성화 대학) 전남대-전북대(주관)(연 180명) • (학과개편)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시스템반도체공학, 연 70명), GIST-삼성전자 계약학과(연 30명)
	• 실험·실증을 위한 산·학·연 반도체 공동 연구시설 구축(전남대) • 시각지능 반도체 첨단공정 팹(GIST)

○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 지원

- AI 기술을 활용한 정보보호 분야(사고대응) 특성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 인프라 및 정보보호 전공 운영, 사이버보안 실습, 산학 프로젝트 추진
- 전남대 AI 융합대학에서 추진하며, 5년 6개월(23년 7월~28년 12월) 간 연 30명의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함

(8) 시 전략산업 연계 취업·창업·정주 지원

□ 토닥토닥 청년 일자리 카페

○ 취업 거점 공간을 마련해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진입의 기회 확대
- 스터디룸, 회의 공간, 카페 공간, 커뮤니티 공간, 도서 공간, 정보 검색공간 등 공간 대관, 면접 정장대여 및 이력서 사진 촬영, 온·오프라인 AI 모의 면접 등의 서비스 제공

□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창업 성장 사다리 펀드 조성

○ 창업 인프라를 위한 성장 사다리 펀드 조성
- 지역 인공지능(AI) 및 지역혁신성장 산업 유망 스타트업 생존율 제고를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2,000억 원 규모의 펀드
- 특화 산업별·기업 성장 단계별로세분화하여 투자 활성화

□ 광주 창업 페스티벌 개최

○ 지역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창업생태계와 교류하고 해외로 진출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2024년 11월)
- 대기업 16개 사, 투자사 270개 사, 스타트업 240개 사 이상 참여
-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 스타트업 부스 전시, 투자사 meet up 등

□ 어린이 무료 청소년 반값 교통비 지원 G-패스 도입

○ 국토부의 K-패스 카드와 연계한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정주 여건 개선
- 어린이 100%, 청소년 50% 할인
- 청년 40%, 일반 30%, 어르신 50%, 저소득층 64% 환급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등 금융 지원

○ 지역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광주광역시-한국주택금융공사-광주은행 협약으로 진행

(9) 지역 정주형 해외 인재 유치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지방대 위기에 대응하고, 교육 경쟁력 강화, 글로벌 우수 인재 배출 및 취업, 정주로 연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기 위한 사업
- 해외 한국유학박람회에 시와 대학이 동반 참여
- 지자체 중심 유학생 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한국어교육 강화, 진로 탐색 기회 확대, 맞춤형 인재양성·취업지원을 통한 지역 정주 유도

(10) 광주형 늘봄학교 구축

□ 학교 내 늘봄학교

❍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내에 늘봄학교 운영
- 안전한 학교 공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 교육프로그램 제공
- 소득 기준, 맞벌이 가정 등 우선순위를 없애 희망하는 누구나 늘봄교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 다양화
- 장애 학생, 이주배경 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온(溫)마을 다(多)봄터 운영

❍ 지역사회와의 연계로 학교 밖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해 돌봄 대기 수요에 대응하고, 돌봄 시간 연장
- 민간 위탁기관을 공모로 선정하고, 사업 성과를 교육청에서 관리

□ 거점형 늘봄센터

❍ 늘봄학교 참여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통합거점형 늘봄센터를 직접 운영
- 늘봄학교 대기 수요가 많은 초등학교 여러 곳을 묶어 늘봄지구로 선정하고, 교내 유휴시설을 활용해 거점형 늘봄학교 구축

- 저녁 늘봄, 방학 늘봄, 방과후학교 연계 늘봄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늘봄교실 운영

□ 지역사회 연계 늘봄체계 운영

○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해 늘봄서비스의 질적 향상 추진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가족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마을커뮤니티 공간 등 지역사회의 가용공간을 활용하고,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해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예체능, 창의성 신장, 정서 함양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또래 놀이문화 형성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등 지역과 연계한 공동운영 늘봄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1) 학교시설 및 마을자원 공유를 통한 거주 편의성 제고

□ 학교 체육시설 개방

○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및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해 지역주민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
-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유지관리비, 개보수 지원

□ 학교 공유주차장 운영 확대

○ 교육청·학교·자치구 협약을 통한 학교 주차장 공유 확대로 주거지 주차난 완화 추진
- 공유주차장 개방에 따른 학교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관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입출차 관리, 통학 아동 보호 등의 방안 마련

□ 학교복합 시설 구축

○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매년 2건 이상 선정되도록 추진해 모든 기초지자체에 최소 1개 이상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 관할 학교를 구별로 나눠 지원해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고, 구청과 협의를 통해 필요한 맞춤형 복합시설 확보

(12) 더 촘촘하고 두터운 광주다움 통합돌봄 확대

□ 초등 전학년 10시 출근제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급

○ 초등학생 자녀 돌봄을 위해 10시 출근제(1시간 단축)를 도입하는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을 기존 초등 1학년 학부모에서 초등 전학년 학부모로 확대
- 10시 출근제 도입으로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중소사업장에 금액 지원(3월~12월 중 2개월간)

□ 틈새돌봄 체제 구축 및 확대

○ 맞벌이 가정 자녀가 입원하는 경우, 병원아동보호사를 파견해 돌봄공백을 예방하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 절감
- 입원 아동 대상 서비스(입원아동 돌봄서비스), 병원 내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병원동행서비스(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웃 간 상호 자조모임을 통한 아이돌봄(이웃집 긴급돌봄) 시행
- 달빛 어린이 병원을 추가 지정해 평일 야간 및 휴일 소아청소년 외래진료 제공으로 어린이 안심 의료체계 강화

(13)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협력사업 추진

□ 민·관·학 소통·협력 거버넌스 구축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온마을 이음학교와 5개 자치구 업무협약으로 자치구 이음센터 운영
- 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온마을 이음학교 공동 사업을 위한 지역교육협의체와 교육 진흥 TF 통합 운영
-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특색 교육과정을 발굴, 운영해 지역과 학교가 학생을 기르고 학생이 배운 것을 지역에 환원하는 선순환 프로그램 운영

○ 시정목표에 부합한 교육 추진을 위해 광역단위(시-교육청-자치구) 교육협력 모델인 광주교육통합지원체계 구축

- 시는 시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교육협력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교육청은 자치구와 협력해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을 설립, 운영
- 자치구는 교육지원청이 참여하는 교육협력지원센터를 구성, 운영

□ 문화예술 특성화를 통한 글로벌 예술 인재 양성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특성을 반영하는 문화예술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시와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협약해 소양을 갖춘 글로벌 예술 인재 양성
- (지방문화학교) 학생 대상 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문화예술특성화학교) 관내 초·중·고 대상 문화예술 특색 프로그램 운영
- (AI 기반 어린이 상상놀이터) AI 기반 문화예술 융복합 어린이 전용 놀이, 체험, 교육 공간 조성

□ 생존수영 교육 지원

❍ 관내 초등학교 1~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생존기능 중심의 수영교육 실시
- 생존수영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발달단계에 따른 학년별 맞춤형 특화교육 시행
- 초등교원 생존수영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 연수 지원

□ 실천적 생태전환 프로그램 운영

❍ 기후환경에 관한 지식, 태도, 실천 역량을 증진하는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교 내 유휴공간에 친환경 텃밭정원을 조성해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과 창의력을 높이고,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
- 학생들의 녹색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교육자료 제공

3) 교육발전특구 특례 제안

□ 자율형 공립고 2.0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 자율형 공립고에 우수한 교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교원 정원 외 추가 배정 허용 특례를 제안

-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정원 배정의 기준)에 "「교육발전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을 추가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별 정원 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추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 육성법) 개정

○ 지방대학의 지역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한 '해당지역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도록 제안

-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전남대, 조선대는 호남권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있으나 전북에 소재한 전북대, 원광대는 지역인재를 호남권과 전북지역으로 나누어 선발하고 있고, 전북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훨씬 높은 상황
- 전북대, 원광대가 지역 범위를 전북과 호남으로 구분하는 것은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소지역 이기주의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 광주지역 교사·학생·학부모는 광주 소재 대학도 지역 범위를 광주로 제한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 지역 간 갈등과 소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지방대 육성법 취지에 맞게 전북지역 대학도 지역인재 선발 범위를 호남권으로 통일하도록 요구

| 표 5-2 | 특례 제안 내용

현행 법령	개정안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정원 배정의 기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제2조(정원 배정의 기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현행 법령	개정안
한다)에 배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의 시행 등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공립의 각급 학교에 국가공무원을 추가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별 정원 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한다)에 배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의 시행 등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공립의 각급 학교에 국가공무원을 추가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가칭)「교육발전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을 추가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별 정원 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 육성법)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⑥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⑥ 해당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하고,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출처: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교육청(2024)

제2절 지역여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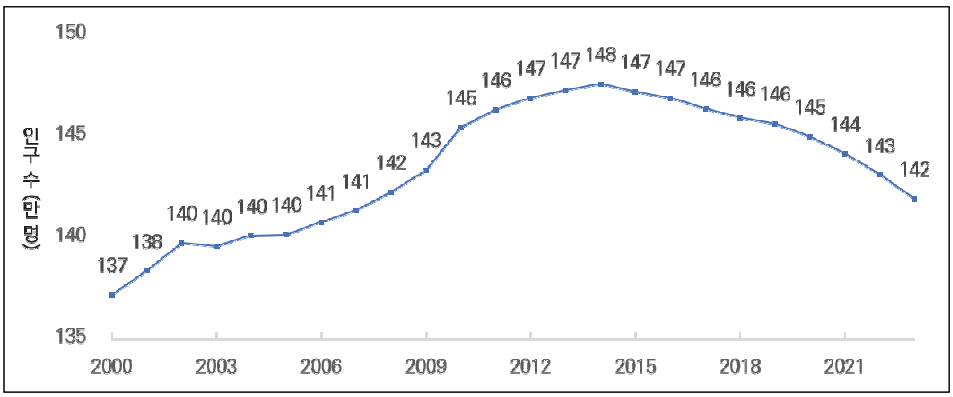
1. 지역여건

1) 인구 현황 분석

(1) 인구 및 고용 동향

❍ 광주광역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48만 명으로 정점에 이르렀으나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23년에는 142만 명을 기록

| 그림 5-4 | 광주광역시 인구 수(2000~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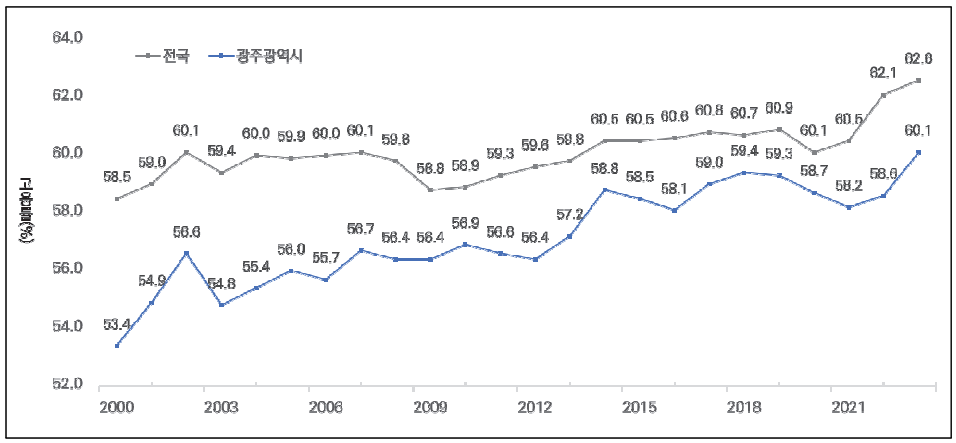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광주광역시 고용률은 전국 평균 고용률과 유사하게 우상향하는 추세지만, 전국 평균 고용률보다 낮은 수준을 보임

❍ 광주광역시의 실업률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나, 이후에는 낮거나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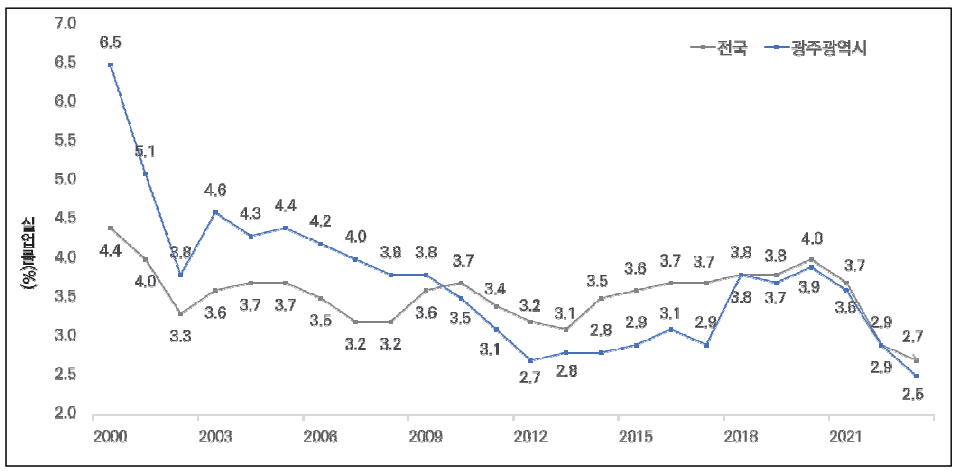
❍ 2%대에서 안정적이던 실업률은 글로벌 경제위기(2018년) 이후 3%대 후반으로 올랐으나, 점차 안정돼 2022년부터 실업률이 다시 2%대에 접어듦

| 그림 5-5 | 광주광역시 고용률(2000~2023)



출처: 행정안전부,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5-6 | 광주광역시 실업률(2000~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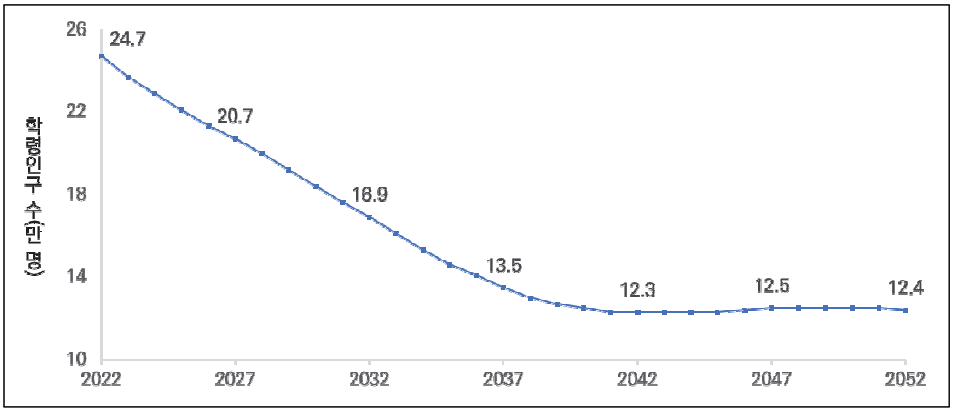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 「경제활동인구조사」

(2) 학령인구 전망

❍ 2022년 24.7만 명이던 광주광역시 학령인구는 2040년까지 급감해 30년 후인 2052년에는 절반 수준인 12.4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그림 5-7 | 광주광역시 장래 학령인구 추계(2022~2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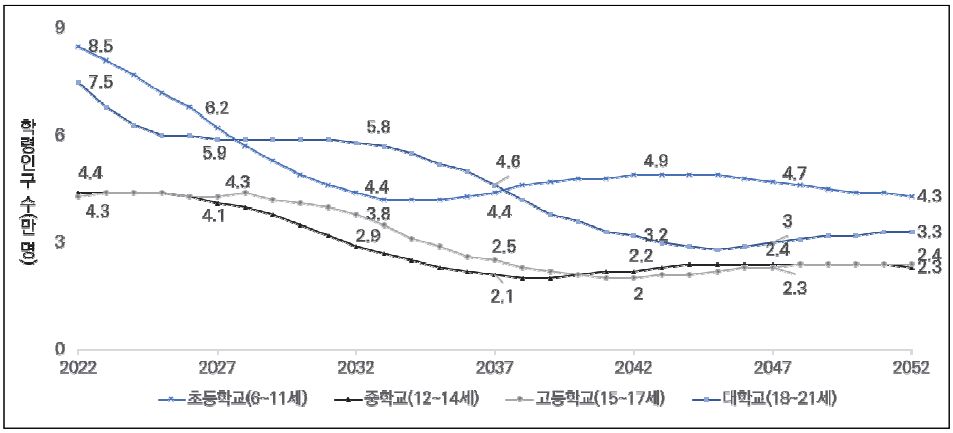


주: 중위 수준 장래 인구추계 가정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초·중·고등학생 수는 2030년대까지 지속 감소하고, 이후에는 보합세를 보이며 현재의 절반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대학생의 감소 폭(7.5만 명→3.3만 명)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됨

| 그림 5-8 | 광주광역시 장래 학령인구 유형별 추계(2022~2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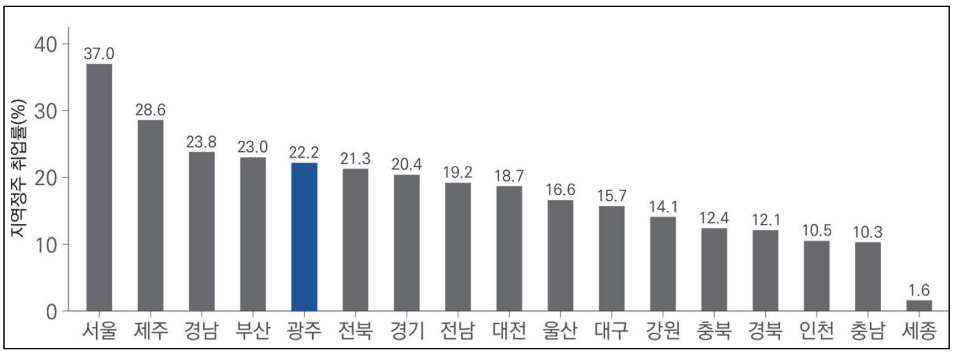
주: 중위 수준 장래 인구추계 가정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3) 지역정주 취업률 추이

❍ 광주광역시는 지역 대학 졸업자 중 22.2%가 지역 내 기업에 취업해 지역정주 취업률 기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3위를 기록함

– 지역정주 취업률은 서울(37.0%)과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제주(28.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광주는 경남(23.8%), 부산(23.0%)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임

| 그림 5-9 | 시도별 지역정주 취업률(2021)



주: 지역 대졸자 중 해당 지역 소재 기업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비율로 산출된 '지역정주 취업률1' 자료를 활용했으며, 데이터 특성상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제외됨
출처: 최정윤, 문보은, 백승주, 손윤희, 조옥경, 장수정(2023)

2) 지역 산업여건 분석[3)]

(1) 주요 산업 동향

❍ 광주광역시 주력산업에 초점을 맞춰 지역 산업 여건을 분석함

❍ 광주광역시 주력산업은 '모빌리티 의장·전장 부품산업', '스마트홈 부품산업', '생체의료 소재·부품산업'으로, 2023년 개편됨

– 모빌리티 의장·전장 부품산업 사업체는 1,429개, 종사자는 22,440명으로 광주광역시 전체의 각각 12.35%, 25.70%를 차지함

3) 2023년도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지역산업진흥계획' 자료를 참고로 정리함

- 스마트홈 부품산업 사업체는 878개, 종사자는 12,979명으로 광주광역시 전체의 각각 7.59%, 14.86%를 차지함
- 생체의료 소재·부품산업 사업체는 583개, 종사자는 4,449명으로 광주광역시 전체의 각각 5.04%, 5.09%를 차지함

(2) 관련 지역산업 분석

□ 모빌리티 의장·전장 부품 산업

❍ 운송기기의 친환경·경량화에 대응하는 바디 제작, 편의를 위한 전기전자기기가 결합된 바디 제작 등 운송기기의 차체(바디, 전장)를 생산하는 산업을 뜻함
- 완성차, 메인 바디(차체, 골격, 프레임 등), 바디 외장(금속 성형품, 도어, 범퍼, 루프, 전조등, 금형 등), 바디 내장(플라스틱 성형품, 주행 보조, 배전, 차량통신, 제어기 등)이 핵심 품목을 이룸
- 해당 산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지역 내 매출액은 17.02조 원으로, 역내 제조업 매출액의 43.8%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여겨짐(2021년)

❍ 지역 내에 완성차 공장 두 곳(기아자동차, 광주글로벌모터스)이 있고, 이들의 1차 협력사를 중심으로 거래관계가 구성됨
-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해 미래차 핵심부품 생산 거점 확보와 중국의 배터리 및 전기차 산업 성장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임
- 핵심기술을 강화해 전장 기술을 상품화하고, 완성차와의 연계, 국책사업 간 연계·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 경로 확보가 필요함

| 표 5-3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모빌리티 의장·전장 부품 산업 범위

세세업종코드	세세업종코드명	분야
29223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와 관련한 자동차, 광융합, ICT, 금형, 배터리, 반도체 등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출처: 2023년도 광주광역시 지역산업진흥계획(2023.2.)

□ 스마트홈 부품산업 산업

❍ 디지털 기능(정보표시, 기능제어, 통신 기능)이 탑재된 가정 생활기기와 가정 생활기기의 디지털 기능을 근접 또는 근거리(핸드폰 · 단말 등 이용)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할 수 있는 부품 및 기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뜻함

- 스마트홈은 가전 등 생활기기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합해 사용자의 편의가 증진된 주거 환경을 의미함(생활기기에 디지털 기능 추가)
- 중소형 생활가전(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홈 IoT 부품(블루투스, 와이파이, 소프트웨어 등), 가전 내장재(조명, 모터, 전동기, 플라스틱 성형품 등), 가전 외장재(금속 성형품, 인쇄, 금형 등)이 핵심 품목을 구성함
- 해당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지역 제조업의 미래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지역 내 매출액은 9.55조 원으로 역내 제조업 매출액의 24.6%를 차지함(2021년)

❍ 삼성전자(광주공장), 오텍캐리어, 위니아 등 대기업 협력사를 중심으로 거래 관계가 구성돼 있음

- 최근에는 중소기업 자체 브랜드 완제품 생산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중소형 생활가전, 홈 IoT 부품, 가전 내장재, 가전 외장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업종 다각화, 연구 및 혁신을 통한 품질 향상, 기술 강화 등이 필요함

| 표 5-4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스마트홈 부품산업 범위

세세업종코드	세세업종코드명	분야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가전과 관련한 가전, 통신, 광융합, ICT, 금형, SW 등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출처: 2023년도 광주광역시 지역산업진흥계획(2023.2.)

□ 생체의료 소재·부품산업

❍ 손상된 인체를 대체하거나 저하된 인체 기능을 재생·복원하기 위해 생체에 접촉해 사용되는 소재·부품 및 기기를 생산하는 산업

- 중소형 생체용 의료 소재(임플란트, 인공치아, 골절용 소재, 흡수성 소재 등), 대체복원용 의료 소재(안경, 콘택트렌즈, 고분자 소재 등), 측정 및 시술 기기(초음파 진단기기, MRI 등), 보조 의료기기(재활보조기, 이동지원기기, 고령친화기기 등)이 핵심 품목을 이룸
- 다른 두 주축산업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보임
  - 지역 내 매출액은 0.63조 원으로 역내 제조업 매출액의 1.63%를 차지함(2021년)

❍ 의료산업 특성상 치료소재·부품, 의료기기, 기타 제조용품 등 개별 품목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음
- 콘택트렌즈(지오메디컬, 뉴바이오 등), 정형외과 의료기기(티디엠 등), 치과 의료기기 및 재료(케이제이메디텍, 쿠보텍 등) 등 생산 기업들이 의료산업 내 주요 비중을 차지함
- 역내 기업의 상생협력 강화 및 연계 지원을 통해 혁신성이 낮은 생체의료 소재·부품 기업의 기술 혁신 촉진이 필요함

| 표 5-5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생체의료 소재·부품산업 범위

세세업종코드	세세업종코드명	분야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생체의료와 관련한 생체소재, 의료기기, 광융합, 금형 등
22199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출처: 2023년도 광주광역시 지역산업진흥계획(2023.2.)

3) 교육 및 연구 관련 인프라 분석

(1) 교육기관

□ 유초중등 교육기관 현황

❍ 2024년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597개 학교에 18만 3,552명의 학생이 재학 중
- 교원은 1만 6,024명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1.5명이며, 이는 전국 평균(11.1명)과 대동소이한 수준임

❍ 광주광역시 주력산업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공업고등학교는 관내 7곳이 있으며, 재학생 수는 3,729명임

- 이중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는 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해당 분야 기술 장인을 육성하는 마이스터고(특수목적고)로 지정돼 있음
- 나머지 6개 고교는 특정 분야 인재,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성화고등학교임

| 표 5-6 | 광주광역시 유·초·중등학교 현황(2024)

(단위: 개, 명)

학제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합계		597	183,552	16,024	11.5
유치원		273	18,924	1,928	9.8
초등학교		155	78,107	5,978	13.1
중학교		91	42,440	3,603	11.8
고등학교	일반고	47	32,093	2,761	11.6
	특수목적고	5	1,314	224	5.9
	특성화고	11	5,381	651	8.3
	자율고	5	3,401	314	10.8
특수학교		6	1,304	503	2.6
고등기술학교		1	17	-	-
각종학교		3	571	62	9.2

주: 2024년 4월 1일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 고등교육기관 현황

❍ 2024년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62개 고등교육기관에 19만 8,711명의 학생이 재학 중

- 지역 내 유일한 국립 종합대학인 전남대를 비롯해 조선대, 호남대 등 10개 대학에 73,657명, 전문대학 6곳에 17,032명이 재학 중이며, 교육대학(광주교육대학교)과 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이 각각 한 곳씩 있음

| 표 5-7 | 광주광역시 고등교육기관 현황(2024)

(단위: 개, 명)

학제	학교 수	재적학생 수	전임교원 수	전임교원 1인당 재적학생 수
합계	62	198,711	6,802	29.2
대학	10	73,657	2,805	26.3
교육대학	1	1,319	73	18.1
전문대학	6	17,032	375	45.4
기능대학	1	1,227	53	23.2
부설대학원	44	105,476	3,496	30.2

주: 2024년 4월 1일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 주력산업과 관련해 관내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모빌리티 의장·전장 부품 산업 분야 고등교육기관
- 광주과학기술원 :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딥러닝 연구개발 및 인프라 데이터 셋 구축
- 전남대학교 : e-모빌리티 산업 및 AI 융합대학 등 인력 양성
- 조선대학교 : 블록체인 기술·빅데이터 활용 에너지 전력 거래 기술개발
- 호남대학교 :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사업 인력 양성, 미래 자동차 예비 인재 양성(미래자동차 스쿨 개최 등)

❍ 스마트홈 부품산업 산업 분야 고등교육기관
- 광주과학기술원 : 인공지능(AI) 딥러닝 연구개발, 차세대에너지 연구개발
- 전남대학교 : 전기/전자공학 분야 인력 양성, AI 융합대학 등 인력 양성
- 조선대학교 : SW 중심 인력 양성, 지능형 IoT 분야 인력 양성
- 호남대학교 : AI 융합대학, 자율주행 전기차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 생체의료 소재·부품산업
- 전남대학교 : 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 구축, 치과생체흡수성소재센터 구축, 생체의료 시험연구
- 조선대학교 : 치과용 정밀장비 RIC 구축, 안과광학의료기기센터 구축
- 남부대학교 : 광의료산업 인력 양성
- 광주보건대학교 : 콘텍트렌즈 센터 구축 및 운영

(2) 연구기관

❍ 국가연구개발 사업·과제 수행 현황을 파악해 광주광역시의 연구 수행기관 현황과 연구개발 성과를 분석함

❍ 광주광역시는 대학 부설연구기관과 대학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창출함 ([표 5-8] 참고)

- 2010~2023년 기간 동안 대학 부설연구기관과 대학이 수행한 과제와 수주한 연구비는 각각 11,512건, 약 3조 383억 원으로 각각 전체의 68.9%, 57.6%에 달함
- 중소기업도 논문 건수는 적지만, 수행한 과제(4,024건, 전체의 약 24.1%)와 수주한 연구비(약 1조 2,320억 원, 약 23.4%), 특허(4,221건, 약 21.3%) 취득에서 활발한 성과를 보임
- 세 유형의 기관에서 과제의 92.9%, 연구비의 80.9%, 논문의 95.7%, 특허의 86.9%를 차지함

| 표 5-8 | 광주광역시 기관유형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성과(2010~2023)

(단위: 건, 백만 원)

기관유형	과제 수	연구비	논문	특허
대기업	23	23,446	44	102
대학	4,548	1,661,644	17,253	5,890
대학-부설	6,964	1,376,626	20,703	7,129
중견기업	100	76,825	71	179
중소기업	4,024	1,231,958	870	4,221
출연연-부설	351	200,675	683	612
기타	709	704,641	948	1,711

주: 지역은 광주, 업종은 제조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자료 추출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웹사이트(https://www.ntis.go.kr/orginfo/index.jsp)

❍ 2010-2023년 사이 연구개발업을 제외하면, 광주광역시의 주력산업과 관련한 업종에서 높은 성과를 창출함([표 5-9] 참고)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이 각각 778건, 775건의 과제를 수행함
- 반면 수주한 연구비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4,01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이 2천억 원 이상의 연구비를 수주함

– 논문과 특허에서도 주력산업 관련 업종에서 활발한 성과를 보임

| 표 5-9 | 광주광역시 업종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성과(2010~2023)

(단위: 건, 백만 원)

업종	과제 수	연구비	논문	특허
1차 금속 제조업	56	14,979	20	28
가구 제조업	7	1,148	0	13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4	812	0	7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07	23,960	36	7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15	62,465	65	213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86	13,753	6	3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13	197,309	102	57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6	1,204	0	0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4	30,362	1	133
기타 제품 제조업	81	12,947	4	3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7	6,460	5	5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1	5,072	2	2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	256	0	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21	4,817	0	16
식료품 제조업	94	15,441	49	101
연구개발업	12,632	3,653,219	39,609	15,295
음료 제조업	3	199	15	4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775	240,514	184	83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24	40,175	15	102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	75	0	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1	2,160	8	1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43	401,058	68	482
전기장비 제조업	584	245,260	187	945
전문 서비스업	75	18,476	10	44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778	243,316	146	69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0	2,143	10	16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47	38,235	30	10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9	9,417	10	1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323	95,369	67	214

주: 지역은 광주, 업종은 제조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자료 추출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웹사이트(https://www.ntis.go.kr/orginfo/index.jsp)

2. 지자체 정책

1) 지역발전정책

(1) 정책의 비전과 목표

□ 신산업과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정책 추진

❍ '내 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5대 시정목표 제시
- 5대 시정목표는 '내일을 주도하는 신경제도시',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로, 주력산업 관련 지역발전정책은 '내일을 주도하는 신경제도시'와 관련됨
- '내일을 주도하는 신경제도시'는 인공지능, 미래모빌리티, 에너지,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도시 건설을 목표로 함

❍ 2024년 주요업무계획의 하나로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함
- AI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산업 전환 가속화
  * 지능형 가전, 스마트 금형, 광융합 등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
-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 「Made in 광주, 창업」 전략으로 창업성공도시 도약
- AI, 미래차 등 대표산업 중심으로 앵커기업과 첨단기업 유치 추진

❍ 광주광역시의 주력산업 담당 부서는 인공지능산업실로, 해당 실은 미래산업총괄관과 5개 과(투자산단과, AI반도체과, 미래차산업과, 에너지산업과, 로봇가전의료산업과)로 구성됨

□ 산업 육성 관련 지역발전정책 사업 현황

❍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전략산업 및 미래산업 관련 정책은 16개 세부사업과 연관되며, 소요예산은 5년간(2022-2026) 약 8조 3,270억 원으로 산출([표 5-10] 참고)
- 재원별 소요 예산은 국비(48.9%)가 가장 많고, 이어 기타(29.6%), 시비(15.5%), 구비(6.0%) 순으로 나타남

-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5조 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추진(2조 1,370억 원)이 전체의 85.7%를 차지함

| 표 5-10 | 광주광역시 민선 8기 주력산업 관련 공약사업 재원별 소요예산(2022~2026년)

(단위: 백만 원, (%))

공약사업	계	국비	시비	구비	기 타
총 사업비	**8,326,966** (100.0)	**4,072,567** (48.9)	**1,290,361** (15.5)	**500,000** (6.0)	**2,464,038** (29.6)
미래모빌리티 특화산단 조성 추진	**34,100** (100.0)	**12,300** (36.1)	**19,400** (56.9)	- -	2,400 (7.0)
미래차 인프라 조성 및 연관산업 첨단화	**315,000** (100.0)	**167,700** (53.2)	**100,700** (32.0)	- -	46,600 (14.8)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5,000,000** (100.0)	**1,700,000** (34.0)	**500,000** (10.0)	**500,000** (10.0)	2,300,000 (46.0)
AI+X 지역산업 기술개발 지원	**2,000** (100.0)	- -	**2,000** (100.0)	- -	- -
시민·지역기업 중심 AI 바우처 지원	**3,200** (100.0)	- -	**3,200** (100.0)	- -	- -
AI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지원체계 고도화	**1,320** (100.0)	- -	**1,320** (100.0)	- -	- -
AI 집적단지 고도화 추진	**362,000** (100.0)	**252,000** (69.6)	**74,000** (20.4)	- -	36,000 (9.9)
배터리 기반 혁신인프라 조성	**13,689** (100.0)	**5,000** (36.5)	**7,500** (54.8)	- -	1,189 (8.7)
차세대 배전망 기술개발 및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구축	**98,467** (100.0)	**81,507** (82.8)	**16,300** (16.6)	- -	660 (0.7)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추진	**2,137,000** (100.0)	**1,615,500** (75.6)	**472,500** (22.1)	- -	49,000 (2.3)
의료 AI서비스 및 산업 생태계 구축	**42,800** (100.0)	**29,800** (69.6)	**8,600** (20.1)	- -	4,400 (10.3)
디지털기술기반 지역의료소재부품산업 고도화 지원 추진	**46,128** (100.0)	**29,563** (64.1)	**13,700** (29.7)	- -	2,865 (6.2)
뿌리산업 첨단화 및 재제조 활성화 지원 추진	**25,000** (100.0)	**17,500** (70.0)	**5,000** (20.0)	- -	2,500 (10.0)
지능형가전 및 친환경 공기산업 고도화 지원 추진	**177,086** (100.0)	**110,000** (62.1)	**56,050** (31.7)	- -	11,036 (6.2)
ICT융합 신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의 디지털 융합	**68,076** (100.0)	**50,657** (74.4)	**10,031** (14.7)	- -	7,388 (10.9)
지역산업 현장맞춤 산업인력 플랫폼 구축	**1,100** (100.0)	**1,040** (94.5)	60 (5.5)	- -	- -

주: 2024년 1월 31일 기준 추진 중인 공약사업
출처: 광주광역시(2024.3), 〈2024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재구성

(2) 주요 관련 사업

□ 사업 개요

❍ 민선 8기 공약사업,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산업·경제)[4]',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서 주력산업 관련 지역발전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검토

- 지자체가 수행하는 정책 사업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재원은 지방비(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

□ 광주형 일자리 사업

❍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 하기 좋은 여건 마련하는 사회 통합형·연대형 일자리 모델임

-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상생적인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보육·교통 등의 공동의 복지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짐
-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4가지 실천지침을 기준으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기업을 광주형 일자리 기업으로 인증하고, 지원함

❍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은 전국 최초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선정(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6월)

- 광주광역시, 현대차㈜, 지역기업이 공동출자해 ㈜광주글로벌모터스 설립(2019년 9월)
- 연간 약 1천 명의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해 연간 10만 대의 경형 SUV를 생산
-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3,030억 원),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450억 원), 친환경자동차 부품 인증센터 구축(360억 원) 등 10개 사업에 총 5,035억 원 투입

  * 국비 2,944억 원, 지방비 2,022억 원, 민자 219억 원

4) www.gwangju.go.kr/economy (최종 접속일 : 2024년 12월 13일)

□ 광주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 인공지능과 광주지역 주력산업을 융합해 지역 경제와 산업 혁신을 위해 데이터 중심의 최첨단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원(데이터·기술·인력)과 인프라(데이터 센터, 실증기반시설 등)를 한곳에 집약한 AI 생태계 조성
-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등 지역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AI 데이터 기반 미래 신산업 육성과 국내 산업·경제 및 일자리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 마련

❍ 인프라 조성, 연구개발, 창업지원, 인재양성 지원 사업 추진
- AI 특화 데이터센터(GPU 연산량 88.5페타플롭스), AI 융합 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기반(77종) 등 인프라 구축
- 자동차·에너지·헬스 케어와 AI를 융합한 R&D 과제 추진
- AI 제품·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AI 스타트업 육성
- 지역 대학 및 재직자 AI 인재양성 지원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첨단3지구(광주광역시 연구개발특구)에 국비와 지방비, 민자 총 4,116억 원을 투입해 조성
- 국비 2,798억 원, 지방비 910억 원, 민자 408억 원
  * 비(非) R&D 3,431억 원, R&D 508억 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행), 운영비 등 177억 원

□ 친환경공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 공기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핵심부품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집적화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신산업 원천기술 개발, 시장 선도 제품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첨단 ICT 융합 기술 개발(AI·IoT·빅데이터·모빌리티)
- 공기질 개선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고정밀 측정·분석 장비, 산업 기반 클러스터 구축

❍ 광주광역시 주력산업인 스마트홈 부품산업과 연계

- 공기청정기+IoT 융합 제품 개발
- 다양한 IoT 기기의 정보 시각화 지원, 정보 해석 및 활용 등을 통해 구축된 DB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지원
- 스마트 에어가전 R&D 허브 구축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정부-지자체 공동 공기산업클러스터 조성, 대형 국비를 투입해 산업육성 기반을 마련 수출산업으로 육성
-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공기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
- 2020-2027년 국비 4,332억 원, 시비 1,250억 원, 민자 1,608억 원 등 7,190억 원 투입

2) 교육정책

(1) 정책의 비전과 목표

□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해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교육 정책 추진

❍ 광주광역시 민선 8기의 교육정책은 5대 시정 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에서 다뤄지고 있음
-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는 연령·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교육체계 구축, 일자리·취미와 연계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의미함

❍ 〈2024년 주요업무계획〉의 정책 방향 중 하나로 '교육-일자리-정주' 체계 구축으로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지역 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제시
- 미래 고급 인재 양성
  * 의·치·약대, AI·반도체학과 등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 확대 추진
  * 미래 차, 로봇 신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첨단산업 융합 학사구조 및 교육과정 개편
- 지역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 기업, 학생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 광주형 마이스터고 신설, 특성과 기반 창업대학 조성

* AI 사관학교, AI 전문가, SW와 미래 차 소부장 전문인력 양성

- 지역 일자리-취업 연계 협력 강화
  * 면접 대비 교과목 개설, 취업 역량 특화 프로그램 운영(대학)

❍ 광주광역시의 교육 정책 담당 부서는 교육청년국으로, 해당 국은 대학인재정책과, 청년정책과, 교육지원정책과 3개 과로 구성됨

□ 교육정책 사업 현황 및 재정계획

❍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 분야 사업은 5개로 판단되며, 총 소요예산은 104.3억 원임([표 5-11] 참고)

- 재원별로 시비와 구비, 교육청 예산이 각각 68.6%, 13.3%, 18.1%를 차지함
- 학교 밖 청소년 교육활동비 지급 사업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주관하며, 다른 사업은 모두 교육정책관에서 주관함

| 표 5-11 | 광주광역시 민선 8기 교육 분야 공약사업 재원별 투자계획 (2022~2026년)

(단위: 백만 원, %)

기관유형	계	시비	기타
총 사업비	10,433.8 (100.0)	7,158.8 (68.6)	3,275 (31.4)
광주형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	1,640 (100.0)	1,640 (100.0)	-
학교 밖 청소년 교육활동비 지급	1,618.8 (100.0)	1,618.8 (100.0)	-
평생교육 체계 개선	3,100 (100.0)	3,100 (100.0)	-
교육통합지원센터 구축	4,075 (100.0)	800 (19.6)	구비 1,385(34.0) 교육청 1,890(46.4)
지역인재 양성 '고등교육위원회' 설치	-	-	비예산사업

주: 2024년 1월 31일 기준 추진 중인 공약사업
출처: 광주광역시(2024.3), 〈2024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재구성

(2) 주요 관련 사업

□ 사업 개요

❍ 민선 8기 공약사업,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여성·가족·교육·청년)[5]',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서 교육 분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검토

❍ 위 방법으로 추출한 사업 가운데 광주광역시의 특수 시책, 핵심사업 등 대표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

- 지자체가 수행하는 교육 분야의 정책 사업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재원은 지방비(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

□ 교육통합지원센터 구축

❍ 공약과제 '광주다운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통합 지원체계 구축'의 세부 사업으로, 학교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통합·발전시켜 광주만의 교육통합 모델 구축

❍ 시, 구, 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추진체계 구성

- 시는 시·구·교육청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센터 총괄 관리·운영을 담당
- 교육청은 진로체험지원센터 기능 강화
- 자치구는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 시, 교육청, 마을공동체, 지역민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교-마을 연계 프로그램 등 소통과 협력을 강화 및 지역교육 활성화

❍ 참여 기관별 업무와 기능 분담

- 시·교육청 :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지자체·교육청 협력체계 구축 및 소통, 자치구 교육통합지원센터 지원 등 운영 총괄 관리
- 자치구 : 지역교육자원 발굴 및 교육 네트워크 구축, 마을교육공동체 연계, 진로체험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육통합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

5) www.gwangju.go.kr/mogef (최종 접속일 : 2024년 12월 13일)

□ 지방대학 위기 극복 및 인재육성을 위한 대학협력사업

❍ LINC 3.0 사업 참여 대학 지원
- 교육부의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에 참여하는 지역 5개 대학(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광주대, 조선이공대)과 지·산·학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협력사업 추진
- 시비 47억 원 지원

❍ 지역대학 살리기 홍보
- 지역대학 가기 캠페인, 지역대학 홍보, 지역출신인재 온라인 홍보 등에 1억 원 지원(2023년)

❍ 대학(원)생 등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 광주광역시 대학생 등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에 근거해 조건에 부합하는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휴학·졸업생(5년 이내)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
- 교육비 부담을 낮춰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

❍ 시(지방자치)와 교육청(교육자치) 간 연계와 협력으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해 미래 인재를 육성

❍ 보편적 교육지원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시행해 교육 기본권 실현
-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소프트웨어 교육지원 등
- 교육재정교부금 지원

❍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 무상급식 및 급식의 질 향상 지원
- 학교 무상급식 식품·운영비 지원(유·초·중·고·특수학교 전체)
- 친환경 농산물 및 Non-GMO 식품 학교 급식 지원

□ **(재)빛고을장학재단 운영**

○ 인재 육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의 미래 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발굴하여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 제공
- 1981년 설립된 무등장학회를 확대, 개편해 2002년 설립
- 학업 장려 장학생, 예체능 특기 장학생, 생계 곤란 장학생 등에게 장학금 지급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 대상 인원 연 500여 명
- 기금 조성액은 104.9억 원이며, 사업비는 연간 약 5억 원
  * 대학생 150만 원, 고등학교 밖 청소년 50만 원, 중학생 35만 원

3) 관련 조례

(1) 지역발전정책

□ **광주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속적인 산업 발전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3년 11월 제정

○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광주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계획을 수립, 시행해야하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기하고 있음
-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대학·기업·연구소의 집적방안, 교육, 연구·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방안,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의 수행방안 등

○ 사업 수행 주체가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때 지원 가능한 범위를 규정함
- 산학융합지구 기반 조성 및 교육, 연구·개발 활성화, 산학융합 인적자원개발 필요성 분석, 교육·훈련 및 평가
- 전략산업과 관련해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인공지능(AI) 융복합 모빌리티 등 산학협력 사업 기획 및 관리, 자동차 산업 협력체계 구축 및 창업·보육, 시험·인증 사업 등 지역산업 기반 고도화,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광주형일

자리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전문 연구·교육기관 유치 등

❍ 그 밖에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업무 위탁,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와 감독, 국가기관, 기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공로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광주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지역 경제를 선도할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3년 11월 제정

❍ 시장은 미래산업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산업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이 갖춰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 그 밖에 시의 발전전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 등

❍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융자·보조·출연 등 재정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광주광역시에서 고려하는 지역산업 분야를 확인할 수 있음
- 지역산업, 산학연 협력사업 육성 및 지원사업
- 디자인산업, 방위산업, ICT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의료산업
-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그 밖에 기업에 대한 지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성과관리, 미래산업전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 표 5-12 | 광주광역시 지역발전정책 관련 조례

구분	조례	내용
지역 산업 관련	광주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한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산업발전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
	광주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 내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한 조례

출처: 연구자 작성

(2) 교육정책

□ 광주광역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활성화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2024년 5월 제정

-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학생,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학생 등에 대해 적용
- 광주광역시장은 교육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교육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은 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할 것을 규정함

❍ 광주광역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교육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명기함

-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사업
-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양성사업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직업교육 활성화,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 그 밖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광주광역시장은 지역 주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자치구, 학교, 민간 등과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함
- 교육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육협력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음

□ 광주광역시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지원 조례

❍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해,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계발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2017년 11월 제정
- "진로체험"은「진로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라,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해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뜻함

❍ 광주광역시장은 청소년의 진로체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진로체험 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기함

❍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광주광역시 교육감과 상호 협력하고, 필요 경비를 보조하거나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가능

❍ 진로체험 활동 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는 교육청 및 자치구,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

□ 광주광역시 지역 인적자원 개발 조례

❍ 지역 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수립·조정·총괄·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4년 4월 제정
- "지역 인적자원 개발"은 시가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과 함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규범과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함
- "인적자원 개발 사업"은 시가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뜻함

❍ 지역 인적자원 개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구성과 내용, 위원(장)의 역할 등을 규정
- 시장과 위촉 위원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의 부위원장을 담당
- 위원은 교육지원·행정지원·경제산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임명
- 위촉위원은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대학교 추천 인물 및 인적자원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

| 표 5-13 | 광주광역시 교육정책 관련 조례

구분	조례	내용
지역 인재 양성	광주광역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지역 내 유치원, 초중등학교, 대안교육기관과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광주광역시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지원 조례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체험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조례
	광주광역시 지역 인적자원 개발 조례	지역 인적자원 개발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조례로, 사회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출처: 연구자 작성

제3절 관련 정책동향 분석

1. 교육정책

1) 교육부 교육서비스 관련정책

□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산업계 수요에 연계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뜻함

- 교육과정 편성·운영 상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해당 분야의 산업별 협의체, 기업체 협약 통해 산업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해, 졸업 후 우선 취업 및 기술 명장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고교 직업교육 선도모델임
- 2020년 이후 취업률은 70~77.5%로 전체 직업계고 평균보다 약 20%p 정도 높은 수준을 보임

○ 학교·법인이 시도 교육교육청에 지정을 신청하면 교육부 장관(국립) 또는 교육감(공·사립)이 지정 고시

- 9개 분야 59개교 지정, 54개교 운영 중(2024년 4월 기준)
  * 2023년 지정 3개교, 2024년 지정 2개교는 각각 2025년, 2026년부터 운영
- 광주광역시에는 광주자동차설비공업고(2010년 개교), 광주소프웨어마이스터고(2017년 개교) 두 곳이 운영되고 있음

| 표 5-14 | 산업분야별 마이스터고 운영 현황(2024.4)

구분	IT·SW	농수산·해양	식품·바이오	기계·자동차	전기·전자·메카트로닉스	에너지·화학	항공·조선·철강	설비·물류	합계
학교 수	6	8	4	8	9	6	7	6	54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4년 4월 18일), '반도체·디지털 등 첨단산업 분야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계획 발표'

❍ 사회변화 및 산업계 수요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성과관리를 통해 마이스터고의 질적 관리를 강화
- AI 기반 교육과정을 고도화하고, 산업 맞춤 교육·취업 지원 등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
- 학습부터 개인 맞춤 경력관리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 직업계고 교육-취업 연계 우수 모델 확산 지원
- 운영 성과 평가(5년 주기)를 통해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감축 및 지정 취소 등을 실시하여 마이스터고의 질 관리 강화

□ 협약형 특성화고

❍ 지역 완결형(교육-취업-정주) 인재 양성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는 특성화고등학교로, 2024년 5월 10개교 선정
- 지역 및 국가에 필요한 특수·희소한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위한 소수 정예 학교로, 2025년부터 5년간 최대 45억 원 지원
- 지자체-교육청-지역(산업)- 특성화고 등이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 체결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교육 시행

❍ 광주에서는 광주공고가 미래형 운송기기 특성화를 전략으로 시와 교육청, 광주교통공사, 도시공사, 환경공단, 글로벌모터스 등 지역 8개 공공기관, 30개 기업, 7개 지역대학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모에 참여했으나 선발되지 않았음
- 교육부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2027년까지 총 35개교로 확대 예정

□ 직업계고 역량 강화

❍ 신산업·신기술 교육 확산을 위해 첨단분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 내용, 시설, 진로 지도 등 산업계 컨설팅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학과 재구조화를 유도
- 이를테면, 전자과를 반도체시스템과로 재구조화하고, 빅데이터, 시스템 반도체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개발(관계부처 합동, 2023)
- 기존 전공과 신산업, 신기술 전공을 융합하는 마이크로 교육과정 도입

❍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갖춘 직업계고 교원 채용을 위한 방안
- 실무 능력을 갖춘 교원을 늘리기 위해, 관련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임용을 우대하고, 융합전공, 현장직무 연수 확대, 민간 산업체 단기 연수 등의 교원 재교육 기회 제공
- 실력 있는 마이스터고 졸업 재직자 등이 산학겸임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임용 기준을 '학력'에서 '경력'으로 완화하고, 산업체 전문가가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과 참여자에 인센티브 부여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독일·스위스식 도제교육을 적용하여 직업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해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 도제식 교육은 기업의 직업훈련과 학교의 이론교육을 결합한 형태로,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육성하는 현장 중심 직업교육모델
- 학교와 기업이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한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 운영
- 학교(이론교육, 기초실습)와 기업(현장교육, 심화실습)을 오가며 재학 중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해 실무 역량 증진해 졸업 후 참여 기업에 취업 가능

❍ 2024년 1월 현재 전국에 78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광주광역시 직업계고 4개교가 참여
- 참여학교는 광주공고, 광주전자공고, 금파공고, 숭의과학기술고로, 기계, 자동차, 디자인, 전기전자, 생명화공, 한식 조리 등 특화 과정이 학교별로 상이함
- 광주광역시는 참여학교에서 교육 훈련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비 및 안전장구 구입,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함

2) 교육부 인프라 확충 및 개선정책

□ 공간재구조화 사업

○ 학령인구 급감, 학교 노후시설 증가 및 지역에서의 학교 역할 강화 등을 종합 고려해 시도교육청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임
-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 발표하며, 기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공간재구조화사업으로 전환함(2023년 11월)
-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학교를 비전으로, 학생 중심의 디지털 기반 공간재구조화를 목표로 함
- 2023년 말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서림초, 화정중, 광주공고 등 12개 초·중·고교가 대상학교로 지정됨

○ 중등 교육과정을 뒷받침하는 공간재구조화
- 자유학기제 및 고교학점제 등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규모, 유연한 공간 활용 및 다목적 학습공간 조성
- 학교별 중점·특색 교육과정 운영에 맞춰 중점(특화) 공간과 연계 공간 조성

○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학교 내 디지털·AI 인프라 확충
-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확대,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 맞춤 교육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네트워크 고도화, 충전 환경, 지원 공간 등 인프라를 개선
- 스쿨넷 증속 등 학교 네트워크 고도화 추진

3) 기타 교육부 관련지원정책

□ 직업교육 혁신지구

○ 지역 거버넌스가 주도하는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를 육성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선순환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 '지자체-교육청 간 직업교육 플랫폼'을 통해 직업계고-지역기업(선 취업)-대학(후 학습)에 참여하는 현장 전문 고졸 지역인재의 성장경로를 구축하도록 지원
- 광역 혹은 기초 단위로 선정하며, 3년간 선정된 광역지자체에 10억 원, 기초

지자체에 5억 원을 지원하고, 재평가 후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음
-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3개 지자체(광역 8개, 기초 5개)가 선정됐으며, 광주광역시는 2022년 선정(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 직업교육 혁신지구 선정 지역은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지역 전략·특화산업 분야의 교육과정–취업–후학습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함

❍ 직업교육 혁신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함
-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은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되, 지자체는 연계 허브 역할을 수행하면서 예산·취업 지원, 홍보를 맡고, 교육(지원)청은 직업계고 지원, 제도 및 인력 지원, 매뉴얼 제작을 담당
- 지역전략기업은 현장실습과 현장 교육을 지원하고, 고졸 채용, 후학습 분위기를 조성
- 직업계고는 교육과정을 개편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기업을 발굴해 취업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
- 지역대학은 재직자 전담 과정을 제공하고, 심화 교육과 기업 지원을 담당
- 유관기관은 특화기업을 발굴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졸 채용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

❍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로, 2022년 미래형 운송기기, 에너지산업 분야 특화산업 지역(광역)으로 선정됨
-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에 참여하는 지역 유관기관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기업 채용을 지원하고, 참여 학생을 1년 이상 고용 유지하는 기업에는 기업 지원금 제공
-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참여 학생 지역기업 취업 시 지역정주금을 지원하고, 지역기업 취업과 대학 진학 병행 시 일·학습병행지원금 지원
- 지역대학의 방학 기간에 교육과정을 대학 상호 학점 인정(최대 8학점)

□ 더욱 실질적인 산학협력 추진

❍ 산학협력 제도 마련과 프로그램 다변화
-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학-기업 협력에만 적용되던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직업계고까지 확대
- 산업체, 지역 연계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밖 교육 운영 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조치를 강화
- 도제교육 대상을 현재 2-3학년에서 1학년(도제준비과정 신설) 확대하고, 우량기업 매칭 등 고교단계 일학습병행(도제학교) 활성화 지원

❍ 학교 기업 및 학교 내 기업 유치 확대
- 학교 기업은 현장실습 교육과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해 물품을 직접 제조·가공·수선·판매하는 부서를 뜻함
- 산업인력의 교원 활용, 현장실습 등의 산학협력과 학교 내 취·창업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기업 자체 운영, 학교 내 기업 입주 등의 지원을 추진

❍ 현장실습 내실화 추진
- 현장실습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실습 대상 기업의 안전 기준을 강화
- 현장을 내실 있게 점검하기 위해 학교 전담 공인 노무사를 확충하고, AI를 활용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 및 진로 설계 지원

❍ 고졸 맞춤형 취업 지원 인프라 강화
- 고졸 채용 및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고졸자를 정규직으로 채용·유지하는 기업에 재정 지원
- 교육청별 취업지원센터, 지역 고용센터 등과 연계해 지역 맞춤형 기업을 발굴

❍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선취업-후진학' 프로그램을 확대
- 고숙련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직업계고-대학-기업 연계 과정, 마이스터대학 등 기술석사과정 연계 등의 모델 발굴

- 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기능인 국비유학(연수) 제도 개선
- 성인학습자 전담 학위과정 운영 확산 및 광역지자체-대학 컨소시엄 모델 운영으로 지역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 활성화
- 온라인 학위과정을 개선해 일-학습 병행 장애요소 완화

❍ 일자리·채용 정보 제공, 면접기법 교육, 상담 및 멘토링, 정부 지원 기관(고용센터 등)과 연계한 교육훈련 제공으로 직업계고 졸업자 중 진로 미결정자의 취업 준비를 지원

- 기업의 채용 방식과 시기를 고려해 직업계고 졸업자 중 진로 미결정자 대상 취업 준비 지원
-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추진

2. 지역발전정책

1) 국가균형발전정책

□ K-Health 국민의료 AI 서비스 및 산업 생태계 구축

❍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기업 육성 및 AI 의료 융합시장 창출,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사업임

- 의료분야 디지털 혁신기술을 보급, 확산 및 의료데이터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내 확산을 지원함
- 지역 AI 기업의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축적된 지역 의료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을 지원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주관 지자체 간 협업을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 혁신 기술을 지역에 적용, 확산해 AI 의료 선도도시를 조성하고, 성과를 전국에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클라우드·인공지능 기반 의료서비스를 확산하고,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에 데이터·AI 융합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

- 단일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AI 융합 의료 서비스 및 데이터 활용 생태계의 성공적 모델을 구축한 뒤,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

❍ 광주광역시는 해당 사업의 착수도시로 선정됨(2022년)
- 사업지역이 확대되면서 2023년 대구와 대전이 추가로 선정됨
- 사업의 목적에 따라 광주지역 의료데이터의 연계·활용 플랫폼 기반 데이터 활용생태계를 조성하고, 의료 AI 솔루션 및 AI 앰뷸런스 보급 확대, 라이프로그 기반 건강관리소 구축·운영 등 AI 솔루션 지역 확산 사업을 추진
-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국비 298억 원, 시비 86억 원, 민자 44억 원 등 총 42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임

□ 도시재생 혁신지구(국토교통부)

❍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해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사업으로, 2019년 도입돼 2024년 8월까지 전국에 14곳이 선정됨
- 총 사업비의 25% 이내에서 5년간 국비가 최대 250억 원 투입되고,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지원 등 기금 지원, 통합심의 등 행정적 지원과 함께 건축규제 완화 등이 가능함

❍ 송암산단(광주 남구)은 2023년 12월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됐으며, 산단의 기존 자동차 정비 자원에 미래차 인프라를 추가해 '자동차 애프터마켓' 산업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임
- 애프터마켓은 신차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를 통칭하는 것으로, 산단 내 유휴부지에 2028년까지 국비 250억 원을 포함해 총 1,560억 원을 투입해 문화·디지털 모빌리티 애프터마켓 기반을 구축함
  * 전장 정비 인력 양성과 애프터마켓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한 모빌리티 복합허브센터 건설
  * 광주첨단영상제작센터(CGI),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와 연계한 미래 모빌리티 체험 실감콘텐츠 제작 등을 위한 첨단 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조성
  * 일자리 연계 주택(150호), 쌈지공원 등 조성

- 미래차 국가산단 등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다른 자동차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해 자동차 생산 및 판매 이후 생애주기별 혁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기타 관련 정책

□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산업통상자원부)

❍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는 기술 자립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사업으로, 10개 지역, 10개 분야에서 운영됨
- 경기 용인(반도체), 충북 청주(이차전지), 충남 천안(디스플레이), 전북 전주(탄소소재), 경남 창원(정밀기계) 등 5곳을 소부장 특화단지로 1차 지정(2021년 2월)
- 충북 오송(바이오), 광주(미래차), 대구(미래차), 부산(반도체), 경기 안성(반도체) 등 5곳을 소부장 특화단지로 2차 지정(2023년 7월)
- 산업분야의 경우, 1차(2021년 2월)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탄소소재, 정밀기계 다섯 개 분야가 지정했고, 2차(2023년 7월)에서 미래차, 바이오 2개 분야, 2024년 4월 우주·항공, 방산, 수소 등 3개 분야가 추가됨

❍ 소부장 특화단지는 앵커기업(선도기업)과 협력사가 가치사슬을 구축해 부품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국산화율을 향상하는 것이 핵심임

❍ 광주광역시는 미래차(자율주행차 부품)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됨
- 빛그린국가산단(인증·완성차 특화), 진곡산단(부품생산 특화), 미래차 국가산단(실증 특화)을 연계한 미래차 산업 벨트 조성
- 미래차 핵심기술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인지센서, 제어부품, 통신시스템 분야에 특화해 기술 자립화를 추구
  * 센서: 적외선·전파·레이저 등을 이용해 차량·사물·환경을 정보로 변환하는 기술
  * 제어: 차량 부품의 제어·관리·동작을 위한 동력전달 기술과 전력 변환·변압·안정 등의 기술
  * 통신: 차량과 주변 환경 또는 기기 간 통신을 수행하는 기술
- 자율주행 핵심부품 및 요소 기술의 국산화 및 실증 지원을 통한 부품-앵커-완성차 간 완결형 벨류체인 구축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이 기대됨

□ 녹색융합클러스터(환경부)

❍ 녹색융합클러스터는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및 실증화 지원, 첨단기술 창출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조성한 지역을 의미함

- 녹색산업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산업으로, 녹색산업과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녹색연관산업으로 칭함
- 지역산업과 연계해 전국 확대 예정(2028년까지 10개소로 확대)

| 표 5-15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계획(안)

구분	창업 벤처	물	전기차 폐배터리	Post-플라스틱	청정 대기	폐반도체	태양광 폐패널	바이오 에너지	자원 순환기술	수열
지역	인천 서구	대구	포항 블루벨리	부산 생곡	광주	구미	해남	보령	제주	춘천

주: 인천 서구(창업벤처), 대구(물)는 조성이 완료됨
출처: 환경부(2024),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클러스터 지원체계 구축, 클러스터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유망 녹색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탄소중립, 순환경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역 내에 분야별 강점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등이 클러스터 구성요소가 되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녹색산업 성장 과정에서 상호 시너지 효과 창출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가 플랫폼 역할을 수행
- 개별기업이 확보하기 힘든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
- 입주 기업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인재 양성, 전문연구기관 연계 등 산학연 연계를 통해 클러스터의 전문성 강화
- 지방거점대학, 특성화고 등과 연계한 채용 지원, 해외 박람회 참여 등 해외 진출 지원

❍ 광주광역시에는 빛그린국가산단(광산구)에 청정대기 클러스터 조성 예정
- 가전 및 자동차 업체가 집적한 광주광역시의 인프라와 연계해 미세먼지 저감 기술설비 산업을 포괄하는 클러스터 조성
- 청정대기산업 거점단지 조성에 따른 관련 기업 입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도모

제4절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1. 정책 시사점

□ 지역 여건과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 통합적 정책 목표 설정

○ 지역 거버넌스가 주도하는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및 지역 산업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교육발전특구의 취지를 반영하는 목표를 설정함
- 시, 교육청, 지역 대학 및 유관기관과 산업체, 마을공동체, 지역주민을 아우르는 추진체계를 설정해 교육이 지역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토대 마련
- 지역산업과 연계한 중등학교 교육 혁신과 강화에 주력해 지역의 주력산업 및 미래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지역 출신 졸업자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취업해 거주하고, 기업은 지역 내에서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
- AI·디지털 교육 강화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공교육의 질적 개선 추구

○ 학령인구 급감 및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교육 정책 수립
- 유-초-중-고등교육·청년 취·창업 지원에 이르는 단계별 목표를 설정해 교육이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경로 설정
- 직업계고 졸업생이 지역 내에 취업하고, 지역 고교생이 지역 대학에 진학하며, 지역대학 졸업생이 지역 내에서 정주하도록 유도하는 사업 추진

□ 주력 및 미래산업 연계 인적자원 양성 및 지원에 초점

○ 지역 주력산업과 강점을 가진 분야, 미래 사회 변화와 관련한 교육사업을 특구 사업에 반영해 지역 학생이 지역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유도
-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고도화, 광주형 마이스터고 지정 및 운영,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고도화 사업 등 산학연 연계, 산업 현장 수요 맞춤형 중등 직업교육을 통해 지역 산업에서 실제로 필요한 인재 양성
- 초중등 교육(AI 기반 어린이놀이터, AI 교육원, 영재고 등)에서 고등교육(AI 융합대학 등), 취업 이후(AI 직무전환교육 등)까지 이어지는 AI 관련 교육을

통해 미래 전략산업인 AI 산업 인재 양성

○ 교육의 범위를 취업과 그 이후까지 설정해 지역 정주 가능성을 높이고, 인재를 유치해 지역 경쟁력 향상 추구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정주를 지원해 인재 유출 최소화 추진

□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한 특구 사업 추진으로 실행력 증대

○ 교육부 유관 사업
- 특구 사업인 광주형 마이스터고는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 도입 사업과 연계 운영해 공모사업에 참여
-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과 관련, 초중등 AI·SW 교육 강화, 교원의 디지털 역량 증진,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AI 영재고·교육원 설립 등의 특구 사업 진행

○ 기타 부처 유관 사업
- 미래차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차 인프라 관련 송암산단 도시재생 혁신지구(국토교통부)는 지역 주력산업과 관련한 사업으로, 관련 분야 직업교육(고등학교), 교육 및 연구(대학·대학원) 기능을 강화해 해당 분야 인재를 육성함

2.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전략 수립

□ 주력산업 성공과 혁신을 위한 사업 보완

○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광주광역시의 주력산업인 모빌리티(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위한 교육 사업 강화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탄소배출이 적은 미래차 및 청정대기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보완해 전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음

❍ 지역 주력산업 성장과 혁신을 위한 사업 추진
- 현재 특구 사업에서 주력산업 관련 사업은 대부분이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임
- 지역 주력산업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광주과학기술연구원, 전남대, 조선대 등 광주 주요 대학의 연구 성과를 지역 내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2) 교육발전특구 주체 간 유기적 연계 강화

□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지-산-학 추진체계 보완

❍ 지역협의체에 시와 교육청, 구청, 대학과 유관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포함돼 있지만, 학교 현장과의 만남은 쉽지 않은 구조
- 현재 특구는 문화경제부시장과 부교육감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특구사업추진단이 구청과 교육지원청, 지역대학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와 연계, 협력해 주요 사항 협의. 결정함
- 또한 5개 분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컨설팅을 수행하고, 성과 환류 연구 진행하고 있음
- 그러나 특구사업추진단은 물론이고 자문단에도 학교 현장과 관련한 인원의 포함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임
- 추진체계에 학교 현장 관련 인원을 추가해 실제 교육 현장의 수요와 문제점을 파악해 이를 해소하고, 정부의 공모사업 참여 시 원활한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음

❍ 지역산업 특화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의 협력 고려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역과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 교육계, 노동계 등 노·사·민·정이 모여 형성한 협의체로, 지역의 인력 및 훈련 수요·공급을 조사해 이를 기초로 훈련을 실시하고, 인력 양성 및 고용 서비스 지원계획을 시행
- 중등교육 중심의 지역산업 연계형 특구인 광주광역시 교육발전특구는 관련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현 특구 계획에는 해당 위원회 관련 내용이 없음

3) 교육발전특구 관련 지역맞춤형 특례 발굴

□ 지역 맞춤형 특례 제안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대한 특례

- 광주광역시 교육발전특구는 현재 자율형 공립고 교원 정원 외 추가 배정 허용을 위해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대한 특례를 제안한 상황
- 이에 더해, 직업계고 교육역량 및 현장 연계 강화를 위해 관련 고교 졸업 후 관련 분야에 재직하고 있는 자 등을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변경 필요

| 표 5-16 | 특례 제안 내용

현행 법령	개정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별표 2] 산학겸임교사등의자격기준[제42조제1항관련]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혹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로서 산업체(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지역 전략산업 및 미래산업 분야 대학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조정

- 광주광역시 교육발전특구는 현재 호남권 대학의 지역인재선발 지역 범위 설정 통일에 관한 특례 의견을 제안한 상황임
- 더불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대 등 인기학과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이는 지역 내 선호 대학 및 인기 학과에 지역 학생 진학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특구에서 강조하는 중등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지역 전략산업,

미래산업 연계와는 무관한 내용임

- 지역 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머물며 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 및 미래산업 분야 관련 학과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조정에 관한 특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교육발전특구 성과 극대화를 위한 성과관리 방안

□ 성과관리방안 검토

❍ PDCA(Plan-Do-Check-Act) 및 환류(Feedback) 사이클에 따른 성과관리 체계 마련

- 계획 수립(Plan)-과제 수행(Do)-성과점검(Check)-개선/조치(Act)
- 성과 관리 흐름도는 아래와 같음

  * (부서별) 사업추진 및 자율 성과 관리→ (분과별) 자체 평가→ (총괄 사업추진단) 종합 성과 관리→ (지역 협의체) 환류 계획 검토

- 5대 전략 사업과 연계하는 분과별 위원회의 자체평가를 통한 상시 성과 관리 및 총괄 사업추진단을 통한 종합성과 관리 실시
- 교육발전특구 사업추진단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협의체의 검토 의견을 반영한 환류 계획 마련

❍ 성과 평가 및 분석

- 교육발전특구 사업추진단(분과별 포함) 및 지역협의체와 연계한 평가위원 구성·운영
- 세부 사업별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따라 성과지표 달성 현황, 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 운영 결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평가
- 매년 사업종료 후 연차평가(매년 2월)를 실시하고, 3차 연도 사업 종료 후 종합평가(2028년 2월) 실시
- 추진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제 도입 검토

❍ 성과 공유 워크숍, 포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과를 공개·확산

□ 성과지표 제안

❍ 고교 졸업자의 취업률 지표 제한적 사용

- 직업교육 중심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취업률은 학교의 평판과 직결돼, 취업을 위한 강압적인 학교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취업률 지표는 절대수치로 사용하기 보다 지역 내 취업률(타 지역 유출율), 분야별 취업률(전공 적합도) 등의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 주력산업 특화 교육 및 '교육-취업-정주' 성과 파악을 위한 지표 발굴

- 중등직업교육 관련 사업으로 양성된 산업인력은 졸업자와 채용기관의 만족도를 평가해 업계 수요와 학교 교과과정의 불일치, 현장에서 요구하는 숙련도와 졸업자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직업계고, 마이스터고 졸업 후 지역 주력산업 분야에 재직 중인 인원 비율을 성과지표로 활용해 교육발전특구 직업교육의 지역 내 고용과 정주 연계 정도 파악해 개선방향을 도출할 수 있음
- 취업률뿐만 아니라 취업 후 지역 내 기업 재직 기간을 성과지표로 설정해 정주의 지속성 파악을 통해 정주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제 6 장

유형 III - 지역대학 연계형 : 경상남도

제1절 유형 및 교육발전특구 사업 개요

제2절 지역여건 분석

제3절 관련 정책동향 분석

제4절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06 유형 Ⅲ – 지역대학 연계형 : 경상남도

제1절 유형 및 교육발전특구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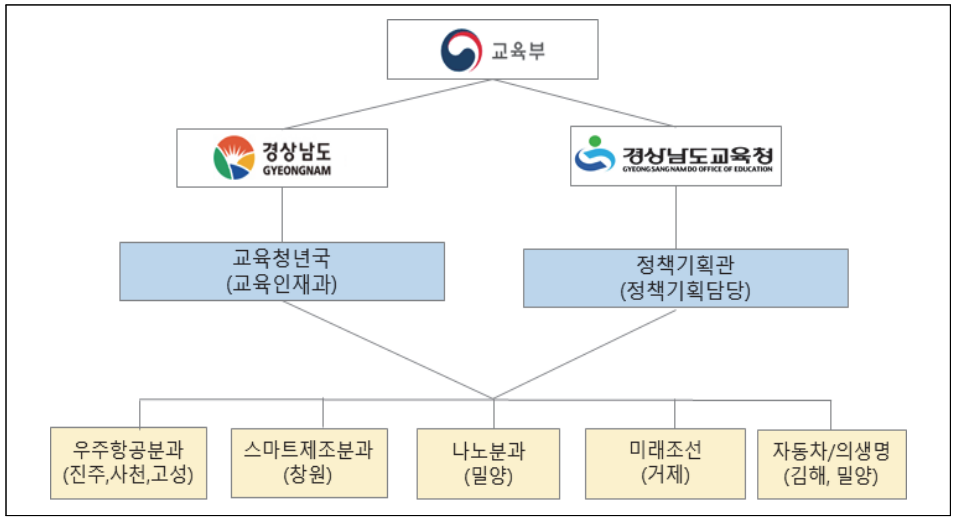
1. 유형 개요

□ **교육부 사업신청 기준에 따른 유형**

○ 경상남도는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 선도지역으로 선정
- 3유형은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바탕으로 광역지자체가 지정 단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며, 1차 특구 지정시 해당 기초지자체로는 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 등이 포함됨
- 이후 2차 특구 지정에서 경남 의령, 창녕, 거창, 함양 등도 지정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1차 지정 시군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특구 사업을 총괄하고, 각 분과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실행과 관리를 맡음
-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의 기획, 실행계획 수립, 정책 방향 설정 등 특구 총괄을 담당함
- 우주항공분과는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및 해당 시군의 교육지원청으로 구성됨
- 스마트제조분과는 창원시와 창원교육지원청으로 구성됨
- 나노분과는 밀양시와 밀양교육지원청으로 구성됨
- 미래조선분과는 거제시와 거제교육지원청으로 구성됨
- 자동차의생명분과는 김해시, 양산시 및 해당 시군의 교육지원청으로 구성됨
- 각 분과는 특구 관련 실행계획 수립, 총괄 관리, 성과 관리를 담당함

| 그림 6-1 | 경상남도 교육발전특구 추진체계



출처: 경상남도·경상남도교육청(2024)

❍ 특히, 경상남도는 교육발전특구 공모 신청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의와 설득, 지역별 협력 모델 구상, 선제적 제안을 통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며 사업의 기반을 구축했음

- 공모사업 초기 경남교육청의 소극적 태도(교육발전특구 불필요 입장)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 참여를 이끌어냄(진정은, 2024)
  - 경남교육청의 선도모델인 직업교육혁신지구를 활용한 방안을 제시하며,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예산 확보와 사업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음
  - 정책기획관, 초등교육과, 진로교육과 등 6개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개별 교육모델에 대해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기울였음
- 경남도는 주도적으로 8개 시군과 협력하여 지역별 교육협력 모델을 구상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타 기관에 선제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했음

□ 교육단계에 따른 유형

○ 경상남도의 주요 과제는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지역산업의 연계를 포함하고 있으나, 특히 대학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지역대학 연계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브릿지 시스템을 운영하며,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산학 협력을 강화함
- 각 지역의 특화산업에 적합한 대학-산업 연계 과제를 개발하여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함

□ 지역 특성에 따른 유형

○ 경상남도는 지역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지역산업과 교육을 긴밀히 연계한 교육발전특구를 설계함

-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다함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함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IB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초등 특화과정을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
- 대학과 고등학교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진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브릿지 시스템을 통해 고등학생들이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제 글로벌센터 운영과 진주·사천·고성의 우주항공, 창원의 스마트제조, 김해·양산의 미래자동차 및 의생명 분야와 대학-특성화고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함

2. 특구 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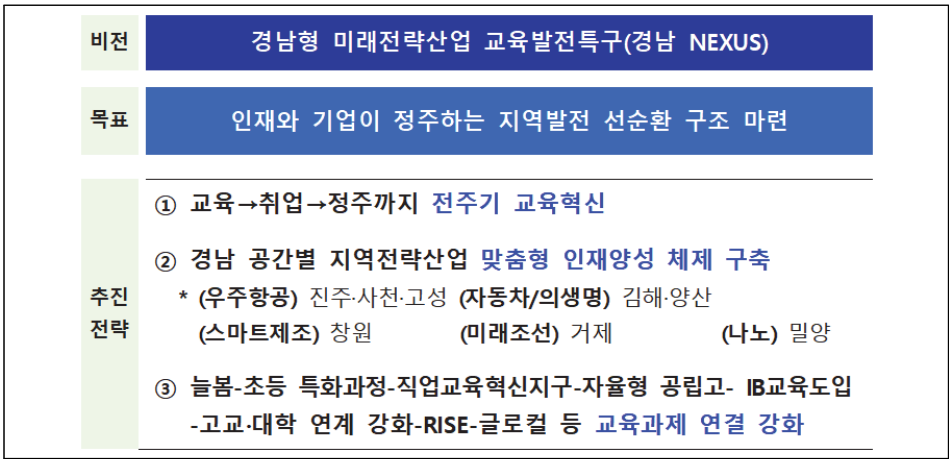
1) 특구 운영 방향

□ **지역 내에서 인재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 목표**

○ 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전 주기 교육 혁신

- 교육을 시작으로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완전한 경로를 구축하여, 경남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 내에서 지속 가능한 인재 공급 체계를 조성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

| 그림 6-2 | 경상남도 교육발전특구 비전과 목표, 전략



출처: 경상남도·경상남도교육청(2024)

○ 경남 전략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 구축

- 경남 각 지역의 전략 산업 특성에 맞춘 특화된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여, 각 지역의 경제적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 인재를 육성
- 지역별 특화 산업에 맞춘 인재 양성은 지역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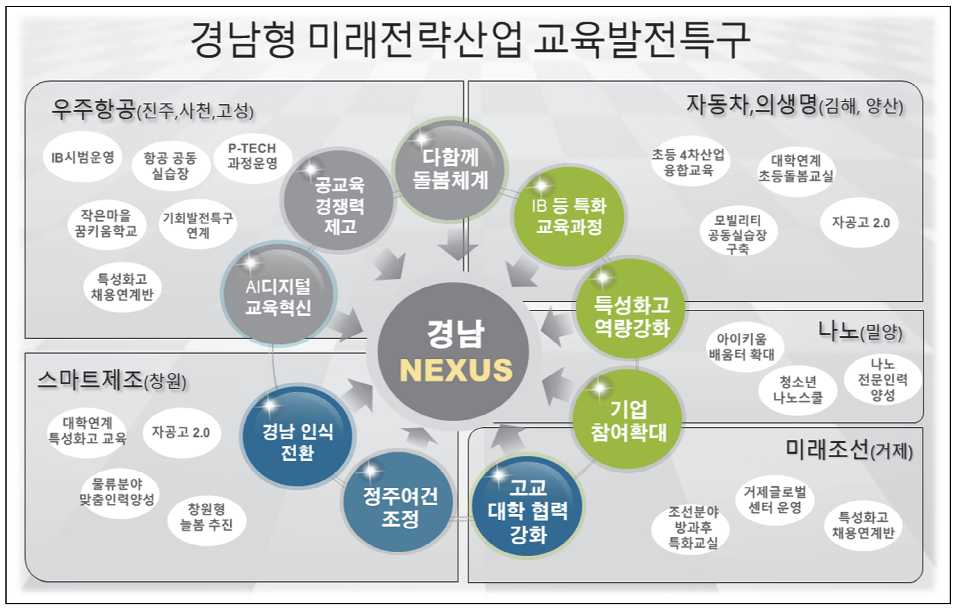
○ 교육 생태계 강화

- 늘봄학교, 초등 특화 과정, 직업교육 혁신지구, 자율형 공립고, IB 교육 도입

등 다각적인 교육 환경 조성

- 고교와 대학 간 연계 강화를 통해 교육-취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RISE(지역 혁신 교육 시스템) 및 글로컬(Global + Local)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역량과 지역 산업 수요를 동시에 반영하여 학생들의 지역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 그림 6-3 | 경상남도 교육발전특구 운영 방향



출처: 경상남도·경상남도교육청(2024)

□ 광역 공통과제와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

❍ 경상남도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9가지 공통과제를 광역 단위로 추진하고, 8개 시군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산업 지구별 특화사업을 추진함

- 경상남도의 9가지 공통과제는 AI 디지털 교육혁신, 공교육 경쟁력 제고, 다함께 돌봄체계 구축, IB 등 특화교육과정 운영, 특성화고 역량 강화, 기업 참여 확대, 고교-대학 협력 강화, 정주여건 조성, 그리고 경남 인식 전환을 포함함

- 진주, 사천, 고성 지역은 우주항공 산업을 중심으로 IB 프로그램 시범 운영, 항공 공동 실습장 구축, P-TECH 과정 운영, 작은마을 꿈키움학교 설립, 기회발전특구 연계, 그리고 특성화고 채용 연계반 운영을 추진함
- 김해와 양산 지역은 자동차 및 의생명 산업을 중심으로 초등 4차 산업 융합 교육, 대학 연계 초등돌봄교실 운영, 모빌리티 공동 실습장 구축,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 2.0 추진을 실시함
- 밀양 지역은 나노 산업을 중심으로 아이키움 배움터 확대, 청소년 나노스쿨 운영, 그리고 나노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함
- 거제 지역은 미래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조선분야 방과후 특화교실 운영, 거제 글로벌 센터 운영, 그리고 특성화고 채용 연계반 운영을 실시함
- 창원 지역은 스마트제조 산업을 중심으로 대학 연계 특성화고 교육, 자율형 공립고 2.0 추진, 물류 분야 맞춤형 인력 양성, 그리고 창원형 늘봄 운영을 추진함

2) 전략별 추진과제 및 주요 내용

(1) 초·중·고 공교육 혁신

□ 다함께 돌봄체계구축

❍ 경남형 늘봄학교 운영
- 모든 초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1학년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지원함
- 아침돌봄, 저녁돌봄, 방학 중 돌봄,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여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함
-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
- 대규모 학교 중 희망 학교에 늘봄학교 업무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교과 수업을 주 10~15시간 운영하면서 늘봄학교 관련 신규 업무와 민원을 관리함
-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 프로그램을 위해 강사료, 프로그램 교재 및 교구비 등을 지원함

❍ 지역 맞춤 늘봄학교 운영

- 지역별 상황과 학교의 공간적 한계를 고려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적합한 늘봄학교 모델을 추진함
-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고, 평일 저녁 8시까지 돌봄 시간을 확대하며 주말에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
-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 학생들을 권역별로 모아 수업을 운영하며, 의령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중심학교와 인근 학교의 협력을 통해 학년별 수업을 제공함

❍ 학교 및 시군 돌봄 간 연계 강화
- 경남도 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 취약 시간대 돌봄 서비스, 부모의 질병 등 긴급 사유 발생 시 친인척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
- 문화예술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등하원 지원, 숙제 및 독서 지도를 실시함
- 복지관, 경로당, 공공체육시설, 주민센터, 학교복합시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에서 돌봄 서비스를 주 5일, 하루 8시간 이상 상시 운영함

□ AI 디지털 교육혁신

❍ 교원 AI·디지털 수업 역량 강화 지원
- 교원 AI·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원격 직무연수를 지원함
- AIEDAP 경남권역 사업을 운영함 (마스터 교사 333명, 리더교원 538명, 일반교원 558명)
- AI, SW 교육, 코딩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2500명)를 운영함
- 미래교육지원 양성 전문가 연수 및 아이톡톡 지원단(교원 318명)을 운영함

❍ 학생 디지털역량강화지원
- 경남수학문화관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교육체험실을 운영함
- 미래교육원 빅데이터 기반 AI 활용 선도학교 133교(초등 97교, 중등 36교)를 운영함
- 미래교육원에서 미래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교육발전특구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지역별 미래교육지원센터(사천, 양산, 고성, 함양)를 운영함

❍ 과학기술기반 융합교육(STEAM) 추진
-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추진함
- 경진대회 및 캠프, 멘토링 프로그램, 학교 내 무한상상실을 운영함(초중고 31개 학교)
-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지원단 및 연수를 운영함

□ 공교육 경쟁력 강화

❍ 자율형 공립고 2.0 추진
- 농산어촌 및 원도심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지자체, 대학, 기업과 연계한 새로운 학교 운영 모델 창출
- 우수한 자율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일반 고등학교에 확산하여 경남도 내 공교육의 선도 모델 마련
- 지자체, 대학, 기업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 지자체 협약형, 대학 협약형, 기업 협약형 운영 모델을 추진 예정 학교 구성원들과 교육발전특구 연계 및 지역 상황과 컨설팅 과정을 통해 결정

❍ 인구감소지역 공교육 지원강화
- 학교별 특성과 학생들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지원
  • 교육 전문가와 협력하여 자율과정 모델을 제시하고 컨설팅 제공
- 과학,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교과목 운영을 위해 자율성을 부여

❍ 기초학력 학생 개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기초학력 통합진단 및 관리 실시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향상도 검사 실시
-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을 확대하여 맞춤형 지원 강화
- 학교 현장에 맞춤형 1:1 컨설팅을 수시 지원
- 학교 밖 온라인 누리교실을 운영하여 학생 맞춤형 교과 보충 학습 지원
-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여 온라인 누리교실의 맞춤형 학습 지원 강화
- 디지털 시스템인 아이톡톡을 활용하여 국어, 영어, 수학 심화과정 운영

□ 자율적 특화 교육과정 운영

❍ IB프로그램 시범학교 운영
-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된 IB 교육환경 제공
- 탐구 주제 중심 및 프로젝트형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통합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학생 중심의 수업 구현
- 학교 단위 역량 강화
  • IB 교육과정 도입을 통해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일체화를 체계적으로 구축
  • 학생들에게 국제적 소양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선택권을 제공하여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실화 도모
  • 교원의 IB 교육과정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연수 및 워크숍을 운영하여 교사들의 연구 문화를 조성하고 전문성을 신장시켜 학교 단위의 자율적 추진 역량 강화

❍ 초등특화 교육과정 운영
- 초등놀이문화 활성화를 위해 선도학교 30개교 지원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초등 놀이 수업을 200개교에서 운영
- 연령별 맞춤형 놀이 프로그램 개발
- 창의적 놀이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미술, 음악, 연극 등 예술적 요소를 포함한 창의적 놀이 제공
- 과학 및 기술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과학 실험, 로봇 만들기, 코딩 등 과학과 기술을 접목한 놀이 제공
- 신체활동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운동 능력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체육활동 및 야외 놀이 제공
- 자연 탐사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환경을 활용한 탐사 및 생태 놀이 제공
- 배움중심수업을 지원하고 확산함

❍ 전략산업·문화 해외탐방
- 경남 항공산업과 제조산업과 연계한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에서 기업탐방 실시

- AIRBUS사, 보잉사,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유럽 내 대학, 미국 NASA, 프랑스 툴루즈 등을 대상으로 함
- 현지 대학 및 연구소를 방문하고 글로벌 기업 탐방
- 박물관, 역사 유적지, 전통 예술을 관람하며 언어 및 문화 워크숍 실시

(2) 특성화고 기술인재 양성

□ 산업연계 특성화고 역량강화

❍ 지역전략산업 연계한 직업계고 지역인재 양성
-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고교학점과 연계하여 산업체 현장 교육과정 운영
- 기업 연계 취업 프로그램 운영
- 항공, 제조, 조선 등 분야별 기업체 명장과 장인의 강의 개설
- KAI, 하이즈항공,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기업체 명장 초청
- 지구별 맞춤형 교육과정 세부과제 추진

❍ 유관기관 연계 지원 강화
- 관내 우주항공분야 중소기업의 산업기능인력을 대상으로 우주항공기업 OJT 교육프로그램 운영

□ 기업 주도적 참여 확대

❍ 채용연계 과정 및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 우주항공지구 특성화고 내 앵커기업반을 개설 운영하여 기업이 원하는 교육-실습 취업을 연계
- 도내 3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단(기계 가공분야 도제) 운영
  - 학교와 기업을 번갈아 오가며 학교에서 이론 및 기초실습을 하고, 기업 내 교육훈련장 또는 공동훈련센터에서 기업현장실습을 진행함
  - 기업체, 도제식 직업학교, 지역산업계의 협업을 통해 고교단계 학력인정 및 NCS 신직업자격 기반 인증 기준에 부합하도록 교과편성

○ 지역인재 고용 지원
- 협약 학교 졸업(예정)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신규 협약 기업을 발굴하고 협약 체결
- 취업 후 3개월부터 인센티브(채용장려금, 환경개선금, 주거정착금 등) 지원

(3) 지산학 전략적 협력 강화

□ 고교-대학 전략적 협력강화

○ 대학 연계 진로 교육 강화
- 고교와 대학 간의 연계를 통해 학과 체험 및 심화 탐구 활동 지원
- 신중년과 함께하는 진로 체험 제공
- 신중년 퇴직 교원과 함께하는 진로 지도 실시

○ 브릿지 시스템 운영
- 브릿지센터를 경상국립대학교 내에서 운영하여 우주항공 분야의 진로체험 및 전문가 특강 지원
- 특성화고 및 일반고등학교에 취업코디네이터(취업 지원관) 배치·운영

○ 지역인재전형 확대 및 장학금 지급
- 경상국립대 지역인재전형 운영
- 경상국립대 학생부종합(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 운영
- 우주항공대학 고교연계 지역인재전형 입학생에게 학업장려금 지원

□ 경남 인식 전환 추진

○ 청소년 꿈 아카데미
- 경상남도 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꿈 캠프,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 청년 성공 스토리 발굴 및 홍보 실시

○ 도내 우수기업 탐방
- 경상남도 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KAI, LG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로템, 두산 등 주요 기업을 탐방하고 학교 설명회 실시

❍ 미래인재육성 글로벌 연수
- 경상남도 교육발전특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초중고 연계 교육모델 발굴, 해외 우수 사례 연구, 지자체-교육기관 협력 모델 개발을 위한 연수 실시

❍ 지역발전특구 지역협력체 운영
- 경상남도 교육발전특구 업무 담당자가 모여 운영 방안을 협의 및 점검하고, 성과 발표 및 공유

□ 매력적 정주 여건 조성

❍ 청년 주거지원강화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경남도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에게 월세 지원
- 전세금 기준 1억 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 임차보증금에 대해 4천만 원 한도 대출이자 3%를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
- 도내 항공우주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113명을 대상으로 청년인재 채용 지원
  • 청년에게 주거정착금 월 30만 원, 교통비 월 10만 원, 자기개발비 연 30만 원, 기업에게 청년인건비 월 200만 원을 10% 기업부담으로 지원

❍ 청년 문화환경 조성
- 사천 삼천포대교 공원 일원과 통영 죽림수산시장 일대에 청년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남해군에는 주거, 창업,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청년 거점공간을 조성

(4) 지역별 특화과제

□ 우주항공 지구

❍ Aerospace-G 우주항공실습장 및 체험장 건립
- 삼천고공업고등학교에 항공수치 제어실습실 및 항공기 기체실을 설치
- 항공우주공학기술자, 발사체기술연구원, 우주비행사, 우주관제센터 요원 등의 직업체험 제공

- 우주항공산업의 성장과 미래 직업교육 환경,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체험관 및 공동실습장 확보

❍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전문교육 기회 제공 및 군 복무 휴직제도 도입
- 경상대학교와 연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대학 전문 교육 기회 제공
- 특성화고와 기업 간 협약을 통해 군 복무 휴직제도를 도입하여, 취업 후 군복무를 거쳐 복직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기능인력 휴직 시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채용지원금 월 200만 원 지원

□ 스마트제조 지구

❍ 스마트 제조 맞춤 인력 양성
- 국립창원대학교에서 창원시 특성화고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제조업 혁신 기반의 기능 전문인력 양성 (50명 중 30명)
- 창원문성대학교에서 산학협의체 기반 교육을 통해 첨단 모빌리티 분야의 지역전략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와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선취업-후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재취업자 대상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전문대-고교 협력 서비스 운영
- 창신대학교에서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장의 요구에 맞춘 기술인재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체 고용과 연계
- 마산대학교에서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차 및 로봇 산업기술 분야 전공체험 오픈캠퍼스를 운영하고 지능형 공장(스마트 팩토리) 분야 전공체험 교육 실시
- 경남대학교에서 지산학고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특성화고-대학-기업 간 현장실습과 인턴십을 지원하고 스마트제조 현장실무 능력제고 비교과 프로그램과 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선취업-후진학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과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 스마트 물류 및 관광 맞춤 인력양성
-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창원공업고등학교, 마산공업고등학교, 한일여자

고등학교 등에서 원스톱 진로교육을 통해 취업 체계 구축
- 진로 탐색 프로그램, 고교학점제 지원 프로그램, 취업 및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일학습 병행(진학연계) 트랙을 개발하여 블렌디드 학위과정, 재직자 전형, 진학지도 및 상담 제공

❍ 창원형 늘봄
- 창원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운영
- 방문서비스(아이돌보미 파견)와 지역아동센터 등 324개소의 돌봄시설 운영
- 초등학교 돌봄을 위한 거점통합돌봄센터 운영

□ 나노 지구

❍ 청소년 나노스쿨
- 거점 학교 공모를 통해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나노기술 및 나노산업 교육 기회 제공
- 미래 전략산업(AI, 코딩, 로봇, 자율주행 등)과 연계된 체험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나노 고급 인력양성
- 나노국가산단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육성
- 고등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

❍ 스마트 스터디 거점센터 중심 학습증진 교육플랫폼 운영
- STUDY CAFE 형식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거점센터를 구축하여 학생 맞춤형 학습공간 제공
- 공교육의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생 맞춤형 온라인 강의 및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 **미래조선 지구**

○ 거제 글로벌 센터 운영
-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및 이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고교-대학 유학생 유치 지원
- 기업 외국인 수요를 관리하고, 수요에 맞춘 대학 특성화 교육 제공
- 외국인 근로자의 재교육 지원

○ 조선분야 방과후 심화 교실 운영
- 거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심화 교육, 직무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자동차/의생명 지구**

○ 주력산업 맞춤형 전문기능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
- 지역 연계 미래자동차 및 의생명 맞춤형 전문 교육과정 운영
- 미래자동차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 고교-대학 연계 교육과정 운영
-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주력산업 맞춤형 공동교육과정과 학교자율교육과정 운영

○ 자동차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방과후 AI자동차부품 PM과정을 운영하여 대학 방문 수업 제공
- 방학 중 프로젝트 실습 과정을 운영하여 대학 방문 수업 제공

3) 교육발전특구 특례 제안

□ **대형조선소 본사 및 사내협력사 산업기능요원 신청규제 개선**

○ 사내 협력사의 제조 시설이 직영과 분리되지 않아 산업체 병역특례 신청이 어려워 개선과 대기업의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필요

○ 조선 및 뿌리산업의 인력 부족과 외국인 의존, 군 복무로 인한 인력 중단 및 사명감 저하 문제 발생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개정 제안
- 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세부선정 기준 개정안 제안

□ 산업인력 수급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등록 외국인과 두 번째로 많은 산업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제조업 및 조선업 분야에서 숙련기능인력의 퇴직과 청년층 유출로 인해 빈일자리율이 가속화되고 있음

❍ 단순노무직보다 숙련기능인력이 선호되며, 지정업종이 아닌 경우 취업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따라 자회사 외국인력 산업비자 및 광역비자 도입을 제안하고, 지역특화형 비자의 배정 인원을 증원하며 인구감소지역 뿐만 아니라 관심지역으로의 확대 요청

□ 직업계고 유학생 비자 완화

❍ 일부 지자체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수사증(D-4-3)을 발급하여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으나, 법적 제약으로 인해 해외 우수학생의 유치가 어려운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함

❍ 조선 및 뿌리산업의 인력 부족과 학령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상남도 내 직업계고에 해외 우수학생을 유치할 필요가 있음

❍ 도내 학교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연수사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등학교까지 확대된 유학생 사증 제도를 개선하며, 유학생 부모의 계절 근로 초청 제도를 확대할 것을 제안

제2절 지역여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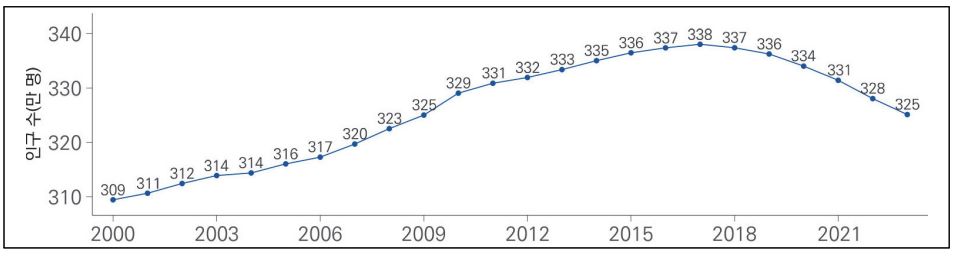
1. 지역여건

1) 인구 현황 분석

(1) 인구 및 고용 동향

❍ 경상남도 인구는 2017년 338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23년에는 325만 명에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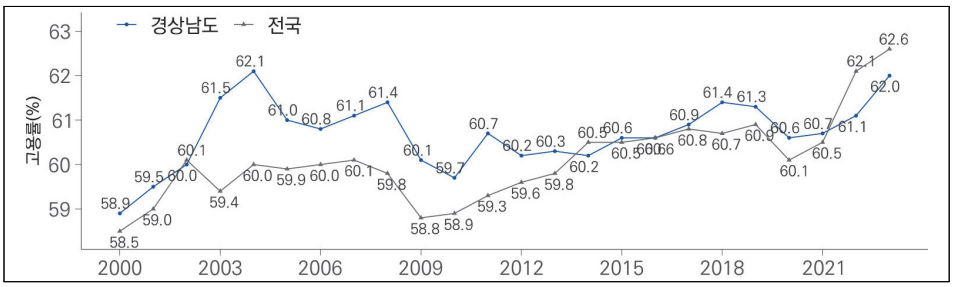
| 그림 6-4 | 경상남도 인구 수(2000~2023)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경상남도 고용률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양호한 고용 상황을 유지했으며, 2022년 61.1%, 2023년 62.0%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그림 6-5 | 경상남도 고용률(2000~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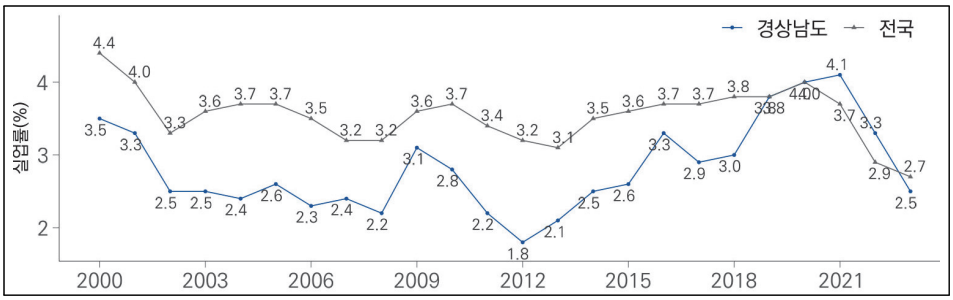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상남도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보다 낮은 실업률을 유지했으나, 2021년에는 4.1%, 2022년에는 3.3%로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졌음

❍ 그러나, 2023년에는 실업률이 2.5%로 다시 전국보다 낮아지며 고용 상황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

| 그림 6-6 | 경상남도 실업률(2000~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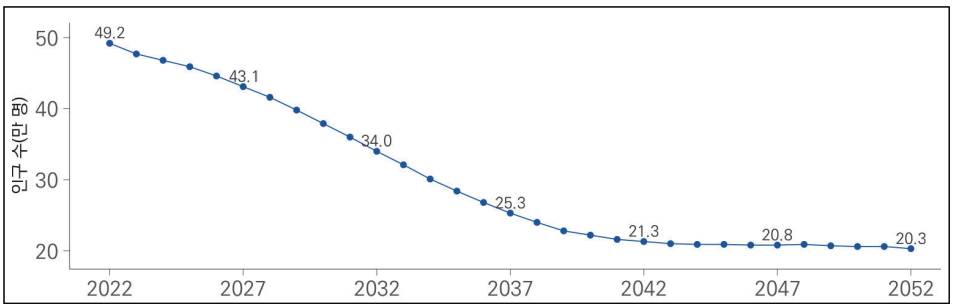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 「경제활동인구조사」

(2) 학령인구 전망

❍ 경상남도 학령인구는 2022년 49.2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30년 후인 2052년에는 20.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특히, 2022년부터 2040년까지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그림 6-7 | 경상남도 장래 학령인구 추계(2022~2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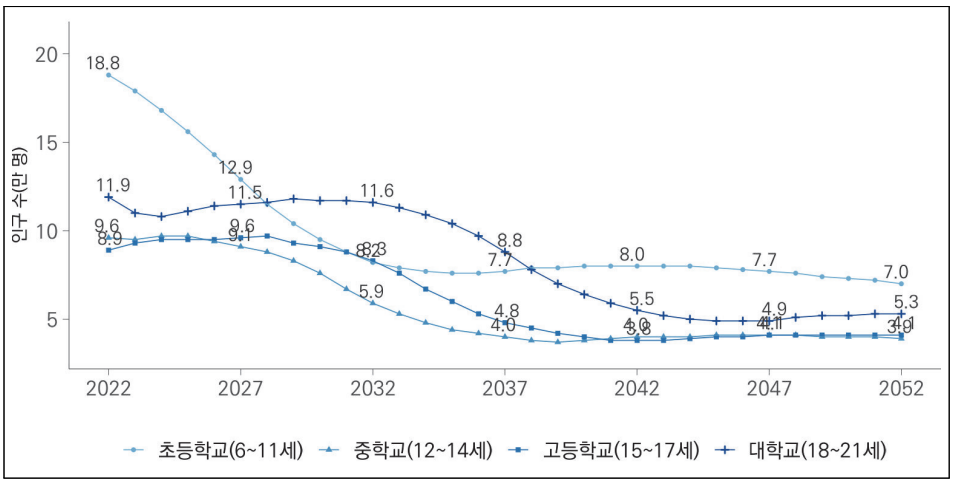
주: 중위 수준 장래 인구추계 가정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22년 경상남도 학령인구를 유형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18.8만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대학생 11.9만 명, 중학생 9.6만 명, 고등학생 8.9만 명 순으로 나타남

❍ 2037년까지 모든 학령 유형에서 인구 감소가 예상되며,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인구는 2022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2037년까지는 상대적으로 대학생 인구 감소 폭이 적을 것으로 보임

| 그림 6-8 | 경상남도 장래 학령인구 유형별 추계(2022~2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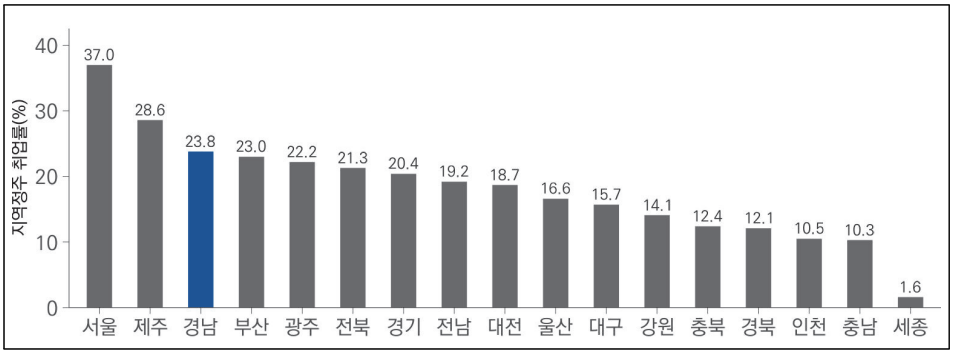
주: 중위 수준 장래 인구추계 가정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3) 지역정주 취업률 추이

❍ 경상남도는 지역 대학 졸업자 중 23.8%가 지역 내 기업에 취업해 지역정주 취업률 기준 전국 시·도 중 3위를 기록함

- 2021년 지역정주 취업률이 가장 높은 시·도는 서울로 37.0%였으며, 이어서 제주 28.6%, 경남 23.8%, 부산 23.0%, 광주 22.2% 순으로 나타남

| 그림 6-9 | 시도별 지역정주 취업률(2021)



주: 지역 대졸자 중 해당 지역 소재 기업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비율로 산출된 '지역정주 취업률1' 자료를 활용함/ 데이터 특성상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제외됨
출처: 최정윤, 문보은, 백승주, 손윤희, 조옥경, 장수정. 202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지원을 위한 지역 특성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 지역 산업여건 분석

(1) 주요 산업 동향[6)]

❍ 경상남도 주력산업은 '첨단정밀기계', '첨단항공부품', '항노화메디컬' 산업임
- 첨단정밀기계는 기존 생산기계에 ICT 융·복합화를 통해 고성능, 고효율, 자율화, 디지털화된 기계로 다공정·ICT 융복합 설계, 해석, 네트워킹, 시스템 제어 기술이 적용되는 산업임
- 첨단항공부품은 항공기의 추진기관, 동력전달장치, 항공전자, 구조물 등에 적용되는 첨단 신소재 및 항공 부품 분야로 구성된 고부가가치 산업임
- 항노화메디컬은 건강한 삶과 건강한 수명연장을 위한 노화예방·자연과 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임

(2) 관련 지역산업 분석

□ 첨단정밀기계 산업

6) 경상남도 주력산업에 초점을 맞춰 지역 산업여건을 분석하였으며, 관련 자료로 '2024년도 경상남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참고

❍ 첨단정밀기계는 기존 생산기계에 ICT 융·복합화를 통해 고성능, 고효율, 자율화, 디지털화된 기계로 다공정·ICT 융복합 설계, 해석, 네트워킹, 시스템 제어 기술이 적용되는 산업임

- [표 6-1]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첨단정밀기계 산업 범위를 나타냄

| 표 6-1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첨단정밀기계 산업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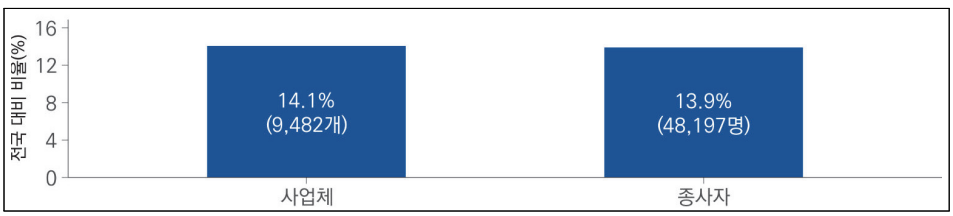
한국표준 산업분류 (KSIC)	산업명	한국표준 산업분류 (KSIC)	산업명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162	승강기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63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34019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	-

출처: 2024년도 경상남도 지역산업진흥계획(2024.1.)

❍ 경상남도 첨단정밀기계 산업의 주요 품목은 절삭가공업, 기계부품 및 가공품, 스마트 액츄에이터, 컨베이어장치, 스마트승강기, 지능형융복합가공기, 특수목적용기계, 기계 및 장비 수리 등임

❍ 2022년 전국 첨단정밀기계 산업 사업체의 14.1%(9,482개)가 경상남도에 소재하며, 종사자의 13.9%(48,197명)가 경상남도에 근무하고 있음

| 그림 6-10 | 경상남도 첨단정밀기계 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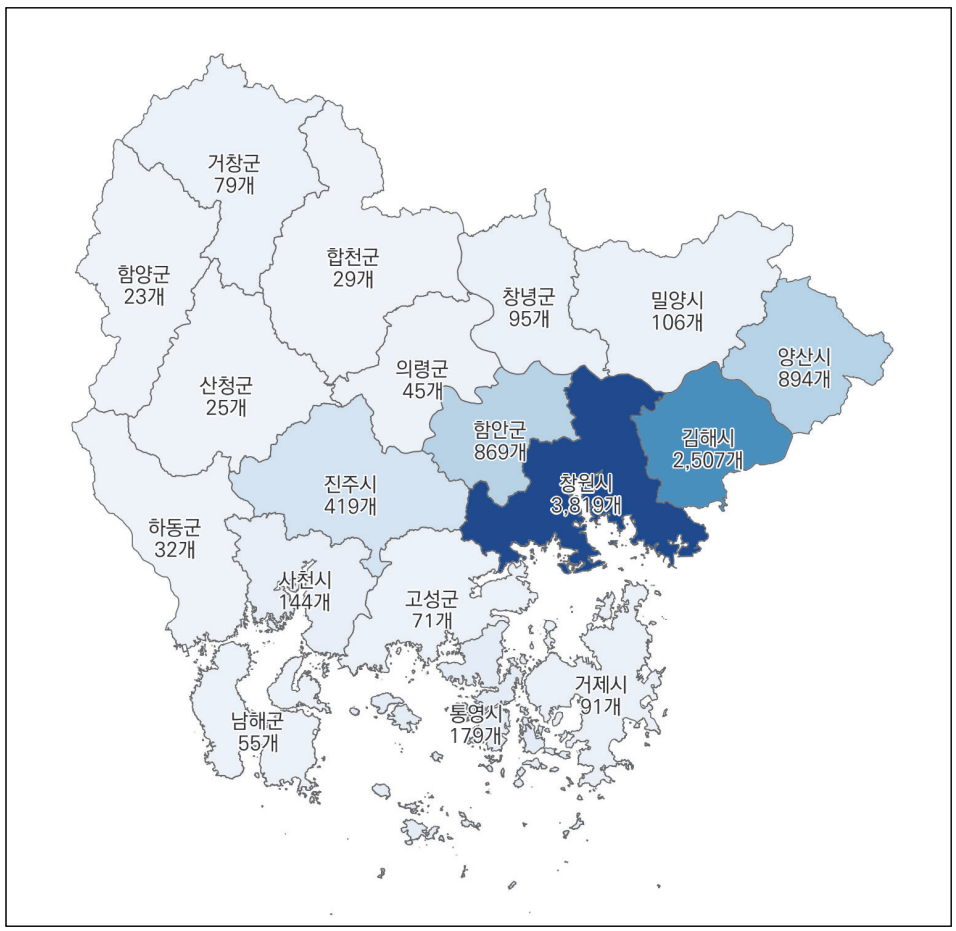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창원시를 중심으로 진주시, 함안군, 김해시, 양산시에 첨단정밀기계 사업체가 집적되어 있음

- 2022년 경상남도 시·군·구별 첨단정밀기계 산업 사업체 분포를 보면, 창원시에 3,819개로 가장 많고, 김해시 2,507개, 함안군 869개, 양산시 894개, 진주시 419개 순으로 나타남
-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있어 창원시에 관련 사업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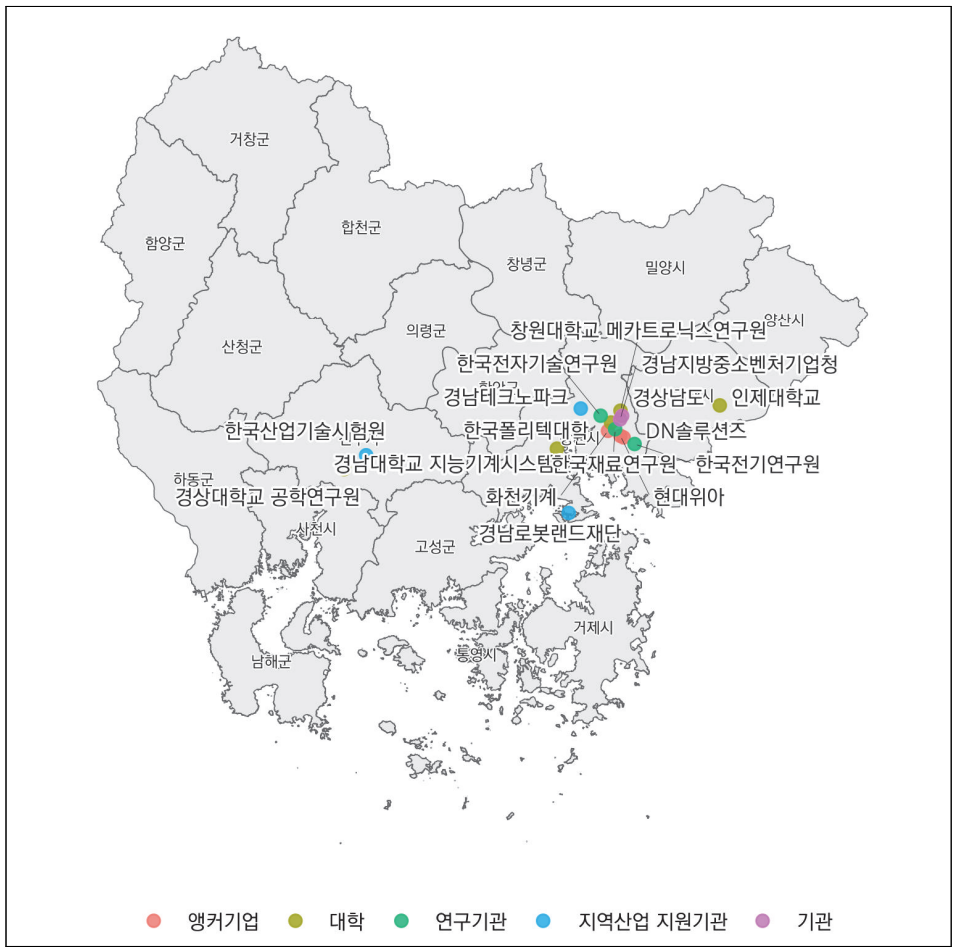
| 그림 6-11 | 경상남도 첨단정밀기계 사업체 분포(2022)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경상남도 첨단정밀기계 산업 생태계를 보면, 앵커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역산업 지원기관, 기관 등도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창원시에 집중되어 있음

| 그림 6-12 | 경상남도 첨단정밀기계 산업 생태계 현황



출처: 2024년도 경상남도 지역산업진흥계획(2024.1.)의 산업 생태계 자료를 활용함

□ 첨단항공부품 산업

❍ 첨단항공부품은 항공기의 추진기관, 동력전달장치, 항공전자, 구조물 등에 적용되는 첨단 신소재 및 항공 부품 분야로 구성된 고부가가치 산업임

- [표 6-2]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첨단항공부품 산업 범위를 나타냄

| 표 6-2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첨단항공부품 산업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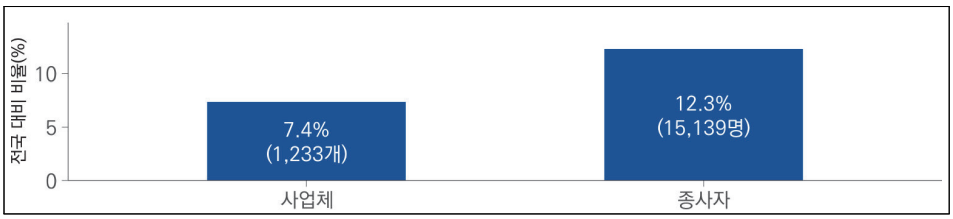
한국표준 산업분류 (KSIC)	산업명	한국표준 산업분류 (KSIC)	산업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해용 무선 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31322	항공기 부품 제조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5941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출처: 2024년도 경상남도 지역산업진흥계획(2024.1.)

❍ 경상남도 첨단항공부품 산업의 주요 품목은 민항기·군항기 관련 기체 및 엔진 부품, 고정·회전익 항공기, 위성발사체 관련 부품, 항공 전자장비, 항공우주 경량 신소재 등임

❍ 2022년 전국 첨단항공부품 산업 사업체의 7.4%(1,233개)가 경상남도에 소재하며, 종사자의 12.3%(15,139명)가 경상남도에 근무하고 있음

| 그림 6-13 | 경상남도 첨단항공부품 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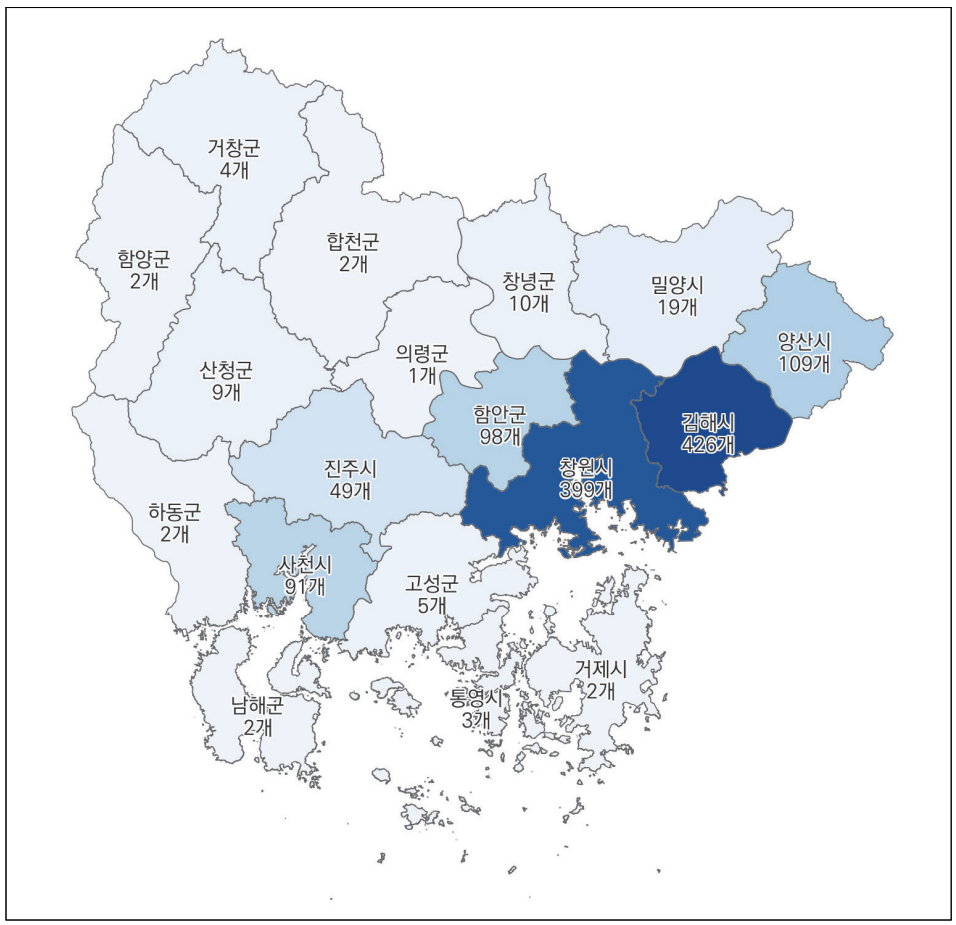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김해시를 중심으로 창원시, 양산시, 함안군, 사천시 등에 첨단항공부품 사업체가 집적되어 있음

- 2022년 경상남도 시·군·구별 첨단항공부품 산업 사업체 분포를 보면, 김해시에 426개로 가장 많고, 창원시 399개, 양산시 109개, 함안군 98개, 사천시 91개 순으로 나타남
- 현재 김해시와 창원시에 첨단항공부품 사업체가 집적되어 있으나, 향후 경상남도에서는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권역을 우주항공 산업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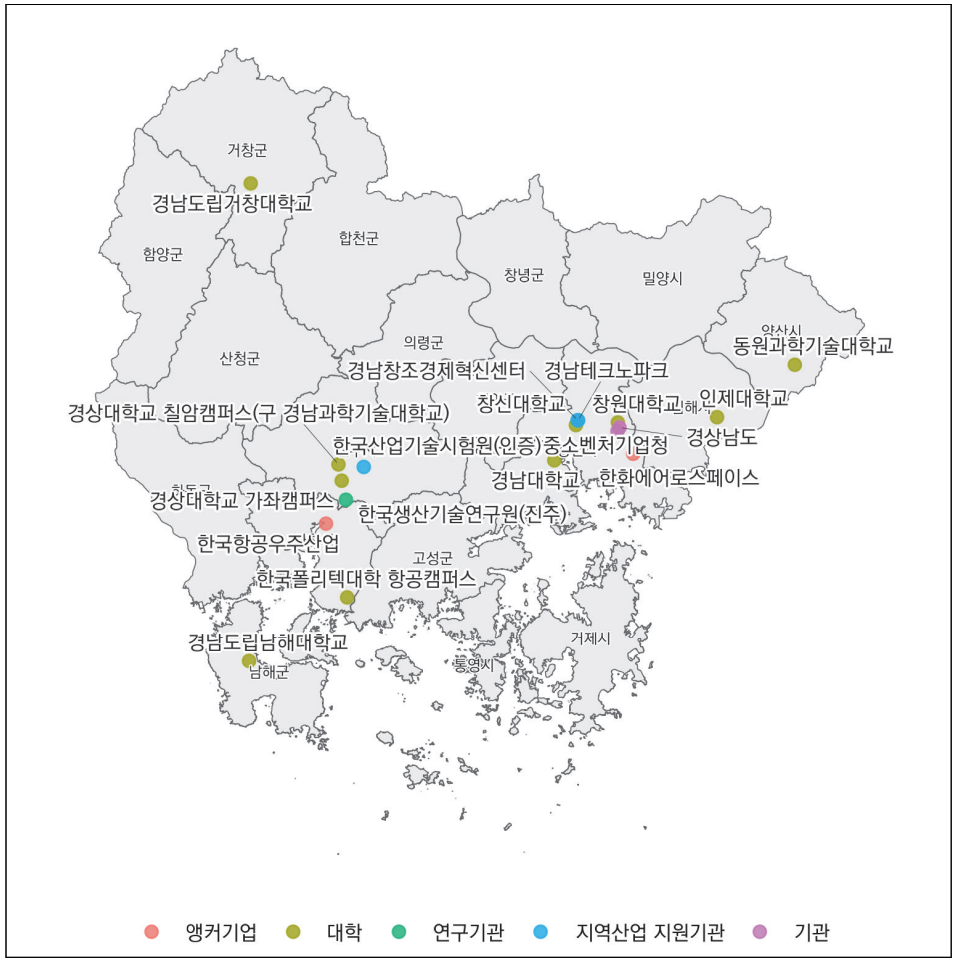
| 그림 6-14 | 경상남도 첨단항공부품 사업체 분포(2022)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경상남도 첨단항공부품 산업 생태계를 보면, 앵커기업, 연구기관, 지역산업 지원기관, 기관 등이 창원시와 진주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학은 여러 지역에 걸쳐 퍼져 있음

| 그림 6-15 | 경상남도 첨단항공부품 산업 생태계 현황



출처: 2024년도 경상남도 지역산업진흥계획(2024.1.)의 산업 생태계 자료를 활용함

□ 항노화메디컬 산업

❍ 항노화메디컬은 건강한 삶과 건강한 수명연장을 위한 노화예방·자연과 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임
- [표 6-3]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항노화메디컬 산업 범위를 나타냄

| 표 6-3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항노화메디컬 산업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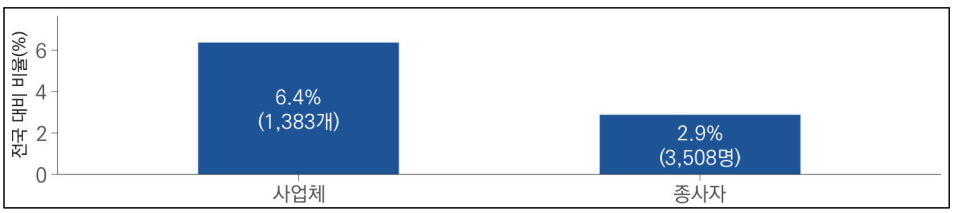
한국표준 산업분류 (KSIC)	산업명	한국표준 산업분류 (KSIC)	산업명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107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

출처: 2024년도 경상남도 지역산업진흥계획(2024.1.)

❍ 경상남도 항노화메디컬 산업의 주요 품목은 항노화 기능식품, 항노화 기능성화장품, 의약용 화합물, 의료용품, 신체보정용기기 등임

❍ 2022년 전국 항노화메디컬 산업 사업체의 6.4%(1,383개)가 경상남도에 소재하며, 종사자의 2.9%(3,508명)가 경상남도에 근무하고 있음

| 그림 6-16 | 경상남도 항노화메디컬 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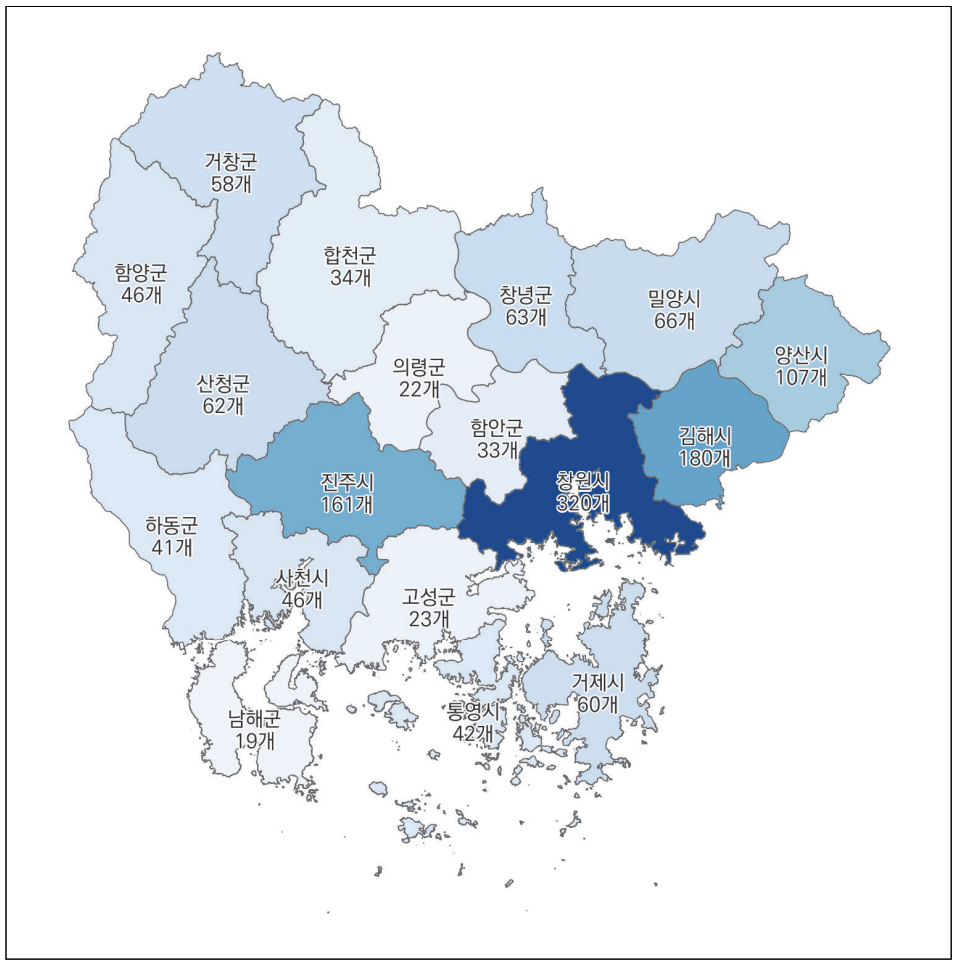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창원시를 중심으로 김해시, 진주시, 양산시에 항노화메디컬 사업체가 집적되어 있음

- 2022년 경상남도 시·군·구별 항노화메디컬 산업 사업체 분포를 보면, 창원시에 320개로 가장 많고, 김해시 180개, 진주시 161개, 양산시 107개 순으로 나타남
- 향후 경상남도에서는 김해시와 양산시 권역을 의생명 분야 동남권 핵심 허브로 육성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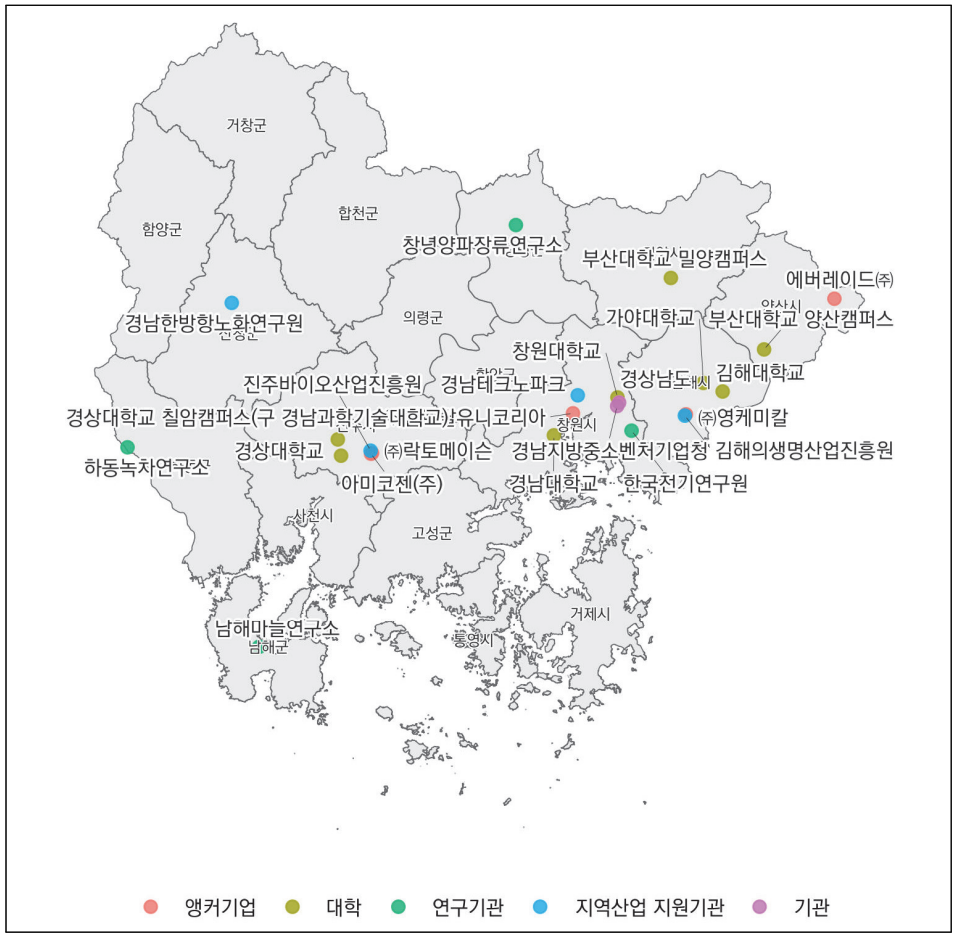
| 그림 6-17 | 경상남도 항노화메디컬 사업체 분포(2022)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경상남도 항노화메디컬 산업 생태계를 보면, 앵커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역산업 지원기관, 기관 등이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양산시에 분포되어 있음
- 사업체 집적지와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비슷한 것으로 분석됨
- 일부 연구기관과 지역산업 지원기관은 집적지 외부에 위치한 경우도 있음

| 그림 6-18 | 경상남도 항노화메디컬 산업 생태계 현황



출처: 2024년도 경상남도 지역산업진흥계획(2024.1.)의 산업 생태계 자료를 활용함

3) 교육 및 연구 관련 인프라 분석

(1) 교육기관

□ 유초중등 기관 현황

❍ 2023년 경상남도 유초중등 기관 현황을 보면, 전체 학교 수는 1,645개, 학생 수는 394,662명, 교원 수는 35,969명임

- 유치원이 658개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 508개, 중학교 266개, 일반고 149개, 특성화고 34개, 특수학교 11개 순으로 나타남

| 표 6-4 | 경상남도 유초중등 현황(2023)

(단위: 개, 명)

학제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교원 수 대비 학생 수
합계		1,645	394,662	35,969	11.0
유치원		658	36,931	4,215	8.8
초등학교		508	171,748	13,805	12.4
중학교		266	93,928	8,120	11.6
고등학교	일반고	149	76,841	7,116	10.8
	특목고	9	2,830	394	7.2
	특성화고	34	9,727	1,392	7.0
특수학교		11	2,049	769	2.7
고등공민학교		1	16	0	-
고등기술학교		1	163	26	6.3
각종학교		8	429	132	3.3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주: 조사기준일은 2023년 4월 1일

❍ 경상남도 주력산업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창원시, 진주시, 밀양시, 고성군 등에 분포되어 있음

- 첨단정밀기계 관련 교육기관으로 창원공업고등학교(창원시),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창원시),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진주시),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밀양시) 등이 있음
- 첨단항공부품 관련 교육기관으로 경남항공고등학교(고성군)이 있음

| 그림 6-19 | 경상남도 공업고등학교 현황(2024)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의 학교/학과별 데이터셋

□ 고등교육기관 현황

❍ 2023년 경상남도 고등교육기관 현황을 보면, 전체 학교 수는 42개, 학생 수는 199,584명, 전임교원 수는 7,102명임

- 전문대학이 20개로 가장 많고, 대학 14개, 사내대학 4개, 교육대학 2개, 기능대학 2개 순으로 나타남

| 표 6-5 | 경상남도 고등교육기관 현황(2023)

(단위: 개, 명)

학제	학교 수	재적학생 수	전임교원 수	전임교원 수 대비 재적학생 수
합계	42	199,584	7,102	28.1
대학	14	131,326	5,436	24.2
전문대학	20	42,450	1,026	41.4
교육대학	2	2,568	140	18.3
기능대학	2	4,952	170	29.1
사내대학	4	0	0	-
부설대학원	0	18,288	330	5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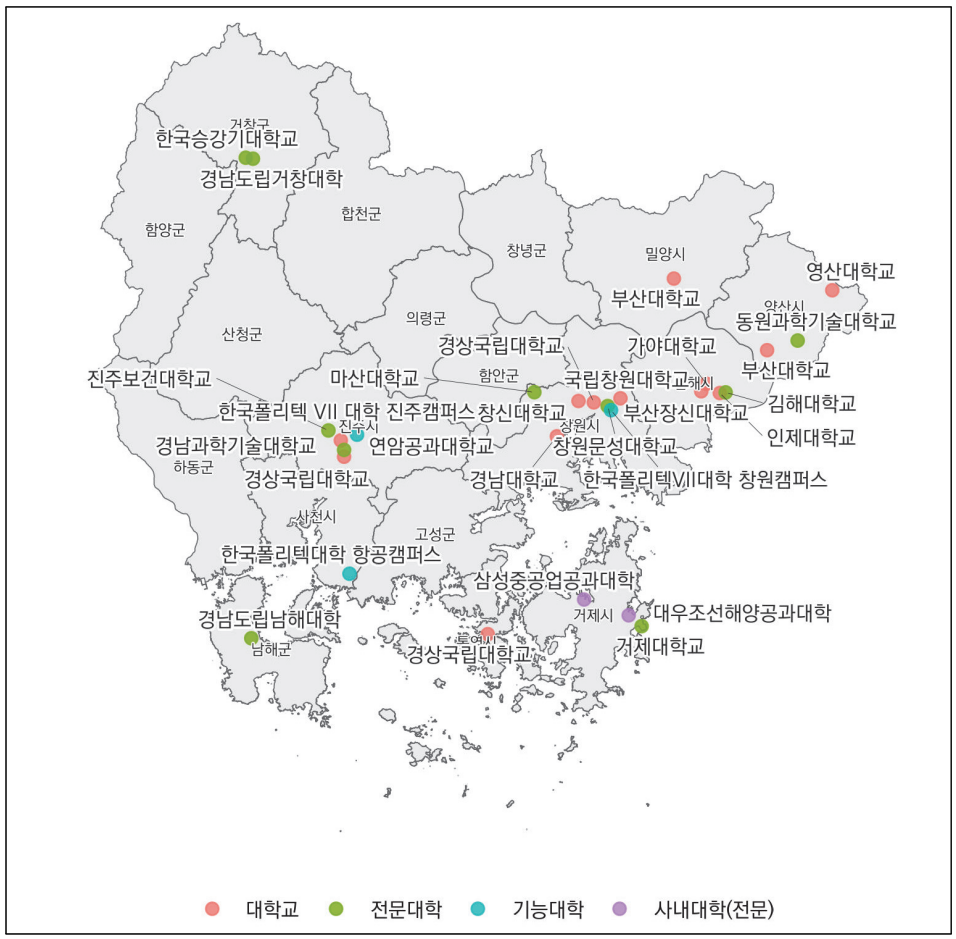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주: 조사기준일은 2023년 4월 1일

❍ 경상남도 주력산업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 전문대학, 사내대학(전문), 기능대학 등은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거창군, 밀양시, 양산시, 사천시, 남해군, 통영시, 거제시 등에도 있음

❍ 경상남도에는 주력산업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이 다수 분포해 있음

- 첨단정밀기계 산업 관련하여 경상국립대학교 공학연구원(진주시), 경남대학교지능기계시스템연구소(창원시), 창원대학교 메카트로닉스연구원(창원시) 등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한국폴리텍대학(창원시), 인제대학교(김해시) 등에서 인력을 양성함
- 첨단항공부품 산업 관련하여 경남도립거창대학교(거창군),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진주시), 경남대학교(창원시), 창원대학교(창원시), 경상대학교(진주시),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사천시), 인제대학교(김해시), 경남도립남해대학교(남해군), 동원과학기술대학교(양산시), 창신대학교(창원시) 등에서 기술개발과 인재 육성을 담당함
- 항노화메디컬 산업 관련하여 경남대학교(창원시), 경상대학교(진주시), 부산대학교(밀양시, 양산시), 경상대학교(진주시), 창원대학교(창원시), 김해대학교(김해시), 가야대학교(김해시) 등에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수행함

| 그림 6-20 | 경상남도 고등교육기관 현황(2024)



주: 고등교육기관 중 대학교, 전문대학, 사내대학(전문), 기능대학만 추출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의 학교/학과별 데이터셋

(2) 연구기관

❍ 경상남도의 연구 수행 기관 현황과 연구개발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과제 수행 현황을 분석하였음

❍ [표 6-6]의 경상남도 기관유형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성과를 보면, 경상

남도에서는 중소기업, 대학-부설 연구기관, 출연연에서 많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높은 연구성과를 내고 있음

- 2010~2023년 중소기업에서 수행한 연구과제 수는 6,985건으로 가장 많고, 전체 연구비는 약 2,605,596백만 원으로 출연연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며 특허 출원 역시 5,364건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 대학-부설 기관은 논문 수가 14,278건으로 여러 유형 중 논문이 가장 활발하게 생산되고 있으며, 특허 역시 5,691건 출원하여 출연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 출연연은 전체 연구비가 2,850,754백만 원으로 기관 유형 중 가장 연구비가 많고, 논문 4,559건, 특허 7,806건으로 연구개발 성과 역시 두드러짐

| 표 6-6 | 경상남도 기관유형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성과(2010~2023)

(단위: 건, 백만 원)

기관유형	과제 수	연구비	논문	특허
중소기업	6,985	2,605,596	1,798	5,364
대학-부설	5,075	975,000	14,278	5,691
출연연	4,980	2,850,754	4,559	7,806
정부/지자체-기타	943	66,971	451	98
중견기업	475	463,652	591	970
대기업	234	462,429	395	708
기타	157	25,090	44	114
국립연구기관-부설	47	6,384	24	22
준정부기관	47	40,251	118	92
지방자치단체	18	313	0	0
중소기업-부설	3	212	0	0
기타공공기관	1	50	0	0

주: 지역은 경남, 업종은 제조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자료 추출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웹사이트(https://www.ntis.go.kr/orginfo/index.jsp)

❍ [표 6-7]의 경상남도 업종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성과를 보면, 연구개발업, 기계·운송장비 제조업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음

- 2010~2023년 연구개발업에서 과제 수 10,088건, 연구비 3,409,651백만 원, 논문 19,052건, 특허 13,282건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임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경우 과제 수 2,165건, 연구비 977,067백만 원, 논문 794건, 특허 2,043건으로 높은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특허 성과가 두드러져 관련 산업 기술 혁신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줌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역시 연구비 758,231백만 원, 논문 451건, 특허 1,110건으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는 업종 중 하나로 나타남
- 이 외에도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에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 표 6-7 | 경상남도 업종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성과(2010~2023)

(단위: 건, 백만 원)

업종	과제 수	연구비	논문	특허
1차 금속 제조업	269	152,087	156	204
가구 제조업	5	352	0	0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43	10,282	2	15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477	634,387	466	70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86	161,146	226	399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540	167,362	226	34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165	977,067	794	2,04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823	758,231	451	1,110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8	6,465	1	24
기타 제품 제조업	79	11,912	5	6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3	2,353	0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5	88,483	110	16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4	550	0	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130	43,696	32	122
식료품 제조업	268	56,059	42	155
연구개발업	10,088	3,409,651	19,052	13,282
음료 제조업	25	3,404	13	25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387	176,768	121	36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50	8,587	3	29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9	2,096	0	3

업종	과제 수	연구비	논문	특허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0	2,023	0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25	420,859	228	731
전기장비 제조업	400	157,824	105	276
전문 서비스업	12	4,197	1	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531	4	0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29	132,960	143	554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6	2,584	0	1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9	9,417	10	1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323	95,369	67	214

주: 지역은 경남, 업종은 제조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자료 추출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웹사이트(https://www.ntis.go.kr/orginfo/index.jsp)

2. 지자체 정책

1) 지역발전정책

(1) 정책의 비전과 목표

□ 도정의 비전과 지역발전정책 목표

❍ 경상남도는 민선 8기의 도정 비전을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분야의 핵심목표를 설정

❍ 지역발전정책에는 다양한 정책이 포함될 수 있으나 경상남도 교육발전특구가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 육성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산업육성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봄

- 4대 분야 중에 하나의 핵심목표로 제시된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가 산업육성 정책과 관련이 있음
- 경상남도 산업육성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산업국의 산업정책과로서, 최근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정책목표로 '디지털 혁신과 첨단산업 육성으로 글로벌 제조거점 도약'을 제시하여 산업 고도화와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도의 관심과 의지를 알 수 있음

- 산업국의 2024년 정책목표는 '디지털 혁신과 첨단산업 육성으로 글로벌 제조거점 도약'으로 설정
- 산업정책과 관련된 정책과제로는 '첨단과학기술 육성 및 스마트제조혁신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주력산업 디지털 전환 및 고도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우주항공청 개청과 글로벌 우주항공 강국 도약 발판 마련',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첨단산업 육성', '원전 제조거점 육성 및 수소생태계 기반구축' 등이 제시

□ 산업육성 정책 사업 현황 및 재정계획

❍ 공약사업 중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 관련 사업 수는 6개(세부 32개)로 이들 중 산업통상국 소관 사업이 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민선 8기 산업 분야 공약사업의 총 사업비는 2022년 발표 기준 2,593,429백만 원으로 산출됨
- 국비가 16.9%, 도비가 6%, 시군비가 7.5%, 기타가 69.6%를 차지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비와 도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과 민간 혹은 기타 재원이 대부분인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서부경남 항공우주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국비 25.3%, 도비 34.6%, 시군비 40.1%로 다양한 재원이 고르게 분포된 반면,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100% 기타 재원으로 구성되어 민간 혹은 특정 목적 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근거리 비행수단 메카 조성 사업은 국비 비중이 60.5%로, 정부 지원이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이 외에도 수소산업 혁신플랫폼 구축 및 수소 핵심기술 사업화와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은 각각 국비 비율이 56.2%, 73.4%로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남

| 표 6-8 | 경상남도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산업 분야 재원별 투자계획(2022~2026년)

(단위: 백만 원, (%))

기관유형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 타
총 사업비	2,593,429 (100)	438,500 (16.9)	156,172 (6)	194,372 (7.5)	1,804,385 (69.6)
서부경남 항공우주클러스터 구축 및 특례지원	88,000 (100)	22,256 (25.3)	30,476 (34.6)	35,268 (40.1)	0 (0)
근거리 비행수단 메카 조성	65,117 (100)	39,401 (60.5)	17,450 (26.8)	1,240 (1.9)	7,026 (10.8)
지능형 기계·소재·나노부품 산업 육성	122,162 (100)	66,524 (54.5)	14,701 (12)	31,899 (26.1)	9,038 (7.4)
미래 친환경·스마트 선박산업 육성	183,033 (100)	101,918 (55.7)	27,300 (14.9)	39,200 (21.4)	14,615 (8)
미래차 전략기술 기반 확충 및 산업 구조 고도화	68,556 (100)	29,356 (42.8)	11,220 (16.4)	26,180 (38.2)	1,800 (2.6)
첨단의료·바이오헬스산업 육성	19,700 (100)	9,700 (49.2)	2,400 (12.2)	7,600 (38.6)	0 (0)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수출지원	82,226 (100)	28,076 (34.1)	19,360 (23.5)	32,790 (39.9)	2,000 (2.4)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1,734,000 (100)	0 (0)	0 (0)	0 (0)	1,734,000 (100)
경남 맞춤형 특화 로봇산업 중점 육성	54,070 (100)	33,207 (61.4)	5,512 (10.2)	9,438 (17.5)	5,913 (10.9)
수소산업 혁신플랫폼 구축 및 수소 핵심기술 사업화	83,741 (100)	47,060 (56.2)	5,350 (6.4)	4,850 (5.8)	26,481 (31.6)
인공지능 분야 미래 전략기술 육성	6,457 (100)	3,732 (57.8)	1,600 (24.8)	0 (0)	1,125 (17.4)
메타버스 기반구축 및 기술개발 추진	59,891 (100)	40,625 (67.8)	16,722 (27.9)	2,037 (3.4)	507 (0.8)
사물인터넷 분야 미래 전략기술 육성	13,200 (100)	6,900 (52.3)	2,520 (19.1)	3,780 (28.6)	0 (0)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	13,276 (100)	9,745 (73.4)	1,561 (11.8)	90 (0.7)	1,880 (14.2)

주: 2022년 발표 당시 기준 자료로 2024년 9월 현재와는 차이가 있음
출처: 경상남도(2022), 〈민선8기 도정과제 실천계획〉 재구성

(2) 주요 관련 사업

○ 산업육성 정책 담당 부서인 산업국의 산업정책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함

□ 디지털 제조혁신과 미래첨단산업 기반 조성

○ 제조업의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해 주력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함
-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사업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함
- 방위 산업 관련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첨단화를 추진하고 방산 수출을 확대함
- 조선 산업 생산기술혁신센터를 구축하고 친환경 및 스마트 기술 개발을 지원함

○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재편을 추진함
-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본격화함
-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와 더불어 원전 관련 정부 예타 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함
- 수소 특화 단지 조성 등 기술 집약적 산업을 육성함

□ 국가전략기술 대응 경남형 신산업 지원

○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패러다임에 대비하여, 경남형 첨단전략기술을 발굴·육성하고 새로운 산업 성장 동력을 확보함

○ 경남의 전략산업을 국가전략기술과 연계하여 조세특례 기술로 지정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함

□ 경남형 지속가능경영(ESG) 확산 추진

○ 기업의 ESG 경영 전략 수립과 실천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함

○ ESG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의 생산 공정을 개선하는 지원을 제공함

○ ESG 경영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업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함

□ **지역특화 산업육성으로 미래성장 경쟁력 강화**

○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기업지원을 제공하며 지역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함

○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신규 국책사업을 발굴하여 미래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함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

○ 2024년 230개사를 대상으로 528억 원(국비 264억 원, 도비 63억 원, 시군비 등 201억 원)을 지원하여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산함
-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경상남도는 2,497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1,035개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182건의 금융지원을 시행했음
- 고도화 단계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비율이 2022년 45%에서 2023년 69.4%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전체 구축기업 중 고도화 기업은 21.3%(532개사), 기초 기업은 78.7%(1,965개사)를 차지하고 있음

○ 스마트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650명을 양성하기 위해 도비 5억 원을 투입하여 교육을 지원할 예정임
-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7,365명을 양성하였으며, 이 중 신규 인력양성 과정으로 2,444명, 재직자 과정으로 4,622명, IT 전문가 과정으로 299명을 교육했음

□ **연구개발 혁신역량 제고 및 과학문화 확산**

○ 강소특구 육성, 중소기업 R&D 사업화 지원센터 운영, 연구개발지원단 운영, 기초연구 분야 대학 R&D 공모사업 지원 등을 통해 연구개발 혁신 역량을 강화함

○ 지역 과학문화 역량 강화사업,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건립 지원, 과학기술포럼 개최 등을 통해 과학기술문화의 활성화를 추진함

□ **과학기술기관 설립으로 도(道) 첨단산업 선도**

○ KAIST와의 협력으로 공동사업을 진행하며, KAIST 경남 연구센터를 개소함

○ 산학연 연계를 통한 기업 맞춤형 대학원인 아세안공학기술원(AIT, 가칭) 설립을 추진하며, KAIST 캠퍼스 분원 유치와 함께 투트랙 전략을 펼침

2) 교육정책

(1) 정책의 비전과 목표

□ **도정의 비전과 교육정책 목표**

○ 경상남도는 민선 8기의 도정 비전을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분야의 핵심목표를 설정

- 교육정책은 4대 분야 중에 하나의 핵심목표로 제시된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와 관련
  - 그 외에 다른 3개의 핵심목표는 '편리한 공간 융성한 문화', '안전한 생활 든든한 복지',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 등을 제시

○ 경상남도의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교육청년국의 교육인재과로서, 최근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정책목표로 지역인재양성과 인력지원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경남을 제시하여 교육에 대한 도의 관심과 의지를 알 수 있음

- 교육청년국의 2024년 정책목표는 '지역인재양성과 인력지원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경남'으로 설정
  - 교육정책과 관련된 정책과제로는 '지역산업 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 '지역 교육혁신 및 지역 주도 인재 양성', '청년지원사업 통합관리를 통한 청년 체감정책 추진',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완화 및 일하고 싶은 환경 조성', '청년 문화 활성화 및 거점 활동공간 확대', '맞춤형 인력지원으로 산업현장 빈일자리 해소', '일자리 사각지대 외국인인력 확대 및 정착지원' 등이 제시

□ 교육정책 사업 현황 및 재정계획

❍ 공약사업 중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 관련 사업 수는 6개(세부 32개)로, 이들 가운데 일부 사업내용이 교육 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교육 분야와 관련된 사업은 산업 육성책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음
  • 사물인터넷 분야 미래 전략기술 육성(산업정책과 소관) 중 인력양성,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산업정책과 소관) 등이 해당
- 교육인재과 소관 사업은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민선 8기에서는 교육 분야에 중점을 두어 공약사업을 기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 사업이 포함된 과제에 한하여 재정계획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재원별 비중은 국비 62.9%, 도비 15.4%, 군비 14.6%, 기타 7.1%로 나타남
- 사물인터넷 분야 미래 전략기술 육성 총 사업비는 13,200백만 원이며, 국비 52.3%, 도비 19.1%, 군비 28.6%로 구성됨
-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 총 사업비는 13,276백만 원이며, 국비 73.4%, 도비 11.8%, 군비 0.7%, 기타 14.2%로 구성됨

| 표 6-9 | 경상남도 민선 8기 공약사업의 교육 분야 재원별 투자계획(2022~2026년)

(단위: 백만 원, (%))

기관유형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 타
총 사업비	26,476 (100)	16,645 (62.9)	4,081 (15.4)	3,870 (14.6)	1,880 (7.1)
사물인터넷 분야 미래 전략기술 육성	13,200 (100)	6,900 (52.3)	2520 (19.1)	3780 (28.6)	0 (0)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	13,276 (100)	9,745 (73.4)	1561 (11.8)	90 (0.7)	1880 (14.2)

주: 2022년 발표 당시 기준 자료로 2024년 9월 현재와는 차이가 있음
출처: 경상남도(2022), 〈민선8기 도정과제 실천계획〉 재구성

(2) 주요 관련 사업

□ 사업 개요

○ 교육정책 담당 부서인 교육청년국의 교육인재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함

□ 지역과 협력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 도와 시군·교육청 간 교육현안 협의체계 운영 및 지역교육 협력 활성화
- 경상남도는 도 교육청과 시군 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교복 구입비 사업비 분담, 급식 식품비 분담률 및 단가 인상 등 교육 관련 현안을 상설로 협의함

○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통한 마을 소멸 위기 대응
-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이주를 유도하여 소멸 위기에 처한 마을과 학교를 활성화하고, 민·관·학 협력을 통해 임대주택을 건립하며 정주 여건을 개선함
- 2024년에는 3개소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개소가 추진됨

○ 지역과 학교의 상생을 위한 시군협력사업 추진
- 도, 시군, 교육청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배움 공간을 제공하고, 복지회관 등 유휴공간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 2023년에는 산청 신등면과 거창 웅양면을 포함한 2개소가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됨

○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저소득층 교육 지원
-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45천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교육지원 바우처를 제공하여 서민자녀의 학력 향상을 지원함
- 추가로, 같은 가구의 중·고등학생 800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습 의욕을 고취함

□ 지역주도 대학혁신을 통한 인재육성 생태계 구축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안정적 도입을 위한 모델 구축
- 지역정주 인재 양성 및 지역산업 발전과 성장을 목표로 RISE 체계를 구축함
- RISE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도내 대학, 산업계,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함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모델을 도출 및 구체화함
  • 주요 추진모델: ① 글로벌 연구 대학, ② 지역전략산업 연계, ③ 혁신성장 평생교육 강화, ④ 지역정주 환경 조성
- 2025년 이후에는 타 부처 인재양성사업과 RISE 체계를 연계하여 道 주도의 인재 양성을 실현함

❍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의 대학 혁신 주도 및 지역혁신체계 구축
- USG 공유대학과 기업 연계 인턴십을 통해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연계를 지원함
  • USG 공유대학: 5개 핵심 분야의 8개 융합전공 교육과정 운영(1,000명 대상 교육, 융합과정 이수자 800명 취업 지원)
- 석·박사급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주력산업과 첨단산업(AI·SW)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USG 공유대학원 과정을 운영함

❍ 지역산업 수요에 맞춘 도립대학 운영 지원 및 구조개혁
- 도립대 구조개혁(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함
- 도립대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 2월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함
- 기숙사 신축과 전액 장학금 지급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공역할을 강화함

□ 지·산·학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수요 맞춤 인재 양성

❍ 글로컬대학(경상국립대) 혁신계획 이행 및 성과 확산 지원
- 혁신계획의 이행을 지원하고, 핵심 혁신과제의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운영함

❍ 글로컬대학 추가 지정을 위한 지역수요 기반 대학혁신 추진전략 마련
- 글로컬대학 추진협의체 및 전담 TF 운영, 예비 및 본지정 관련 전문가 자문을 지원함
- 과학기술연구 중심 대학(국·공립대 통합), 전문대 고등직업교육 연합, 사립대 연합 도시캠퍼스 등의 전략을 포함함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경남형 특구 지정안 마련
- 항공 분야 등 지역 특화 산업에 맞춘 인재 양성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함
- 시군 의견 수렴 및 교육청 협의를 통해 경남형 모델안을 마련함
  • 주요 모델안: 항공분야 전문기능인력 양성, 지역특화 산업 기능인력 양성, 디지털 교육혁신, 혁신도시 연계형 학교, 늘봄학교
  • 지역특화 산업은 항공(진주·사천·고성), 방산·수소(창원), 항만·물류(창원), 조선(거제), 나노(밀양), 승강기(거창), 의생명(김해), 스마트공장(양산)

□ 도민 평생교육 체계적 지원으로 인재육성 기반 강화

❍ 평생학습 광역거점기관 기능 확대 및 평생교육 전문성 강화
- 광역 문해교육 사업을 활성화하여 '경남 통합 온라인 평생학습 강좌'인 '배움온'을 운영하고, 문해의 달 행사를 진행함
- 지역 대학을 포함한 협력 범위를 기존 도(진흥원) 및 시군 간 협력에서 도(진흥원)-대학-시군 간 협력으로 확대하고, 자체 인력을 활용한 평생교육 컨설팅을 추진함

❍ 장애인 및 성인 문해교육 수요자 등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며(10개소),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6개소)
- 취약지역의 평생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1개 시군에 강좌를 지원함
- 군부 및 시부 지역의 비평생학습 도시 대상 강좌나르미 지원사업 포함

❍ 지역과 대학의 선순환 발전 생태계(인재-취창업-정주) 구축 및 운영
- RISE센터 사업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전문 인력 추가 확보, 관리 시스템 및

규정 마련), 도 RISE 기본계획('25~'29)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센터의 역할을 강화함

○ 남명학사 체계적 운영과 장학지원으로 지역 인재육성 기반 구축
- 평생교육진흥원의 수탁 운영('23.1.~)에 따른 남명학사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함(2개소)
- 대학 입학생(250명)과 재학생(20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생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함(30명)

3) 관련 조례

(1) 지역발전정책

□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경남 지역의 경제를 선도할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이 조례는 전략산업의 선정과 육성방향, 종합계획의 수립, 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 기반시설 및 기술개발 지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선도기업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경남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유망 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우선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도지사가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도록 규정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자금·인력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함
-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 산업단지 조성, 교육훈련, 자금·기술지원 등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우선 제공함
- 도내 본사 및 공장 설립을 돕기 위해 기반시설을 우선 공급하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시험비용 지원,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기술 지원을 제공함
- 전략산업 발전과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등을 촉진하여 기술 이전과 국제 학술 행사 등을 활성화함

- 전략산업의 고도화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지정하여, 이들 기업에 우선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며, 해당 기업에 대한 우수 사례 발굴과 포상을 추진함

(2) 교육정책

□ 경상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지역 내 대학의 역량 강화와 균형 잡힌 지역 인재의 육성을 촉진하여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이를 위해 도지사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도록 하며, 공공기관과 기업이 지역 인재의 채용 확대에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행계획 수립 및 자료 요청,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사업, 육성지원 협의회 구성,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 지도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도지사는 연도별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대학 및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도지사는 교육역량 강화, 취업 능력 개발, 정주 기반 마련 등 다양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함
- 도지사는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20명 이내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협의회는 시행계획, 시책 평가, 채용 실태 분석 등의 사항을 심의함
- 도지사는 필요 시 대학, 기업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
- 도지사는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감독하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포상을 시행할 수 있음

□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내 작은 학교에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며, 예산 지원을 통해 교육 복지 증진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시설 개선, 교육 복지 및 통학 편의 등을 포함한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명시함

❍ 지자체와 지역사회 협력 및 교직원 지원, 학생 유치 및 지원체계 강화, 재정적 협력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소멸 위기 마을과 학교의 상생을 촉진하고, 교직원에게 배치, 연수, 업무 경감 및 주거 편의 등을 제공하여 근무 여건을 개선함
- 학생 유치를 위해 공동학구 적용과 통학차량 지원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며, 작은 학교 지원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정함
- 교육감은 도지사 및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재정적 분담을 위한 협의를 통해 작은 학교의 지속 가능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제3절 관련 정책동향 분석

1. 교육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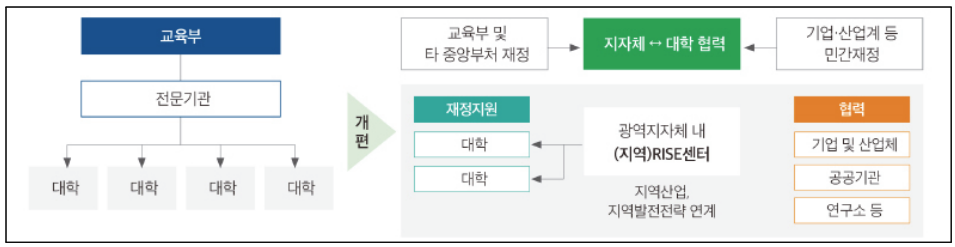
1) 교육부 관련 정책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RISE 사업은 대학과 지역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지역발전계획(산업, 과학, 문화 등)과 연계하여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을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함

- 교육부는 대학 지원에 관한 행정 및 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여, 지자체가 대학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원을 실시함

| 그림 6-21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추진체계



출처: 행복한 교육 웹사이트(https://happyedu.moe.go.kr/)

○ 2024년 4월 기준, 각 시도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RISE 5개년(2025~2029) 계획 시안을 교육부에 제출하였으며, 추진체계 구축 및 시도별 계획 최종 확정 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임

○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 내용은 △경쟁력 있는 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기반 구축,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 성장동력 발굴, △직업 및 평생교육 지원을 통한 일과 학습 연계, △대학 역량을 활용한 지역 현안 해결을 포함함

□ 글로컬대학

❍ 글로컬대학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기 위해 지역 및 산업계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대학의 내·외부 장벽을 허물고자 하는 비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는 사업임

❍ 대상 대학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이며, 예비지정과 본지정 평가 후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최종 심의로 결정됨

❍ 2023년 10개 내외에서 시작하여, 2026년까지 총 30개 내외 지정 목표로 함
- 2023년에는 10개 글로컬 지정대학(14교)을 통해 △국립대 거버넌스 혁신(강원대-강릉원주대), △국·공립대 통합 모델(안동대-경북도립대), △지속가능 재정펀딩 모델(포스텍, 울산대) 등 혁신사례를 조기에 창출함

| 표 6-10 | 2023년 글로컬 본지정 대학

대학	내용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	'1도 1국립대'를 통해 4개 캠퍼스를 지역별로 특성화하여 강원권의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 거버넌스 구축
경상국립대학교	경남의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과 협력해 지역 내외 연구소, 산업체와 연계하여 우주항공방산 허브로 도약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Edu-TRIangle 프로젝트를 통해 AI와 디지털 역량 강화, 세계적 에듀테크 거점 구축으로 미래교육도시 육성
순천대학교	스마트팜, 애니메이션, 우주항공·첨단소재 분야에 약 75%의 정원을 배정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강소기업을 지원
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공공형 대학으로 전환하여 인문학 중심의 K-인문 한류 창출과 지역 내 교육·연구기관과의 통합 운영
울산대학교	도심 및 산업단지에 멀티캠퍼스를 설치하여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기업지원 Complex를 통해 울산 산업 전환을 견인
전북대학교	국내외 연구자 유치를 위한 국제캠퍼스 조성으로 전북과 지역대학을 세계로 연결하고, 다양한 학위·비학위 과정을 운영
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통합을 계기로 캠퍼스를 주력 산업과 연계해 특성화하고, 개방 공유형 캠퍼스를 조성하여 현장 중심 인재 양성을 강화
포항공과대학교	연구중심대학의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기업의 창업과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벤처·스타트업 허브 조성
한림대학교	3대 융합 클러스터(의료·바이오, 인문·사회, AI) 중심으로 학과 구조를 개편하고, AI 기반 맞춤형 학습을 통해 창의 융합 인재 양성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23.11.13.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을 선도할 2023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 발표" 재구성

□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

❍ 첨단분야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 인재양성정책이 마련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인재양성전략회의가 반기별로 개최될 예정이며,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제정이 추진됨

❍ 대학은 첨단 인재 양성의 핵심 역할을 맡아 △산학협력 교육과정 개발, △교원 확충, △실험·실습 인프라 구축 등으로 집중 재정 지원을 받으며, 반도체·이차전지 특성화 대학 및 첨단산업 부트캠프가 확대될 계획임

❍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이 협력하여 융복합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해 학생들에게 첨단분야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AI와 반도체를 포함한 혁신 융합대학 프로그램이 확대될 예정임

❍ 또한, 학부 중심이었던 산학협력은 석·박사 과정까지 확대되며, 산업과 연계한 기술인력 양성 시스템을 강화하고, 대학·기업·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교육과 연구의 공동 수행을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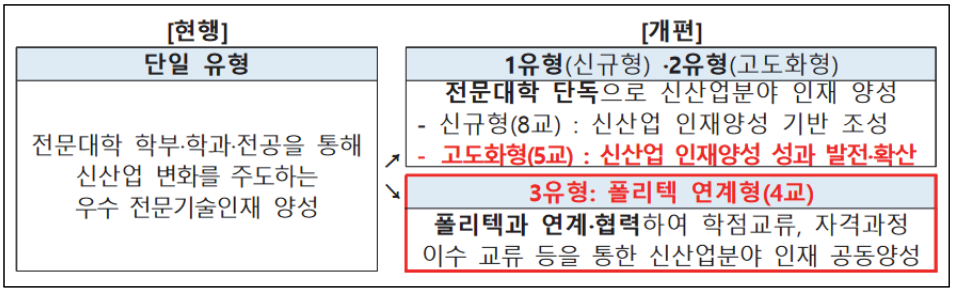
❍ 추가로,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마이스터고가 지정되며, 기존 마이스터고의 산학협력 고도화도 지원됨

□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개편

❍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은 전문대와 폴리텍 대학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신산업 분야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임

- 전문대학과 폴리텍이 보유한 고등직업교육 자원 활용을 효율화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전문기술 인재를 양성함
- 전문대학과 폴리텍이 연계·협력을 위한 MOU를 기반으로 사업에 참여하되, 전문대학이 주체가 되어 사업 참여 및 사업비를 지원함

| 그림 6-22 |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유형 다변화



출처: 교육부. 2024.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2.0 기본계획"

○ 이를 위해 △공동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교육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학점 교류와 복수 자격 과정 이수 등을 추진하며, 전문대학과 폴리텍 간 협력 트랙을 새롭게 신설하여 전문성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2) 기타 교육부 관련지원정책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은 지역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청, 지역 기업, 특성화고가 연합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임

○ 협약형 특성화고를 통해 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역 완결형 인재 양성 모델을 실현하고, 지역 전략 산업에 맞춘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지역 내 취업률과 정주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2024년 선정된 10개 협약형 특성화고는 철도, 반도체, 방산, 관광농업, 바이오 등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된 분야에서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지역 인재를 육성할 계획임

○ 지자체, 교육청, 지역 기업, 특성화고등학교가 협력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하고 실무 중심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업, 정주,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함

- 지자체는 취업 및 정주 지원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청년 정책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필요시 조례 제·개정 및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특성화고 운영을 뒷받침함
- 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 교장 공모제 및 산학겸임교사 도입을 통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재정 투자를 통해 안정적 교육 환경을 지원함
- 지역 기업은 인재상 설정 및 산학융합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며, 현장실습 기회 제공과 졸업 후 채용을 통해 학생들이 실무 경험을 쌓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 산업에 맞는 특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여 실무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며, 산학협력 단체들과 협력해 학생들의 취업 및 후학습(후진학) 기회를 마련함

| 표 6-11 |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연합체 선정 결과

시도	분야	학교	지자체
서울	철도	용산철도고등학교	서울특별시청, 용산구청
인천	반도체	인천반도체고등학교	인천광역시청
인천	항공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인천광역시청
대전	방산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대전광역시청
강원	관광농업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	강원 춘천시청
충남	기업SW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충남 천안시청
전북	치즈·바이오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전북특별자치도청, 임실군청
경북	이차전지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	경상북도청, 포항시청
경남	어선 해기사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경상남도청, 남해군청
제주	항공우주	한림공업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청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24.5.20. “지역에서 교육-취업-정주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첫 선정 결과 발표”

2. 지역발전정책

1)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

❍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기존 혁신 거점을 연계하여, 각 지역의 특성화된 혁신자원과 역량을 활용하는 자립적 성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 사업은 신산업 육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며, 혁신 인력과 R&D 인프라의 집적을 통해 지역 주도의 성장을 이루고자 함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27조, 제28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기반하여 추진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주요 지원 대상임

❍ 주요 프로그램은 기업유치 및 정책지원, 인력 양성 지원, 글로벌 협력 지원, 기업 지원 등으로 구성됨
-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클러스터 내 기업 유치 활동을 활성화하고 관련 정책적 지원을 제공함
-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특화 산업에 맞춘 전문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인턴십, 재직자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
- 특화 산업 육성에 필요한 해외 기술과 협력 채널을 구축하며, 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도 포함됨
- R&D 성과 제고를 위해 시제품 제작, 기술 인증, 기업 설명회(IR)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함

2) 중견기업-지역혁신얼라이언스 지원

❍ 지역 중견기업과 대학을 포함한 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 기술 수요와 연구 역량을 연계하고 협력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과 중견기업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중견기업의 기술역량 강화와 지역 혁신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됨

❍ 주요 프로그램은 중견기업-대학 매칭, 산학협력 기반 석박사 과정 운영, 지자체 인력양성 프로그램 연계로 구성됨
- 지자체 주도로 중견기업의 기술 수요와 대학의 연구 역량을 연계하여 '혁신연구실'을 지정하고, 인력양성 및 공동 연구개발(R&D)을 수행함
- 중견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을 혁신연구실에서 공동 연구하며, 석박사 과정은 실제 R&D 과제와 연계한 PBL(Project-Based Learning) 방식으로 운영됨
- 지자체가 시행하는 청년 및 대학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함

3)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 산업단지 내에 대학 캠퍼스와 기업연구소를 통합하여, 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함
- 지역 내 현장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산업단지와 대학이 긴밀히 협력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

❍ 주요 프로그램은 산업융합기반 조성, 산학융합촉진 지원 등으로 구성됨
- 기업연구관, 대학 캠퍼스관, 기업지원시설 등을 포함하여 대학과 기업 간의 공간적 통합 인프라를 구축함
-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통해 R&D 공동연구와 프로젝트Lab 운영, 인턴십 등을 통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중소기업의 기술지원도 함께 제공됨

❍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7개 지구가 선정되어 지원 중이며, 총 14개 지구가 조성 완료됨

| 표 6-12 | 산학융합지구 조성 현황(2023년 8월)

구분	지구	특화업종	지구	특화업종
조성 완료 (14)	경기	기계소재, 전기전자	충남당진	철강, 자동차, 기계소재
	전북	기계, 자동차, 조선해양, 신재생에너지	부산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경북	모바일, 디스플레이, 메카트로닉스, 전기전자	전남여수	석유화학, 플랜트공정
	전남대불	조선해양	전남나주	에너지, ICT
	충북	바이오	인천	항공, 자동차, 뿌리산업
	울산	화학, 소재, 에너지, 메카트로닉스	제주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제조, 화장품
	경남	지능형생산기계, 기계소재부품, 항공, 나노광학	음성	신재생에너지
조성중 (3)	광주 ('23 예정)	자동차	경산 ('23 예정)	기계, 전기전자, 소재부품장비
	원주 ('24 예정)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	-

출처: 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 웹사이트(https://www.nabis.go.kr/)

제4절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1. 정책적 시사점

□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교육발전특구의 비전, 목표, 전략 수립

○ 경상남도 교육발전특구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은 지역의 고유한 여건과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여 경남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음
- '경남형 미래전략산업 교육발전특구'라는 비전 하에, 인재와 기업이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첨단정밀기계, 첨단항공부품, 항노화메디컬 등 경남의 주력산업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인재 양성 전략은 지역 산업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고 있음

□ 통합적 정책 설계 추진

○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 고용, 정주를 연계한 통합적 접근이 중요한데, 경상남도는 이를 고려한 사업을 기획했음
- 경상남도는 교육기관이나 기업 간 협력 모델을 구상함과 동시에 청년 주거 지원과 청년 문화환경 조성 등 정주 여건 강화를 정책에 포함함

○ 교육을 통한 인재 정착 유도 전략은 단순히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넘어, 지역 내 인재가 해당 산업에 종사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지방정부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조정 역할 중요

○ 협력사업 추진 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 구조를 주도하고 조율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면,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줌
- 경상남도 사례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협력과 조율에 나설 때 지역 교육 및 산업 연계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경상남도는 공모사업 신청 단계에서 기관 간 이견을 적극적으로 조율

하고, 지역별 맞춤형 협력 모델을 선제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사업 참여를 유도했음

❍ 경상남도는 관련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 기관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음
- 경남교육청의 직업교육혁신지구와 같은 선도 모델을 특화사업에 연계하여 예산 확보와 사업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등 기관별 강점을 활용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제안함

❍ 즉, 경상남도는 주도적인 설득 과정을 통해 각 기관의 참여를 끌어냈으며, 기관별로 관심을 가질 만한 정책 모델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교육발전특구 사업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

2.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전략 수립

□ 경남 교육발전특구의 차별성

❍ 경남 교육발전특구가 가진 차별성은 지역산업과 교육을 긴밀히 연계하여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음
- 경상남도는 첨단정밀기계, 첨단항공부품, 항노화메디컬 등 주력산업에 기반해 초·중·고부터 대학, 특성화고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 인재 양성 체계를 마련하며, 이를 통해 경남 내에서 인재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독자적인 지역 특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 특히 경남 특화산업을 반영한 지역별 지구 설정 및 그에 맞춘 다양한 교육과정 제공은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전략으로서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우주항공 지구의 삼천고공업고등학교 내 항공실습장 구축, 나노 지구의 나노기술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미래조선 지구의 거제 글로벌 센터와 방과후 직무 강화 교육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전략으로, 지역 인재의 산업별 적응력을 높이고 경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과제들로 평가됨

□ 경남 교육발전특구 모델 확산을 위한 전략

○ 경남 교육발전특구 사례는 다른 지자체가 기업과 협력하여 현장 학습을 강화하는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데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음
- ‘산업연계 특성화고 역량강화’, ‘유관기관 연계 지원 강화’, ‘채용연계 과정 및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스마트 제조 맞춤 인력 양성’ 등 추진과제가 이에 해당함

○ ‘산업연계 특성화고 역량강화’ 과제를 참고하여 지역 내 주력 산업과 연계하여, 특성화고에서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항공, 제조, 조선 분야에서 기업의 요구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고, 고교학점제와 연계하여 산업체 현장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해당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쌓도록 지원할 수 있음

○ ‘유관기관 연계 지원 강화’ 과제를 참고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이나 산업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배치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
- 특히, 예비 기능 인력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우주항공 분야처럼 OJT(On-the-Job Training)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무 기술을 익히고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교육-취업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음

○ ‘채용연계 과정 및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과제를 참고하여 기업의 요구에 맞춘 교육, 실습, 취업이 연계된 앵커기업반을 특성화고에 개설하여, 학생들이 학교-기업 간의 통합된 학습 과정을 통해 실무 역량을 쌓도록 할 수 있음
- 기계 가공 분야 등 특화된 분야에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단을 운영하여, 학교에서 이론과 실습을 배우고, 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맞춤형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스마트 제조 맞춤 인력 양성’ 과제를 참고하여 스마트 제조 등 신산업에 맞춘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 대학 및 전문 교육기관과 협력해 현장 실습 및 인턴십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창원대학교와 같은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제조업 혁신과 관련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통해 특성화고와 전문대가 연계된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맞춤형 교육은 지역 내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인재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경상남도의 교육발전특구 모델은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한 점에서 다른 지자체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 경상남도는 광역 차원에서 AI 디지털 교육혁신, 공교육 경쟁력 제고, 돌봄체계 구축 등 9가지 공통과제를 추진하여 도 전체의 교육 혁신과 기초 교육 인프라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각 시군과 교육지원청은 지역 산업 특성과 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특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 요구에 맞는 산업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2) 교육발전특구 주체 간 유기적 연계 강화

□ 지자체-교육청 간 연계 강화 방안

❍ 경상남도는 '경남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를 통해 도(시군)-교육청(교육지원청)-기업-학교-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역할 분담의 관점에서 보면, 도 및 시군은 교육 인프라와 고용 지원을 총괄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교육과정 지원과 현장 실습을 중심으로 교육 활동을 담당하는 구조로 적절히 나누어져 있음

- 구체적으로, 도와 시군은 교육 인프라 구축, 정주 여건 개선, 지역 산업과 학교 간 협력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진로 지원, 현장 실습 지원 등 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두 기관이 교육과정 개발과 현장 실습 지원에 함께 관여하면서, 교육과정 개발의 세부 범위와 책임이 다소 불명확해져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 예를 들어,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있어 도와 시군의 구체적 지원 역할과

교육청의 교육적 전문성 발휘에 대한 협력 방안이 명확히 설정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주 여건 개선은 주로 도와 시군의 역할로 정의되었으나, 교육청 역시 일부 관련 지원을 맡고 있어 양 기관 간 역할을 더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공동 목표 및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보완이 필요함
- 정기 협의회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아 업무 연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교육청과 지자체의 역할에 따른 특화된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참여기관 구성

❍ '경남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 분과별 참여기관 구성을 보면, 지자체, 교육청, 특성화고, 전문대학, 일반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각 산업 분야에 맞춰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음
- 각 산업 지구(예: 우주항공, 스마트제조, 나노 등)마다 해당 산업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음
- 각 산업 지구별로 해당 산업의 대표 기업과 연구기관이 포함되어 있어 실무 중심의 교육 및 현장 학습 지원이 용이해 보임
  • 예를 들어, 자동차/의생명 지구에는 벤츠와 GM 같은 글로벌 기업이 포함되어 있고, 연구기관으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 참여하고 있음

3) 교육발전특구 관련 지역맞춤형 특례 발굴

□ 현재 제안된 특례의 한계

❍ 현재 제안된 특례로는 대형조선소 및 사내 협력사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신청 규제 개선, 외국인 숙련 인력 도입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 그리고 직업계고 유학생 비자 완화가 있음

❍ 그러나 이 특례들은 주로 조선업, 뿌리산업, 제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경남

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우주항공, 의생명, 나노 산업에는 충분한 혜택이 미치지 않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경남의 다른 특화 산업인 우주항공, 의생명, 나노 산업과 관련된 특례를 추가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첨단산업 분야의 숙련 인력 유입을 막고 있는 규제를 찾고 특례 발굴을 통해 이를 완화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교육발전특구 성과 극대화를 위한 성과관리 방안

□ 성과관리 방안 검토

○ 제안된 성과관리 방안은 경남 교육발전특구의 목표를 달성하고 사업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경남 교육발전특구의 성과관리 방안은 PDCA(Plan-Do-Check-Act) 사이클이 잘 구축되어 있음
  - 도·교육청(교육지원청)·시군이 교육발전특구의 실행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추진 과정과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함
  - 연차별로 성과 평가를 통해 사업의 진행 상황을 분석함
  - 성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 확산하고 환류함

○ 자체평가협의회(컨설팅단) 운영을 통해 사업계획 검토, 전반적 사업 운영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추진력을 높이고 있음

□ 성과지표 검토

○ 초중고 교육 혁신지수, 디지털 교육 혁신지수, 특성화고 지역 연계 혁신지수, 지산학 협력 지수 등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연차별 목표를 명시하여 관리할 계획임
  - 이들 지표는 각각 돌봄학교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초중고 교육 혁신지수', 디지털 교육 활성화 수준을 측정하는 '디지털 교육 혁신지수', 특성화고와 산업 연계 정도를 파악하는 '특성화고 지역 연계 혁신지수', 지역 학생의 지역

대학 진학과 지역 취업률을 평가하는 '지산학 협력지수'로 구성됨

❍ 그러나, 현재 지표들은 경남 교육발전특구의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지역별 특화사업의 성과를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지역별 특화사업의 성과를 보다 명확히 평가하기 위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별도의 지표 설정이 필요해 보임

- 예를 들어, '지역 특화산업 연계지수(가칭)'은 각 지역의 특화산업과 교육기관 간 연계성을 측정하며, 해당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이 얼마나 산업 특성에 부합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지역 특화산업 취업 연계지수(가칭)'는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에 취업한 특성화고 및 지역 대학 졸업생 비율을 측정함으로써, 지역별 특화사업이 실제 지역 내 고용과 정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

제 7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 제언

07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1. 연구요약

□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과 연계한 교육전략의 필요로서 교육발전특구의 도입**

○ 지역불균형 발전에 따른 학교 교육의 격차 심화는 지역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 야기

○ 지역발전과 교육 간 선순환 형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정책으로서 교육발전특구 제도 도입

-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구 지정
- 24년 2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7월 2차 시범지역 지정으로 총 56건의 시범지역이 지정·사업추진 중

○ 교육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라는 정책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의 초기단계의 한계도 존재

- 지방시대 전략의 4대 특구 중 법적 근거가 없는 특구,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연계를 통한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유기적 연계 부족 등 근본적인 제약 외에도 다수의 특구 지정, 차별화된 특구 전략의 미비 등 운영상의 문제가 노정

○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유형별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교육발전특구의 유형별 특성

❍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본 교육발전특구의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음

| 표 7-1 | 교육발전특구 유형별 특성

구분	1유형(단독형)	1유형(연계형)	2유형	3유형
중점 분야	유아돌봄형	혁신도시 연계형	지역산업 연계형 (초중고)	지역산업 연계형 (지역대학)
공간 범위	기초자치단체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시)	광역자치단체(도) 지정 시군
추진 주체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장-교육감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사례	화천군	충북 음성-진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지정 시군 (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
지역 특성	접경지역/인구감소지역 /고등교육기관 부재	충북혁신도시/ KEDI 교육관련 국책연구기관 소재	광주형 일자리사업/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우주항공(진주, 사천, 고성), 스마트제조(창원), 나노(밀양), 조선(거제), 자동차/의생명(김해, 밀양)
중점 사업	화천형 늘봄프로젝트 / 국방산업 연계 자공고 전환/ 교육+돌봄+주거 패키지 지원	혁신도시 인프라 활용 공유협력 돌봄시스템 / KEDI 활용 교육과정 개발/ 혁신도시 외곽 교육격차 해소	빛고을 직업교육혁신지구 및 광주형 마이스터고 지정 추진/ 시 전략산업과 연계한 취업·창업·주거 지원	전략산업별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및 우주항공 미래자동차 분야 취업 지원금 지원/ 우주항공 연계진학 지원
정책 연계	교육부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강원도교육청 더나은교육지구/ 행정안전부 접경지역개발사업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지원정책/ 충북혁신도시 종합계획	교육부 직업교육 혁신지구/ 국토교통부 도심융합특구/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차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교육부 RISE 및 글로컬 대학 연계/ 교육부 약형 특성화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등
지자체 특성	2007년 화천군 인적자원개발 중장기계획 수립/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 조례	충북혁신도시 연계/ 유관 산업 혁신기관 연계 지원/ 한국교육개발원(KEDI) 등 유관기관 연계 활용	직업계고-지역기업-대학 연계 지역인재 성장경로 구축 지원/ 광주형 일자리 사업 지원	경남 전략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체계 구축/ 분야별 시군 특구 지정 육성
제안 특례	마이스터고 지정 및 취소 권한 이양 제안	국립소방병원 개원에 따른 관련 학과 정원 증원 특례	자율형 공립고 교원 정원 외 추가 배정 제안	경남 지역산업 인재양성에 필요한 맞춤형 특례 제안

2. 정책적 시사점

□ 인구감소시대, 지역발전과 교육발전 간 상관관계 더욱 분명

❍ 지방소멸의 위기 가시화 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적 접근은 기존의 단편적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적으로 다뤄지길 요구함
- 정책은 각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구분되나 실제 이를 받아들이는 인구는 모든 정책영역을 망라하는 하나의 복합체임
-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이 열악한 교육여건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기업투자유치만이 능사가 아닌 상황
- 인구를 둘러싼 더 나은 정주 여건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 복지, 고용, 주거 등을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

❍ 이는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과의 연계 발전 추구는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의미
- 소관부처별, 추진주체별 등 기존의 파편화된 정책적 접근을 지양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경로상에서 정책적 접점 및 혁신을 찾는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교육발전특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

□ 지역주도형 교육발전특구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 공존

❍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소멸의 위기 해소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직·간접적인 방안에 해당
- 지역주도하에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선순환 형성이 궁극적인 목표

❍ 지역 스스로가 유아·돌봄에서부터 초·중등 및 대학교육과 취업에 이르기까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설계된 제도인 만큼 지방의 능동적·선제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
-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교육발전특구의 비전, 목표, 전략 수립과 지역 내 정책 주체 간의 연계·협력 정도, 지방정부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조정역할 등이

교육발전특구 성공의 관건임을 본 연구의 유형별 사례지역 분석을 통해 확인한 바 있음

○ 그러나 교육발전특구 전략의 차별성 부족,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 어려움 등 사업 추진의 난항을 예상하는 목소리 또한 높은 편
- 지역마다 차별화된 계획 수립이 강조되기보다 자율형 공립고 운영, 지자체 주도 늘봄·돌봄 시스템 지원 등 유사 모델 난립에 따른 사업의 실효성 저하
- 전국 지자체의 4분의 1이 교육발전특구인 상황에서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의 수가 많은 만큼 관련 예산 배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음

□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리 전략 마련 중요

○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맞춤형 공교육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이는 그 자체로 교육혁신의 과정임
- 교육정책을 향한 국가와 지방의 공동 책무성 강화, 적시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가동,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간의 연계 협력 추진, 공공기관과 대학, 기업 등 민관 협력 강화, 지역맞춤형 특례 발굴 등 지역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실천이 요구됨

○ 특히, 3년이라는 시범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으로 정식 지정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교육발전특구를 향한 지방의 접근은 고도화될 필요가 있음
- 현행 교육발전특구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양분되는 만큼 성공적 제도 운영을 위한 명확한 목표 설정과 관리전략 마련 중요
-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전략 수립, 교육발전특구 주체 간 유기적 연계 강화, 교육발전특구 관련 지역맞춤형 특례 발굴, 교육발전특구 성과 극대화를 위한 성과관리 방안 등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

제2절 정책 제언

1. 교육발전특구의 유형별 관리전략

□ 일반자치 유형에 의한 공모 유형의 한계 극복 필요

○ 현재 1, 2, 3 유형으로 지정되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지방 교육청과 공동협력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 유형에 따라 구분된 것임
- 즉 1유형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감, 2유형은 광역자치단체장(광역시 및 제주)과 교육감, 3유형은 광역자치단체(도)가 지정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하나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협력하여 특구 기획 및 운용

○ 현재와 같은 유형 구분은 협력 주체를 명확히 명시하여 해당 주체들이 공동사업을 기획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 특구의 공간적 범위의 불명확성,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모호로 인하여 실제로 재원 투입 및 성과관리단계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음
- 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협력하는 제1유형의 경우도 광역자치단체의 협력이 전제될 수 밖에 없으며,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기초자치단체장과 협력이 전제될 수밖에 없음
- 즉 기초-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도외시한 현재의 공모 유형 대신 현재 차별적 전략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유형별 관리가 필요

□ 교육발전특구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유형 관리

○ 지역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관리전략 또한 현재의 지정 유형을 고려하여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2유형의 경우 제주를 제외하고는 광역시를 대상으로 지정된 것이므로, 대도시 유형이라 할 수 있으며, 1유형은 시군인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대별될 수 있음
- 3유형의 공간적 범주가 다양한데, 1유형처럼 1-2개 시군만 선정된 사례(충남 아산, 경북 안동-예천)가 있는가 하면, 경남처럼 1,2차 지정에 의해 다수의

지역을(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1차 지정), 의령, 창녕, 거창, 함양(2차 지정)) 지정한 사례가 있음

❍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가 지역에 정주·취업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교육발전특구의 조성 목적임을 고려할 때, 대도시-도시-농촌의 지역특성에 따라 차별화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대도시 지역의 경우, 관내 지역대학이 소재하여 대학과 연계한 지역 및 교육혁신전략이 마련될 수 있음
- 1유형에 속하는 도시지역인 경우 인구 5만 이상인 도농복합시와 인구 100만에 버금가는 광역시급 도시지역이 있으며,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대학소재 지역과 대학이 없는 지역 등 지역여건의 차별성이 고려되어야 함
- 농촌 지역의 경우, 1차산업 외에 발달된 지역산업이 부재하고, 인구이동이 유초등 단계에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유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인 고등교육까지 포괄하는 전생애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판별이 필요함

□ 교육발전특구의 중점사업을 고려한 유형화 방안

❍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공모 당시,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대학 등이 협력하여 유·초·중등·대학교육 분야 중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집중적 육성이나 연계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관심 분야 중심으로 다양한 모델의 특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방침 제시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지역특성에 따른 교육발전특구 운영모델로 지역중심 돌봄·교육, 지역산업 연계, 혁신도시 연계 등의 중점추진 분야를 예시로 제시

- 본 연구에서 해당 유형에 속하는 사례지역을 분석한 결과, 지역 돌봄(화천군), 지역산업 연계(경남 해당 시군), 혁신도시 연계(충북 음성·진천)형은 지역특성에 기반한 특화된 특구로 개발·운영되고 있으나,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역산업과 연계된 중점추진사업이 제안되었다기보다는 교육부가 제시한 유·초·중·고, 대학 등 교육단계별 사업내용을 마련하는데 집중하여 지역산업 연계의 차별성은 두드러지지 않았음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의 운영 및 관리를 현행과 같이, 공모 유형별, 교육단계별로 실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이 협력적으로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한다는 당초 목표와는 다르게, 주체별로 분절적인 사업추진 및 관리를 할 우려가 있음

❍ 향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따른 교육발전특구 운영모델별로 유형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교육발전특구가 지향하는 바와 부합할 것임

❍ 가능한 유형화안으로는 첫째, 지역돌봄형(농촌형/도시형), 둘째, 지역산업연계형(광역시형/광역도형), 셋째, 특화지구 연계형(혁신도시/문화도시 등 다양한 지역특화특구 연계형)을 제안

❍ 현재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성과관리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 차원의 성과관리 방안은 중점사업별 유형별 성과목표 관리방안을 제안하도록 함

2.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전략 수립

□ 지역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교육정책 수립

❍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매우 높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지역교육정책 수립이 매우 중요

❍ 지자체-교육청 협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므로, 교육발전특구 기획 당시 대부분의 계획 입안자들이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 수렴 노력을 기울였음

❍ 그러나 교육정책의 경우, 단편적인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마련될 수 있는 시책이 아니므로, 지역에서 실제로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얼마나 실현했는가가 중요

❍ 화천군의 경우, 교육발전특구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16년부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역교육정책을 마련해 옴

-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린이 전용 도서관, 스터디 카페 등을 조성한 바 있음
- 지역의견을 수렴한 지역교육정책의 토대가 기 구축되어 교육발전특구 계획 수립 당시에도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학교장 등 다양한 계층별 간담회를 통해 실효적인 정책 수립 가능

| 그림 7-1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계획 수립



출처: 최인환(2024)

□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정책으로 차별성 확보

❍ 지역교육정책이 지역발전정책과 실질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에 기반한 지역인재양성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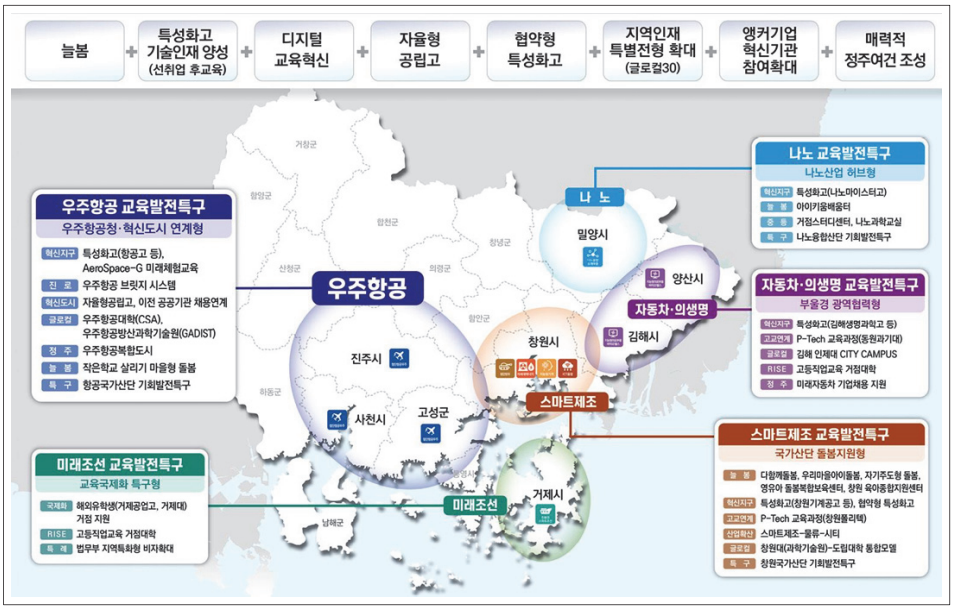
❍ 교육계가 공급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에 천착하기 보다는 지역산업, 즉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특화산업 또는 지역주력산업 등 지역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인재양성 정책 제시되어야 함

❍ 경남의 경우, 지역이 실제로 주력하고 있는 5대산업 분야와 연계한 기술인재 양성에 집중한 〈경남형 미래전략산업 교육발전특구〉를 기획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우주항공, 미래조선, 나노, 스마트제조, 자동차·의생명 분야별로 기술인재 양성

| 그림 7-2 | 경남형 미래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발전특구 사례



출처: 윤인국(2024)

2) 교육발전특구 주체 간 유기적 연계 강화

□ 지자체와 교육청 외 대학 등 유관기관 간 연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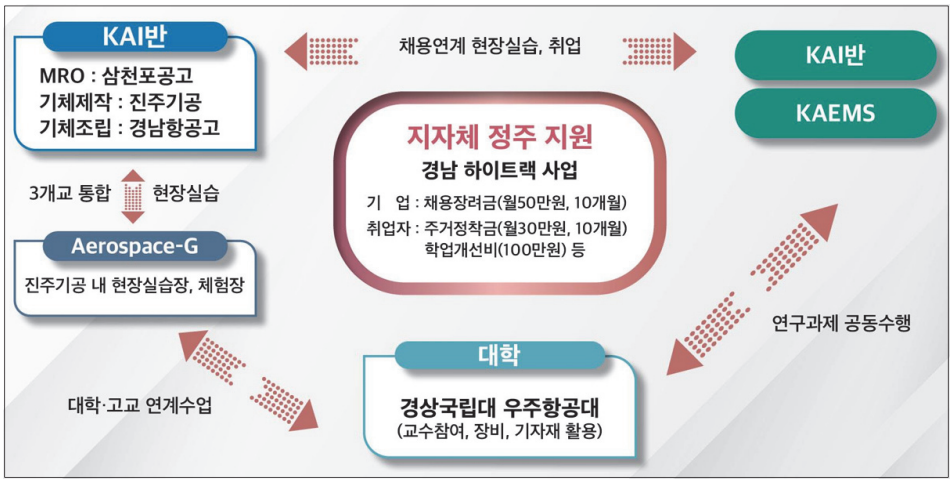
❍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교육발전특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지자체-교육청과의 협업 뿐만 아니라 유관 주체 간 협력체계도 구축되어야 함

❍ 일례로 지역전략산업에 필요한 기술인재양성을 위해 직업계고 인재양성과정을 살펴보면, 직업교육은 관련 고등학교에서, 지역인재에 대한 정주 지원은 지자체 지원할 수 있지만, 직업교육에 필요한 핵심기술 연관 수업을 위해서는 관련 대학과 연구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임

○ 지산학연 협력체계 중,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교육청 외 지역대학 및 유관 연구기관 등 핵심적인 기술교육을 담당할 혁신 주체들과의 연계가 더 강화되어야 함

○ 교육청은 초중고 교육정책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산학연의 연계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역할이 더 중요함

| 그림 7-3 | 직업계고 인재양성과정 (예시: 경남 우주항공분야)



출처: 윤인국(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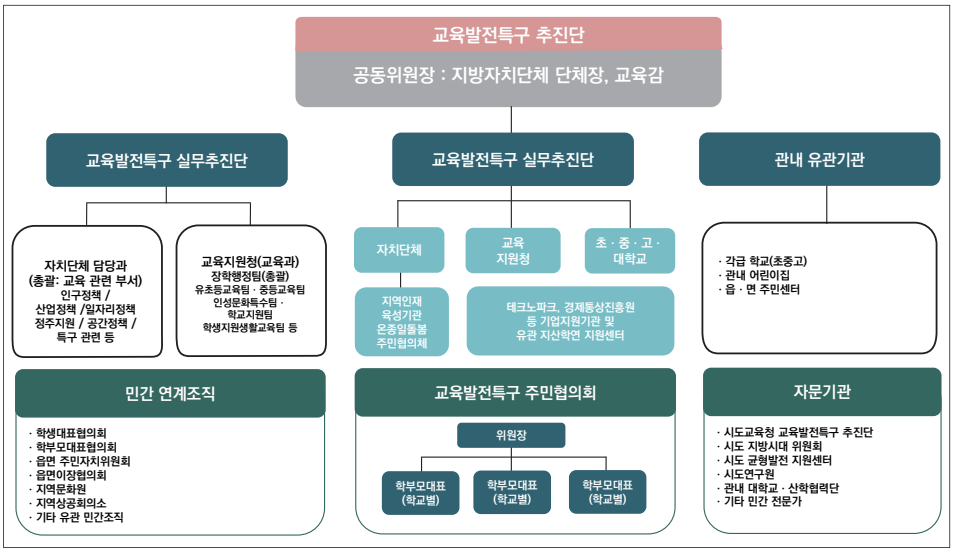
□ 지자체와 교육청 간 실질적 협력 네트워크 운용

○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운영체계를 살펴보면(〈그림 2-16〉 교육발전특구 운영체계), 교육발전특구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지방시대위원회와의 연계, 지역 차원에서는 지자체내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담당기구와 교육발전특구 운영·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지원하고 지역기업,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 협력체를 구성·운영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 지역협력체는 특구를 신청한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지역별 특구 운영 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시대 4대 특구 및 지역발전사업간 원활한 연계협력 도모 차원에서 유사 협력체 조직과 지역위원회 통합 운영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발전특구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특구가 아니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심의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는 지방시대 관련 특구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해당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림 7-4 | 교육발전특구 협력적 추진모델



❍ 제도적 기반이 없는 현 시점에서 교육발전특구의 운영은 지역 협력체보다는 교육발전특구를 실제로 담당할 지역 담당기구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공동위원장으로 추대하되, 실질적 운용은 교육발전특구 실무추진단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음

- 교육발전특구 실무추진단에 자치단체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등 교육청 산하 유관기관과 초·중·고·대학교 등 해당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특구 사업을 함께 추진
- 사업기획-집행-평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받는 민간 연계조직과 자문기관 등도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함께 운용 가능

❍ 중점사업 유형별 모델에 따라, 관내 유관기관으로 군부대(접경지역),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혁신도시 연계형),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연구소 등 다양한 혁신 주체가 참여 가능

3) 교육발전특구 관련 지역맞춤형 특례 발굴

□ 교육 관련 규제 완화 및 특례 위주 발굴 한계 극복

❍ 교육발전특구는 '특구'이기에 지역맞춤형 특례 지원이 특구의 중요한 방침이었음

❍ 지역이 특구 내에 적용가능한 특례를 포함한 교육발전특구 사업계획서를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상향식으로 제안하고 특구로 지정되면 다양한 맞춤형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운영 모델(〈표 2-3〉) 및 교육단계별 교육발전특구 적용 특례(안)(〈그림 2-14〉)을 제시하면서, 지역특성에 따른 다양한 특례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음

❍ 지역중심 돌봄교육, 지역산업 연계, 혁신도시 연계 등 교육발전특구 운영 모델에서 나타나듯이, 관련 특례는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교육 특례만을 지향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단계별 적용 특례(안)이 교육 관련 특례로 제안되다 보니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교육 관련 특례를 발굴·제안함
  - 사례분석에서도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이 학과 정원 증원, 교원 정원외 추가 배정, 마이스터고 지정 권한 이양 등 교육 관련 특례 위주로 제안

❍ 교육발전특구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인재양성이 목적인 바,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관련 특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지만, 지역산업 육성에 위한 다양한 특례들이 발굴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경남 및 전남 등은 지역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 극복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기업 취업, 정주까지 이어지는 정책 추진 속에서 필요한 외국인 관련 특례를 제안하기도 함

□ **지역맞춤형 특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필요**

❍ 지자체-교육청-대학 등 유관기관들이 지역에 필요한 지역맞춤형 특례를 발굴·제안하여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없이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음

❍ 교육발전특구에서 지원가능한 구체적 특례안과 지자체에서 발굴한 특례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행되는지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교육발전특구의 특례 지원은 실현될 수 있을 것임

❍ 최초의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제도 도입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 관련 규정으로 근거를 두려고 하였으나, 입법 당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산된 바 있음

❍ 현재는 교육부 중심으로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며 관련 공청회 등이 진행되고 있음

❍ 교육발전특구 관련 제도적 근거 마련안은 교육발전특구 제도 개선에서 보다 자세히 후술하도록 함

4) 체계적인 성과관리 방안 제안

□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관리를 위한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관리 필요**

❍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발전특구 운영계획안에서 성과지표는 교육단계별 중점 추진내용에 따라 성과지표를 제안하고 있음(〈그림 2-13〉 교육단계별 중점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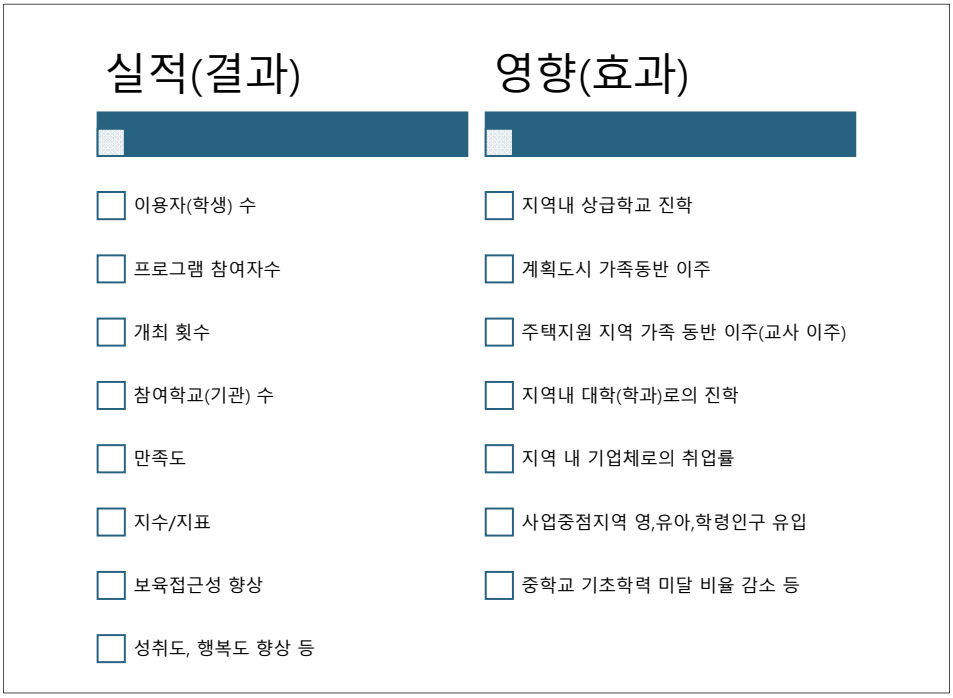
❍ 유아돌봄 단계의 사업추진에 따라 출산율 상승, 초중고 단계의 사업추진에 따른 학업성취도 상승과 사교육비 감소, 대학 교육단계의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인재 전형비율 확대 및 지역인재 취업률 상승 등을 제시
  - 교육발전특구가 지향하는 바에 따른 성과지표가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3년간의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도달하기는 어려운 성과지표임

❍ 따라서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운영계획서상의 성과지표는 대체로 성과관리가 용이한 실적 및 결과지표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제시

❍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 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운영계획서 상에서 제시된 성과지표도 대체로 실적(결과)지표로 구성
  -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분되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프로그램 참여율, 자격증 취득률, 만족도 등으로 구성

❍ 사업 초기단계에서는 실적(결과)지표로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교육발전특구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영향(효과)지표를 통해 성과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수립한 성과지표에 따라 사업실적을 관리하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평가에 따라 교육발전특구를 지속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업 성과지표로는 각 교육발전특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방향에 따른 목표를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할 것이므로 영향지표로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그림 7-5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성과지표(안)



출처: 임종헌(2024),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위한 성과관리 방안, 지방시대엑스포 자료집(2024.11.7.)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의 체계적 관리 방안

❍ 교육발전특구가 시범지역으로서의 사업으로부터 더 나아가 안정된 제도적 기반 하에서 특구로 지속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필수적임

❍ 현재 지역이 수립한 자율적 교육발전특구 성과는 지역별·개별적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차별, 정량·정성별, 실적·영향별 성과지표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56개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도지역사업과 24개의 관리지역은 중앙차원의 메타평가를 통해 이후 교육발전특구로 지정 여부를 판가름 받게 될 것임

❍ 1차, 2차 연차별 성과관리는 P(Plan)-D(Do)-C(Check)-A(Act) 단계 중에서 계획대비 실행, 즉 실적 위주의 관리에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겠으나, 사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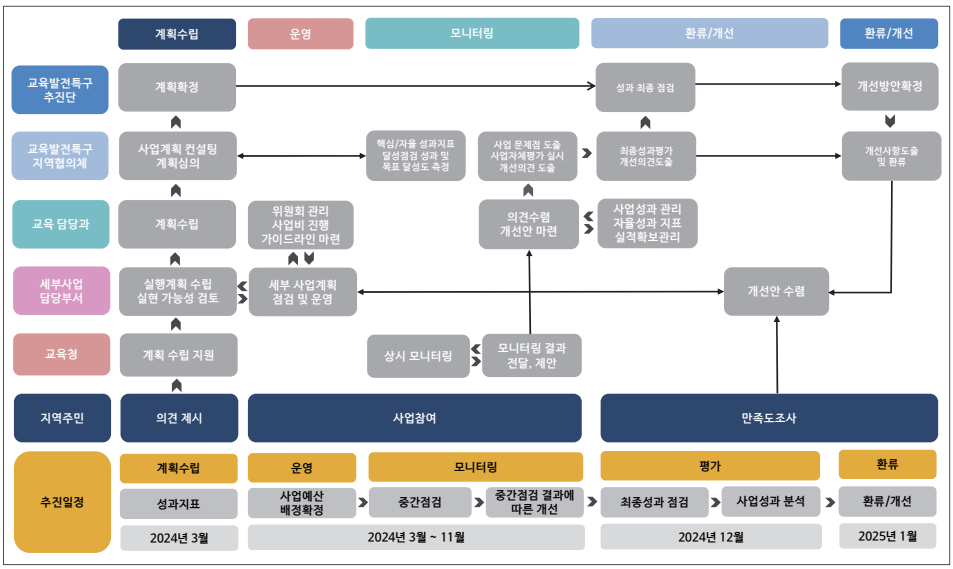
완료되는 3차년도에는 전체 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임
- 즉 3차년도에서는 각 특구가 지향하는 효과(Effect) 또는 영향(Impact)에 따른 성과분석을 실시해야 할 것이므로, 종합효과 분석시 공통효과 지표와 자율효과 지표를 구분하여 성과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개별 지역 성과지표는 특구내 사업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나, 종합성과 관리에서 중요하게 관리해야 하는 부분은 교육발전특구의 전체 사업목표, 즉 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협력성, ② 교육혁신과 지역발전과 연계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특히 교육발전특구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관련 특례 도입 및 적용이 구체화 된다면, 도입 특례의 적정성 및 효과성 등도 중요한 성과관리의 항목이 될 수 있음

❍ 1차년도 성과평가를 위한 단기적 성과지표 및 관리방안은 교육부의 후속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겠으나, 지역별로는 3년간의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중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하여 사업을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음

❍ 화천군이 제시하고 있는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예시로 계획-집행-모니터링-평가-환류 단계별 성과관리를 제안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 각 단계별로 교육발전특구추진단 및 지역협의체, 자치단체 담당부서와 유관부서, 교육청, 지역주민 등 관련 주체들의 역할을 고려하여 사업을 관리해야 함
- 특히 교육발전특구가 교육자치-일반자치 협력 모델로서 도입되기 시작한 제도임을 고려하여, 무엇보다도 지역협력체의 구축 및 이행 정도 등을 운영 측면에서는 잘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그림 7-6 | 체계적인 성과관리 모델 제시



출처: 최인환(2024)을 참조하여 수정 작성

3. 교육발전특구 관련 제도 개선 방안

❍ 교육발전특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교육발전특구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개정안과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절차, 특례 적용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규정하는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상태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분석 정리하고자 함

1) 관련법 개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 24년 7월 김도읍 의원 등 11인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내 교육발전특구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 제안

- 현재 법안 발의 후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단계 진행 중

❍ 지역간 불균형 해소, 지역특성에 맞는 자립 발전을 위한 제도적 토대로서 제정·시행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기회발전특구 등이 규정된 만큼 이와 연장선상에서 교육발전특구 조성에 대한 조속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

-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여건 개선도 중요

□ 주요 내용

❍ 이전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자유특구'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으나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삭제되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음(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4)

- 당시 수월성 위주의 교육 우려, 교육위원회의 선행 논의 필요 등을 이유로 삭제됨

| 표 7-2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내 교육발전특구 원안 vs. 현행

원안	현행
제35조(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등) ①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자치와 제2항에 따른 교육자유특구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5조(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등) ①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자치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출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2024)

❍ 개정안은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방인재의 양성·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교육발전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한 안 제35조의 2 신설을 제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내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되,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도록 규정

| 표 7-3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내 교육발전특구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등) ①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자치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신설〉	제35조의 2((교육발전특구의 설치·운영) ① 국가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방인재 양성과 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발전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발전특구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출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2024)

❍ 이와 관련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본 개정안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등을 도모하려는 취지에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임(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4)

- 단,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논의 경과를 참고하여 본 개정안 심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함께 제시
- 한편, 행안부는 개정안과 같이 현행법에 교육발전특구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에서 마련할 개별 법률안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 표명

❍ 교육발전특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양성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지방시대 전략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도 지역균형발전특별법상의 근거 규정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특히 교육부에서는 교육발전특구에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조달의 필요 등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도 해당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2)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제정 배경 및 전개

❍ 교육발전특구는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위한 생태계 구축이라는 국가적인 현안을 해소할 장기적인 정책인 만큼 안정적인 법적, 제도적 뒷받침 필수

- 2024년 3월부터 교육부는 지역의 공교육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7개 광역지자체 및 8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지속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중요

❍ 2024년 11월 김도읍 의원 등 12인은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고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입법예고와 위원회 심사 등의 입법절차 진행이 필요한 상황

- 제정 발의된 본 법안은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지정 및 운영, 각종 규제의 특례 및 교육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체계

❍ 본 법안은 크게 제1장 총칙, 제2장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제3장 규제특례, 제4장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으로 구분되며 총 43개의 조항을 포함함

| 표 7-4 |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체계

구분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제5조 특구의 지정신청 제6조 특구의 지정 등 제7조 특구 지정의 효과 등 제8조 특구의 변경 제9조 특구의 해제

구분		내용
		제10조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 사무국의 설치 등 제12조 특구 전담기관 등 제13조 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 등 제14조 특구별 전담조직 제15조 특구운영의 성과관리
제3장 규제 특례	제1절 교육발전특구와 지역혁신지원 선도지역에 대한 특례	제16조 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제17조 학교 안전공제 적용에 관한 특례 제18조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제19조 교육과정의 특례 제20조 농어촌 학교 및 소규모 학교에 관한 특례 제21조 지역교원에 관한 특례 제22조 교원자격에 관한 특례 제23조 협업교육에 관한 특례 제24조 산학겸임교사에 관한 특례 제25조 직업계고 교원 파견에 관한 특례 제26조 전문교원 확보에 관한 특례 제27조 특구 내 학교에 대한 교원 추가배정에 관한 특례 제28조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한 특례 제29조 지역 산업 관련 교육을 위한 특례 제30조 공유재산 양여에 관한 특례
	제2절 교육분야 규제특례 우선 허용	제31조 교육분야 규제제외 우선 허용 제32조 규제제외 우선 허용에 대한 지원 제33조 규제제외 우선 허용 취소
제4장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제34조 선도지역의 지정신청 제35조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지정 등 제36조 선도지역 지정의 효과 등 제37조 선도지역의 변경 제38조 선도지역의 해제 제39조 교육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0조 전담조직의 설치 제41조 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2조 선도지역별 전담조직 제43조 선도지역 운영의 성과관리

출처: 국회입법예고.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본 법안은 교육발전특구제도의 기본취지, 운영의 안정성 확보, 성과 극대화 등에 방점을 두고 초안 작성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1,2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교육발전특구 실행계획서 분석과 해외사례, 유사 관련 법률 검토 등의 절차가 선행됨(남수경, 2025)

- 해외 사례와 관련하여 제2장 교육발전특구지정 및 운영과 제3장 규제 특례는 일본 구조개혁특구와 미국 기회특구 내 공교육 혁신 등을 참고하였고, 제4장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부족한 곳에 더 많은 것을 제공한다를 모토로 추진되는 프랑스의 우선교육네트워크(REP: R´eseaux d'Education Prioritaire) 등을 참고

□ 특례 기본 원칙 및 적용 방식

❍ 남수경(2025)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에 적용되는 특례는 크게 4가지 기본 원칙하에 수립됨

- 지속가능한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 특례조항으로 시작하여 성공모델로 확인 시 학교 교육 관련 법률개정을 통해 전국적 확산
- 맥락친화성과 구체성을 토대로 적용가이드가 될 수 있는 특례: 지역의 교육 규제완화 요구기반의 특례내용 제시, 지역공교육 혁신에 실질적으로 적용
- 일괄적용 방식이 아니라 지역특성 맞춤형 특례 적용: 특별법에 담긴 특례 조항의 실질적인 적용은 특구 운영계획을 기반으로 검토과정을 통해서 결정
- 학생 안전, 교육 공정성, 신(新)규제 소지가 있는 특례제안은 제외: 학생의 안전과 교육적 공정성을 유지하되, 지역 공교육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및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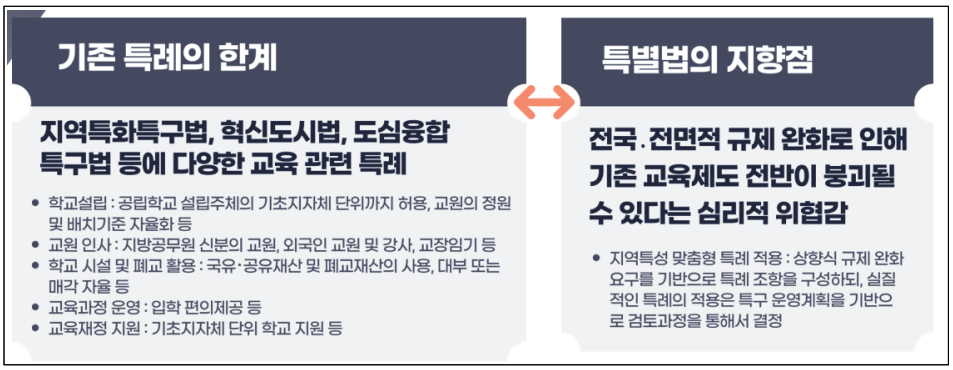
❍ 특히, 특례 적용에 있어 기존 지역특화특구법, 혁신도시법, 도심융합특구법 등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교육 관련 특례의 한계에서 벗어나 본 법안만의 차별성을 분명히 함(남수경, 2025)

- 기존 제도 내 여러 교육 관련 특례가 존재하나 전국적이고 전면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기존 교육제도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심리적 위협감 제기
- 이와 달리 본 법안은 지역의 상향식 규제 완화 요구를 기반으로 특례 조항을 구성하되, 실질적인 특례의 적용은 특구 운영계획을 기반으로 검토과정을 통해서 결정

○ 특례가 적용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로 특별법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하는 방식과 규제 제외 우선 허용하는 이른바 교육분야 규제샌드박스 적용 방식이 있음

- 전자는 교육발전특구 및 선도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과 지자체의 장이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특구별로 상황에 따라 필요한 특례를 적용하는 방식
- 후자는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례를 교육발전특구 및 선도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과 지자체의 장이 신청하면 교육부를 포함한 관계기관 교육분야 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일정기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며 교육부장관은 적용 결과 검토후 법령 정비

| 그림 7-7 |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특례적용 원칙



출처: 남수경(2025)

□ 각 장의 주요 내용

○ 본 법안은 제1장 총칙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주기반 구축 및 지방 공교육 혁신이라는 교육발전특구 지원의 목적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재정 확대 책무를 명시함

- 목적: 이 법은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사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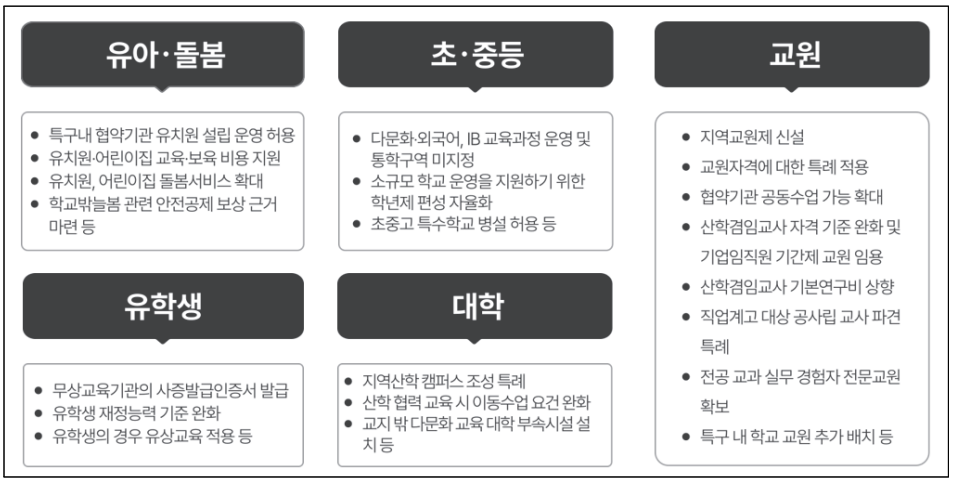
지속성 보장과 지역균형발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추가 재원을 확보·지원하여야 함(안 제4조 제2항)

❍ 제2장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정 효과, 지역협의체 및 특구별 전담조직 설치, 특구운영의 성과관리 등을 명시함
- 교육발전특구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은 선정 가능함(안 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6조)
- 특구를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특구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두어야 함(안 제13조)
- 특구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구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14조)
- 특구 운영의 성과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특구 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

❍ 제3장 규제특례와 관련하여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 유학생,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례 조항 규정
- 교육발전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과 학교는 설립기준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8조)
- 교육발전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은 다문화 학생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법무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 내 학교의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에서 교육분야 규제 적용 등을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적용받고자 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의 우선 허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 그림 7-8 |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특례 주요내용



출처: 남수경(2025)

❍ 제4장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지정 및 운영 관련하여 지정신청 및 지정 등에 대한 규정 마련하고 있으며 교육발전특구와 일부 내용 상이

-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은 수도권 내 교육격차 완화를 위하여 대학이 지역 교육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면서 초중고 분야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체계를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발전특구와 다르게 대학 총장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전제하고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수도권 내 교육발전특구 기지정지역은 제외

❍ 이상의 법안 내용 중 교육발전특구 외에 추가 지정근거를 두려고 하고 있는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지정 및 운영의 경우, '수도권 지역 지정', '대학총장 참여 필수' 등 교육발전특구와는 다른 지정 방침을 제안하고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문헌

[국내 및 해외 문헌]

관계부처합동. (2021.12.22.).『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안)』.

관계부처합동. (2023.8.).『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

광주광역시. (2023.2.).『2023년도 광주광역시 지역산업진흥계획』.

광주광역시. (2024).『2024년 주요업무계획』.

광주광역시. (2024.3.).『2024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광주광역시. (2024.4.).『2024년도 광주광역시 지역산업진흥계획』.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교육청. (2024.5.).『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운영계획서』.

교육부. (2023a).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

교육부. (2023b).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발표자료.

국토교통부. (2017).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교육발전특구 설치·운영 근거 마련.

기획재정부. (2022). 2022년 나라살림 개요.

김병욱. (2021).『교육사회학』. 학지사.

김선영·백지원. (2023). 도서 지역 영어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연구.『한국언어과학회』30(4), pp.1-25.

김성순·모위홍. (2016). "교육투자가 중국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산업연구』40(1), pp.1-26

김수홍. (2017).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과제.『동북아법연구』. 10(3), pp.583-607.

김영화. (2015).『한국 산업화 시기의 교육과 경제성장(개정판)』. 교육과학사.

김영화. (2017). 에티오피아 교육과 경제발전 간 연계: 한국 산업화 경험의 맥락에서 진단한 현황과 과제,『한국아프리카학회지』. 52, pp.3-46.

김태환·김은란·이차희·남성우·표희진·박미래. (2020). 인구의 지역별 격차와 불균형. 균형발전 모니터링&이슈Brief, 제1호, 국토연구원.

김현미 외. (2022).『인구감소 대비 지역별 인구추계 기반 미래학교 시나리오 구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현호. (2022).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추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이슈와 포럼. 43, pp.11-17.

남수경. (2025). 교육발전특구 특별법 제정 방안 국회공청회자료. 교육발전특구 특별법 국회포럼(25.1.8).

대한민국 정부. (2019).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마강래. (2023). 위기의 지역을 살리는 암묵지의 힘, 제4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자료집(23.11.28), pp.29-48.

박기관. (2022).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방향과 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이슈와 포럼. 43, pp.18-23.

박지희. (2021).『학생쏠림과 학령인구 이동의 시공간적 역동성 탐색』.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백일순·김주락·이승원. (2023). 도시 구성체로서의 학군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를 사례로.『공간과 사회』. 84, pp.132-183

백일순·최민정. (2024). 영토적 통치 전략으로서 불균등 발전: 국토종합계획 속의 '균형'에 대한 소고.『국토지리학회지』. 58(1), pp.39-65.

송우경. (202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의미와 주요 내용. KIET 산업경제. 7월호, pp.7-16.

윤기찬·김순양. (2015). 인구규모에 따른 지역 간 교육격차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CIPP모형의 적용.『지방정부연구』18(4), pp.293-315.

윤인국. (2024). 지역산업 연계 산업기술인재 양성 방안,「교육발전특구의 운영 사례와 발전 방향」, 2024년 제3차 정책포럼 K-미래교육포럼 자료집(2024.3.28.)

음성군. (2022).『민선 8기 공약 자료집』.

음성군. (2023).『2023년 주요업무계획』.

음성군. (2024).『2024년 주요업무계획』.

이두휴. (2011). 도시와 농촌간 교육양극화 실태 분석.『교육사회학연구』. 21(2), pp. 121-148.

이소영 외. (2021).『지방대학 위기대응 및 상생협력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소영. (2022a). 지자체-대학-지역기업 간 상생협력체계 구축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하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제142호.

이소영. (2022b). 지방대학의 위기대응 및 상생방안,『자치의정』9·10월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이혜영·강태중. (2004).『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와 타지역 학교의 교육격차 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임종헌. (2024).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위한 성과관리 방안, 지방시대엑스포 자료집 (2024.11.7.)

정성수. (2024). 교육발전특구가 성공하려면.『교육정책포럼』통권 370호. pp.12-17.

정일환·김정희. (2000). 교육의 경제발전에 대한 관점과 기여분석.『교육학논총』21(2), pp.29-48.

정일환·박찬호. (2020). 대구시의 지역 간 교육격차 실태와 해소방안 탐색: 교육관련 집단인식 분석.『비교교육연구』30(4), pp.1-22.

조정인. (2018). 교육투자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대한 탐색연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를 중심으로『한국아프리카학회지』. 55, pp.205-253.

지방시대위원회. (2023).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2027.

지방시대위원회. (2024).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진천군. (2022a).『민선 8기 군수 공약 이행 추진계획』.

진천군. (2022b).『생생 88팔팔 군민만족 공약 실천계획』.

진천군. (2023).『2023년 주요업무계획』.

진천군. (2024).『2024년 주요업무계획』.

진천군·음성군·진천교육지원청·음성교육지원청. (2024.5.).『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운영계획서』.

최영일. (2017).『폐광지역 교육환경 분석 및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연구: 강원도 폐광지역 고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최은영. (2004). 학력자본 재생산의 차별화와 빗장도시의 형성. 『대한지리학회지』. 39(3), pp.374-390.

최인환. (2024).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교육발전특구의 운영 사례와 발전 방향」, 2024년 제3차 정책포럼 K-미래교육포럼 자료집(2024.3.28.)

최정윤·문보은·백승주·손윤희·조옥경·장수정. (202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지원을 위한 지역 특성 분석 연구. 기본이슈페이퍼, 한국교육개발원.

충청북도. (2016).『충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 기본계획』.

충청북도. (2022).『제2차 충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충청북도. (2023).『2024년 충청북도 지역산업진흥계획』.

통계청. (2024a).『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통계청. (2024b).『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

환경부. (2024.1.).『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Cooke, P., et al. (1998). Regional systems of innovation : an evolutionary perspective, *Environment & Planning A*, 30(9):1563-1584.

Hill, K and Hoffman.D. (2009). *The Contribution of Universities to Regional Economics*, ASU School of Business.

[뉴스기사 및 보도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2024.4.18.). 반도체·디지털 등 첨단산업 분야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계획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2024a).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2024b).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2.9.26.). '22년 상반기 혁신도시 정주환경 통계조사 발표.

동아일보. (2023.5.22.). 지방대 5곳 중 1곳꼴… 신입생 80%도 못채워.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522/119407572/1

충청북도 교육청 보도자료. (2024.10.31.). 충북교육청, 충북혁신도시에 초중통합학교 신설된다.

프레시안. (2024.8.6.). 포천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지금이 치적 홍보나 할 때인가? http://www.jnewstimes.com/news/article.html?no=458378

KBS 뉴스. (2024.1.8.). “교육발전특구 경상남도-경남교육청 ‘엇박자’”.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0879.

[웹사이트]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gwangju.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웹사이트. https://www.ntis.go.kr/orginfo/index.jsp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http://innocity.molit.go.kr

국회입법예고. https://pal.assembly.go.kr/napal/main/main.do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 http://ce.or.kr

충북테크노파크. https://www.cbtp.or.kr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r

KOSIS인구상황판 학령인구.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Index.do

자체연구 2024-04

유형별 사례분석을 통한 교육발전특구 맞춤형 관리방안

저 자 이소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진경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도형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민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주락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민정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

발 행 일 2024년 12월 31일
발 행 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 소 (26464)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21(반곡동)
전 화 033-769-9999
홈 페 이 지 http://www.krila.re.kr
인 쇄 처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